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대응 연구

연구책임자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흥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참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정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지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소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인구위기 대응에 공헌하기 위해 2022년 4월 조직되었다.

인구클러스터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의 원인과 인구 고령화의 추이에 대한 엄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심층적으로 전망한다. 셋째,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구클러스터는 다양한 전공의 내부 연구진이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적인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를 수행하는 한편, 정부 부처, 다른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를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차

서언	05
-----------	-----------

요약	07
-----------	-----------

사업의 배경과 목표	17
I. 사업의 배경	17
II. 사업의 목표	19

2차년도 사업성과	21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영유아·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I. 현실 진단과 평가	21
II. 연구 결과	24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28
2.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 현황	
I. 현실 진단과 평가	31
II. 연구 결과	35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36
3. 노인돌봄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의 활용과 정책 대응	
I. 현실 진단과 평가	43
II. 연구 결과	45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52
4.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I. 현실 진단과 평가	56
II. 연구 결과	60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71

5. 자녀 없음이 아시아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에서 미치는 영향	
I. 현실 진단과 평가	76
II. 연구 결과	77
III. 결론 및 정책 제안	85
6.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I. 현실 진단과 평가	91
II. 연구 결과	93
III. 결론 및 정책 제안	97
7. 저출산과 자녀 페널티의 관계 연구	
I. 현실 진단과 평가	102
II. 연구 결과	103
III. 결론 및 정책 제안	107
8. 지방소멸과 청년들의 지역선택	
I. 현실 진단과 평가	109
II. 연구 결과	111
III. 결론 및 정책 제안	117
<hr/>	
네트워킹 사업 성과	119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럼 개최	119
2.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121
3.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인구포럼 공동개최	122
<hr/>	
3차연도계획	125
1. 전반적인 전략	125
2. 코어 연구 계획	125
3. 제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 -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	126
4. 제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 계획	127
<hr/>	
첨부	130
1. 논문	134
2. 각 행사 프로그램과 발표자료	254
3. 기고 및 칼럼	431
4. 기사	447
5. 동영상	499

서언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노동인력 규모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등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문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재정위기 등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변화의 요인 및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수행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인구 클러스터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1차 및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1차 연도 코어 연구에서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 연도에서는 첫째로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로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2) 돌봄 서비스 불균형 완화의 방안으로 꼽히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이주 노동자 실태, 3) 노인 돌봄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4)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5)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자녀 없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 등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2) 자녀를 갖는데 따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3)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 유출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및 인구문제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인구 클러스터의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요약

1.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영유아·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본 연구는 영유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 추계에 인구 규모 및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대상자의 인구 구조 변화 외에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가구 구조 변화,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가구 내 고령자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요추계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서비스 이용 아동 및 고령자 1명당 돌봄 시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수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영아(만0~2세) 수는 2021년 88.4만 명에서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 96.4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돌봄서비스 수요는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구구조변화 고려 시 부모 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22.0% 증가, 개인양육(친인척 및 비혈연)은 동기간 약 48.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동기간 6.9~24% 증가, 비용은 6~23%, 시간당 비용은 5.7~20.7%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아(만3~6세)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2021년 160.3만 명에서 2036년 76.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돌봄 이용규모가 감소하나, 가구구조 변화를 적용하면 시설 및 개인양육의 돌봄유형별 감소폭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2021년 65세 이상 인구수를 100이라고 하면 이 중 돌봄이 필요한 규모는 12.2인데, 이 규모가 2035년에는 23.4로 약 1.9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가구 중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비중, 가구 내 고령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공식돌봄의 규모는 2021년 2.5에서 2035년

4.8이 되고, 현재 도움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는 잠재 공식돌봄 인구를 포함하면 약 1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돌봄시간은 2021년 대비 2035년 2.7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비공식 돌봄의 의존도가 높지만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비중은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돌봄의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로 인해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변화가 가져올 정책적 도전으로는 인력 및 서비스 유형간 불균형 대응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유형별 인력 및 시설 간 대체성이 높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유형간 수급불균형,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구 특성 변화로 인한 특정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수요 및 공급간 불균형, 사회서비스업의 노동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적 측면의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 현황: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가속화된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 한국 노인 인구 비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나 서비스 인력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북미나 유럽 및 동아시아 일부 고소득 국가들은 외국인 인력 활용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한국은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증 자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을 IOM의 이주민의 건강 결정요인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개인적, 사회적, 생활 및 근로조건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중치를 적용한 총 분석 샘플 수는 27,381명이었다. 대상자의 8.5%만이 미충족 의료 니즈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한편으로 약 절반(53.3%)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또는 좋음이라 응답하였다. 건강의 개인적 결정 요인의 경우 한국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50~60대 이상의 중년으로 고졸 이하가 87.7%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이며 수도권 거주자이다. 이는 유럽의 인력이 비교적 젊은 여성이며 국적인 보다 다양하다는 점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사회적 결정 요인의 경우 절반 정도가 10년 이상 거주자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다 해당 노동시장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다는 대상자는 약 36.5%에 그쳤고, 약 5명 중 한 명은 차별 경험이 있다 보고하여, 이들의 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보다 포용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의 경우 약 3분의 1만이 정규직 근로자이고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42%에 달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해 임금 수준과 임금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는 다면적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노인돌봄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의 활용과 정책 대응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에 앞으로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로 인력의 확보 여부가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 방안이 주요한 정책 대응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이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 상황과 외국인 인력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현황을 제한적이거나 확인하고, 이민 인력 활용이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과 수급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확인해, 향후 본격적인 이민·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4)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미래 인구 및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는 치매와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와 가족 단위 상호 작용의 저하로 국민 정신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정신장애 중 의사결정 장애를 수반하는 신경인지장애는 치매나 지적 장애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수반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양한 신경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원의사결정제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연도에는 인지장애 발생 및 지원의사결정제도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경인지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4개의 연구를 통해,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는 점과 국민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후견 서비스의 확충과 후견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인구사회 변화로 인한 인지·지적 장애 인구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인지·지적 정신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인 맞춤형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재 구조화하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서비스의 제도화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자녀 없음이 아시아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에서 '자녀 없이 나이 드는 경험'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녀 없이 나이 드는 경험의 미묘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제로 자녀가 없는 노인'과 '사실상 무자녀인 노인(모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을 구분하였다. 자료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5개국의 전국단위 패널데이터를 기술통계 및 다변량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규모를 조사하였다. 둘째,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경험이 노년기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무자녀 경험이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1~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로 자녀가 없는 노인의 비율은 미얀마가 가장 높았고(60세 이상 노인의 6.8%), 태국(6.4%), 베트남(4.7%), 중국(3.7%), 한국(2.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긴 하지만 모두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의 비율은 태국이 60세 이상 노인의 10.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9.9%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는 2.3~2.8%로 나타났다.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과 비교해 자녀가 실제로 없는 노인의 사회참여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녀 없는 노인의 사회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 영향은 한국, 태국, 미얀마에서 무자녀 노인들이 자녀와 가까이 사는 노인들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과 낮은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무자녀 상태(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의 영향은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시아 5개국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무자녀가 노인에게 갖는 사회적 및 심리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이 연구는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매년 공표되는 지역별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가 예상하는 미래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해당 지역의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생순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의 증가는 둘째 혹은 그 이상의 자녀 출산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95%,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87%, 셋째 혹은 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2.18% 감소한다. 이 추정 결과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 감소 중 10.6%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7) 저출산과 자녀 페널티의 관계 연구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DB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 전후 남녀의 소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의 자녀 페널티와 저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녀 페널티는 출산 후 여성이 겪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일컫는 용어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그리고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76~85년생 여성과 그 남편을 첫 출산 3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추적하는 사건사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평균 소득은 첫 출산 1년 전 대비 5년 후 약 41% 감소하여, 여러 선진국보다 자녀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6~80년생보다 1981~85년생 여성의 자녀 페널티가 첫 출산 후 3년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페널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 대비된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단순 비교가 아닌, 동일한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최근 코호트 간 자녀 페널티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함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확대로 더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이것을 '페널티'라고 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한편, 일하는 여성이 (일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이들이 출산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서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과 같이 (휴직하지 않아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녀 페널티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8) 지방소멸과 청년들의 지역선택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와 함께 청년층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친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지방 정주 지원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년층 순유출이 더욱 심각한 지역(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엇갈리므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네트워킹 사업 성과 요약

(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 포럼 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8월 11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는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과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을,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평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훈 OECD Economist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2)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경제학회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9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의 개회사,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KDI 이영욱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시대, 돌봄의 경제학적 의의” 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의 재구조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이철희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은 교수는 “인구변화와 미래 돌봄 수요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 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은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증가하는 돌봄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을 논의하였다.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고령화 관련 포럼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4년 3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을 주제로 인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충격, 고령 인력의 변모, 기술변화의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여건에의 영향, 미래 고령자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에의 영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지원 및 의사결정대리(후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고령자 범죄피해 특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발생의 증가세가 뚜렷함을 보이며,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3차 연도 계획

(1) 전반적인 전략

제3차 연도에도 1~2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크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에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인 제언이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진에게 학술적인 논문 출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특정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연구 수행 독려한다.
- 매년 4개 이상의 핵심적인 인구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가칭 “인구 클러스터 이슈 브리프”를 발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적인 제언을 전달한다.
- 매년 정부기관과 인구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공동 포럼 혹은 심포지엄 개최하여, 인구 클러스터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매년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인구문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공동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하여, 학술적인 연구와 정책 연구 간 시너지 강화한다.

(2) 코어 연구 계획

인구 클러스터에 소속된 8인의 내부 연구진과 1인의 연수연구원은 제2차 연도의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음 두 가지 큰 주제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미래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구체

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출산과 인구이동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지역 인구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3) 제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 -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

3차 연도에는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Age Friendliness Index: AFI) 생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외 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여건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1,000명 정도의 5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일자리 성격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추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Eggleston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의 고령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국의 직업 사전 및 센서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일자리 고령친화지수의 장기적인 변화와 부문별 분포를 분석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제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 계획

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은 국가미래전략원의 전체적인 필요와 정부, 연구, 언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축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제2차 법무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외국인 정책 포럼, 국책 연구기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지역 인구 불균형 포럼, 제2차 인구 클러스터 저출산 포럼, 인구 클러스터 고령노동 포럼 등 4개의 네트워킹 사업 관련 행사를 기획중이다.

사업의 배경과 목표

I 사업의 배경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된 후 줄곧 1.3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까지 떨어졌다.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던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는 신생아 수가 2026년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 반등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4년에 들어와서도 출생아 수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노동인력 규모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노동인력 규모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현재의 4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약 898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는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또한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정한 출생코호트 규모에 맞추어 형성된 제도 및 사회시스템에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추후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다. 20세 남성인구 향후 5년간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병역 자원 부족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2022년 24.4%였던 노년부양비는 2072년까지 104.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인구위기 대응은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도는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책정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칭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책 수립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변화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출생아 수의 저하와 인구고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막연한 전망과 우려는 넘쳐나지만 언제, 어떤 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된 기존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II 사업의 목표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보아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및 이로 인한 빠른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화정책”에 관련된 이슈들과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가 가져올 충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응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은 그 성격이 상이하다. 현재의 인구 클러스터의 규모와 재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는 자원과 연구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은 출산율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인구의 규모나 구조에 맞도록 설계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 및 인프라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에 있어서 매우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 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차 연도의 코어연구의 목표는 첫째로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로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아래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듯이, 이 두 가지 큰 목표와 관련된 8개의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2) 돌봄 서비스 불균형 완화의 방안으로 꼽히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이주 노동자 실태, 3) 노인돌봄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4)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5)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자녀 없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 등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에 미친 영향, 2) 자녀를 갖는데 따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3)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 유출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및 인구문제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인구 클러스터의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영유아·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수연구원)

I 현실 진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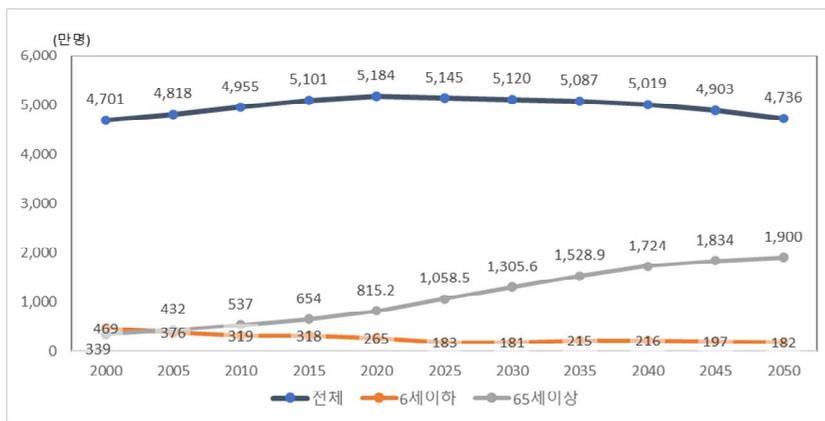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사회서비스 중 특히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및 고령자의 인구 구조 변화 외에 가구원수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가구 구조 변화,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가구 내 고령자 수의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돌봄수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및 고령자의 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하였다.

영유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를 살펴보면, 우선 6세 이하 영유아수¹⁾는 2020년 265만 명(전체 인구의 5.1%)에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2만 명(전체 인구의 3.8%)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 상 영유아가 속한 가구 중

1) 아동돌봄서비스의 보육대상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는데 보육연령 기준 만0세는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출생자까지로 최대 월령기준으로 23개월까지 포함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의 연령 구분으로는 0-1세가 보육연령 만0세, 2세가 보육연령 만1세로 볼 수 있어,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유아를 6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은 79.2%, 한부모 가구는 6.8%, 3세대 가구는 5.9%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 815만 명(전체 인구의 15.7%)에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900만 명(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총조사(2000~2020년, 5년 단위) 자료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6.2%에서 2020년 21.1%로, 부부 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27.9%에서 37.8%로 증가했으나 자녀 동거 가구 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인구수 추계 결과(2020~205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kr

영유아 대상 아동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 유치원 원아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수혜 아동수는 약 240만 명(중복 포함)이며, 각 유형별로는 양육수당 56.1만 명(전체의 23.4%), 어린이집(보육료지원) 118.5만 명(49.4%), 유아학비 58.3만 명(24.3%), 아동돌봄서비스(시간제 포함) 7.2만 명(3%) 등이다.

노인돌봄서비스로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인구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128.1만 명이며 이 중 95.4만 명(신청자의 86.9%)²⁾이 등급 인정을

2) 65세 이상 인구의 10.7%

받았으며 신청자 및 등급 인정자 수, 인정비율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 노후생활, 노인의 기능 및 건강유지, 악화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로, 2020년 기준 지원대상자수는 약 45만 명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대상자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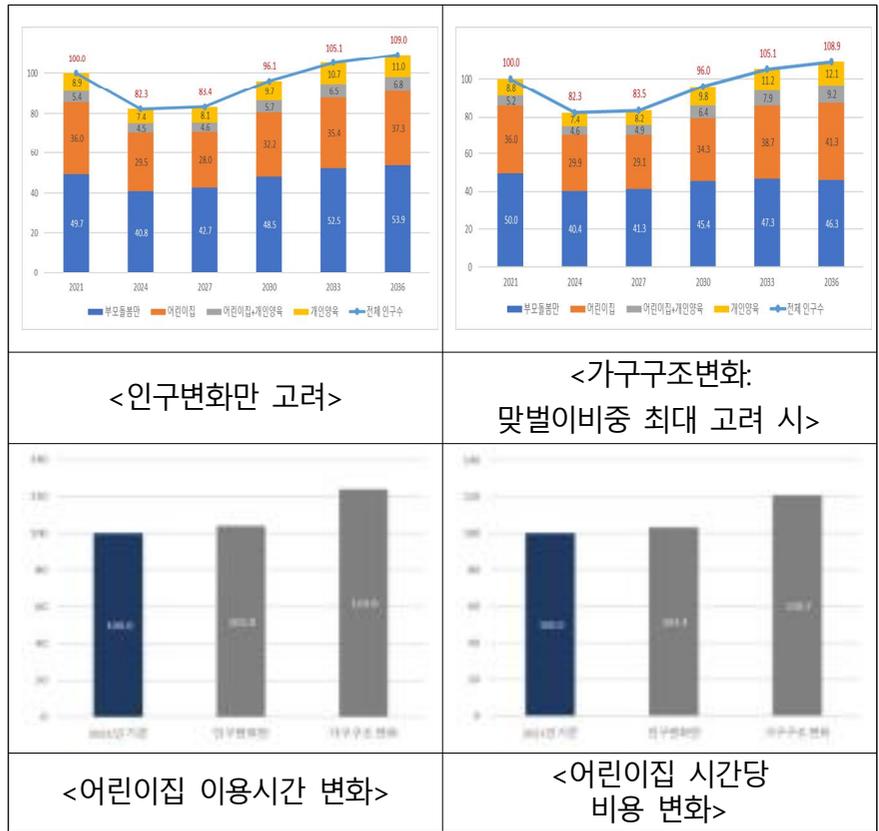
II 연구 결과

1.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장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이용자 규모)는 영유아수에 돌봄유형별 이용률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되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영유아 가구 구조 변화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반영하였다. 영유아 가구는 (1) 부부+미혼자녀가구-맞벌이 (2) 부부+미혼자녀가구-비맞벌이 (3) 한부모가구 (4) 3세대가구-맞벌이 (5) 3세대가구-비맞벌이 (6) 기타가구로 나누고, 통계청 인구패널의 2015~2021년간 영유아 가구구조 변화(전이행렬로 구성)가 2036년까지 지속 혹은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또한, 영유아 돌봄유형은 중복 활용을 포함하여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유아 개인 및 부모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돌봄유형별 돌봄시간 및 비용을 추정하여 돌봄서비스별 이용시간 및 비용 변화도 함께 탐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패널자료 2015~2021년을 기초로 2021~2036년까지의 가구구조변화를 추계하고, 돌봄유형별 이용률 및 시간 등의 분석에는 보육실태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영아(만0~2세) 수는 통계청 인구변화 가정에 따라 2021년 88.4만 명에서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 96.4만 명으로 증가한다.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돌봄 유형의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 8.5% 증가하나, 어린이집은 동기간 6.6%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약 24.3% 증가한다. 여기에 영유아가 속해있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약 48.6% 증가한다.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은 가구구조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는 2021년 이용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2036년에는 106.9~124.0이 되며, 어린이집 비용은 106~123.0, 시간당 비용은 105.7~120.7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8.4만 명=100으로 환산)



주: 가구구조 변화는 2015-21년 가구구조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유아(만3~6세)의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160.3만 명에서 2036년 76.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의 돌봄 유형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유아수의 큰 감소로 인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에는 19.9%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20.0%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27.9%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약 23.9% 감소한다. 인구변화에 맞벌이 비중이 최대로 증가하는 가구구조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에는 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17.4%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29.7% 감소, 개인 양육은 16.2% 감소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21년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2036년에는 80~83.8, 비용은 81.4~83.3, 시간당 비용은 79.4~81.8 정도가 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어린이집만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나 가구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우 모두 2021년 현재 수준의 70~7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호 정도 및 두 기관 간의 대체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노인돌봄서비스의 장래 이용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패널 2015~2021년 자료를 기초로 2021~35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가구 내 고령자의 수(1인, 2인이상)별 가구유형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고령층의 돌봄서비스 유형을 (1) 비공식 돌봄(가족 및 지인) (2) 공식 돌봄(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병인 등) (3) 비공식과 공식돌봄 중복 활용 (4) 도움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고, 고령자패널조사 자료를 기초로 개인 및 가구 요인을 고려하여 돌봄유형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앞의 결과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인구수에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이용 규모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65세 이상 인구수를 100이라고 하면 이 중 돌봄이 필요한 규모는 2021년 12.2에서 2035년 23.4로 약 1.92배 정도 증가한다. 이는 동기간 고령층 인구,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층 가구구조 변화를 추가로 고려하면, 2035년 돌봄 필요 규모는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비중 및 돌봄 유형별 선호에 따라 22.6~23.3로 달라지며 공식 돌봄의 규모가 커진다.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 비중이 최대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비공식 돌봄(중복유형 포함)은 2021년 6.5에서 2035년 10.8 정도가 된다. 공식 돌봄(중복유형 포함)은 2021년 2.5에서 2035년 4.8이 되며,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나 어떠한 돌봄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인구 규모를 잠재적 공식 돌봄으로 보면 전체 공식돌봄 필요 규모는 약 12.6 정도가 된다. 추가로,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식 돌봄시간은 2021년 대비 2035년 2.7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비공식 돌봄규모(중복유형 포함)는 12.9('21)에서 23.9('35), 공식 돌봄(중복유형 포함)은 5.1('21)에서 9.7('35)로 커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 규모 포함 시 전체 공식 돌봄은 22.9(35)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비공식 돌봄의 의존도가 높지만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비중은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돌봄의 수요는 제시된 결과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 고령자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57.1만 명=100)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장래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때, 인구 규모 및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영아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비해 시설 돌봄 및 개인양육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의 효과로 인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하지 않거나 아동 수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노인돌봄의 경우에도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공식 돌봄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용 인원과 같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는 서비스 이용 아동 및 고령자 1명당 돌봄 시간과 돌봄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에 따라 영아의 시설 및 개인 양육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75세 이상 인구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식 돌봄의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가 가져올 정책적인 도전은 인력 및 서비스 유형 간 불균형 대응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출생아 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출산 추이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아와 유아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의 추이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실현되는 경우, 2036년까지 영아 돌봄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로 인해 전체 돌봄서비스 수요 중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비중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영아와 유아 돌봄서비스 인력 및 시설이 완전히 대체적이지 않다면, 향후 영아 및 유아 돌봄서비스 인력 및 시설 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어린이집, 유치원, 개인 양육 등) 돌봄서비스 시설 및 인력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면 유형 간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의 변화로 인해 장시간, 고비용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공급 측면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로 인해 나타날 아동 돌봄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 등 개인양육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맞벌이가구 및 영유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개인양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자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가 가져올 정책적인 도전은 기본적으로 양적인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과 무관하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2036년까지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변화와 산업 및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수요 변화를 결합한 장래 인력수급에 관한 전망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매우 큰 규모의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이철희 외, 2023).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빠른 증가와 지역 간 수급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 인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다. 먼저, 재가돌봄, 시설돌봄, 노인맞춤돌봄 등 서비스별 돌봄인력 운영 현황 및 특성 분석,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 등을 통해 적절한 처우 제고, 교육훈련 및 자격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여 내국인의 돌봄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호 및 진입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숙련도 제고, 체류비 등을 포함한 처우,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도입방안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장래 돌봄서비스 수요는 고령 인구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고령자 친화적인 방향의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 소득수준, 문화적인 규범, 생애 경험 등에 있어서 과거 세대와 다른 출생코호트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돌봄서비스의 유형이나 질에 대한 수요가 바뀌게 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출생 코호트 간 차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래의 고령자는 같은 특성을 가진 현재 고령자와는 다른 돌봄 수요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고령인구의 경우 이질성이 크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형이나 질에 있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필요해질 수 있다. 추가로,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가족 부양에 대한 가치 인식 변화에 따른 공식 돌봄에 대한 선호 증가 등에 따라서 공식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지혜(2023),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철희·이지혜(2023),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 추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이지혜·이철희(2024),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한국인구학, 제47권 제1호, pp. 73-108.
- 이철희·엄상민·이종관(2023),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 현황: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김홍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혜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I 현실 진단과 평가

글로벌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와 이들의 보건복지 서비스 니즈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432만 명에서, 2022년 89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1,298만 명, 2040년에는 1,72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3).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년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과 2020년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독거노인의 비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 자녀 동거 희망률 등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던 돌봄 역할이 줄어들고, 공적인 영역에서 돌봄 책임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양난주, 2020).

이에 더하여,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6%의 노인이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희망한다고 응답하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aging in place)하고자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수 및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신윤정 외, 2021).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로, 노인돌봄 뿐 아니라 아동돌봄 역시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인 공적

아동 돌봄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하는 건강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노동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공급 불균형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윤정 외, 2021).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북미와 유럽 또 일부 아시아의 여러 고소득 국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의 해결에 있어 이민 노동 인력을 적극 활용해 왔다(김유휘 외, 2021). 즉, 자국 여성들의 건강돌봄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낮아 북미와 북서유럽의 많은 고소득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이주의 해당 시장에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한동안 제한되었고, 이 기간에 고소득 유럽 국가들에서의 돌봄 서비스의 중단, 운영의 혼란(disruption)은 고소득 국가들의 얼마나 외국인 인력에 의존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운영해 왔는지, 또 동시에 외국인 돌봄인력 공급 시장이 국가에 따라서는 얼마나 취약한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보건위생 관리 상황 등에 대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Kulmann, E. et al., 2020).

코로나-19 동안 임금 상승, 추가 노동인력 추가 등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재정과 인력 지원들이 있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면서도 집중적 사망이 있었던 노인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국제 기구,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있었으나(OECD, 2021)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보고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 서비스 노동 시장을 빠져나간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아 현장은 인력 부족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이는 남아 있던 인력들의 소진을 가중시키고 추가적인 인력 이탈이 우려되고(ICN, 2020), 이는 서비스 질의 악화로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이는 국가 간의 이민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경쟁적 리크루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Catherine V. et al, 2022). 이는 특히 단일 시장을 표방한 유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고되며, 유럽 내에서 보건복지 인력 부족에 대해 범유럽적 대응과 윤리적인 리크루트, 이민 인력의 일자리의 질과 임금,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노동권 보호, 나아가 이들의 사회통합

이슈까지 다양한 정책 아젠다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되고 있으나, 명확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보건복지분야의 이민인력 도입은 1999년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2002년 '서비스 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를 통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 및 일부 서비스업에 취업활동이 가능해졌다(김유휘, 2018).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내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규용, 2007). 이후,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며, 재외동포들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도 돌봄서비스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돌봄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김유휘 외, 2021).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 전문인력은 경우 이민자의 규모가 크지 않다(강동관, 2018). 한편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등의 보건돌봄인력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상당수 되리라 생각되나 이들의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연구들이 있으나 질적 연구들이거나 편의 표본 등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박민정 외, 2020; 김유휘 외, 2021; 이규용 외, 2023).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 의의가 크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위한 이들 그룹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근거 자료 필요에 부응하고자 법무부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OM의 이주민의 건강 결정요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세 개의 도메인-개인, 일과 노동, 그리고 사회—에 해당되는

결정요인을 대표성 있는 표본 자료에 가중치를 넣어 프로파일링을 해 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이주민 여성의 경우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정의하였다. 돌봄 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4(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들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Q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민 여성을 직업분류 대분류 4와 산업분류 대분류 Q를 모두 만족하는 여성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총 샘플 수는 27,381명이었다.

II 연구 결과

1.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만족도

조사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미충족 의료 니즈가 없다고 응답했고, 8.5%만이 미충족 니즈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가보고 건강수준(self-reported health)으로 측정한 전반적 건강상태의 경우,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매우 좋음(19.9%), 좋음(33.4%)이라 응답하였으며, 보통(29.9%)이 그 뒤를 이었다. 나쁨이라 응답한 사람은 16.1%였고,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사람은 0.7%로 적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3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만족한다(35.7%)로, 이들을 합하면 73.3%에 달한다. 보통은 24.2%였고,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2.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결정요인: 개인적 특성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이주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55.3%)의 노년층이고 50대 이상이 89.2%에 해당되어 유럽과 북미의 경우 비교적 젊은 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에 있어서도 대졸은 12.3%에 불과하며 초졸 이하도 16.5%에 달한다. 이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인력은 전문직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고학력 인력이 진입하기 비교적 쉬운 첫 직업으로 해당 분야의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꽤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중고령의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민들의 3명 중 2명은 기혼 상태이고, 대부분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93.4%), 대다수(82.3%)가 수도권 지역 거주하고 있었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Korean-Chinese)가 82.3%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도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한국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여성 이주인력의 독특한 특성이라 하겠다.

3.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결정요인: 사회적 특성

체류 기간 측면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인다. 약 절반 정도가(49.5%) 10년이상 거주했고, 비자 종류로도 work and visit 비자는 15.0%에 달할 뿐 재외동포(overseas Korean, 54.9%)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15.0%)가 6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가 해당 노동시장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56.1%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8.2%에 달했으나 공식 한국어 시험을 응시한 경우 9.0%로 매우 적었다.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본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3.1%였으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다는 응답은 36.5%에 그쳤다. 약 5명 중 1명(18.3%)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결정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특성

해당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professional status는 다양하였는데 정규직이 33%에 그쳤고, 비정규직이 42.2%에 달했고, 일용직도 24.8%로 보고되었다. 해서 3명 중 1명만이 안정적인 professional statu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6.3% 44.9%였으나 10%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의 보험 가입 상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도 보인다.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는 300명 이상인 경우는 2.4%뿐이었고, 100명 이상도 11.0%였다. 한편 10~2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99명 규모의 사업장이었다(20.3%). 노동 시간의 경우 60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50시간(27.3%), 50~60시간(12.9%)이었다. 이는 보건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5명 중 2명은 5인 이상 사업자 대상 주 52시간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9.6% 뿐인 것으로 고려할 때, 대다수가 저임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의 경우 월 평균 200~300만원인 경우가 5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200만원으로 33.1%였다. 3백만원 이상은 6.1%였고, 1백만원 이하로 응답한 경우도 9.1%에 달했다. 이는 임금 만족도에 반영되어 매우 좋음, 좋음은 46.0%에 그쳤다. 60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과 임금만족도는 낮은 것은 알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직 경험에 대한 보고로 오직 15.4%만이 이직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같은 직장에서 지속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이주민 표본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의 보건복지분야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의 미충족 의료 니즈,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건강결정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일과 생활환경적 도메인을 나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며 서비스업을 분류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주로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미충족 의료 니즈를 가진 대상자가 10% 미만인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효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미충족 의료 니즈를 가진 대상자의 특성은 보다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전반적 건강상태의 경우 절반 정도(53.3%)의 대상자만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 응답하였다. 이주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채덕희 외, 2019; 강수진 외, 2022)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한 대상자의 비율이 23~24%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분석에서 나쁨(16.1%)과 매우 나쁨(0.7%)이라 답한 대상자 역시 약 17% 정도로 조금 낮았으나 보통이 약 30%로 조금 더 많은 양상이었다.

개인적 건강결정 요인들의 경우 한국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령이고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은 이들이 건강과 돌봄 취약군을 돌보는 일을 하나 본인들도 연령과 학력 면에서 건강 취약군임을 시사한다. 해외의 연구들이 이민 돌봄인력의 경우 자국 돌봄인력에 비해 건강하다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민 돌봄자가 사회의 복지체계에 부담보다는 자선임을 강조(Olakivi, A. et al, 2023; Patel, K. et al, 2018; Lehti, V. et al, 2017)하는 반면,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들이 중고령자이며 신체와 감정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직업보건 관점에서 이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겠고, 인식하는 미충족의료 니즈가 낮으나, 건강보험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문제와 의료이용 패턴 등이 한국인 종사자와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의 건강 결정요인 도메인의 경우 먼저 대다수의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점과,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란 점을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역양 등이 다

르긴 하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재외동포이며 한국 생활에 이미 익숙한 인구집단이 있다는 점은 의사소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대인서비스인 보건복지서비스업의 향후 급증할 수요에 대응해 노동 인력 공급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인력들은 다수가 중고령 여성이어서 보다 젊은 연령층의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도 같은 업종에 지속적 유입이 있을지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연구들은 해외(중국)동포인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긴장과 차별, work ethics의 차이 등의 이슈들을 보고하고 있다(이규용 외, 2023).

본 연구자료에서도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여성 중 18.3%가 차별경험을 보고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향후 증가한다고 할 때를 대비해 거시적 차원의 사회통합 정책과 해당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이민자 고용기관 대상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자료에서 도움을 처할 수 있는 동향의 외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3.%에 달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은 이민자 개인의 역량에 따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로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들과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건 관련 건강 결정요인 도메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한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22년 37.5%인 것에 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본 연구대상자 군에서는 정규직이 33.0%로 보고되어 다수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서서히 줄고 있으나 여성, 60대, 보건복지서비스업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민자와 본국인 간의 임금 격차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의 많은 직종에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정치·경제학적으로 복잡한 이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해법들을 모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가 육아, 간병 등을 위한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을 외국인 인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규약 등으

로 이들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과 같이 개인 간 사적 고용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KDI, 채민석, 2024).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이하로 육아지원 서비스에 한해 도입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쪽은 월 200~300만원 이상의 높은 돌봄 인력 비용은 중산층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직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여성계는 노동 인권과 서비스 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3세 유아의 95%가 무상보육으로 보육기관을 다니는 점과 가장 희망하는 돌봄서비스가 국공립·직장·민간 어린이집(50.8%)과 본인이나 배우자(15.0%)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박종서 외, 2021) 개인 간 사적고용을 통한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무관하게 현재의 보건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은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보여준다. 대다수가 중고령 60대 여성이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0~300만원이 대부분(84.8%)이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 10~3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근무하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42%에 달하여 초과 근무도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한편 이직 경험이 15.4%로 낮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있어 일정 업종, 권역에의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저인력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함께 돌봄, 생활지원이 주를 이루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외국인 돌봄서비스 인력 고용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대두되었고, 이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이슈는 해당 업종의 이슈가 아니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50년에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노인과 그들의 가족이라 할 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아젠다이다. 또한, 노동, 보건복지, 가족, 법, 주택, 교육, 외교 등 범부처적 협력을 통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 등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하는 보다 큰 정책의 청사진 하에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50대

이상 중고령자로 미충적 의료니즈는 비교적 인지하고 있지 못한 반면, 자가보고 기반 건강수준은 절반만이 좋음 이상으로 보고하여 향후 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들 이주 노동자들이 개인적, 사회적, 생활 및 근로조건 영역별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 노동자는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적 역할을 넘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인구집단이라 생각할 때 이들의 건강 관리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는 보건 및 사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는 상당히 동질한 한국 사회에 이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나갈지의 대한 정책적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관련된 이슈들이 선제적으로 다각도로 심층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해당 이슈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첨예한 입장 차가 있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숙의과정 또한 필요하겠다. 2023년에 한국 인구의 4.9%가 외국인으로,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사회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상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이주 여성 돌봄 노동자 정책은 해당 계획에서 강조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필요와 파급력 측면에서는 외국인정책 성공의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정책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유휘(2018), "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1), 180-208.
- 김유휘 외(2021),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동관 외(2018),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및 체류 실태 분석연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박민정 외(2020),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서비스 제고를 위한 이민 정책의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외(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난주(2020),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표를 다시 묻는다", 제3차 사회서비스 혁신포럼 발표자료(2020.11.13.).

이규용(2007),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과제", 노동리뷰, 3(-), 19-30.
통계청(2023,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2022 ~ 2072년"

Catherine Vaillancourt-Laflamme, Jane Pillinger, Nicola Yeates, Genevieve Gencianos, Gihan Ismail, Nashwa Ismail and Carlos Montoro(2022), Impacts of Covid-19 on migrant health workers: a review of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provision, 10th September, Milton Keynes, UK/Ferney Voltaire, France: The Open University/Public Services International.(DOI: <https://doi.org/10.21954/ou.ro.00014b4d>)

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2020), COVID-19 and the international supply of nurses, Geneva: ICN.

Kuhlmann, E., Falkenbach, M., Klasa, K., Pavolini, E., & Ungureanu, M. I.(2020), "Migrant carers in Europe in times of COVID-19: a call to action for European health workforce governance and a public health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0(Supplement_4), iv22-iv27.

Lehti, V., Gissler, M., Markkula, N., & Suvisaari, J.(2017), "Mortality and causes of death among the migrant population of Finland in 2011–13",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7(1), 117-123.

OECD(2021), Rising from the COVID-19 crisis: Policy responses in the long-termcare sector.

Olakivi, A., Kouvonen, A., Koskinen, A., Kemppainen, L., Kokkinen, L., & Väänänen, A.(2023), "Sickness absence among migrant and non-migrant care workers in Finland: A register-based follow-up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4034948231168434.

Patel, K., Kouvonen, A., Koskinen, A., Kokkinen, L., Donnelly, M., O'Reilly, D., & Vaananen, A.(2018), "Distinctive role of income in the all-cause mortality among working age migrants and the settled population in Finland: a follow-up study from 2001 to 2014",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6(2), 214-220.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menuNo=200433&pageIndex=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4/DOJXWRQWHFH6VACVN2T26IEXCU/

3. 노인돌봄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의 활용과 정책 대응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I 현실 진단과 평가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바 있으며(채민석 외, 2024),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이 계획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23).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이민 인력의 유입은 여러 사회적 비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이민 인력 정책 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돌봄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 정책 마련 시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서비스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 시장 영역의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과 차별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돌봄 영역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 방식은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에 의해 인력이 공급되거나, 고용과 체류자격을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선택적으로 국내로 이주시키는 유형(managed migration scheme)이 있다. 노인돌봄의 주된 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요양보호사로 근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노인돌봄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의 활용은 고용과 체류자격을 연계해 필요 인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 외국인 노인돌봄 인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시장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의 진출입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서비스 가격(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³⁾ 그러나 정해진 수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이 즉각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 외국인과 내국인 간 대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내국인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는 선별적인(selective) 인력 유입 정책이 필요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해 인력 확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트리는 약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Fasani et al.(2020)에서 지적하듯이 이민 인력의 유입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민 인력 유입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민 인력은 무작위의 개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선택적인 개인의 유입이므로 이민 인력 유입의 효과가 단순 인력 유입의 영향인지 유입 인력의 특성에 따른 영향인지를 구분 짓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민·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민·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 상황과 외국인 인력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본 장에서는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현황을 제한적이거나 확인하고, 이민 인력 활용이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과 수급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확인해, 향후 본격적인 이민·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큰 폭의 서비스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II 연구결과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 관련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인력 규모는 약 3,200명이다. 국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52만 6천여 명⁴⁾임을 고려하면, 장기요양 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은 소수이다. 제한적인 외국인 인력의 유입에는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외국인, 특히 여성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장기요양 분야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진입장벽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일 수 있다.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 취득이 요구된다.⁵⁾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체류 조건 및 체류 기한 등이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2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가 교육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4). 정부는 지역의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10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구직(D-10) 비자 소지자까지 교육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⁶⁾.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국인 근로 양상과 달리 간병 서비스는 주로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간병 인력의 법적 근거나

4)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26,376명이며 전문인력이 72,146명,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 인력이 454,239명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보건복지부, 2024).

6)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거주(F-2) 비자 소지자가 포함되었다. 2009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서 외국인 관련 기준이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교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기준에서 한국어 능력 검증 기준이 삭제되었다. 2014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가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김유휘, 2018).

자격 요건은 없다. 그 결과 근로를 위한 비자 기준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와 달리 간병 서비스는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이 근로 인력의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민간 영역의 간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등 나은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의 외국인 인력이 간병 서비스보다 선호하는 점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김유휘 외, 2021). 이민·외국인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선호 변화로 상대적인 고령의 외국인 인력이 장기요양서비스로 유입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직종의 인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숫자는 제한적이나 최근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인적 특성을 제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이민·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현황

<표 3-1>은 매해 말 기준 보건복지 시설에서 근로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요양보호사의 규모를 나타낸다. 2016년 말 기준 38만 명 수준이었던 요양보호사 수는 2023년 56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장기요양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23년 전체 근로 장기요양 인력 중 0.57%를 차지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나, 절대적인 수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표 3-1> 활동 요양보호사 규모

연도	요양보호사 수	내국인	외국인
2016	380,354	99.73%	0.27%
2017	397,904	99.70%	0.30%
2018	418,621	99.68%	0.33%
2019	446,322	99.65%	0.35%
2020	487,821	99.63%	0.37%
2021	512,947	99.57%	0.43%
2022	545,729	99.50%	0.51%
2023	565,923	99.43%	0.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표 3-2>는 2016년부터 2023년 장기요양 시설⁷⁾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다. 2016년 전체 인력 중 60대 이상이 18.9%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60대 이상 인력이 전체 인력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대 이상 인력도 2016년 4,800 명(1.26%)에서 2023년 3만 4천여 명(6.13%)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2> 요양보호사 인력의 연령 분포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6	16.26%	27.74%	37.12%	17.62%	1.26%
2017	14.17%	26.18%	37.72%	20.22%	1.71%
2018	12.45%	24.08%	38.29%	22.93%	2.24%
2019	10.57%	22.32%	38.41%	25.92%	2.79%
2020	8.79%	20.81%	38.21%	28.94%	3.25%
2021	7.26%	18.90%	37.66%	32.35%	3.82%
2022	6.02%	17.25%	36.69%	35.09%	4.96%
2023	5.06%	15.68%	35.81%	37.32%	6.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일반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 인력은 비교가능한(comparable) 내국인 인력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은 내국인 인력보다 오히려 더 고령화 정도가 심한 수준을 나타낸다. 60세 이상 인력이 2016년 기준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31% 수준에서 외국인 인력의 절대적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난 2023년에는

7) 재가와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60세 이상 인력이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중 56%를 차지해 고령 인력이 유입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국인 인력 간 고령화 정도의 격차는 고령화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간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등 나은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의 외국인 인력이 간병인 일자리에서 장기요양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유휘 외(2021)는 기존의 이주 여성들의 주요 일자리인 간병인이나 요식업 또는 제조업의 노동강도가 훨씬 높아, 여성 이주민들이 고령화하면서 생계유지와 노후 소득을 위한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력의 건강 문제, 노동생산성 하락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들은 노인돌봄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이민 인력의 활용은 노인돌봄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에 따른 연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연령 분포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6	5.38%	14.77%	49.02%	29.55%	1.27%
2017	4.09%	13.28%	48.00%	32.85%	1.79%
2018	3.16%	11.33%	49.08%	34.51%	1.91%
2019	2.85%	8.67%	46.38%	39.78%	2.33%
2020	2.92%	8.03%	45.49%	40.37%	3.19%
2021	2.35%	7.29%	43.87%	43.01%	3.49%
2022	1.97%	6.60%	41.29%	45.70%	4.45%
2023	1.68%	5.92%	36.46%	49.74%	6.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낮은 소득 수준은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낮은 선호의 주요 원인이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의 60% 이상이 하위 25% 이하의 소득 수준에 머무른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낮은 소득 수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외국인 인력의 80%가 보험료 분위 소득 하위 25% 이하로 전체 요양보호사 인력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격차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근로 기간 및 경력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3-4> 요양보호사 인력의 소득 분포

	1분위(Q1)		2분위(Q2)		3분위(Q3)		4분위(Q4)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2016	58.10%	75.00%	26.77%	20.83%	11.44%	3.67%	3.69%	0.50%
2017	57.27%	75.80%	27.85%	20.57%	11.16%	3.20%	3.72%	0.43%
2018	59.88%	77.74%	25.78%	18.60%	10.59%	2.76%	3.76%	0.90%
2019	58.84%	77.17%	27.09%	19.75%	10.33%	2.43%	3.74%	0.66%
2020	57.22%	74.42%	29.28%	23.36%	9.85%	1.89%	3.64%	0.33%
2021	58.50%	76.36%	28.36%	21.95%	9.53%	1.37%	3.61%	0.32%
2022	63.32%	82.27%	24.11%	16.09%	9.03%	1.41%	3.54%	0.22%
2023	61.46%	79.93%	26.80%	18.48%	8.52%	1.26%	3.23%	0.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부족이 두드러진다. 2023년 10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자격 기준을 확대한 정책 변화는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의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한다.

<표 3-5> 요양보호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

	전체 인력		외국인 인력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2016	60.25%	39.75%	35.52%	64.48%
2017	60.12%	39.88%	35.66%	64.34%
2018	59.90%	40.10%	34.95%	65.05%
2019	59.71%	40.29%	30.79%	69.21%
2020	59.69%	40.31%	30.58%	69.42%
2021	59.83%	40.17%	30.51%	69.49%
2022	59.48%	40.52%	27.19%	72.81%
2023	59.13%	40.87%	24.74%	75.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2. 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

본 절에서는 돌봄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저숙련 인력의 유입과 선별적 이민 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은 내국인 인력 대체 및 임금 수준의 변화, 그리고 돌봄의

부담이 줄어든 여서 인력의 활용 가능성 증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다.

가. 내국인 인력 대체효과

노인돌봄 분야의 일자리는 저숙련 일자리로 내국인 저숙련 인력과 이민 인력이 대체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저숙련 노동공급의 증가로 저숙련 일자리인 노인돌봄 인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반면, 자본 및 숙련 노동의 소득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득 분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선빈, 2023; 최경수, 2011). 내국인(저숙련) 인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민 인력 활용에서 고려가 필요한 주요한 지점인데,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외국인 인력의 내국인 인력 대체 가능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이다.

노인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과 내국인 근로자 간의 대체관계는 아직 제한적인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근로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단순노동, 건설업, 음식숙박업에서 대체성을 가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내국인 중 중졸 이하의 저숙련자와 대체관계를 가지며(김정호, 2009), 건설업, 음식숙박업에서 내국인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규용, 박성재, 2008; 유경준, 이규용, 2009).

그러나 이민 인력의 구체적인 대체 또는 보완 효과는 일자리의 속성에 따라 차별적이며, 매우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라는 노인돌봄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내·외국인 인력의 대체효과가 다른 저숙련 일자리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나. 인력 공급의 확대와 임금 하락

일반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인력 공급의 확대는 인력 공급을 늘려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제공되며, 노인돌봄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의 확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민 인력의 대규모 공급은 각각의 서비스 공급 비용 조정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선택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민 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민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저숙련 이민 인력의 확충이 재가 서비스 이용의 비용을 낮추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고비용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Butcher et al., 2022). 그러나 미국과 달리 대량의 이민 인력 확보에 제약이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노인돌봄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을 시설 요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이민 인력의 확충이 급격한 노인돌봄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 증가

교육수준이 높은 유휴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특히 공적인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비공식적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민 인력 유입의 확대는 이탈리아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정도와 은퇴 연령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Peri et al., 2013).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공적인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기반의 노인돌봄이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민 인력의 활용을 통한 입주 방식의 노인돌봄 제공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노인돌봄에서 이민 인력 활용 상황을 분석한 Peng(2017)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규제 수준이 높은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특성으로 이민 인력의 활용은 재가 서비스가 아닌 시설 서비스에 주로 국한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큰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는 이민 인력의 활용이 일본의 경험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이민 인력의 활용이 향후의 노인돌봄 정책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사전적 결정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민 인력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민 인력 활용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민·외국인 인력 정책의 방향과 설계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정도가 높고 소득 불평등이 크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면 저숙련 인력의 확대는 내국인 인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이라면 이민 인력의 활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상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3.09.0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설명자료", 보도설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김유휘·이정은·안수란·박고은·전지혜·손인서(2021),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3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호.

보건복지부(2024), 『2024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채민석·이수민·이하민(2024),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4-6호.

최경수(2011),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239호.

Butcher, K. F., Moran, K., & Watson, T.(2022), "Immigrant labor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born elderly",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30(5), pp. 1375–1413.

Fasani, Francesco, Joan Llull, Cristina Tealdi(2020), "The economics of migration: Labour market impacts and migration policies", *Labour Economics*, Volume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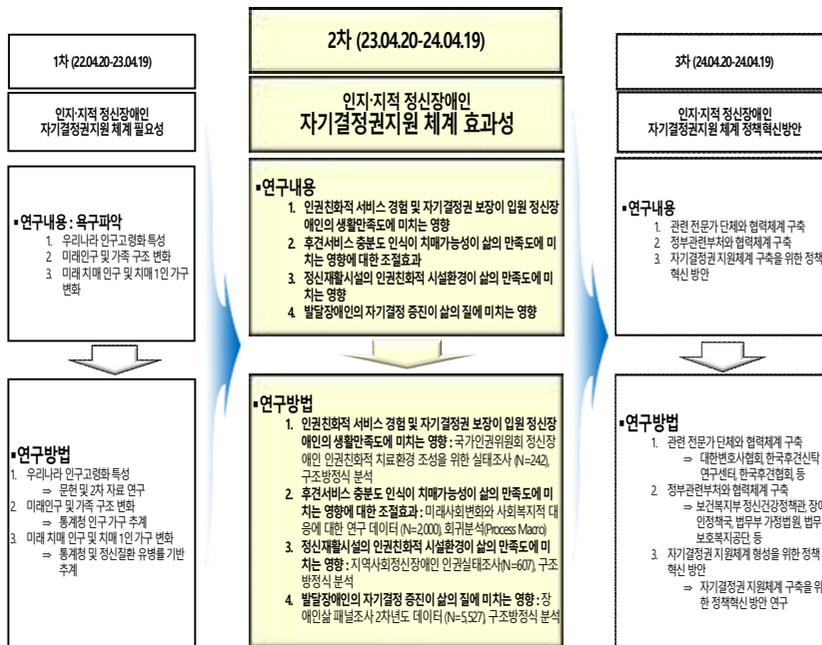
4.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경 및 연구 방향성

다음 그림은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의 배경, 진행, 향후 계획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1] 미래사회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1차 연도(2022년~2023년) 연구는 우리나라 미래 인구 가족구조 변화 및 인자·지적 정신장애 인구 추계를 통해 의료 및 보건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차 연도(2023년~2024년) 연구는 인자·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기결정권지원과 같은 권리기반 접근이 실제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제도 및 서비스가 인자·지적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차 연도(2024년~2025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2차 연도에 걸쳐서 수행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권리기반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인지·지적 장애인 자기결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I 현실 진단과 평가

1. 인지·지적 장애의 이해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 분류 중 신경·인지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결정 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정신장애의 범주는 (1) 지적장애, (2) 자폐성 장애, (3) 정신증적 장애, (4) 치매로 불리는 신경인지장애, 등이 있다.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s)의 하위 진단인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와 자폐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는 발달단계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주로 취학 이전에 나타나서 이후 성장 발달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이다.

지적장애는 (1) 지적 기능 및 능력의 손상, (2) 이로 인한 적응 기능상의 손상, (3) 이러한 지적 및 적응 기능 손상이 생애초기 발달과정에서 시작되는 특성이 있다. 지적장애 유병률은 인구의 1% 정도이고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애는 인구의 약 0.6%에 이른다(APA, 2013).

자폐성 장애는 (1) 다중 영역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 결함이 나타나고(예, ①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의 결여, ② 비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③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이해의 결여, 등), (2) 행동, 관심, 활동 등에 있어서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3) 이러한 증상이 생애 초기 발달과정에서 시작되며, (4)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등 문제없이 기능하고 있던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수행 능력 제약이 나타난다. 자폐성 장애의 유병률은 인구의 약 1%로 추정된다(APA, 2013).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의 주요 증상은 (1)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잘못된 강한 믿음인 망상 증상, (2) 왜곡된 비현실적 지각인 환각 증상, (3) 비논리적이고 와해 된 생각이나 언어, (4) 심하게 혼란스럽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5) 기타 우울 및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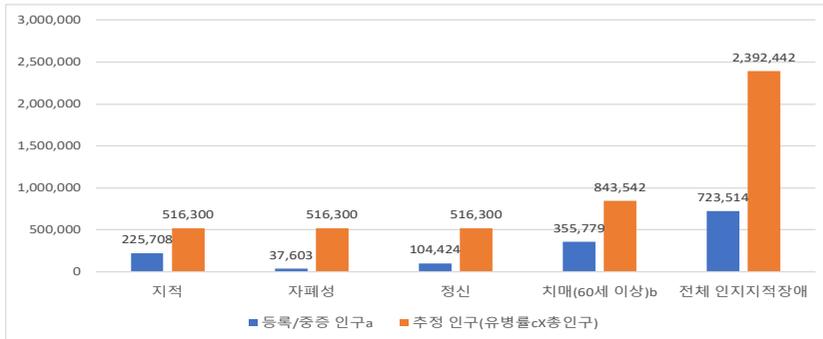
등의 음성증상들이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진단인 조현병(schizophrenia)의 경우 위 5가지 증상 중에서 망상, 환각, 비논리적 사고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을 포함하여 위 5개 증상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증상으로 인해 현저한 기능상 저하가 나타나고,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현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는 증상 및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1)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2)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나눈다.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s)는 주의력, 기능수행, 학습 및 기억력, 언어, 사회적 인지 등 복합적 영역에서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2)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인해 일상 생활상 독립성이 현저히 저하 된 경우에 진단을 내린다. 주요 신경인지장애 유병률은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65세경에는 유병률이 1~2% 정도로 추정되지만, 85세 경에는 30%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경도신경인지장애(Minor Neurocognitive Disorders)는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심각한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 경도일 때 진단하고, 경도 신경인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아서 기능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주변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2. 인지·지적 장애 인구 추계

[그림 4-2]는 우리나라 인지·지적 장애 등록 인구 현황과 유병률에 기초한 추정한 인구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2] 의사결정지원 대상자 규모 추정:
 등록 인지·지적장애인 수와 추정 지적·인지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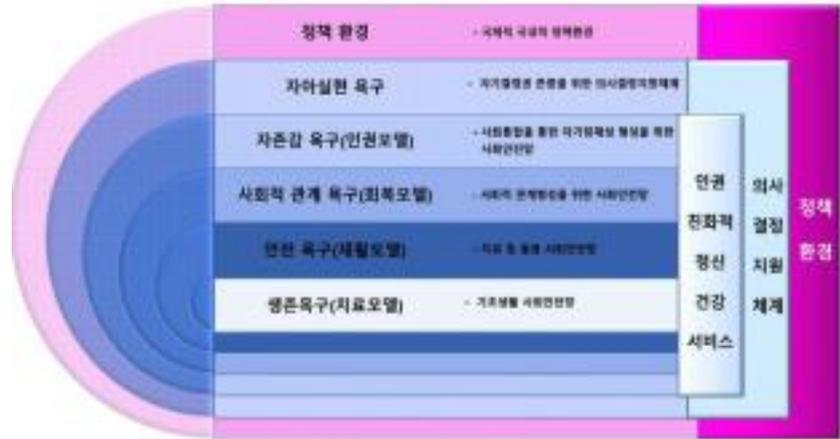
자료: a.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b. 2022 공공포털 데이터 (보건복지부)

장애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등록된 지적장애인 수는 225,708명, 자폐성 장애인은 37,603명, 정신장애인은 104,424명, 중증 치매인구는 355,779명이다. 반면 2022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 수와 자폐성 장애인 수 및 정신장애인 수는 각각 516,300명이고, 추정 치매 인구수는 843,542명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추정되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수가 모두 2,392,442명인데, 이들 중에서 장애 등록을 한 인지·지적 장애인 수는 약 3분의 1 정도인 723,514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나라 인구 중 최소 약 1.5%에서 많게는 4.7%의 국민이 인지·지적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기능 저하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현황 및 한계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1) 생존권 보장을 위한 치료관점,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재활관점, (3) 사회권 보장을 위한 회복관점에서 인간의 생존, 안전, 사회통합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등이 치료모델 관점의 사회복지 접근의 예이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정신재활시설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늘리는 것은 재활모델 관점의 사회복지 접근의 예이다. 지역사회 주거, 교통편의,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회복지원을 하는 접근이 회복모델 관점의 접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주로 치료 및 재활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회복 및 인권 모델 관점에서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림 4-3] 접근관점 변화 권리기반 접근의 필요성



[그림 4-3]은 복지서비스 접근관점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를 도입한 다음, 당사자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환경체계를 구축한 다음,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이유는 WHO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지적 장애인을 위한 정책접근 방향성이 인권 모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UN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책 방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인지·지적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인권 모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권기반 접근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방향인지 또는 인권기반 접근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권기반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인권기반 정책이나 개입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결과

1.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은·강상경, 202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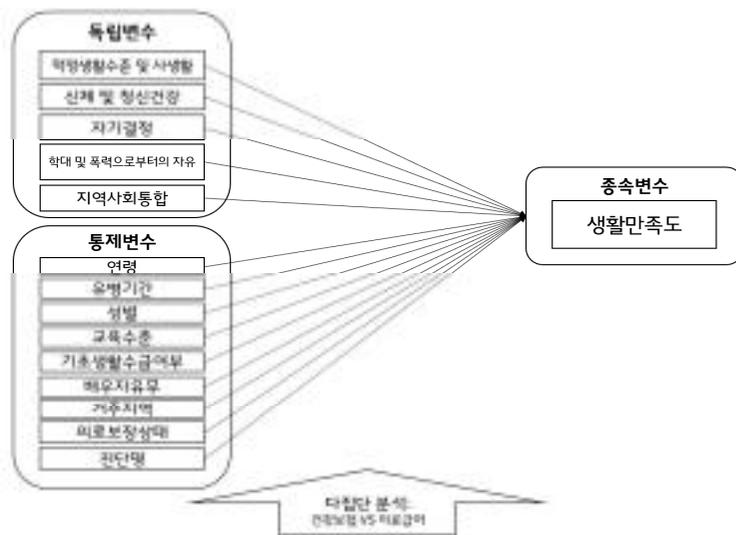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 사각지대 중이 하나인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에서의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 중 자기 결정권 보장 경험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질문

[연구 문제 1] 인권 친화적 서비스(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결정,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의료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나. 연구모형



다. 연구방법

① 데이터 : 입원 정신장애인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N=228)

② 분석 방법 : 구조방정식 및 다중집단분석

라. 연구결과

①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표 4-1>은 연구 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권 친화적 서비스는 입원환자들의 생활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자기 결정권 보장 변수도 생활 만족도와 .10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여, 자기결정이 보장될수록 입원환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나 권리기반 실천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4-1> 정신의료기관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N=228)

변인	정신의료기관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B	s.e.	β
적정생활수준 및 사생활 보장	.402	.125	.253**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	.040	.131	.023
자기결정 보장	.214	.115	.132†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367	.129	.206**
지역사회통합 보장	.026	.075	.023
성별	.038	.082	.026
연령	.003	.004	.045
교육수준	.097	.035	.157**
기초생활수급여부	.339	.138	.221*
배우자 유무	-.069	.131	-.030
장애등록 여부	-.049	.091	-.033
거주지역	.033	.086	.022
유병기간	.003	.004	.041
의료급여수급여부	-.104	.144	-.066
진단명	-.003	.092	-.002

$\chi^2(68)=65.634$ $p=0.339$, CFI=1.000, IFI=1.000, RMSEA=0.000
† $p<.1$, * $p<.05$, ** $p<.01$, *** $p<.001$

② 의료보장상태에 따른 영향요인 차이

<표 4-2>는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기 결정권 보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의 크기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b=.110$, $p>.10$), 의료급여 환자들에게($b=.194$, $p<.05$)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같은 권리기반 실천이 의료보험 환자처럼 경제적 지위가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의료급여 환자처럼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입원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 병원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N=228):
의료보장상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

변인	병원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의료급여			건강보험		
	B	s.e.	β	B	s.e.	β
적정생활수준 및 사생활 보장	.260	.153	.177†	.788	.206	.441***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	.207	.151	.135	-.469	.226	-.239*
자기결정 보장	.293	.140	.194*	.199	.181	.110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203	.157	.123	.727	.203	.351***
지역사회통합 보장	-.093	.091	-.085	.180	.119	.150
성별	.060	.095	.044	-.019	.141	-.012
연령	.003	.005	.048	.004	.007	.055
교육	.097	.039	.175*	.116	.068	.155†
기초생활수급여부	.324	.171	.134†	.322	.208	.133
결혼유무	.080	.174	.032	-.229	.184	-.107
장애등록 여부	-.131	.107	-.094	.113	.155	.065
지역	.078	.096	.058	-.097	.156	-.055
유병기간	.005	.005	.077	.005	.008	.071
진단명	.039	.107	.027	-.245	.156	-.149

†p<.1, *p<.05, **p<.01, ***p<.001

2. 치매 가능성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후견서비스의 보호효과 (박종은·강상경, 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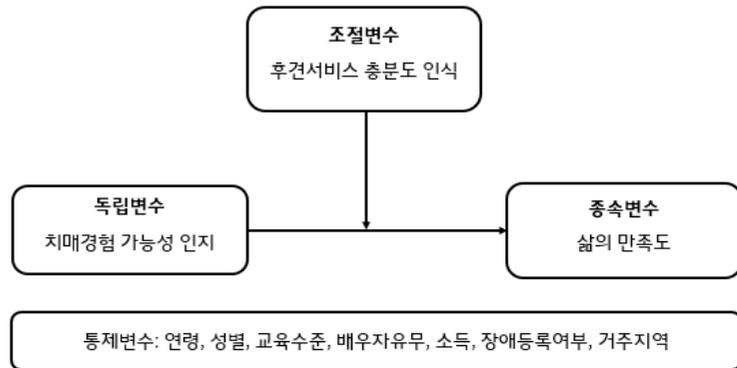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치매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치매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질문

[연구 문제 1]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이 조절하는가?

나. 연구모형



다. 연구방법

- ① 데이터 : 미래사회변화와 사회복지적 대응연구 데이터 (N=2,000)
- ② 분석방법 : 회귀분석 (SPSS Process Macro)

라. 연구결과

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표 4-3>은 연구 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참석자들의 치매 경험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B(se)=-0.0012(0.0006)$, $p<.05$). 또한 이들의 후견서비스 충분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se)=.0988(0.0152)$, $p<.001$). 이러한 연구참석자들이 본인들이 노후에 치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노후 후견서비스가 충분하게 있어서 이용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후견제도 확충 필요성의 근거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3> 치매경험 가능성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t	p
상수	1.3559	.0530	25.6072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	-.0012	.0006	-2.1788	*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988	.0152	6.5139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x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014	.0007	1.9525	#
연령	-.0034	.0009	-3.8293	**
성별(남성=1)	.0419	.0221	1.8916	
교육수준	.0129	.0106	1.2133	
배우자 유무(배우자유=1)	.0357	.0264	1.3501	
ln소득	.0279	.0024	11.5571	***
장애유무(장애유=1)	-.0129	.0626	-.2056	
거주지역(대도시=1)	.0047	.0218	.2137	
R2	.1101			
F	24.6068***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ΔR^2	.0017#			

#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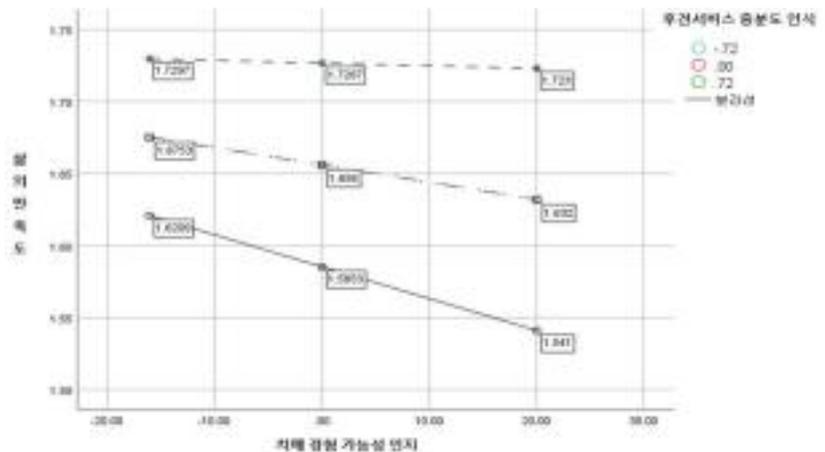
② 치매경험 가능성의 보호효과

<표 4-4>는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에 의해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se)=-0.0014(.0007), p<.10). 즉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매경험 가능성 인지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후견서비스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매경험 가능성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견서비스 확충이 국민들의 치매 걱정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를 완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4> 치매경험 가능성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t	p
상수	1.3559	.0530	25.6072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	-.0012	.0006	-2.1788	*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988	.0152	6.5139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x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014	.0007	1.9525	#
연령	-.0034	.0009	-3.8293	**
성별(남성=1)	.0419	.0221	1.8916	
교육수준	.0129	.0106	1.2133	
배우자 유무(배우자유=1)	.0357	.0264	1.3501	
ln소득	.0279	.0024	11.5571	***
장애유무(장애유=1)	-.0129	.0626	-.2056	
거주지역(대도시=1)	.0047	.0218	.2137	
R2	.1101			
F	24.6068***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Δ R2	.0017#			

#p<.1, *p<.05, **p<.01, ***p<.001



3. 정신재활시설의 인권친화적 시설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해숙·강상경,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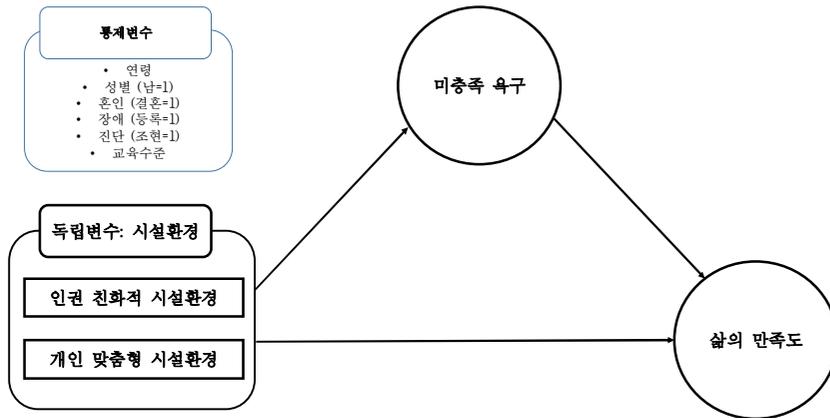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재활시설의 인권친화적 환경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질문

[연구질문 1]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대한 인식(즉, 인권친화적 환경인식, 개인 맞춤형 환경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질문 2].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시설환경에 대한 인식(즉, 인권 친화적 환경인식, 개인 맞춤형 환경인식)은 미충족 욕구에 영향을 주는가?

나. 연구모형



다. 연구방법

- ① 데이터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N=607)
- ② 분석방법 :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라.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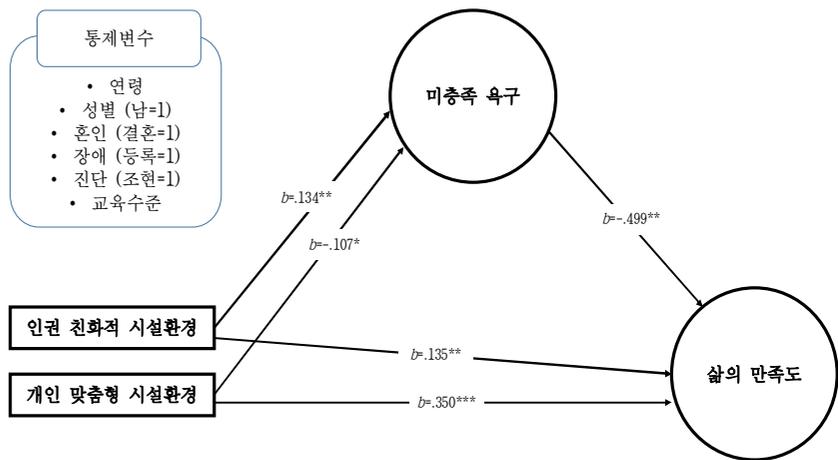
아래 <표 4-5>는 인지·지적장애인의 시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에 대한 [연구 질문 1]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시설 환경을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0.135, p<.01$).

<표 4-5> 시설환경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생변수	내생변수(매개 & 종속)	B (S.E.)	C.R. (p)	β
연령 →		0.007 (0.003)	2.335 *	0.100
성별(남=1) →		-0.009 (0.065)	-0.133	-0.005
혼인(결혼=1) →		0.240 (0.132)	1.818 +	0.075
장애(등록=1) →	미충족욕구 (매개)	-0.393 (0.081)	-4.867 ***	-0.217
진단(조현=1) →		-0.016 (0.076)	-0.217	-0.009
교육수준 →		0.106 (0.031)	3.448 ***	0.140
개인 맞춤형서비스 환경 →		-0.141 (0.068)	-2.079 *	-0.107
인권친화적 실천환경 →		0.192 (0.074)	2.613 **	0.134
미충족욕구(매개) →		-0.335 (0.031)	-10.922 ***	-0.499
연령 →		-0.002 (0.002)	-0.953	-0.034
성별(남=1) →		0.057 (0.037)	1.564	0.053
혼인(결혼=1) →		0.040 (0.074)	0.541	0.019
장애(등록=1) →	삶의 만족도 (종속)	-0.001 (0.046)	-0.019	-0.001
진단(조현=1) →		0.088 (0.043)	2.062 *	0.075
교육수준 →		0.002 (0.017)	0.090	0.003
개인 맞춤형서비스 환경 →		0.312 (0.041)	7.667 ***	0.350
인권친화적 실천환경 →		0.129 (0.042)	3.104 **	0.135

+ p<.10, * p<.05, ** p<.01, *** p<.001
 χ^2 (df)=591.449(211), p<.001; IFI=.948, RMSEA=.055 (.049~.060)

아래 그림은 시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충족 욕구에 영향에 대한 [연구 질문 2]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재활시설 이용자들이 시설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낄수록 미충족 욕구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134$, $p<.01$).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예상·강상경,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증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증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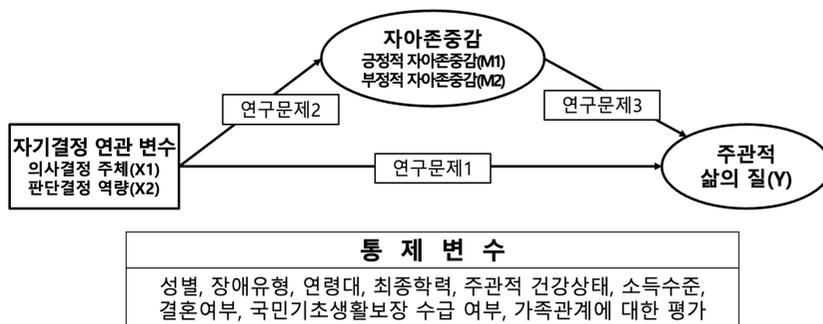
가. 연구질문

[연구 문제 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은 주관적 삶의 질(일상생활 만족도)의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정적 영향을,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 연구모형



다.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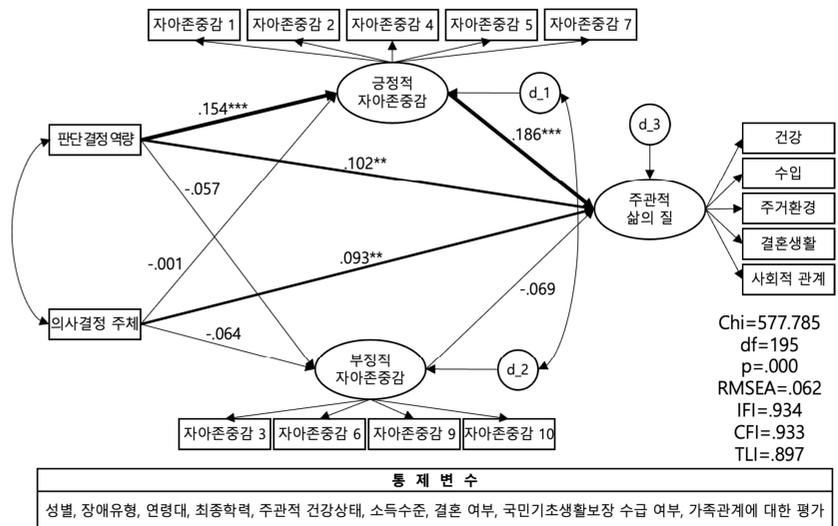
- ① 데이터 : 장애인 삶 패널조사 2차 연도 (N=5,527)
- ② 분석방법 :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라. 연구결과

아래 <표 4-6>과 하단의 그림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 1]과 [연구질문 2]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질문 1]에 대한 분석 결과, 판단 및 결정역량 즉 자기결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b=.102, p<.01$). [연구질문 2]에 대한 분석결과, 자기결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지만($b=.154, p<.001$), 자기결정권 수준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57, p>.10$).

<표 4-6> 자기결정권 증진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판단·결정 역량→ 긍정적 자아존중감	.072	.022	3.307	.154***
판단·결정 역량→ 부정적 자아존중감	-.024	.020	-1.216	-.057
판단·결정 역량→ 주관적 삶의 질	.171	.057	3.005	.102**
의사결정 주체→ 긍정적 자아존중감	-.001	.070	-.013	-.001
의사결정 주체→ 부정적 자아존중감	-.084	.064	-1.303	-.064
의사결정 주체→ 주관적 삶의 질	.483	.182	2.653	.093**
긍정적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질	.665	.150	4.447	.186***
부정적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질	-.274	.167	-1.641	-.069
모형 적합도	$\chi^2=577.785$, $df=195$, $p=.000$, $RMSEA=.062$, $IFI=.934$, $CFI=.933$, $TLI=.897$			



(*: $p < .05$, **: $p < .01$, ***: $p < .001$)

아래 <표 4-7>은 효과분해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판단 및 결정 역량 즉 자기결정권 변수는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총효과, $b=.135$, $p < .05$), 총효과 중 상당부분이 직접효과로 나타났고($b=.102$, $p < .05$),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었다($b=.033$, $p < .01$).

<표 4-7> 효과분해

		판단·결정 역량	의사결정 주체
주관적 삶의 질 (생활 만족도)	총효과	.135*	.097*
	직접효과	.102*	.093*
	간접효과	.033**	.004

아래 <표 4-8>은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능한 4개의 경로들 중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b=.048, p<.01$), 나머지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8> 경로들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패턴변수	간접효과
P2(판단·결정 역량 → 긍정적 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48**
P4(판단·결정 역량 → 부정적 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07
P6(의사결정 주체 → 긍정적 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01
P8(의사결정 주체 → 부정적 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23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미래 인구 및 사회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 증가와 1인 단독가구의 증가이다. 이러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치매와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와 가족 단위 상호작용의 저하로 국민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11조 3,275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대비 약 135% 증가한 수준이다(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 정신장애는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및 직업기능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정신장애 중 의사결정 장애를 수반하는 신경인지장애는 치매나 지적 장애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수반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양한 신경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원의사결정제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연도에는 인지장애 발생 및 지원의사결정제도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경인지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2차 연도 동안 시행된 4개 연구의 요약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은·강상경, 2023a)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수준 생활 및 사생활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영향요인이 의료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4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자기 결정권 보장이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치매 가능성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후견 서비스의 보호 효과 (박종은·강상경, 2023b)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국민의 삶과 당사자는 물론 돌봄 관계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대처해야 할 국가적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인지하는 치매 경험 가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 서비스의 충분도 인식의 매개·조절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변화와 사회복지적 대응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2,0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프로세스 매크로(모델1, 모델4)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후견 서비스 충분도 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조절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치매 경험 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치매 경험 가능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후견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적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매 또는 치매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저하 위험이 국가 차원의 후견 서비스 제도화 및 실시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후견 서비스의 확충과 후견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인구사회 변화로 인한 인지·지적 장애 인구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해숙·강상경, 2023)

본 연구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시설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당사자가 인지한 미충족

욕구가 매개하는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시설환경에 대한 인식은 ① 정신재활시설이 얼마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환경' 인식과 ② 정신재활시설이 얼마나 인권 친화적 실천을 하는지에 대한 '인권 친화적 환경'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미충족 욕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당사자가 인지한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로 측정되었다. 연구 목적을 위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607명의 정신재활시설 이용 정신장애인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환경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여, 미충족 욕구의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인권 친화적 환경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지만, 간접효과는 직접 효과와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나 간접효과는 억제 효과로 나타났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당사자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어서, 당사자 맞춤형 서비스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권 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당사자의 자기 인식 및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 내적 통제력에 의한 회복을 통한 삶의 만족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인 맞춤형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재 구조화하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정신재활시설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인권 친화적 서비스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예상·강상경,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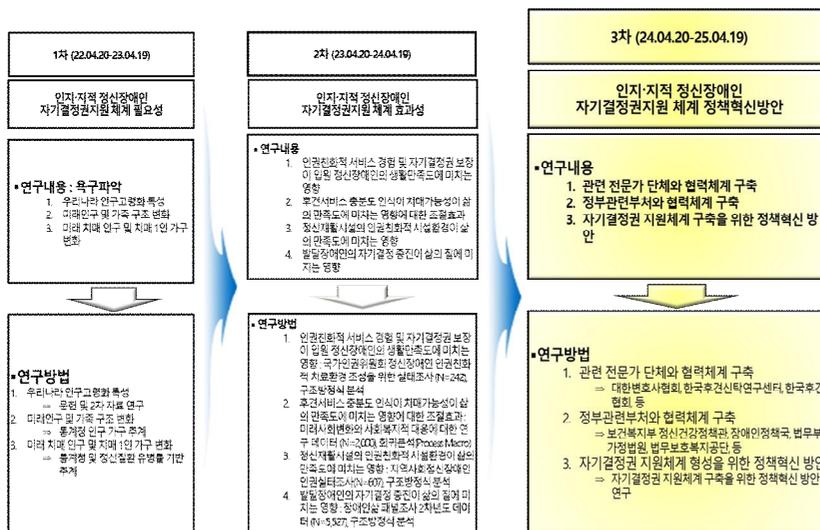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장애인 삶 패널조사" 2차연도(2019년) 조사에 응답한 발달장애인 51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과 연관된 변수는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 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주체를 '나 자신'으로 선택한 여부는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중에서 '판단·결정 역량→긍정적 자아존중감→주관적 삶의 질'을 잇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서비스의 제도화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후속 연구(2024~2025)

아래 그림에 도식화된 것처럼, 1차 연도에는 인구사회변화에 따른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인구추계를 중심으로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고, 2차 연도에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자기결정지원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인지·지적 정신장애인의 수가 급증할 것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확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면서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3차 연도에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회 활동 및 혁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4-4] 미래사회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참고문헌

강상경 외(2022),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

박종은·강상경(2023a), "인권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보장 상태에 따른 다집단 분석", 보건사회연구, 43(2), 147-168.

박종은·강상경(2023b), "치매 경험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0(3), 237-267.

전해숙·강상경(2023),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과 미충족 욕구의 매개효과: 개인 맞춤형 시설환경 또는 인권친화적 시설환경?",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0(2), 5-36.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2019), 『2019 정신건강정책포럼 요약본』, 서울: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2019),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 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

조예상·강상경(2023),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 증진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0, 87-117.

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통계연보』.

APA(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5. 자녀 없음이 아시아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연구

하정화(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현실 진단과 평가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 자녀가 노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개인적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다. 따라서 노년기 자녀의 부재는 노인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Croll, 2006; Raymo et al., 2008), 기존 연구들 역시 노년기 자녀없음의 부정적 영향을 주로 다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와 함께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인들이 도시로 이주한 성인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시아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녀가 없이, 혹은 자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비교를 통해 이 영향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아시아 내에서 경제발전 수준, 인구통계학적 궤적, 문화적 기반, 인구고령화 정책이 서로 다른 국가인 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노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두 가지 서로 다른 자녀 부재의 형태에 주목해 '실제 무자녀' 노인과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규모가 각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 '실제 무자녀' 노인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거나 자녀가 있었으나 사별한 노인이다.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자녀가 있지만 근처에 살지 않는 노인이다. 둘째,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자녀 부재가 노년기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무자녀 경험이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섯 개 국가의 구조적, 제도적 요인과 문화적 규범을 비교하여,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상태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결과

1.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들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사회적 지지의 콘보이 모델(convoy model of social relations), 세대 간 결속 이론(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ory),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자녀의 유무가 노년기 삶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자녀가 실제로 혹은 실질적으로 없는 노인은 자녀가 있는 노인에 비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안녕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Aboderin, 2004).

그러나 무자녀와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서구 국가의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없음과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자녀가 없는 노인이 자녀가 있는 노인에 비해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연구(Dykstra, 2006; Vicente and Guadalupe, 2022; Vikström et al., 2011)도 있지만,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Keith 1983; Wenger et al. 2007)도 존재한다. 외로움 등 심리적 건강 면에서도 무자녀의 영향이 성별, 결혼 여부,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ropeckyj-Cox, 1998; Vikström et al., 2011; Zhang and Hayward, 2001). 국가간 비교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가 심리적 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사회의 무자녀에 대한 관용 수준, 사회적 접촉 수준, 출산장려문화 등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Huijts et al., 2011; Tanaka and Johnson, 2014).

서구 사회의 연구들과 달리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eng et al., 2014; Zhang and Liu, 2007). 그러나, '실제 무자녀' 상태와 '사실상 무자녀' 상태의 결과를 구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아시아의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무자녀, 심리적 안녕,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족 규모의 감소, 생산활동가능인구의 이주 증가, 공식적인 돌봄 제도의 발달로 노인 부양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효'가 여전히 규범으로 남아 있는 문화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이 노인의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 정책이 서로 다른 아시아 5개국의 맥락에서 무자녀의 다양한 차원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무자녀 상태와 노년기 사회적·심리적 안녕의 관계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볼 때, 여성은 축적된 경제적 자산의 부족으로 남성에게 비해 자녀없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Koropecj-Cox, 1998). 소득과 관련해서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녀의 지원 없이도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의료 돌봄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Wenger et al., 2007),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Mood and Jonsson,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없음의 영향이 성별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2. 사회적 맥락

연구의 대상이 되는 5개 국가인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공통점은 다섯 국가 모두 강력한 '효' 규범을 공유한다는 점이다(Croll, 2006). 그러나 무자녀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맥락에는 차이가 있다.

인구학적 요소와 경제 발전 정도 측면에서,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가장 낮고(0.97⁸⁾), 태국(1.38), 중국(1.55), 베트남(1.94), 미얀마(2.21) 순으로 높아진다. 경제 발전 정도는 GDP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고(33,436.92), 중국(9905.34), 태국(7298.95), 베트남(3230.93), 미얀마(1250.17) 순으로 낮아진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성인 인구의 농촌에서 도시, 혹은 해외로의 이주율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3국에서 모두 높아, 남겨진 노인의 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이다(Knodel et al., 2010; Teerawichitchainan and Low, 2021). 또한 저개발국의 노년층은 공공 및 민간 노후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제력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에서 무자녀 상태가 노인의 삶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부가 더 큰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8) 본 통계 수치는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화적 측면에서, 5개 국가 모두 자녀가 노년기 부양에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화적 규범이기는 하지만(Croll, 2006), 친족 제도 면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부계혈통제를 따르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는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는 반면, 양자혈통제를 따르는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부양 책임 소재의 기준이 유연하다. 부계혈통 사회의 엄격한 효 규범은 양자혈통 사회에서보다 무자녀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며,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준다(Teerawichitchainan et al., 2015; Yang, 2012).

제도적 측면에서, 5개 국가들 간에 노인복지 제도의 발전 정도가 다르며, 이는 일반적인 노인과 특히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대한 사회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8년 이후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무자녀 노인에게 공식적인 돌봄을 일찍이 제공해왔으며, 중국에서는 노인 연금제도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등 공공 돌봄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Liu and Sun 2016; World Bank 2016). 반면,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태국을 제외하고는(Teerawichitchainan and Pothisiri, 2021),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복지 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5개국의 대표적인 고령화패널조사 중, 한국고령화연구패널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KLoSA)의 2012년 데이터(n=5,289), 중국의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Study(CHARLS) 2011년 데이터(n=7,453), 태국의 Surveys of Older Persons in Thailand(SOPT) 2011년 데이터(n=34,173), 베트남의 Vietnam Aging Survey(VNAS) 2011년 데이터(n=2,789), 그리고 미얀마의 Myanmar Aging Survey(MAS)의 2012년 데이터(n=4,080)에서 60세 이상의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한국 및 중국의 데이터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와 유사한 형식으로 설계되어 비교적 국가 간 자료 비교가 용이하였다. 동남아시아 3개국의 고령화 조사는 독립적으로 실시되어 일부 측정 문항에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 그 차이를 서술하였다.

연구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 변수로는 노년기의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사회활동참여지수는 모든 국가에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그 여부와 빈도를 기반으로 측정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국가별로 우울증 척도(한국, 중국)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베트남, 태국, 미얀마)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독립변수는 실제 무자녀, 사실상 무자녀, 인근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기준집단)로 구분되는 상호배타적인 범주형 변수이다. '실제 무자녀'는 살아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을, '사실상 무자녀'는 살아있는 자녀가 있으나 노인의 특정한 생활 범위를 벗어나 살고 있는 노인을 가리킨다. 이때 생활 범위의 거리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조절 변수로는 성별과 가구 자산이 사용되었다. 통제 변수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연금가입여부, 근로상태, 가구형태(독거 여부), 거주지역(도시 혹은 농촌), 주관적 건강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 표본을 사용해 모든 분석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실제 무자녀 및 사실상 무자녀 집단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두번째, 최소제곱(OLS)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무자녀 상태와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셋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별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무자녀 상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가. 표본의 특성

첫째, 각 국가의 자료에서 모든 분석변수에 대해 실시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성별은 남녀 비율이 비슷한 중국 외에는 모두 여성이 더 많았고, 평균 나이는 모든 국가에서 69~70세였다. 혼인 비율은 한국과 중국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 노인들의 혼인 비율은 54.2~68.5%로 이보다 낮았다. 평균 자녀 수는 베트남(4.7명) 미얀마(4.3명), 태국(3.5명), 한국(3.3명), 중국(3.2명) 순이었다. 사회경제적 변수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경제 수준과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학력 수준, 연금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2.7에서 3.9 사이이며, 평균적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의 노인들이 태국과 미얀마의 노인들보다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평가했다. 독거가구 형태는 베트남, 미얀마보다 한국, 중국, 태국에서 흔하게 나타났다.

<표 5-1> 표본 특성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Dependent variables					
Social participation index (standardized)	0.03 (1.02)	0.01 (1.02)	0.00 (1.00)	-0.08 (1.01)	0.05 (0.99)
Psychological distress (standardized)	-0.04 (1.00)	-0.05 (0.98)	0.10 (1.03)	-0.03 (0.93)	-0.03 (0.99)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emale (%)	55.8	50.7	55.9	57.0	54.0
Mean age (s.d.)	70.37 (7.85)	69.26 (7.57)	69.24 (7.47)	70.71 (8.38)	70.46 (7.86)
Currently married (%)	71.1	74.3	64.7	68.5	54.2
Mean number of children (s.d.)	3.34 (1.44)	3.20 (1.63)	3.51 (2.13)	4.69 (2.38)	4.27 (2.44)
Educational attainment (%)					
No education	19.6	36.3	11.8	18.4	22.1
Some primary	4.0	19.2	4.7	31.7	44.8
Complete primary	28.7	23	72.7	17.7	14.9
Secondary and beyond	47.7	21.5	10.7	32.2	18.1
Have pension (%)	34.2	49.6	7.5	18.4	8.3
Worked last year (%)	31.4	37.8	42.7	38.8	29.9
Urban (%)	73.5	48.9	33.5	32.9	31.4
Household wealth index (standardized)	0.04 (1.04)	0.10 (1.04)	0.00 (1.00)	0.20 (1.02)	0.05 (1.00)
Self-rated health	3.90 (0.88)	3.15 (0.92)	2.70 (0.82)	3.69 (0.73)	2.84 (0.87)
Solitary living (%)	14.7	10.7	8.6	5.3	4.9
Unweighted N	5,289	7,453	34,173	2,789	4,080

Source: KLoSA 2012, CHARLS 2011,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나. 무자녀 집단의 규모

다음으로, <표 5-2>의 결과를 통해 각 국가의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actual) 및 사실상(de-facto) 무자녀 노인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무자녀 노인의 비율은 미얀마(7%), 태국(6%), 베트남(5%), 중국(4%), 한국(2%) 순이었다. 한편,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비율은 미얀마(3%), 중국과 베트남(2%)에 비해 태국(11%)과 한국(10%)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성별, 연령대, 도시/농촌의 거주지역에 따라 무자녀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제 무자녀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농촌보다 도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여성과 도시 거주자들 중 비혼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비율이 60~69세의 연령대에서 그 이상의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무자녀 상태로 노년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2>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5개국의 실제 무자녀와 사실상 무자녀 노인 실태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 actual childless	% defacto childless								
All older persons	2.3	9.9	3.7	2.4	6.4	10.8	4.7	2.3	6.8	2.8
Male	2.2	11.6	4.9	3.1	4.5	12.8	1.5	1.8	4.6	2.3
Female	2.5	8.6	2.7	1.8	7.9	9.2	7.2	2.6	8.6	3.3
Age 60-69	2.7	10.3	3.2	3.5	7.2	13.7	7.2	3.6	8.2	3.6
Age 70-79	1.4	10.5	4.5	1.2	5.6	7.8	3.7	1.4	5.4	1.6
Age 80+	3.5	7.1	4.5	0.2	4.5	3.1	1.4	0.6	4.8	2.9
Urban	2.8	7.4	2.7	3.1	9.8	10.2	5.2	2.1	7.2	4.4
Rural	0.9	17.0	4.9	1.7	4.6	11.1	4.5	2.3	6.6	2.1

Source: KLoSA 2012, CHARLS 2012,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Analyses are weighted.

다. 자녀 없음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무자녀 상태와 사회참여의 연관성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우선, 무자녀가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본 모델 1 분석 결과, 실제 무자녀가 동남아시아 3개 국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사회참여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무자녀는 오직 중국에서만 낮은 사회참여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자산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 없음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모델2 분석 결과, 사회참여에 대한 무자녀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는 오직 한국의 실제 무자녀의 경우에서만 약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의 실제 무자녀 노인 중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은 높지만 남성은 낮다. 사회참여에 대한 무자녀 효과에서의 부의 차이는 한국, 중국, 태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양상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과 태국에서 부유한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사회참여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부유한 실제 무자녀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p < .10$).

<표 5-3> 자녀 없음이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1)	(2)	(1)	(2)	(1)	(2)	(1)	(2)	(1)	(2)
Childlessness (children nearby=ref)										
Actual childless(AC)	0.13	-0.31	-0.18	-0.06	-0.13***	-0.16**	-0.58***	-0.80***	-0.18*	-0.24*
Defacto childless(DC)	0.01	0.06	-0.16*	-0.22*	0.01	0.01	-0.05	0.05	-0.10	0.07
Moderating variables										
Female	0.12***	0.12***	0.08*	0.07*	0.10***	0.10***	-0.11**	-0.12**	-0.13***	-0.13***
HH wealth	0.09***	0.08***	0.05***	0.05***	0.01†	0.01	0.06**	0.06**	0.07***	0.07***
Interaction terms										
AC*female		0.40†		-0.24		0.04		0.31		0.12
DC*female		-0.02		0.23		0.03		-0.12		-0.24
AC*HH wealth		-0.35†		-0.18†		-0.04		0.11		0.05
DC*HH wealth		0.21***		0.12		0.06**		-0.13		-0.07
Constant	0.67***	0.69***	0.09	0.09	0.76***	0.768***	-0.11	-0.09	1.98***	1.99***
Unweighted number	5,125	5,125	4,936	4,936	22,020	22,020	2,576	2,576	4,080	4,080

Sources: KLoSA 2012, CHARLS 2011,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led.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0$

라. 자녀 없음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5-4>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살펴 본 무자녀 상태와 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1 분석 결과,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의 영향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과 태국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없는 노인이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보다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실제 무자녀 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모델 2 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무자녀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는 오직 베트남의 실제 무자녀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베트남의 여성 실제 무자녀 노인은 남성에 비해 심리적 안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다음으로 가구 자산이 심리적 안녕을 악화시키는 효과는 베트남의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의 경우에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미얀마에서도 자산이 많은 경우 사실상 무자녀가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줄었다.

<표 5-4> 자녀 없음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1)	(2)	(1)	(2)	(1)	(2)	(1)	(2)	(1)	(2)
Childlessness (children nearby=ref)										
Actual childless(AC)	0.33**	0.26	-0.12	-0.11	0.19***	0.19***	0.14	0.70***	0.12†	0.16†
Defacto childless(DC)	-0.08†	-0.11†	0.15*	0.19*	0.03	0.01	0.21***	0.23*	0.02	0.09
Moderating variables										
Female	-0.01	-0.02	0.19***	0.19***	0.06***	0.05***	0.25***	0.27***	0.21***	0.21***
HH wealth	0.02	0.02†	-0.14***	-0.14***	-0.14***	-0.14***	-0.19***	-0.19***	-0.26***	-0.25***
Interaction terms										
AC*female		0.16		-0.02		-0.01		-0.67***		-0.06
DC*female		0.03		-0.04		0.04		0.01		-0.04
AC*HH wealth		0.07		0.07		-0.04		-0.12†		-0.02
DC*HH wealth		-0.06		0.06		0.003		-0.18†		-0.19**
Constant	-1.76***	-1.75***	-1.12***	-1.13***	-0.69***	-0.69***	-2.22***	-2.27***	-1.28***	-1.27***
Unweighted number	5,125	5,125	4,936	4,936	22,020	22,020	2,592	2,592	3,796	3,796

Sources: KLoSA 2012, CHARLS 2011,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led.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0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5개국의 자료 분석을 통해, 아시아 노인, 특히 젊은 노인 세대에서 자녀 없이 나이들어가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자녀 비율은 낮은 연령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60~69세의 노인 인구 중 자녀가 없는 '실제 무자녀' 집단과 자녀의 이주 등으로 근접한 거리에 자녀가 없는 '사실상 무자녀' 집단의 비율을 합치면, 무자녀 비율의 범위는 중국의 7%에서 태국의 21%에 이른다. 현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에서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자녀 없이 나이드는 것"은 향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무자녀 노인 연구에서 실제 무자녀 노인과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노화 경험을 구분했다는 점, 이 두 차원의 무자녀 경험이 노년기의 안녕과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이 노년기 무자녀 상태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서구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도 무자녀 상태와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 및 심리적 안녕 사이의 관계가 항상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실제 무자녀 노인들의 사회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 혹은 자녀가 없는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Devasahayam, 2014). 이는 또한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 여전히 자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Yeung et al., 2018). 반면, 5개 국가들 사이에서 부계와 양계의 친족 제도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무자녀의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뚜렷한 문화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심리적 안녕 면에서의 분석 결과, 무자녀 상태가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실제 무자녀가 아닌,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들이 자녀와 가까이 살고 있는 노인들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실제 무자녀 노인은 아무런 지지 원천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아 노화 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심할 수 있다(Chan et al., 2008). 또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효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이미 자녀가 없는 것에 적응하여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는 실제 무자녀 노인과 달리(Zhang and Hayward, 2001),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자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효 규범이 이행되지 않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Teerawichitchainan et al., 2015). 둘째, 비록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무자녀 노인이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들보다도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 또한 놀라운 것이다. 이는 한국의 비교적 짧은 도시와 농촌 간 거리, 또는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한국에서는 자녀와의 지리적 거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일부 한국 노인들이 자녀 혹은 손자녀와 관련된 집안일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자율적인 삶을 즐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부 국가에서 무자녀 상태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자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 변수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성일 때 무자녀가 사회참여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없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Yang, 2012)와는 반대되지만,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더 많고 친밀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Antonucci and Akiyama, 1987)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반면, 가구 자산의 조절 효과는 무자녀 유형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부의 증가가 한국과 태국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사회참여는 높이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자녀가 없는 '실제 무자녀' 노인의 사회참여는 낮춘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원이 무자녀 노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무자녀 노인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이 다양한 환경에서 무자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첫째, 선택 편향 혹은 작은 표본 크기 등 표본과 관련된 통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데이터만으로는 응답자의 실제 무자녀 상태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여부, 혹은 불임 및 자녀의 사망 등 비자발적 무자녀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족의 구성과 출산 결정의 다양성이 증가해감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무자녀의 자발성과 그 효과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조손가정 등, 사실상 무자녀의 다양한 유형과 그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마다 서로 다른 사실상 무자녀의 거리 기준이나 다른 척도의 사용 등, 국가 간 비교 과정에서의 비교가능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실제 무자녀와 사실상 무자녀의 비율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및 무자녀 추세에 맞추어 각 국가 또는 지역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 무자녀의 사회적 결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발견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무자녀 노인이 사회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원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많은 청년층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나라의 경우, 살아있는 자녀가 있지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무자녀 노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자녀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향후 더욱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Verdery et al., 2019). 초저출산으로 자녀 없이 나이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삶의 경로가 된다면, 자녀없음이 미래의 노인 코호트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까? 아니면, 자녀 유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의 격차가 더 커질까? 공식적인 돌봄 체계가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무자녀 노인은 어떤 종류의 지지 체계에 의존하게 될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녀가 적거나 없는 인구 코호트가 노인 연령대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boderin, Isabella(2004), "Modernisation and ageing theory revisited: Current explanations of recent developing world and historical western shifts in material family support for older people", *Ageing & Society*, Vol. 24(1): 29-50.
- Antonucci, Toni C. and Hiroko Akiyama(1987) "Social networks in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oy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Vol. 42(5): 519-527.
- Chan, Chak Kwan., King Lun Ngok and David Phillips(2008), *Social policy in China: Development and well-being*, Policy Press.
- Cheng, Sheung-Tak, Trista Wai Sze Chan, Geoff H. K. Li, and Edward M. F. Leung(2014), "Childless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widowed persons", *Journals of Gerontology*, Vol. 69(1): 48-52.
- Croll, Elisabeth J.(2006),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in the changing Asian family", *Oxford Development Studies*, Vol. 34(4): 473-491.
- Devasahayam, Theresa W. (Ed.)(2014), *Gender and ageing: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Dykstra, Pearl A.(2006), "Off the beaten track: Childlessness and social integration in late life", *Research on Aging*, Vol. 28(6): 749-767.
- Huijts, Tim, Gerbert Kraaykamp, and S. V. Subramanian(2011), "Childless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text: A Multilevel Study on 24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9(1): 32-47.
- Keith, Pat M.(1983), "A comparison of the resources of parents and childless men and women in very old age", *Family Relations*, Vol. 32(3): 403-409.
- Knodel, John, Jiraporn Kespichayawattana, Chanpen Saengtienchai, and Suvinee Wiwatwanich(2010), "How left behind are rural parents of migrant children? Evidence from Thailand", *Ageing & Society*, Vol. 30(5): 811-841.
- Koropecjy-Cox, Tanya(1998),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middle and old age: Are the childless more vulnerabl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 53B(6): S303-S312.
- Liu, Tao and Li Sun(2016), "Pension reform in China." *Journal of Ageing*

& Social Policy, Vol. 28(1): 15-28.

Mood, Carina and Jan O. Jonsson(2016), "The social consequences of poverty: an empirical test on longitudinal data",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27(2): 633-652.

Raymo, James M., Saeko Kikuzawa, Jersey Liang, and Erika Kobayashi(2008), "Family structure and well-being at older ages in Japan",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25(3): 379-400.

Tanaka, Kimiko and Nan E. Johnson(2014), "Childlessness and Mental Well-Being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37(8): 1027-1045.

Teerawichitchainan, Bussarawan, Wiraporn Pothisiri and Giang Thanh Long(2015), "How do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matter for psychological health of elderly parents? Evidence from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136-137: 106-116.

Teerawichitchainan, Bussarawan, and Timothy Qing Ying Low(2021), "The Situation and well-being of custodial grandparents in Myanmar: Impacts of cross-border and internal migr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277(2021): 113914.

Teerawichitchainan, Bussarawan and Wiraporn Pothisiri(2021), "Expansion of Thailand's social pensio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family support for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0(4): 428-442.

Verdery, Ashton M., Rachel Margolis, Zhangjun Zhou, Xiangnan Chai, and Jongjit Rittirong(2019), "Kinlessness Around the Worl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 74(8): 1394-1405.

Vicente, Henrique Testa and Sónia Guadalupe(2022), "Childlessness, personal social networks and wellbeing at advanced ages: A cross-sectional study in a southern European familistic welfare state", *Aging & Society*, Vol. 44(3): 597-621.

Vikström, Josefin, Marie Bladh, Mats Hammar, Jan Marcusson, Ewa Wressle and Gunilla Sydsjö(2011), "The influences of childlessn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network of the oldest old", *BMC Geriatrics*, Vol. 11: 78.

Wenger, G. Clare, Pearl A. Dykstra, Tuula Melkas and Kees C. P. M. Knipscheer(2007), "Social Embeddedness and Late-Life Parenthood: Community Activity, Close Ties, and Support Networks", *Journal of Family*, Vol. 28(11): 1419-1456.

World Bank(2016), *Live long and prosper: Aging in East Asia and Pacific*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Report), The World Bank, Available online at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3133>. Accessed on July 11, 2019.

Yang, Sungeun(2012) "An autoethnography of a childless woman in Korea", *Affilia-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Vol. 27(4): 371-380.

Yeung, Wei-Jun Jean, Sonalde Desai and Gavin W. Jones(2018), "Families in Southeast and South Asia",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44(1): 469-495.

Zhang, Weiguo and Guiping Liu(2007), "Childless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in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 22(2): 185-203.

Zhang, Zhenmei and Mark D. Hayward(2001), "Childlessnes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erso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 56(5): S311-S320.

6.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김태훈(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 현실 진단과 평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초저출산의 문제이다. 합계출산율은 1.24였던 2015년 이후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2023년 0.72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높은 자녀 양육비용인데, 그중에서도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양육비 부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015년 이후로 한정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와 출산율이 강한 시계열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Becker (1960, 1993)의 출산 모형에 따르면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질(quality) 수준의 증가는 자녀 출산을 감소시키는데, 사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질 혹은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투자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교육 지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정책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증분석 이전에 한 가지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자녀의 출산 후 몇 년 후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계획이나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갖기 이전에 부부가 예상·기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다. 그러나 각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이후의 출산력을 모두 조사한 데이터는 드물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매년 조사 및 공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이용해서 기대 사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즉, 매년 공표되는 평균 사교육비가 해당 지역의 당해연도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기대 사교육비가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교육비가 실제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지 실증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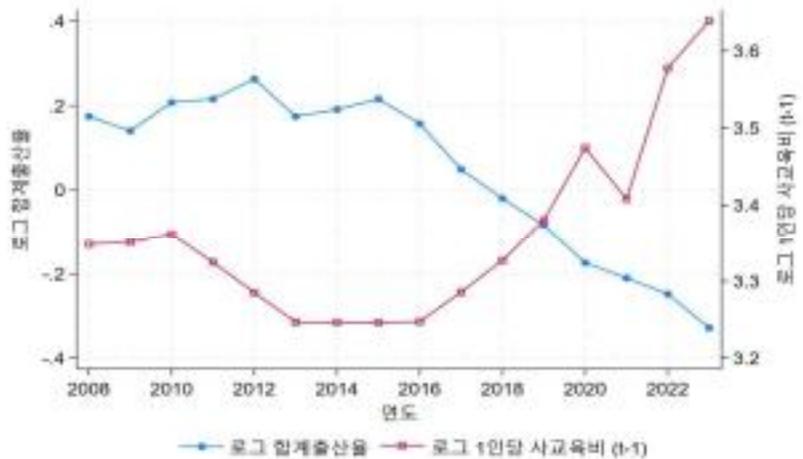
평가하고, 사교육비의 감소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먼저 국가 단위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17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과 지역 출산율의 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연구 결과

1.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관계

[그림 6-1]은 한국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로그로 나타낸 1인당 사교육비(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 가격)와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시간적으로 1년 전의 사교육비가 당시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1년 전의 사교육비를 나타낸다. 즉, 2008년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는 실제로는 2007년의 사교육비이다. 해당 그림은 2015년 이후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2009년 이후에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출산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강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림 6-1] 로그 사교육비 지출(t-1)과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



[그림 6-2] 로그 사교육비 지출(t-1)과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
(선형 추세 제거)



[그림 6-2]는 로그 1인당 사교육비와 로그 합계출산율 각각에 대해 선형 추세를 제거한 잔차들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사교육비가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교육비가 시간 추세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출산율은 추세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계열적인 관계가 사교육비와 합계출산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변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있을 높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1.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한 사교육비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 추정

다음으로 패널데이터 및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데이터는 17개 시도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형은 패널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인 이원-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⁹⁾ 그 이외에도 임의효과 모형, Arellano-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 Blundell-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도 보고한다. 통제변수들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로그 지역

9) 해당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og TFR_{s,t} = \beta T_{s,t-1} + X_{i,t-1}\gamma + \lambda_s + \delta_t + \epsilon_{s,t}$. 종속변수는 시도 s의 시점 t의 로그 합계출산율이고, $T_{s,t-1}$ 는 시점 t-1의 로그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이다. $X_{i,t-1}\gamma$ 는 시점 t-1에서의 시도 s의 다른 특성들을 포함하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다. λ_s 는 시도 고정효과, δ_t 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내총생산, 1년전 및 2년전의 조혼인율,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로그 1인당 개인소득이 사용되었다. 공간의 제약 상 다른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nuisance parameters)에 대한 추정 결과는 보고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인 사교육비 지출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만 보고한다.

<표 6-1>은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열(1)은 고정효과 모형, 열(2)는 임의효과 모형, 열(3)은 AB의 동적효과 모형, 열(4)는 BB의 동적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선호하는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기 때문에 열(1)의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분석 결과 1년 전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1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역시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 로그 1인당 사교육비(t-1)가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	(2)	(3)	(4)
	FE	RE	AB	BB
로그 1인당 사교육비 (t-1) _i	-0.1236** (0.0472)	-0.1045* (0.0577)	-0.0840** (0.0374)	-0.1420*** (0.0420)
관측치 수	224	224	208	224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열(1)은 고정효과 모형, 열(2)는 임의효과 모형, 열(3)은 Arellano-Bond의 동적효과 모형, 열(4)는 Blundell-Bond의 동적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

다음으로 <표 6-2>는 사교육비 지출이 출생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에서 1년 전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095%,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1873%,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출산율은 0.2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교육비의 증가는 둘째 이상의 다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표 6-2> 로그 1인당 사교육비(t-1)가 출생순위별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	(2)	(3)	(4)
	FE	RE	AB	BB
첫째 아이 출산율	-0.0950 (0.0601)	-0.1118 (0.0699)	-0.0832 (0.0510)	-0.1300*** (0.0397)
둘째 아이 출산율	-0.1873** (0.0636)	-0.1048** (0.0435)	-0.1950*** (0.0498)	-0.2863*** (0.0534)
셋째 이상 출산율	-0.2180 (0.1267)	-0.1165 (0.1150)	-0.1556** (0.0703)	-0.2024** (0.0842)
관측치 수	208	208	192	208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열(1)은 고정효과 모형(FE), 열(2)는 임의효과 모형(RE), 열(3)은 Arellano-Bond의 동적효과 모형(AB), 열(4)는 Blundell-Bond의 동적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BB).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1. 해석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대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했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이다. 즉, 2023년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이 약 4.34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은 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 가격으로 측정했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6.5% 증가했다. 추정 결과에 근거하면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약 4.53%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이 약 42.9%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해당 기간의 출산율 감소율의 약 10.6%를 설명한다.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사교육비의 영향은 특히 둘째 이상의 아이 출산에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95%가 감소하는 반면,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2.18% 감소한다.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을 주저하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Becker (1960, 1993)의 출산 모형에 따르면 자녀의 질(quality) 혹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때 출산은 감소하는데, 질과 자녀 수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¹⁰⁾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출산 자녀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10) 특히 자녀의 수와 질이 강한 대체 관계를 가질 때 그럴 수 있다. "Even a small exogenous increase in n (or q) could be responsible for a large decrease in q (or n) if the interaction between n and q were sufficiently strong" (Becker, 1993, p146).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하는데 이러한 투자 지출의 증가는 다시 출산 자녀의 수를 줄어든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자녀 1명당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출산율 혹은 출산 자녀의 수를 줄어든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가구의 자녀당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하여 후속 세대의 출산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Becker (1960, 1993)의 이론이 설명하는 “교육비 지출 증가↔출산율 감소”의 상호 작용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현재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현재 출산율 감소뿐 아니라 미래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및 출산율 저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교육의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이 연구에서 추정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것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지출은 출산율 이외의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은 다른 급우들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존재한다(Kim, Jang, and Kim, 2022a). 마치 군비 경쟁처럼 서로의 사교육 참여를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증가는 급우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im, Jang, and Kim, 2022b). 교실 안에서 경쟁 압력이 상승하고 사교육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개인의 최적 선택이 사회적으로는 최적 수준보다 과도한 소비 (혹은 생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사교육 지출보다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교육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그 결과는 “사교육 지출이 과도하며 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도 일치한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수요는 경쟁적인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쟁적인 대학 입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평판이 졸업 이후 얻게 되는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는 기술 변화가 야기하는 교육의 수익률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Ermisch, 2003). 즉, 사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술 변화와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교육의 수익률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고속련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기술 변화가 나타나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교육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인 성공 이후 다시 원상태로 회귀했던 주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존재하는 대학 서열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소비 혹은 생산에 대해 양적인 규제나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세금(피구세)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배출량에 대한 규제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교육에 대한 양적 규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예로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과외 금지나 2021년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이후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강압적인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완화된 형태의 규제 정책으로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고, 사교육 참여가 파급효과 및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증적인 결과에서도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초등학생은 광역시도별로 교습 시간이 21시에서 24시 사이, 중학생은 22시에서 24시 사이, 고등학생은 22시에서 24시 사이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교습 제한 시간이 가장 이른 시도에 맞추도록 조정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합의와 소통에 기반하여 시간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즉,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오후 10시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반대하여 학원 영업의 자유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이 가진 부정적 외부효과와 군비 경쟁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장한 일요일 학원 휴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해결방안의 하나이다. Kim, Tertilt, and Yum(2023)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사교육세의 적절한 부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사교육 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교육세의 부과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고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 적용에서 많은 반발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신에 현존하는 학원 교습비 기준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제정 및 집행하여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사교육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사교육이 가진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파급효과로 인해 이러한 개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반대가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부과나 양적인 규제 및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발과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도록 설득, 소통,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지만, 사교육의 본질적인 성격 중 하나가 제한된 수의 명문대 입학 및 좋은 직장을 점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교육 감소 효과가 반드시 크게 나타날지 분명하지 않다. 즉, 공교육의 질적 향상은 학생들의 인적자본 축적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절대평가가 아닌 상

대평가 시스템하에서 다른 학생보다 약간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한 욕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사교육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체 관계의 정도를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Becker, G. S.(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09-240.
- Becker, G. S.(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Ermisch, J.(2016), An economic analysis of the fami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S., Tertilt, M., & Yum, M.(2023), Status externalities in education and low birth rates in Korea. Available at SSRN 3866660.
- Kim, T., Jang, H., & Kim, J.(2022a), "Do peers affect private tutoring engagement in Korea? Evidence from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3(2), 271-283.
- Kim, T., Jang, H., & Kim, J.(2022b), "Peers' private tutoring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70(4), 658-665.

7. 저출산과 자녀 페널티의 관계 연구

황지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I 현실 진단과 평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성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인적자본의 차이가 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었지만, 여성의 교육수준이 충분히 높아진 지금도 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골딘 교수가 강조하였듯, 최근 연구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Goldin, 2021). 여러 선진국에서 여성에게는 출산 후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위 자녀 페널티(child penalty 혹은 motherhood penalty)가 발견되는 반면 남성의 소득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Kleven et al., 2023). 이에 따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녀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초저출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문화적 요인들이 있지만 일차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출산 이후 겪게 될 경력 단절 리스크가 크면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무자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Hwang, 2023).¹¹⁾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녀 페널티를 정확히 추정하고, 이와 저출산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행정자료인 건강보험공단DB(이하 건보DB)를 이용하여 1976~85년생 부모의 자녀 페널티를 추정하고, 코호트에 따라 자녀 페널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산 여성의 특성 및 행동 패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자녀 페널티 발생 요인 및 저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1976년생 여성 중에는 37세까지 무자녀인 비율이 19%였지만 1985년생 여성 중에는 35%로 증가하였다.

II 연구 결과

1. 분석 표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2~2020년 건보DB를 사용한다. 건보DB는 개인의 출산, 고용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첫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정보를 관측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첫 출산을 한 1976~85년생 여성과 그 남편으로 설정한다. 표본 크기는 여성 생년 기준 1976~80년생 코호트 593,997쌍과 1981~85년생 코호트 536,157쌍이다.

자녀 페널티를 식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최근 해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건사 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한다(Kleven et al. 2019a,b; Andresen and Nix, 2022b). 사건사 방법론은 첫 자녀 출산이라는 사건 전후에 나타나는 관심변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녀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Y_{ism}^g = \sum_{j \neq -12} \alpha_j^g \times I[j = t] + \sum_k \beta_k^g \times I[k = age_{is}] + \sum_y \gamma_y^g \times I[y = s] + \nu_{ism}^g \quad (1)$$

Y_{ism}^g 은 개인 i 의 s 연도, m 월에서의 관심변수를 의미한다. 상첨자 g 는 성별 또는 코호트 집단을 의미하며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분석을 진행한다. t 는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의 상대시점(event time)으로 $t = 0$ 은 출산이 이루어진 연월을 의미하며, 이전과 이후의 상대시점을 $\{-36, -35, \dots, 0, \dots, +59, +60\}$ 과 같이 정의한다. $I[j = t]$ 는 상대시점이 t 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로 기준 시점이 되는 출산 12개월 전 시점, 즉 $I[t = -12]$ 를 제외한다. 따라서 α_j^g 가 가지는 의미는 출산 12개월 전과 비교한 상대시점 t 기에서의 사건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연령 더미 변수 $I[k = age_{is}]$ 와 각 연도 더미변수 $I[y = s]$ 도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생애주기와 연도 추세를 비모수적으로 통제한다. 마지막 항인 ν_{ism}^g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수는 상대시점별 첫 자녀 출산의 효과를 나타내는 α_j^g 이다. 다만 소득을 분석할 때는 통상적으로 액수 자체보다는 변화율(%)을 보기 때문에 Kleven et al. (2019a)에서와 같이 아래 식을

통해서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퍼센트 변화로 변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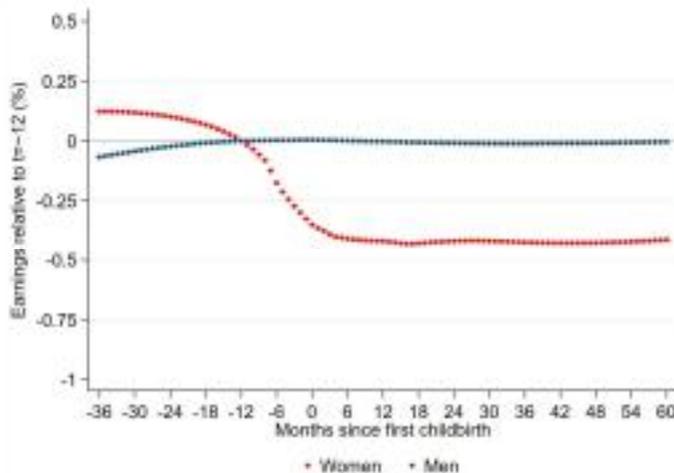
$$P_t^g \equiv \frac{\hat{\alpha}_t^g}{E[\tilde{Y}_{ism}^g | t]} \quad (2)$$

여기서 분모의 \tilde{Y}_{ism}^g 는 식 (1)에서의 $\hat{\beta}_k^g$ 과 $\hat{\gamma}_y^g$ 을 더한 값으로 예측값(predicted value)에서 상대시점의 효과만을 뺀 값이다. 따라서 P_t^g 는 자녀가 없을 때의 가상적인(counterfactual) 결과 대비 자녀 출산의 상대시점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2. 초기 분석 결과

[그림 7-1]은 전체 1976~85년생 출산 여성과 남편 샘플에 대한 상대시점 t (첫 출산 36개월 전에서부터 60개월 후)에서의 자녀 효과를 보여준다. 빨간 점은 여성, 파란 점은 남편 집단의 식(2) 추정치를 나타낸다. 출산 12개월 전을 기준 시점으로 정의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0의 값을 부과한다.

[그림 7-1] 출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체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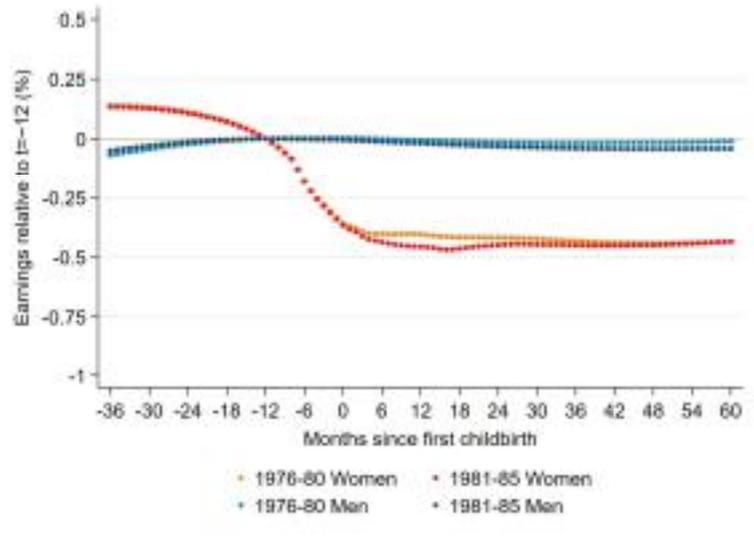


[그림 7-1]을 통해 남성에게는 첫 출산 이후 소득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여성에게는 급격한 소득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12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평균 소득은 임신 기간 중에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출산 5년 후 약 41.3% 떨어진다. 이는 노르웨이(21%, Andresen and Nix 2022b), 덴마크(24%, Kleven et al. 2019a), 스웨덴(35%,

Kleven et al. 2019b)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수치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의 자녀 페널티와 그 크기가 유사하다(45%, Kleven et al. 2019b).

[그림 7-2]는 분석 샘플을 1976~80년생과 1981~85년생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놀랍게도 최근 코호트인 1981~85년생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더 큰 자녀 페널티가 관측된다(출산 1년 후 시점 40.4% vs. 45.7%). 인접 코호트인데도 5%p의 차이가 나타나며, 최근 자녀 페널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서구 선진국 사례와 명확히 대비된다(Kleven, 2022; Andresen and Nix, 202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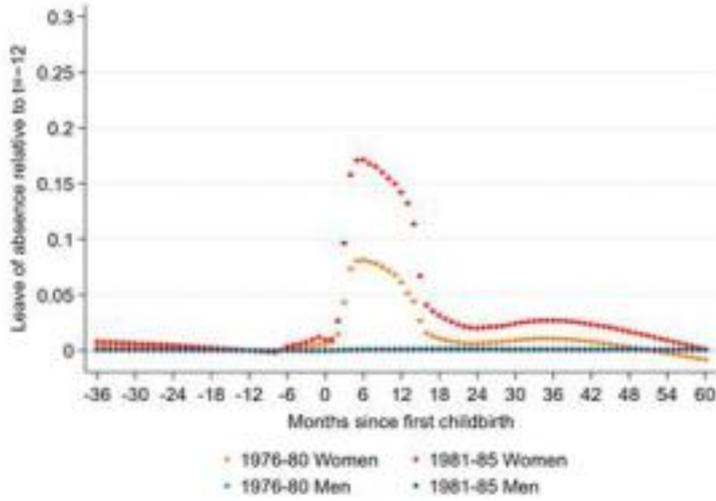
[그림 7-2] 출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코호트별)



해당 기간 코호트간 자녀 페널티 차이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 확대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이다. 예컨대 육아휴직 확대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돕는 면이 있지만, 휴직 중 소득을 낮춤으로써 자녀 페널티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둘째, 출산한 여성(부모)의 구성 변화이다. 최근 무자녀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이 출산을 (안) 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자녀 페널티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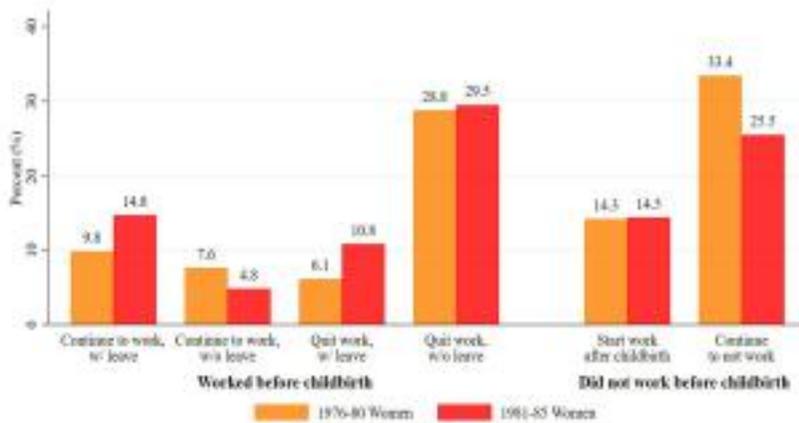
첫 번째 채널과 관련하여 [그림 7-3]은 휴직 여부를 살펴본다. 여성의 휴직 사용률이 최근 코호트에서 유의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첫 출산 5개월 후 시점 9%p vs. 18%p).

[그림 7-3] 휴직 여부 (코호트별)



두 번째 채널과 관련하여 [그림 7-4]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행동 패턴 유형에 따른 각 코호트 안에서의 비율을 보여준다. 출산 전 일을 하던 여성의 경우 휴직 사용이 늘어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출산 전 일을 안 하던 여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초기 결과이지만 일하는 여성이 엄마가 될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4] 출산 이후 경제활동 유형별 비율 (코호트별)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DB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 전후 남녀의 소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의 자녀 페널티와 저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녀 페널티는 출산 후 여성이 겪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일컫는 용어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그리고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76~85년생 여성과 그 남편을 첫 출산 3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추적하는 사건사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평균 소득은 첫 출산 1년 전 대비 5년 후 약 41% 감소하여, 여러 선진국보다 자녀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6~80년생보다 1981~85년생 여성의 자녀 페널티가 첫 출산 후 3년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페널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 대비된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단순 비교가 아닌, 동일한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한국에는 첫 출산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간 자녀 페널티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함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확대로 더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이것을 '페널티'라고 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한편, 일하는 여성이 (일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이들이 출산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서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과 같이 (휴직하지 않아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녀 페널티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Andresen, Martin Eckhoff and Emily Nix(2022), "Can the child penalty be reduced? Evaluating multiple policy interventions," Technical Report,

Discussion Papers.

Andresen, Martin Eckhoff and Emily Nix(2022), "What causes the child penalty? Evidence from adopting and same-sex coup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0 (4), 971-1004.

Goldin, Claudia(2021),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wang, Jisoo(2023), "Later, fewer, none?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y*, 60 (2), 563–582.

Kleven, Henrik(2022), "The geography of child penalties and gender norm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Technical Repor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and Gabriel Leite-Mariante(2023), "The child penalty atlas," Technical Repor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and Jakob Egholt Sogaard(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 (4), 181–209. 18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Johanna Posch, Andreas Steinhauer, and Josef Zweimuller(2019), "Child penalties across countries: Evidence and explanations," *AEA Papers and Proceedings*, 2019, 109, 122–126.

8. 지방소멸과 청년들의 지역선택¹²⁾

윤참나(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요셉(KDI 연구위원)

I 현실 진단과 평가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방 소멸' 위기가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인구 감소 위기의 핵심에는 청년층 유출 문제가 존재한다. 대체로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귀농·귀촌 인구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난 2010년대에는 한동안 멈춘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 감소 및 지역의 쇠락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는 청년층의 유출을 억제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대학 지원, 지역인재에 대한 우대, 기업 투자와 혁신도시 유치 및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주여건 향상, 출산·육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청년층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층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입된 정책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여러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라 각 요인들의 종합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모형 기반의 분석이 없어서 어떤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관한

12) 본 연구는 윤참나 & 한요셉(2021)의 후속 연구로, 본 원고에서는 기존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후속연구 방안을 논의한다.

분명한 방향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해 국내에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들(강동우, 2019; 김희삼, 2010; 이찬영 & 이흥후, 2016)은 대부분 진학 단계의 이동과 취업 단계의 이동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의 선택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지원을 통해 지방 대졸자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식의 지원처럼 단계 간 연계성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는 경우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지원정책들을 시뮬레이션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본다.

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미국에서 대학 진학 시 주(州) 간 이동에 관한 Kennan(2015)의 모형과 중국의 호구제도 및 대학정원 지역할당제를 배경으로 한 Yang(2021)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한다. 본 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졸업 이후 기대되는 생애임금과 함께 각 지역에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혜택(amenities)이나 졸업지역 및 그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여 지역 선택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진학 단계에서는 졸업 이후의 상황뿐만 아니라 주어진 성적에 의해 진학 범위가 제약될 수 있음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추정된 모형은 실제 지역 선택의 패턴들을 잘 예측하며, 여기에는 대학소재지의 잔류 내지는 고교소재지의 회귀 등 복잡한 이동 패턴들과 여러 초기조건에 따른 이질성도 포함된다. 즉, 추정된 모형은 기대임금 외에도 고교/대학 소재지에 대한 선호나 지역적 편의 수준(amenities)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 선택의 단계 간 연계성을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를 위한 지원정책들이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지방기업에 취업한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 (2) 지방대학에 진학한 지역 인재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이라는 단일한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의 크기는 직장 선택 시 효용을 1 높이는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연소득 단위로 변환하면 남성의 경우 연간 192만 원, 여성의 경우 연간 97만 원에 해당한다.

1. 지역인재의 지역노동시장 정착 지원

첫 번째로 비수도권 도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역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총 4가지 세부 정책안을 고려하였다.

정책안 1: 비수도권 도 취업자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

정책안 2: 고교소재지와 취업지역이 같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

정책안 3: 대학소재지와 취업지역이 같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
 정책안 4: 고교소재지와 대학소재지가 모두 취업지역과 같은 경우에만 지급

<표 8-1> 지방 취업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14.9	14.7	14.8	14.8	14.8
(기준과의 차이)	(0.0)	(-0.1)	(-0.0)	(-0.1)	(-0.1)
서울 외 수도권	22.1	22.0	22.1	22.0	22.1
(기준과의 차이)	(0.0)	(-0.1)	(-0.0)	(-0.1)	(0.0)
비수도권 광역시	25.6	24.7	25.2	23.3	24.2
(기준과의 차이)	(0.0)	(-0.9)	(-0.5)	(-2.3)	(-1.5)
비수도권 도	37.4	38.6	37.9	39.9	38.9
(기준과의 차이)	(0.0)	(1.2)	(0.5)	(2.5)	(1.5)
졸업 후 취업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29.1	25.4	26.4	26.9	27.3
(기준과의 차이)	(0.0)	(-3.7)	(-2.7)	(-2.3)	(-1.9)
서울 외 수도권	19.0	17.3	18.0	18.2	18.4
(기준과의 차이)	(0.0)	(-1.7)	(-1.0)	(-0.8)	(-0.6)
비수도권 광역시	22.7	16.5	20.1	20.0	21.2
(기준과의 차이)	(0.0)	(-6.2)	(-2.6)	(-2.7)	(-1.5)
비수도권 도	29.2	40.8	35.6	35.0	33.2
(기준과의 차이)	(0.0)	(11.5)	(6.4)	(5.8)	(4.0)
청년층 수혜비율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취업 시 보조금	0.0	40.8	33.4	29.8	26.6

지역노동시장의 보조금의 경우 자격요건을 지역대학 출신 정도로만 제한하는 방안(정책 3)이 비용절감 및 지역대학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표 8-1). 다만, 대학 진학 선택에 있어서 비수도권 도와 비수도권 광역시 간의 높은 대체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전체 소재 대학의 진학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이는 다른 정책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결과에 비해 같은 보조금을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지급할 경우, 비수도권 도 지역 취업 비중의 변화는 '정책 1'의 경우 +4.2%p로 비수도권 도 지역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11.5%p)에 비해 그 효과가 절반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8-2). 이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으로부터 도 지역으로의 이동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취업 비중은 지원정책의 효과로 일부 증가하며(+2.9%p), 청년층의 비수도권 전체의 취업 비중은 증가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전체 취업 비중은 감소한다.

<표 8-2> 지방 취업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14.9	-0.2	0.0	-0.1	-0.1
서울 외 수도권	22.1	-0.2	-0.1	-0.1	0.0
비수도권 광역시	25.6	0.3	-0.1	0.3	-0.3
비수도권 도	37.4	0.2	0.2	0.0	0.4
졸업 후 취업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29.1	-4.9	-3.5	-3.2	-2.4
서울 외 수도권	19.0	-2.2	-1.4	-1.2	-0.8
비수도권 광역시	22.7	2.9	-0.5	1.4	-0.3
비수도권 도	29.2	4.2	5.4	3.1	3.4
수혜비율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취업 시 보조금	0.0	59.0	52.9	48.1	40.8

2. 지방 대학 진학 보조금 정책의 효과

다음으로는 비수도권 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진학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본다. 그런데 장학금과 같은 재학생에 대한 보조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 앞서 노동시장 차원의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책 효과성의 비교를 위해 대학 선택 시점의 효용 증가량이 4년 후 직장 선택 시 효용을 1 만큼 증가시키게 했으며, 이는 앞의 노동시장에 대한 보조금과 동등한 크기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정책안 1: 비수도권 도 지역 대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안 2: 정책안 1 + 지역 대학 출신에 대한 노동시장 보조금 지급

<표 8-3> 지방대학 진학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	정책 1	정책 2
서울	14.9	14.8	14.8
(기준과의 차이)	(0.0)	(0.0)	(-0.1)
서울 외 수도권	22.1	21.6	22.0
(기준과의 차이)	(0.0)	(-0.5)	(-0.1)
비수도권 광역시	25.6	23.2	22.8
(기준과의 차이)	(0.0)	(-2.4)	(-2.8)
비수도권 도	37.4	40.4	40.4
(기준과의 차이)	(0.0)	(3.0)	(3.0)
졸업 후 취업	기준	정책 1	정책 2
서울	29.1	29.3	26.8
(기준과의 차이)	(0.0)	(0.2)	(-2.4)
서울 외 수도권	19.0	19.0	18.1
(기준과의 차이)	(0.0)	(0.0)	(-0.9)
비수도권 광역시	22.7	22.1	19.9
(기준과의 차이)	(0.0)	(-0.6)	(-2.8)
비수도권 도	29.2	29.6	35.3
(기준과의 차이)	(0.0)	(0.4)	(6.0)
청년층 수혜비율	기준	정책 1	정책 2
진학 시 보조금	0.0	40.4	40.4
취업 시 보조금	0.0	0.0	30.5

비수도권 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진학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이 3.0%p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8-3). 이러한 진학 비중 증가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의 감소(-2.4%p)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 비중의 증가폭은 미미하며, 특히 비수도권 전체를 보면 이러한 정책 개입의 결과로 오히려 비수도권 취업 비중이 감소한다. 비수도권 도 지역 취업에 대한 보조금과 결합될 경우(정책 2)에는 비록 도 지역 취업 비중은 증가하지만 지방대학 진학 비중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며, 특히 수도권 진학 비중 감소폭은 '정책 1'에 비해서 오히려 축소되어 지방대학 육성 관점의 효과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0.6%p → -0.2%p).

다음으로는 같은 보조금을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지급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8-4). 앞서 비수도권 도 지역에만 지원할 때와의 뚜렷한 차이는 비수도권 도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이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은 증가한다. '정책 1'의 경우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 진학 비중은 1.3%p가량 증가하며, 비수도권 도 지역 진학 비중은 오히려 0.5%p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 전체에 같은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광역시 소재 대학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표 8-4> 지방대학 진학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baseline)	정책 1	정책 2
서울	14.9	0.0	-0.1
서울 외 수도권	22.1	-0.7	-0.1
비수도권 광역시	25.6	1.3	0.3
비수도권 도	37.4	-0.5	0.0
<졸업 후 취업>	기준(baseline)	정책 1	정책 2
서울	29.1	-0.1	-3.3
서울 외 수도권	19.0	-0.1	-1.3
비수도권 광역시	22.7	0.3	1.4
비수도권 도	29.2	0.0	3.2
<청년층 수혜비율>	기준(baseline)	정책 1	정책 2
진학 시 보조금	0.0	63.7	63.7
취업 시 보조금	0.0	0.0	48.9

하지만 보조금을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지급할 경우에도 비수도권 대학 진학 지원정책으로 인한 비수도권 진학 비중 증가 효과는 취업 단계로 넘어가면 대부분 사라진다. 취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편이 생애효용 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책 1'의 경우 비수도권 취업 비중 증가 효과는 비수도권 전체에서 0.3%p 증가에 그친다.

취업 지원을 결부한 '정책 2'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취업 비중이 4.6%p가량 증가하지만, 앞서 비수도권 취업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7.1%p)에 비해 그 증가폭이 오히려 작다. 여기에서 대학과 취업 단계의 지원으로 지원규모가 2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성이 크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비수도권 진학 비중의 증가폭 역시 '정책 1'보다도 크게 축소된다(+0.8%p → 0.3%p).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 지원과 지방노동시장 지원이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발생시킴을 시사한다.

3. 후속연구방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¹³⁾가 다수 있지만 지역 대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에 미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 교육통계서비스에 제공하는 전국 431개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정보를 활용한다.

13) 문윤상(2021), 백승민(2023)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인구이동, 고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정책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년층 순유출이 더욱 심각한 지역(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엇갈리므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동우(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47-60.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pp. 55-92.

문윤상(202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KDI, KDI 정책포럼.

백승민(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자료, 1-87.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143-169.

한요셉·윤참나(2021),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Kennan, J.(2015), "Spatial variation in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supply of college graduates", No. w2106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Yang, Y.(2021), "Place-based college admission, migration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uman capital: Evidence from China", Working Paper.

네트워킹 사업 성과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럼 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8월 11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과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을,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평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훈 OECD Economist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추계 및 최근 노동시장의 동학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 간의 학력·연령·산업·직업별 노동공급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인구변화에 의한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부문 및 유형 간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학력, 부문(산업 및 직업), 연령별 취업자 간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인구변화로 인해 심각한 부문 및 유형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부문 거시모형(multi-sectoral macroeconomic model)을 도입하여 산업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2031년까지의 학력, 산업, 직업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고학력 중심)과 보건업(고학력, 저학력 모두) 등이며, 증가율 면에서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고숙련 중심), 수도업(고숙련 중심), 사회복지서비스업(고숙련 중심)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지역 간 변이를 활용하여 특정한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문별로는 그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석 결과, 내·외국인 간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산업별로는,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외국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됨을 보였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부문은 외국인력 유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외국 인력 쿼터를 높여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앞의 장래 노동 공급 및 수요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은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2026~2031년 산업·직업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규모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력·산업·직업 간 노동 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노동인력 부족 및 과잉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최근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수량적 분석 결과, ② 장래 5~10년간의 노동수급에 대한 수량적인 전망 결과, ③ 고용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성 조사 등을 기초로 각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 도입 적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환영사 (김병연 원장)



발표 (이철희 교수)

2.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9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구 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의 개회사,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시대, 돌봄의 경제학적 의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의 재구조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투자, 자녀 돌봄을 위한 노동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가 돌봄과의 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비공식돌봄 지원,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인구변화와 미래 돌봄 수요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 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가 가져올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1) 돌봄 대상자의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와 2) 돌봄 서비스별 선택 확률을 고려한 돌봄 수요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아 및 유

아는 인구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 및 개인양육과 같은 돌봄 유형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노인 돌봄 수요는 1인 및 부부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2035년 공식 돌봄의 대한 수요가 2021년의 2.5-2.7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구조변화 외에도 돌봄대상자의 가구 구조 특성 변화에 따라 돌봄 유형별 수요, 돌봄 시간, 돌봄의 질(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노인돌봄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우려 등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제반 사회경제문제는 돌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증가하는 돌봄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돌봄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과수요와 서비스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의 근본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약요인으로는 가격규제와 초과 수요, 경직적인 공급 규제, 규제와 갈등으로 분절적 돌봄 서비스의 고착화, 민간 돌봄 역할 강화 기반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 균형이라는 정부 역할을 제시하며, 가격 체계 개선과 돌봄 가치 제고, 유연한 제도, 인력 확보 정책,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품질 관리 강화, 돌봄 기술 활성화와 같은 정책 변화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개회사 (황윤재 학회장)



발표 (홍석철 상임위원)

3.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인구포럼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4년 3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

로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을 주제로 제39회 인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은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충격, 고령 인력의 변모, 기술변화의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여건에의 영향, 미래 고령자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단기간 노동 총량 부족은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부문 간, 유형 간, 직업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의 고령인구는 교육 및 건강 수준이 높아, 숙련도와 생산성이 높은 고령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노동투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고령인구의 질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급인력 활용이 낮은 편임을 지적하며, 고령 인력(power seniors) 활용을 위해, 나이 제한이 없고,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시간, 경제상태 만족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보였다. 가족에게 비공식돌봄 제공을 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에의 근로 강도를 조정하기보다는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는 노동공급을 중단하고, 대졸 이상은 노동 공급은 지속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특히,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에 대한 활용 및 인식제고, 급여지급 측면에서도 유급 휴가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였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는 2020-2050년 간 약 2.6배 증가하고, 노인 치매 1인 가구수는 약 3.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중 각 영역에 대한 욕구인식조사 결과, 후견서비스, 사전서비스의향서, 사전연명의료서비스의향서, 전문가 의사결정서비스 순으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서비스 구축도 병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항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고령자 범죄피해 특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61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DB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발생 증가세가 뚜렷함을 보였다. 고령층 대상 재산 범죄, 손괴, 배임, 절도, 횡령과 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피해 지원 관련 광범위한 사각지대, 인력 부족, 낮은 신고의식, 심터의 불편함, 서비스 연계과정 불편함, 체계적 생산관리 미흡 등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책과제로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력 충원,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제고, 법률·심리 지원서비스위한 전문인력 배치, 주거개선, 범죄피해 통계생산 및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개회사 (이태수 원장)



발표 (강상경 교수)

3차 연도 계획

1. 전반적인 전략

제3차 연도에도 1~2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에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인 제언이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진에게 학술적인 논문 출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특정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연구 수행 독려한다.
- 매년 4개 이상의 핵심적인 인구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가칭 “인구 클러스터 이슈 브리프”를 발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적인 제언을 전달한다.
- 매년 정부기관과 인구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공동 포럼 혹은 심포지엄 개최하여, 인구 클러스터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매년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인구문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공동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하여, 학술적인 연구와 정책 연구 간 시너지 강화한다.

2. 코어 연구 계획

인구 클러스터에 소속된 8인의 내부 연구진과 1인의 연수연구원은 제2차 연도의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음 두 가지 큰 주제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미래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출산과 인구이동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지역 인구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1~2차 연도의 연구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장차 아동 및 고령인구 돌봄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추계함으로써 돌봄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된 유용한 수량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3차 연도에는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확대·발전시킬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분석을 지역별 분석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로 인해 지역의 각종 서비스 인프라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고자 한다.

2차 연도에 수행한 외국인 돌봄인력에 관한 연구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의 Center of Excellence in Research on Aging and Care(CoE AgeCare)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인구 클러스터 연구진(김홍수 교수)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센터의 Migration, Aging and Care(MICA) 연구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와 한국은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고령화가 빠른 국가이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돌봄인력 문제를 대응하는 정책방안으로 이민돌봄 인력 활용방안을 가장 늦게까지 보류한 국가라는 점에서 비교 연구는 유용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3차 연도에는 인구변화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의대 증원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인 갈등을 푸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구 클러스터 연구진 2인(이철희 교수, 권정현 박사)은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의 근거로 이용한 2023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집필진이었다. 이 연구는 팬데믹 직전의 연령별 의료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의료인력 수요 변화를 전망했는데, 의사단체가 지적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의료제도 및 기술 변화에 의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변화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전망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적인 불균형 역시 전망할 계획이다.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인지장애 고령층의 의사 결정 문제에 관한 연구는 기존 분석 내용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 1차 연도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 추계를 통해 미래사회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차 연도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사결정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3차 연도 연구는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서비스 중요도, 시급도 조사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충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2차 연도에 인구 클러스터에 합류한 연구진은 1차 연도에 수행한 연구를 발전시켜서 논문으로 완성하고, 중요한 정책 제안을 담은 브리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의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함의 실태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다른 연구는 기초지자체별 학원 수, 사교육비 지출 등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분석한 2차 연도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향후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대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 지역 대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다. 이 연구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에 미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 교육통계서비스에 제공하는 전국 431개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3. 제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 -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

3차 연도에는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Age Friendliness Index: AFI) 생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외 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장차 학력 수준이 높고 건강이 양호한 소위 파워 시니어(power seniors)가 전체 인구 대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 시니어는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일자리가 고령친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일할 유인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가진 일자리가 고령친화적인지, 고령친화적인 일자리의

산업/직종별 분포는 어떠하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Maetas et al. (2023)의 연구가 서베이 조사와 이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Acemoglu et al. (2022)의 연구는 이 결과를 미국의 O'Net 및 마이크로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친화지수의 규모와 분포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이철희 클러스터장은 버클리 대학의 Karen Eggleston 교수(Director, Asia Health Policy Program of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와 공동으로 한국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Maetas et al. (2023)이 미국에서 얻은 결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의 성격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먼저 한국의 여건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1,000명 정도의 5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일자리 성격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추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Eggleston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의 고령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국의 직업 사전 및 센서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일자리 고령친화지수의 장기적인 변화와 부문별 분포를 분석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제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 계획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4회의 네트워킹 사업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가미래전략원의 전체적인 필요와 정부, 연구, 언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축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 제2차 법무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외국인 정책 포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각 산업 및 직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외국인 정책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8월 개최한 법무부-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공동 포럼을 계승한 행사로서, 인구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책 연구기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지역 인구 불균형 포럼

한국의 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 요인 및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 클러스터의 두 연구자(이철희 교수, 윤참나 교수)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 제2차 인구 클러스터 저출산 포럼

제1차 연도에 개최한 인구 클러스터 저출산 포럼을 계승하여,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 요인과 대응 방안에 관한 인구 클러스터 내부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 성과와 외부 연구자들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토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결혼·출산 패널티에 관한 연구와 교육 경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관련 학회와의 공동 포럼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구 클러스터 고령노동 포럼

장차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로 진행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문제,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의 바람직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고령노동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첨부

논문

1. 경제학연구,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 장래 수요 추계", 이철희 교수, 이지혜 부연구위원
2. 한국인구학,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이철희 교수, 이지혜 부연구위원
3. 워킹페이퍼,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김태훈 교수
4. 한국인구학, "도시 중산층 이상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하정화 교수

각 행사 프로그램과 발표자료

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 포럼 개최
 - I. 포스터
 - II. 행사사진
 - III. 발표자료
2.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경제학회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I. 포스터
 - II. 행사사진
 - III. 발표자료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고령화 관련 포럼 공동개최
 - I. 포스터
 - II. 행사사진
 - III. 발표자료

기고 및 칼럼

1. 한겨레, "연구기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이철희 교수,
2. 한겨레,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 이철희 교수
3. 한겨레, "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 이철희 교수

4. 한겨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한국이 교육·여성 문제", 이철희 교수
5. 한겨레,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이철희 교수
6. 한겨레, "서유럽과 동유럽의 분기점, 인구감소 대응", 이철희 교수
7. 한겨레, "의대 증원,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이철희 교수
8. 한겨레, "이민 확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철희 교수
9. 한겨레, "총선 이후의 인구정책 방향...차별화보다 초당적 협력을", 이철희 교수
10. 동아일보, "노동시장, '파워시니어' 시대에 대비해야", 이철희 교수
11. 관악논단,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은 '살고 싶은 나라'", 강상경 교수
12. 브릿지경제, "마음건강 관리 국가 역할 간과...마음건강 증진 '살고 싶은 나라와 연결", 강상경 교수
13. 한국경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맞다", 윤참나 교수
14. 조선일보, "집에 아내가 없다...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황지수 교수

기사

1. 매일경제, "35세 미만 노동인력 15년 30% 증발",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2. 중앙일보, "'1000만 노인' 코앞...경제학회 "2050년까지 의사 2만명 늘려야"",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한국경제학회 공동 개최
3. 한국경제, "가격 묶였는데, 제대로된 돌봄서비스 나오겠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한국경제학회 공동 개최
4. 국민일보, "고물가, 미세먼지... 매력 없는 한국, 성적표 뜯어보니", 이철희 교수
5. 뉴시스, "연금고갈 같은 국각적 필요성만 운운...저출생 정책 역효과", 이철희 교수
6. 동아일보, "20년 뒤엔,... 식당 종사자 33만명 줄고 기술·복지업 22만 늘 것", 이철희 교수
7. 동아일보, "인구 위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이철희 교수
8. 문화일보, "노인부양 부담 줄면 출산 늘 것... 미래세대 위해 연금제도 개혁해야", 이철희 교수
9. 문화일보, "평택 출산율,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 증가, 비결은?", 이

- 철희 교수
10. 문화일보, "기존 성공모델 다 버리고... 숏사회시스템 재구조화 필요", 이철희 교수
 11. 문화일보, "지자체도 지역화폐 예산 수립... '현금성 퍼주기' 재현되나", 이철희 교수
 12. 매일경제,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땀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이철희 교수
 13. 매일경제, "'젊은 사람들만 사라져' 흑사병보다 심각...한국 덮치는 '이것 뭐길래'", 이철희 교수
 14. 서울경제, "'인구감소에도 생존 전략은 있다", 이철희 교수
 15. 서울신문, "노동인구 감소, 특정 산업·연령대 등 불균형에 정책 초점 맞춰야", 이철희 교수
 16. 아시아경제, "고령화로 의료수요 급증, 의사 2만명 이상 늘려야", 이철희 교수
 17. 연합뉴스, "한일 학자들, 도쿄서 저출산 문제 논의... '인구감소 속도 늦춰야'", 이철희 교수
 18. 이데일리,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이철희 교수
 19. 조선비즈, "韓 인구 변화 이대로면 노동·돌봄·의료·지역·세대 '불균형' 키운다", 이철희 교수
 20. 조선일보, "'밤 10시까지 가게 지켜도, 수중엔 월 30만원' 퇴직 창업자들의 눈물", 이철희 교수
 21. 조선일보, "60대 이상 근로자, 처음으로 20대 추월", 이철희 교수
 22. 중앙일보, "'주36시간 미만' 근무 청년층 중 75% "지금처럼 일하고 싶다"", 이철희 교수
 23. 중앙일보, "인구규모 유지보다 공동체 행복 증진을", 이철희 교수
 24. 한국경제,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려면 여성·청장년 경제활동 늘려야", 이철희 교수
 25. 한겨레, "결혼·출산 페널티' 큰 노동시장 바꾸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어렵다", 이철희 교수
 26. KBS, "현금 지원 출산율 제고 한계..."인구 유출 줄여야", 이철희 교수
 27. KBS, "시간제가 오히려 좋아?...'좋은 일자리 개념 바뀌나", 이철희 교수
 28. 국민일보, "'의대 정원' 여전한 간극... "매년 5% 늘려야" vs "괴담 가깝

- 다", 권정현 연구위원
29. 매경이코노미, "급증하는 돌봄 수요 대응 어떻게? 아이 '안전' 노인 '동반'... 수요 파악부터", 권정현 연구위원
30. 서울신문, "내달부터 의무격리 축소되지만...'아프면 쉴 권리' 뒷받침 전무", 권정현 연구위원
31. 세계일보, "임현택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의사 1만명 부족' 연구원 "말도 안 되는 주장"", 권정현 연구위원
32. 시사인, "자연된 의대 증원, 그리고 그 반대자들", 권정현 연구위원
33. 조선비즈, "중증 담당의·응급의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과 별개로 살펴야", 권정현 연구위원
34.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쓸림 있더라도...의사 늘려야 필수의료까지 낙수 효과", 권정현 연구위원
35. 한겨레, "의대 증원 규모 10월 중 발표...18년째 3058명 정원 얼마나", 권정현 연구위원
36. 세계일보, "학령 인구감소의 역설... "교육의 질 켜 기회 될 수도"", 김태훈 교수
37. 르몽드, "In South Korea,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sinks lower and lower", 황지수 교수
38. 타임, "Why Experts Say South Korea Shouldn't Just Throw Cash at Its Low Birth Rate Problem", 황지수 교수

동영상

1. SBS뉴스, "정부의 출산율 반등 전망, '어림없습니다'", 이철희 교수
2. 삼프로TV, "저출산 대한민국이 마주할 문제들", 이철희 교수
3. 삼프로TV, "자식은 부채다?, 대책은 어디에?", 이철희 교수
4. 삼프로TV, "밥 먹듯 야근하는 세상에서 애까지 낳아야 합니까?", 이철희 교수
5. 삼프로TV, "수요공급의 법칙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애는 어디서 키울까요?", 이철희 교수
6. 삼프로TV,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땅한' 정책", 이철희 교수
7.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 강상경 교수

논문

1. 경제학연구,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 장래 수요 추계, 이철희 교소, 이지혜 부연구위원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 장래 수요 추계*

이지혜** · 이철희***

본 연구는 영유아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벌이 가구 등 가구구조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장래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하였다. 통계청 장래추계 결과 향후 영유아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영유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증가, 그리고 가구 특성별 공적 돌봄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서 영유아 공적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인구 변화 정도만큼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영아 돌봄 시간과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영유아 돌봄 정책 마련에 있어, 돌봄 대상 인구의 양적 변화 외에도 대상 인구가 속해있는 가구 특성, 가구구조 변화 속도, 가구 특성별 돌봄유형에 대한 선택확률, 시간 및 비용 등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 영유아 가구구조 변화, 돌봄유형 결정요인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I3, J1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대응 연구> 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또한, 이지혜 (2023)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의 2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제1저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 avenir79@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 경제학부 | chullee@snu.ac.kr

I. 머리말

급격한 출산율 하락 및 혼인율 감소 등으로 인해 영유아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어,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의 이용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중 시설 돌봄 및 친인척 혹은 비혈연을 통한 개인양육 돌봄 수요는, 아동수 외에도 영유아 가구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증가나 가구 내에서 영유아에게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면, 돌봄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에 있어, 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아동수에 최근 각세별 단일 돌봄 서비스별 이용률을 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요 추계에 영유아 인구구조 변화만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영유아 가구의 구조 변화나 대상 아동과 가구, 부모, 보육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돌봄서비스별 선택확률은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에 영유아 가구의 가구구조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영유아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돌봄유형별 이용률을 적용하고자 한다. 영유아 아동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본으로 하되, 영유아 가구유형별 돌봄서비스 수요의 상이함을 고려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유형 변화 전이확률을 적용하여 향후 영유아 가구유형 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 가구유형별 아동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별 이용확률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영유아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돌봄유형별 이용률을 도출하고, 아동수와 이용률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변화를 이용규모 및 이용시간 등으로 추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했을 경우와 가구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여, 영유아의 인구는 감소하나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향후 공적 돌봄의 수요 변화는 그 인구 감소폭보다 적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영유아수와 영유아 대상 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가구유형 및 돌봄유형을 결정하는 요인과 수요를 추계하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영유아가구의 돌봄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분석 자료를 소개한다. IV장에서는 영유아가구의 돌봄유형별 이용 규모 추계분석결과를, V장에서는 영유아가구의 돌봄유형별 이용시간 및 비용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였다. VI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II. 현황 및 선행 연구

1. 영유아수 및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수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¹⁾ 영유아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2030년부터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2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의 각세별 구성을 보면, 2020년 현재 0세~6세까지의 각세별 비중은 0세가 11%, 2세가 13.1%, 4세가 16.2%, 6세가 16.3%로 영아의 비중이 낮은 구조이며 2030년부터는 0세가 16.2%, 2세가 15.0%, 4세가 13.5%, 6세가 12.6%로 다시 영아가 증가하며 2040년부터는 각세별 비중이 13.4~1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6세 이하 영유아수(1970-205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kr

2023년 현재, 영유아 대상 아동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아동돌봄 지원사업(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 유치원 원아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아동돌봄서비스는 2011년 소득하위

1) 아동돌봄서비스의 보육대상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는데 보육연령 기준 만0세는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출생자까지로 최대 월령기준으로 23개월까지 포함함. 이후 보육연령 만1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생일자를 의미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 연령구분과 보육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유아는 장래인구추계의 6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함.

7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월부터는 0~2세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 시행, 2013년 3월부터는 만0~5세 영유아로 확대 적용됐다. 2021년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수혜 아동수는 약 240만명이며, 이중 양육수당 56.1만명(전체의 23.4%), 어린이집(보육료지원) 118.5만명(49.4%), 유아학비 58.3만명(24.3%), 아동돌봄지원사업(시간제 포함)은 7.2만명(3%) 정도이다.

<그림 2>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현황(2015-2021년)



주: 2020년 기준 영유아수는 약 265만명이나, 서비스 이용자 총원은 약 256만명임. 다만, 통계 수집 주체 및 기준이 상이하여, 영유아(보육연령 만0~5세) 외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동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포(bokjiro.go.kr), 교육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2. 선행 연구

영유아 아동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서비스 대상자수와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률로 결정된다고 할 때,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의 영유아수에 각 서비스별 각세별 최근 돌봄서비스별 이용률을 적용하여 중단기 이용자수를 추계하고 있다(박진아 외, 2015; 이정원 외, 2018; 김동훈 외, 2021). 예를 들면, 김동훈 외(2021)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의 양육정책의 재정추계를 위해, 통계청 장래추계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5-2020년의 자료를 기초로 2021-2026년 영유아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2018~2020년 3년간 평균 서비스별 이용률을 적용하여 돌봄서비스별 수혜자수

를 추계하였다.

그런데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수요 추계에 인구 구조의 변화는 반영하고 있으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 구조 변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능성 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 행태는 아동의 연령 외에도 가구 및 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영유아의 가구 구조변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지혜·이철희(2024)에서는 2015-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패널을 활용하여 최근의 영유아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전이행렬로 구성하고 이를 2021년 이후에 적용하여 2036년까지의 영유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가구, 3세대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비중을 추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인구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영유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가구 비중의 확대 가능성을 보이며 시설 돌봄 등 공적 돌봄의 수요 추계에 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 수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지혜·이철희(2024)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반면, 가구의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결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아동의 연령,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등이 돌봄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ckman, 1974; Blau and Hagy, 1998 등). 돌봄 유형을 결정하는 가구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조부모의 유무, 영유아수, 12~17세 사이 아동 유무, 어머니의 취업 여부, 지역 등이, 아동 특성으로는 연령, 출생 순위, 출생 분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거리, 비용, 운영시간, 교사 1인당 아동수 등 접근성과 서비스 질적 요인도 돌봄선택에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Del Boca et al., 2005; Banfi et al., 2009 등). 가구 및 부모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적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공적 돌봄이 사회화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을 통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el Boca et al., 2005). 가구 내에 다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 등 공적 돌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어머니가 노동공급을 줄이거나 다른 대체적인 비공적 돌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Rose and Elicker, 2008). 지역적으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보다 공적 돌봄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ohansen et al. 1996). 또한, 아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동 연령이 중요한데

연령에 따라 신체사회적(physiological), 인지적(cognitive), 사회감정적(socio-emotional) 필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돌봄 형태를 결정한다는 증거들이 있다(Carnegie Corporation, 1994). 그리고 대체로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돌보고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설 돌봄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결정에는 유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왔다(주은선 외, 2014; 하석철, 2018). 다만, 그 요인별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돌봄 시간이 감소한다는 연구와(주은선 외, 2014; 하석철, 2018) 반대로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직접 양육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어머니가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인 경우보다 직접 돌봄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최상설·홍경준, 2012; 백은주·한선아·강민정, 2011). 부모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국외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 돌봄이 증가하고 시설 돌봄 이용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주은선 외, 2014; 하석철, 2018). 가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 돌봄 시간이 감소하고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며(김지경, 2004; 최상설·홍경준, 2012; 주은선 외, 2014; 이정원 외, 2018), 비혈연 및 친척 등을 통한 개인 대리양육이 증가한다(백은주 외, 2011). 그리고, 미취학 아동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부모돌봄이 증가하며(주은선 외, 2014) 동거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돌봄 선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석철, 2018).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근로 여부에 따라서 아동 돌봄서비스 활용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Van Dijk and Siegers 1995; Kreyenfeld and Hank 2000; Uunk et al. 2005; European Commission 2008). 어머니의 노동공급, 근로 결정이나 전일제와 시간제 결정 등이 돌봄 방법의 선택과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되고(Del Boca and Vuri, 2007) 둘 사이에는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Baker et al., 2008). 국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에 비해 직접 돌봄보다 시설이나 개인 대리양육의 가능성이 높고(김지경, 2004; 윤홍식, 2010; 최상설·홍경준, 2012; 이윤형, 2017; 이정원 외, 2018), 맞벌이의 경우 시설돌봄 이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석철, 2018).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규모 및 수요 추계에 있어, 선행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추가로 가구구조 변화 및 아동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영유아돌봄서비스의 대상자인 영유아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본으로 하되 선행연구인 이지혜·이철희(2024)의 영유아 가구구조 추계 결과를 활용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 가구 및 부모, 공적 돌봄기관

의 특성 등 영유아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별 이용률을 추정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영유아 돌봄서비스별 장래 이용 규모 및 이용 시간 등 수요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

1. 연구 방법(영유아 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선택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며, 영유아의 시간 배분은 어머니의 시간배분 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James-Burdumy, 2005; 이영옥, 2014)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영유아의 전체 시간(T)은 부모 돌봄시간(T_p),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돌봄시간(T_f), 혈연이나 비혈연 등이 제공하는 돌봄시간(T_o)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T_c = T_p + T_f + T_o \quad (1)$$

각각의 돌봄 투입시간에 따라서 자녀의 질(Q)이 결정된다고 하면,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돌봄시간이 같더라도 자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질은 각각의 돌봄주체별 투입시간과 주체별 돌봄의 질, 그리고 추가 재화 투입양(M)에 의해서 결정된다.

$$Q = Q(Q_p \cdot T_p, Q_f \cdot T_f, Q_o \cdot T_o, M) \quad (2)$$

영유아 가구의 효용이 소비(C)와 여가 시간(T_l)과 자녀의 질(Q)로 결정된다고 하면, 영유아 가구의 효용함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제약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ax U &= U(Q, C, T_l) \quad (3) \\ \text{where } C + P_f \cdot T_f + P_o \cdot T_o + M &= w_m T_m + N \end{aligned}$$

여기에서 Q는 자녀의 질, C는 소비, L은 여가시간, P_f 는 시설돌봄비용, P_o 는 친인척이나 비혈연 돌봄비용, M은 양육에 필요한 재화, w_m 는 어머니의 임금률, T는 각 요소별 투입시간, N은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나타냄.

부모 중 주된 돌봄제공자가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노동공급과 아동의 돌봄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가구 소득은 어머니의 근로소득(wT)과 기타 가구소득(N)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임금률(w)과 근로시간(T_m)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아동 어머니의 노동공급은 시설 및 개인양육(친인척 및 비혈연) 서비스의 가격, 임금률, 각 돌봄제공주체들의 질, 남편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정리하면, 부모(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돌볼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질 생산함수(Q)가 오목하다는 가정하에서 시설 및 개인양육의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부모 돌봄시간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그 대체 정도는 돌봄 제공주체들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i)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돌봄 방법 k 개 중에서 j 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선택에 비해 j 를 선택할 때 얻는 효용(U), 즉 자녀의 질적 수준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돌봄방법 j 를 선택할 때의 효용(U)은 설명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확정적 효용(V)과 확률적 효용(ε)으로 결정된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

$$U_j = V_j + \varepsilon_j, \text{ where } j = 1, 2, \dots, k \quad (4)$$

$$\begin{aligned} \Pr(y = j) &= \Pr(U_j > U_k), \text{ all } k \neq j & (4)' \\ &= \Pr(U_k - U_j < 0), \text{ all } k \neq j \\ &= \Pr(\varepsilon_k - \varepsilon_j < V_j - V_k), \text{ all } k \neq j \end{aligned}$$

k 개의 돌봄 유형 중 1을 선택했다면 이 때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Pr(y = 1) &= \Pr(\varepsilon_2 - \varepsilon_1 < V_1 - V_2, \dots, \varepsilon_k - \varepsilon_1 < V_1 - V_k) \\ &= \int_{-\infty}^{V_1 - V_2} \dots \int_{-\infty}^{V_1 - V_k} f(\varepsilon_2 - \varepsilon_1, \dots, \varepsilon_k - \varepsilon_1) d(\varepsilon_2 - \varepsilon_1) \dots d(\varepsilon_k - \varepsilon_1) \quad (5) \end{aligned}$$

여기에서 오차항의 분포가 제1종 극단값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라고 가정하면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varepsilon_j) = \exp(-\varepsilon_j) \exp(-\exp(\varepsilon_j)) \quad (6)$$

확정적 효용부분(V)을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돌봄 유형 1

1) 민인식·최필선(2019)의 pp.203-206의 설명을 참조함.

을 선택할 확률이 계산된다.

$$\Pr(y_i = 1) = \frac{\exp(x_i\beta_1)}{\sum_{i=1}^k \exp(x_i\beta_i)} \quad (7)$$

돌봄유형 결정과 같이 종속변수가 비순서형인 선택일 때 다항 로짓모형이나 다항 프로빗 모형을 주로 활용하며, 영유아 대상 돌봄유형결정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들에서 이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Connelly and Kimmel, 2003; Del Boca et al., 2004 등). 다항 로짓모형과 다항 프로빗 모형의 선택은 효용함수에서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인가, 즉 i.i.d(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가 위배되는가로 결정된다. 돌봄 유형들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서도 이를 지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항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영유아 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한다. 동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원, 보육 및 교육 현황, 보육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대상인 만6세 미만의 3,775명의 아동별 조사자료와 가구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 아동 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1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의 돌봄지원유형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 양육수당 (2) 보육료 지원 (3) 유아학비의 3가지 중 하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아동 중 양육수당은 26.8%, 보육료지원은 46.4%, 유아학비는 26.7%가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07:00~22:30까지 30분 단위로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에 대한 조사 항목을 활용하면 돌봄 유형별 중복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1) 부모 돌봄만 하는 가구 (2) 어린이집 (3) 유치원 (4) 어린이집+개인양육(친인척 혹은 비혈연)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 등 6개의 돌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의 돌봄유형 중 부모돌봄만 하는 경우는 20.2%, 어린이집은 36.7%, 유치원 17.2%이고, 개인양육서비스만 활용하는 경우는 6.6%이고, 시설과 개인양육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는 19.2%로 나타났다.

<표 3> 돌봄유형 구성

전체	양육수당 수급자 (1,013명, 26.8%)	보육료 지원 대상자 (1,753명, 46.4%)	유아학비 대상자 (1,009명, 26.7%)
3,775명 (100%)	(1) 부모 돌봄만 762명(20.2%)	(2) 어린이집(+학원) 1,385명(36.7%)	(3) 유치원(+학원) 651명(17.2%)
	(6) 개인양육서비스 (친인척, 비혈연) 251명(6.6%)	(4) 어린이집 +개인양육 368명(9.7%)	(5) 유치원+개인양육 358명(9.5%)

6개의 돌봄유형 구분에 따른 영유아 및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돌봄과 개인양육방법에서 시설양육과 개인양육을 중복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부부+미혼자녀가구와 3세대 가구 유형 모두에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부모돌봄이 약 20%pt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시설돌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맞벌이가구의 개인양육 활용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보육실태조사 기초통계(2018년) - 6개 돌봄유형별

구분	소계	돌봄 방법 활용 아동수(단위: 명)					
		부모 돌봄만	어린이 집	유치원	어린이집+ 개인양육	유치원+ 개인양육	개인양육 서비스
전체	3,775 100%	762 20.2%	1,385 36.7%	651 17.2%	368 9.8%	358 9.5%	251 6.7%
아동 연령별							
만0세	434 11.5%	342 78.8%	18 4.2%	- -	3 0.7%	- -	71 16.4%
만1세	553 14.6%	280 50.6%	172 31.1%	- -	35 6.3%	- -	66 11.9%
만2세	535 14.2%	82 15.3%	340 63.6%	- -	86 16.1%	- -	27 5.1%
만3세	614 16.3%	35 5.7%	383 62.4%	71 11.6%	76 12.4%	30 4.9%	19 3.1%
만4세	615 16.3%	15 2.4%	235 38.2%	199 32.4%	62 10.1%	75 12.2%	29 4.7%
만5세	574 15.2%	8 1.4%	142 24.7%	218 38.0%	52 9.1%	136 23.7%	18 3.1%
만6세	450 11.9%	- -	95 21.1%	163 36.2%	54 12.0%	117 26.0%	21 4.7%
가구유형별							
부부+미혼자녀	3,170 84.0%	665 21.0%	1,223 38.6%	577 18.2%	260 8.2%	266 8.4%	179 5.6%
-맞벌이	1,508 39.9%	148 9.8%	584 38.7%	241 16.0%	227 15.1%	179 11.9%	129 8.6%
-비맞벌이	1,662	517	639	336	33	87	50

	44.0%	31.1%	38.4%	20.2%	2.0%	5.2%	3.0%
한부모	86	15	31	17	7	14	2
	2.3%	17.4%	36.0%	19.8%	8.1%	16.3%	2.3%
3세대	435	74	120	54	77	54	56
	11.5%	17.0%	27.6%	12.4%	17.7%	12.4%	12.9%
-맞벌이	250	15	57	28	65	43	42
	6.6%	6.0%	22.8%	11.2%	26.0%	17.2%	16.8%
-비맞벌이	185	59	63	26	12	11	14
	4.9%	31.9%	34.1%	14.1%	6.5%	5.9%	7.6%
기타	84	8	11	3	24	24	14
	2.2%	9.5%	13.1%	3.6%	28.6%	28.6%	16.7%

이후의 아동 돌봄유형 분석을 위해 돌봄유형은 앞서 설명한 6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아동의 성별 및 연령, 출생순위 및 출생분기 등 아동 특성 외에,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년수, 가구 내 영유아 수, 맞벌이유무, 가구소득, 대도시 여부, 가구유형(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가구, 3세대가구, 기타가구) 등의 가구 특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보육 시설의 특성이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이 충분한지(접근성) 및 믿고 보낼만한 기관이 있는지(신뢰기관 유무) 등을 추가하였다.

IV. 영유아가구의 돌봄유형별 이용 규모 추계

영유아돌봄유형별 이용 규모는 연령별 가구유형별 아동수에 연령별 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돌봄 대상자의 가구 분포 및 돌봄유형별 선택확률 추정 결과,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산출한 이용규모 추계 결과를 제시한다.

1. 영유아 인구수 및 가구분포 변화

영유아수(0~6세)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만 0세~6세 영유아의 2020~2035년 자료를 활용한다. 영유아수는 2020년 265.1만명에서 2035년 214.6만명으로 증가하며, 각세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만0세는 영유아수 전체의 11%이나 2030년 이후 영유아수의 출생아수 증가로 영아의 비중이 높아져 2035년에는 만0세의 비중은 15.1%가 된다.

여기에 영유아 아동의 가구구조변화를 추가로 고려하였는데, 영유아 아동의 주요 가구 유형을 (1) 부부+미혼자녀가구-맞벌이 (2) 부부+미혼자녀가구-비맞벌이 (3) 한부모가구 (4) 3세대가구-맞벌이 (5) 3세대가구 -비맞벌이 (6) 기타가구 등으로 구분하고,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5-2021년간의 과거 가구 유형별 변화에 대한 전이확률을 구하여 이를 전이행렬(P)로 구성하고, 가구유형 전이행렬이 2021년 이후에도 유지 혹은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영유아 아동의 가구유형별 변화 가능성을 도출하였다¹⁾.

$$Y(t+n) = Y(t) \times P_{t,t+n} \quad (8)$$

$$\text{여기에서 } P_{t,t+n} = \begin{bmatrix} P^{11} & \dots & P^{16} \\ \dots & \dots & \dots \\ P^{61} & \dots & P^{66} \end{bmatrix}, \quad \sum_{j=1}^6 P^{ij} = 1,$$

$$P^{ij} = \Pr(H_{t+n} = j | H_t = i), \quad 0 \leq P^{ij} \leq 1,$$

Y는 가구수, H는 가구 유형, P는 가구유형별 전이행렬, i와 j는 6개의 가구 유형 중 i와 j 유형을 나타냄.

1) 상세한 내용은 이지혜·이철희(2024)를 참고하기 바람. 맞벌이 비중 변화는 노동패널 2015-2021년의 맞벌이가구 변화양상을 2021년 이후에 반영했으며, 추가 가정을 위해 OECD의 평균 맞벌이가구 비중을 활용함.

가구유형 전이행렬 및 맞벌이 비중 변화에 따른 향후 수요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가정을 도입하여 6가지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는데, (1) 2018-2021 가구유형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가구유형 전이행렬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1)번 시나리오가 가장 완만하게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변화하며, (6)번 시나리오가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다.

2018-21년의 영유아 가구구조변화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1은 다음과 같이, 영아의 경우 2021년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과 2036년의 비중은 81.7%와 81.4%로 유사하나 맞벌이 비중의 변화는 전체의 14.6에서 19.8%로 증가한다. 유아의 경우에도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은 2021년과 2036년이 유사하나, 동기간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2.2%에서 27.2%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유아의 가구 구조 변화(2021-36년) - 시나리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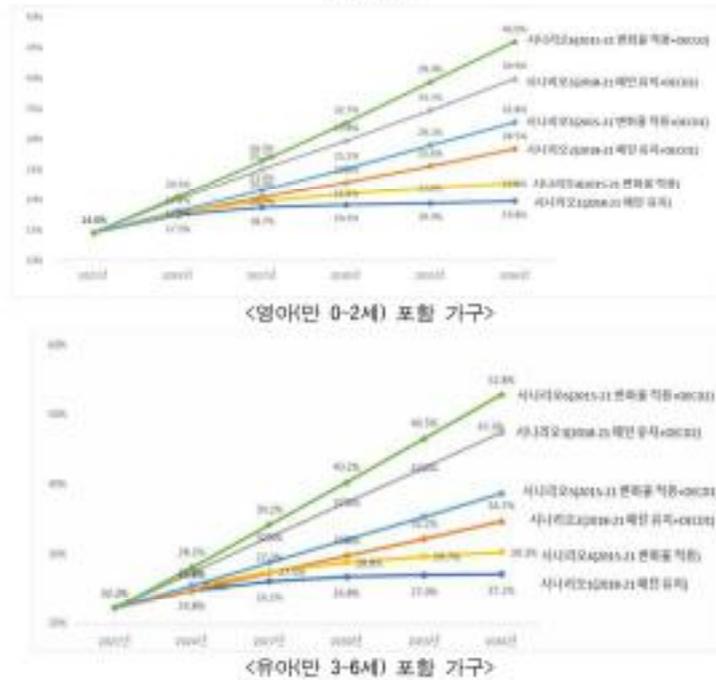
구분	인구수 변화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3세대가구			기타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만 0-2세>									
2021년	100.0%	81.7%	14.6%	67.2%	5.7%	5.3%	2.4%	2.9%	7.3%
2024년	82.3%	83.5%	17.5%	66.0%	5.4%	4.6%	2.1%	2.4%	6.6%
2027년	83.4%	82.7%	18.7%	64.0%	5.4%	4.8%	2.3%	2.4%	7.1%
2030년	96.1%	81.5%	19.2%	62.3%	5.2%	5.3%	2.6%	2.7%	8.0%
2033년	105.1%	81.1%	19.4%	61.7%	5.0%	5.4%	2.7%	2.8%	8.4%
2036년	109.0%	81.4%	19.8%	61.6%	5.0%	5.4%	2.6%	2.7%	8.2%
<만 3-6세>									
2021년	100.0%	77.9%	22.2%	55.7%	7.6%	6.1%	2.7%	3.4%	8.4%
2024년	75.9%	78.4%	24.8%	53.6%	7.6%	5.9%	2.8%	3.1%	8.2%
2027년	62.0%	78.4%	26.1%	52.3%	7.6%	5.9%	2.9%	3.0%	8.2%
2030년	60.2%	78.2%	26.8%	51.5%	7.5%	5.9%	2.9%	3.0%	8.3%
2033년	68.9%	78.1%	27.0%	51.0%	7.5%	6.0%	3.0%	3.1%	8.4%
2036년	76.0%	78.1%	27.2%	50.9%	7.5%	6.0%	3.0%	3.1%	8.4%

자료: 이지혜·이철희(2024), p.20. 재인용

6가지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부부+미혼자녀가구-맞벌이가구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영아의 가구구조는 시나리오에 따라,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이 2021년 전체의 81.7%에서 2036년 81.4%~93.8%가 되며, 부부+미혼자녀가구-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14.6% 수준에서 2036년 19.8%~46.0%로 변화한다. 유아의 가구유형은,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이 2021년 전체 가구의 77.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8.1%~87.0%로 증가한다. 부부+미혼자녀-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22.2% 수준에서 2036년 27.2%~52.8%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6> 영유아 포함 부부+미혼자녀X맞벌이가구 비중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별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자료: 이지혜·이철희(2024), p.95. [그림 3] 재인용

2. 돌봄유형 결정 모형 및 선택확률 추정

다음으로,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돌봄유형에 대한 결정, 즉 아동 i 가 아동돌봄서비스 유형 j 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¹⁾ 선택가능한 범주가 $j=1, 2, \dots, J$ 이고, 개인 i 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잠재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 돌봄유형 j 를 선택할 때의 효용은 Y 와 같다.

$$Y_{ij} = \beta_j X_i + \epsilon_{ij} \quad (9)$$

where $y_i = j$ if $y_{ij} = \max U(y_{i1}, y_{i2}, \dots, y_{iJ})$

종속변수 (Y_j)²⁾는 비순서형 선택형 범주로 영유아가구에서 받고 있는 돌봄지원유형을 나타내며, (1) 양육수당(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유치원 (4) 어린이집+개인양육(친인척 혹은 비동거인)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으로 구분한다. 설명변수로는 아동 성별, 연령, 출생순위 등의 아동특성과 어머니 연령, 가구내 다른 영유아수, 가구소득, 맞벌이여부, 가구유형, 지역 등의 가구 및 부모 특성과 보육교육시설의 접근성과 신뢰할 만한 기관 유무 등을 고려하였다. ϵ_{ij} 는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평균 0, 분산 1, 공분산 0인 다변량 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양육수당지원(base)과 다른 돌봄지원방법의 상대적인 선택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된다.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가구인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주변에 신뢰할 만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지원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나 가구 내에 다른 돌봄제공 가능자가 있는 3세대 가구나 기타가구에 사는 어린이집 이용이 줄어든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가구인 경우, 한부모가구의 경우, 신뢰할만한 기관이 근처에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1) 민인식·최필선(2021), pp. 247-248. 참고하여 작성

2) "학원"은 관측수가 적어서 제외

<표 7> 영유아 보육지원유형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어린이집 (base: 부모돌봄)		유치원 (base: 부모돌봄)		어린이집 +개인양육 (base: 부모돌봄)		유치원+개인양육 (base: 부모돌봄)		개인양육-친인척 비협연 (base: 부모돌봄)	
	추정 계수	s.e.	추정 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 계수	s.e.	추정 계수	s.e.
아동 특성										
남성	-0.09	0.11	-0.06	0.13	-0.06	0.13	0.05	0.14	-0.21	0.14
연령	0.77***	0.06	1.41***	0.07	0.98***	0.07	1.56***	0.07	0.76***	0.07
출생순위	-0.04	0.09	-0.14	0.11	-0.18	0.11	-0.27**	0.12	-0.19	0.11
출생분기	0.09*	0.04	0.26***	0.06	0.21***	0.06	0.32***	0.06	0.09	0.06
가구/부모 특성										
어머니 연령	-0.04***	0.01	-0.02	0.02	-0.01	0.02	-0.04**	0.02	0.00	0.02
어머니 교육연수	-0.03	0.03	0.03	0.03	-0.02	0.03	-0.02	0.04	0.05**	0.04
다른 영유아수	0.38**	0.16	0.31*	0.18	0.24*	0.18	0.13	0.19	0.15	0.19
가구소득	0.08**	0.04	0.16	0.04	0.28	0.04	0.30***	0.05	0.30***	0.05
맞벌이여부	1.26***	0.13	0.98***	0.15	2.16***	0.16	1.63***	0.17	1.42***	0.16
가구유형(기준:부부+미혼자녀)										
한부모가구	0.26	0.33	0.37	0.40	0.20	0.46	1.00	0.43	0.14	0.53
3세대 가구	-0.18	0.18	0.23	0.21	0.96***	0.20	0.84***	0.23	0.79***	0.21
기타 가구	-1.54***	0.51	-1.37**	0.64	0.45	0.52	0.16	0.57	0.06	0.51
지역 (기준: 대도시)										
(2) 중소도시	0.20*	0.12	0.28*	0.15	-0.12	0.15	-0.31**	0.16	0.05	0.16
(3) 읍면지역	0.27**	0.13	0.22	0.16	-0.43***	0.16	-0.50***	0.17	-0.18	0.17
보육교육시설 특성										
접근성	-0.04	0.11	0.03	0.13	-0.16	0.13	-0.05	0.14	-0.24	0.14
신뢰기관 유무	0.53***	0.15	0.58***	0.20	0.39**	0.20	0.32	0.22	0.14	0.20
상수항	-0.48	0.61	-5.72	0.77	-4.24	0.78	-5.68***	0.85	-4.22***	0.89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함을 의미함.
 관측치 = 3,232 / Log pseudolikelihood = -3137.73 / Prob > chi2 = 0.0000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특정 설명변수(예를 들면, 아동 연령)의 선택확률은 다른 설명변수들이 평균값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P_i^s = \frac{\exp(\beta_0^s + \beta_i^s X_i + u_i)}{\sum_{j=1}^s \exp(\beta_0^j + \beta_i^j X_i + u_i)} \quad (10)$$

돌봄유형별 선택확률 추정결과를 가구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연령별로 맞벌이가구(가구유형1과 유형4)와 비맞벌이가구(가구유형2와 유형5) 유형에 따라 부모돌봄, 시설돌봄, 개인양육(친인척 및 비혈연)의 선택 확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영아에서 유아로 갈수록 부모돌봄보다는 시설돌봄 쪽으로 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8> 돌봄지원유형(6가지) 선택확률(다른조건이 평균일 때)

연령	가구유형	(1)부모 돌봄만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 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 개인양육	(6) 개인양육
0세	유형1	0.5257	0.1680	0.0223	-	-	0.2841
	유형2	0.9108	0.0454	0.0000	-	-	0.0438
	유형3	0.7060	0.0634	0.0000	-	-	0.2306
	유형4	0.3181	0.0606	0.1070	-	-	0.5143
	유형5	0.8222	0.0156	0.0003	-	-	0.1619
	유형6	0.7024	0.0018	0.0012	-	-	0.2947
1세	유형1	0.2063	0.4664	0.1435	-	-	0.1838
	유형2	0.6508	0.3032	0.0009	-	-	0.0451
	유형3	0.5459	0.3212	0.0000	-	-	0.1330
	유형4	0.0884	0.1952	0.3908	-	-	0.3256
	유형5	0.6149	0.2090	0.0117	-	-	0.1644
	유형6	0.3404	0.0124	0.2572	-	-	0.3900
2세	유형1	0.0205	0.6415	0.2980	-	-	0.0401
	유형2	0.2270	0.7417	0.0107	-	-	0.0206
	유형3	0.1097	0.8339	0.0000	-	-	0.0564
	유형4	0.0074	0.3062	0.6042	-	-	0.0822
	유형5	0.1907	0.6129	0.1006	-	-	0.0958
	유형6	0.2608	0.0478	0.4323	-	-	0.2591
3세	유형1	0.0167	0.5812	0.1547	0.1433	0.0629	0.0412
	유형2	0.1252	0.6108	0.0286	0.1999	0.0186	0.0170
	유형3	0.0908	0.6104	0.0524	0.1510	0.0953	0.0000
	유형4	0.0145	0.3951	0.3072	0.1230	0.1160	0.0441
	유형5	0.1061	0.4923	0.0929	0.2083	0.0622	0.0382
	유형6	0.1680	0.2953	0.3536	0.0445	0.1326	0.0060
4세	유형1	0.0051	0.4255	0.1710	0.2079	0.1320	0.0585
	유형2	0.0533	0.4884	0.0407	0.3295	0.0575	0.0305
	유형3	0.0517	0.3997	0.0595	0.2899	0.1992	0.0000
	유형4	0.0040	0.2807	0.3048	0.1506	0.2024	0.0575
	유형5	0.0380	0.3396	0.1019	0.3252	0.1504	0.0450
	유형6	0.1614	0.1918	0.3287	0.0641	0.2385	0.0155

5세	유형1	0.0010	0.2361	0.1656	0.2720	0.2436	0.0818
	유형2	0.0159	0.3053	0.0452	0.4545	0.1318	0.0473
	유형3	0.0240	0.2487	0.0224	0.4202	0.2848	0.0000
	유형4	0.0007	0.1398	0.2671	0.2201	0.3107	0.0615
	유형5	0.0108	0.2002	0.1140	0.3624	0.2723	0.0402
	유형6	0.0323	0.1013	0.3852	0.0891	0.3751	0.0170
6세	유형1	0.0002	0.1224	0.1433	0.2918	0.3514	0.0910
	유형2	0.0054	0.1797	0.0412	0.5243	0.1867	0.0627
	유형3	0.0008	0.1128	0.0596	0.3321	0.4947	0.0000
	유형4	0.0001	0.0706	0.1954	0.2275	0.4342	0.0722
	유형5	0.0020	0.1052	0.0872	0.4297	0.3304	0.0455
	유형6	0.0076	0.0432	0.2881	0.0978	0.5478	0.0154

주: 가구유형1은 부부+미혼자녀-맞벌이, 2는 부부+미혼자녀-비맞벌이, 3은 한부모+미혼자녀, 4는 3세대-맞벌이, 5는 3세대-비맞벌이, 6은 기타가구임.

3.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

앞의 결과를 활용하여, 돌봄유형별 이용규모는 가구유형 및 연령 등을 고려한 영유아수에 해당 그룹별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NCCS_j^i = \sum_a \sum_f P_j^{af} N_i^{af} \quad (11)$$

NCCS는 아동돌봄유형별 이용자수, N는 가구유형 및 연령을 고려한 아동수, P는 연령별 가구유형 돌봄유형별 돌봄이용확률, f는 가구유형(맞벌이여부 포함), a는 아동 연령, j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유형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구구조 변화 외에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어느정도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이용규모를 인구 변화만을 고려했을 때와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로 나눠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돌봄유형은 (1)부모돌봄만 (2)어린이집 (3)유치원 (4) 어린이집+개인양육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서비스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유아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아와 유아의 결과를 따로 제시하였다.

먼저 영아(만 0~2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 가정에 따라 2021년 88.4만 명에서 감소하다 반등을 보여 2036년 96.4만명으로 증가한다.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 4가지 돌봄 유형의 이용 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부모돌봄만 하는 경우는 2021년 49.7에서 2036년 56.1로 12.8% 증가,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1.4에서 43.0으로 3.8%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3에서 15.6으로 9% 정도 증가한다.

그런데,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빠른 증가세 및 OECD 수준의 맞벌이 비중을 반영한 시나리오 6의 인구 및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부모돌봄은 49.7에서 2036년 46.3으로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1.4에서 50.5로 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21.3으로 약 48.6% 증가한다. 여러 시나리오별 결과에서도, 어린이집과 개인양육 서비스의 이용규모가 가구구조 변화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8.4만명=100으로 환산)



주: 시나리오(1) 2018-2021 가구유형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 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유아(만 3~6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에 따르면 2021년 160.3만명에서

그런데,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빠른 증가세 및 OECD 수준의 맞벌이 비중을 반영한 시나리오 6의 인구 및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부모돌봄은 49.7에서 2036년 46.3으로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1.4에서 50.5로 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21.3으로 약 48.6% 증가한다. 여러 시나리오별 결과에서도, 어린이집과 개인양육 서비스의 이용규모가 가구구조 변화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8.4만명=100으로 환산)



주: 시나리오(1) 2018-2021 가구유형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 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유아(만 3~6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에 따르면 2021년 160.3만명에서

크게 감소하여 약간 반등하나 2036년 76.0만명으로 2021년의 76% 수준이 되어, 전체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1) 부모 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의 6가지 돌봄 유형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3.8에서 2036년 3.2로 15.3% 감소,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3.6에서 34.6으로 20.7% 감소, 유치원(유치원과 유치원+개인양육 합산)은 동기간 48.3에서 35.1로 27.9%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2.7로 약 27.0% 감소한다. 인구 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시나리오 6(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부모 돌봄은 3.8에서 2036년 2.1로 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3.6에서 36.1로 17.4%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0으로 29.7% 감소, 개인 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6.1로 16.2% 감소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보육교육기관 및 개인양육서비스의 규모도 감소하나, 맞벌이 비중 증가 등의 가구구조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 부모돌봄 외의 돌봄유형에서의 수요 감소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의 이용규모는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경우에 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구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체 정도 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서도 돌봄유형별 이용규모는 인구변화 외에도, 가구구조 및 맞벌이 비중에 따라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0〉 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160.3만명=100으로 환산)



〈2021년과 2036년의 유아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비교〉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V. 돌봄유형별 돌봄시간 및 돌봄 비용 추계

1. 영유아 돌봄시간 및 비용 결정요인 분석

추가로, 돌봄유형별 돌봄시간 및 돌봄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영유아의 돌봄유형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인양육의 이용시간과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설양육 및 개인양육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돌봄유형에 대한 이용여부를 우선 선택하고, 이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돌봄 유형에 대한 선택(selection equation)한 후에, 돌봄 유형별 돌봄 시간과 돌봄 비용을 결정(regression equation)하는 모형을 Heckman(1976)에서 제시된 내용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2i} = \beta x_i + u_i : \text{돌봄 시간 및 돌봄 비용 결정} \quad (12)$$

$$y_{1i}^* = \alpha z_i + v_i : \text{돌봄 유형 선택}$$

$$y_{1i} = 1, \text{ if } y_{1i}^* > 0$$

$$y_{1i} = 0, \text{ otherwise}$$

여기에서, z_i 에는 돌봄 유형을 선택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돌봄 시간 및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외조건(exclusion restriction)을 포함한다. 또한, 오차항은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u_i \sim N(0, \sigma^2) \text{ and } v_i \sim N(0, 1)$$

$$\text{corr}(u_i, v_i) = \rho$$

돌봄방법별 이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 및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와 함께, 거주지 근처에 가까운 보육교육시설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기관이 있는지 등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용시간과 비용 수준의 결정요인으로는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가구소득, 가구유형, 거주지역 등의 가구 특성 외에 시설의 돌봄프로그램수 등을 추가하였다. 이용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용 시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외조건으로, 등원시간, 근처 보육시설의 유무, 신뢰할만한 기관의 유무 등을 고려하였는데 모형마다 독립성 가정($H_0: \rho = 0$)

에서 유의한 변수로 선택하였다.

어린이집의 이용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맞벌이인 경우, 주변에 신뢰할 만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의 경우에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가정에서 지출하는 보육비용이 0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아동당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한 달간의 총비용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세별 부모 및 시설지원금¹⁾과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프로그램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원 영유아 부모 보육료 및 기관 기본보육료가 낮아져서 연령에 따라 이용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다만, 맞벌이에 따른 이용비용의 증가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시간당 돌봄비용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높아지고, 대도시와 프로그램수에 따라서도 높아진다.

1) 2018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는, 종일반을 기준으로 0세 부모보육료는 44.1만원/월, 민간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43.7만원/월임. 1세는 부모보육료 38.8만원/월, 기본보육료 23.8만원/월, 2세는 부모보육료 32.1만원/월, 16.1만원/월, 3~5세는 부모보육료 22만원/월임.

<표 11>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비용 결정요인 분석

1단계 분석	어린이집 이용여부		어린이집 이용여부		어린이집 이용여부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아동 특성						
연령	0.00	0.01	0.03**	0.01	0.04***	0.01
가구/부모 특성						
어머니 연령	-0.02***	0.01	-0.02***	0.00	-0.01***	0.00
맞벌이여부	0.38***	0.04	0.28***	0.04	0.24***	0.04
보육교육시설 특성						
신뢰기관 유무	0.14***	0.04	0.13***	0.04	0.09***	0.03
상수항	0.34*	0.18	0.19	0.17	0.08	0.17
2단계 분석	이용시간(log)		보육비용(log)		시간당 비용(log)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아동 특성						
연령	0.02***	0.00	-0.18***	0.01	0.02***	0.01
남성	-0.01	0.01	-0.01	0.01	0.01	0.01
가구/부모 특성						
어머니 연령	0.00	0.00	0.00*	0.00	-0.01***	0.00
어머니교육연수	-0.01***	0.00	0.00	0.00	0.01***	0.00
다른 영유아수	-0.01	0.01	-0.01	0.01	-0.01	0.01
가구소득(모소득제외)	-0.04***	0.01	0.00	0.01	0.02*	0.01
가구유형						
(부부+미혼자녀)X맞벌이	0.09**	0.04	0.04	0.05	-0.02	0.04
(부부+미혼자녀)X비맞벌이	0.03	0.04	0.11**	0.05	-0.06	0.04
한부모가구	0.11**	0.05	0.06	0.06	-0.06	0.05
3세대X맞벌이	0.05	0.04	0.00	0.05	-0.01	0.04
3세대X비맞벌이	0.06	0.05	0.12**	0.05	-0.07	0.05
대도시 여부	-0.03***	0.01	0.00	0.01	0.04***	0.01
프로그램수	0.00	0.00	0.02***	0.00	0.06***	0.00
상수항	2.38***	0.08	6.53***	0.10	-0.13	0.10
	관측수 = 3,249 (Selected = 1,544) Log likelihood = -1709.1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관측수 = 3,249 (Selected = 1,544) Log likelihood = -2149.7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관측수 = 3,249 (Selected = 1,544) Log likelihood = -2064.7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유치원의 경우에는 3세 이상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많고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유치원 이용확률이 높아지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이용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맞벌이인 경우에 이용에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도 야간보육까지 유연한 편인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에는 맞벌이인 경우에 시간 제약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용시간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지거나 비맞벌이인 경우 이용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비용은 프로그램수에 따라서, 그리고 대도시와 사립유치원의 경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비용도

비용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분석한, 돌봄유형별 돌봄시간 및 비용 추정 결과는 영유아의 돌봄유형별 수요추계에 활용한다. 다만, 돌봄 유형간에 대체관계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돌봄유형별 이용 및 시간 그리고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개인양육서비스 등 각각의 돌봄유형에 대한 이용 여부에 따른 돌봄 시간과 비용 추정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러 돌봄유형간 대체효과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장래 영유아 돌봄시간 및 비용 분석 결과

돌봄유형별 아동수에 추정한 돌봄유형별 이용시간 및 돌봄비용을 곱하여, 돌봄유형별 돌봄 시간과 돌봄 비용을 추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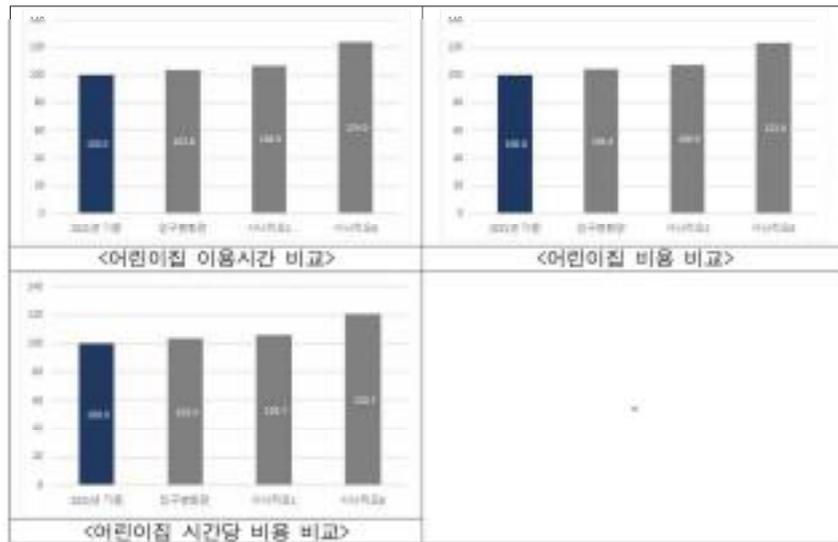
$$NCCS1_i^j = \sum_a \sum_f P_j^{af} N_i^{af} Hour_i^{af} \quad (13)$$

$$NCCS2_i^j = \sum_a \sum_f P_j^{af} N_i^{af} Cost_i^{af} \quad (14)$$

NCCS1은 아동돌봄유형별 총시간, NCCS2는 총비용, N은 가구유형 및 연령을 고려한 아동수, P는 연령별 가구유형 돌봄유형별 돌봄이용확률, f는 가구유형(맞벌이여부 포함), a는 아동 연령, j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유형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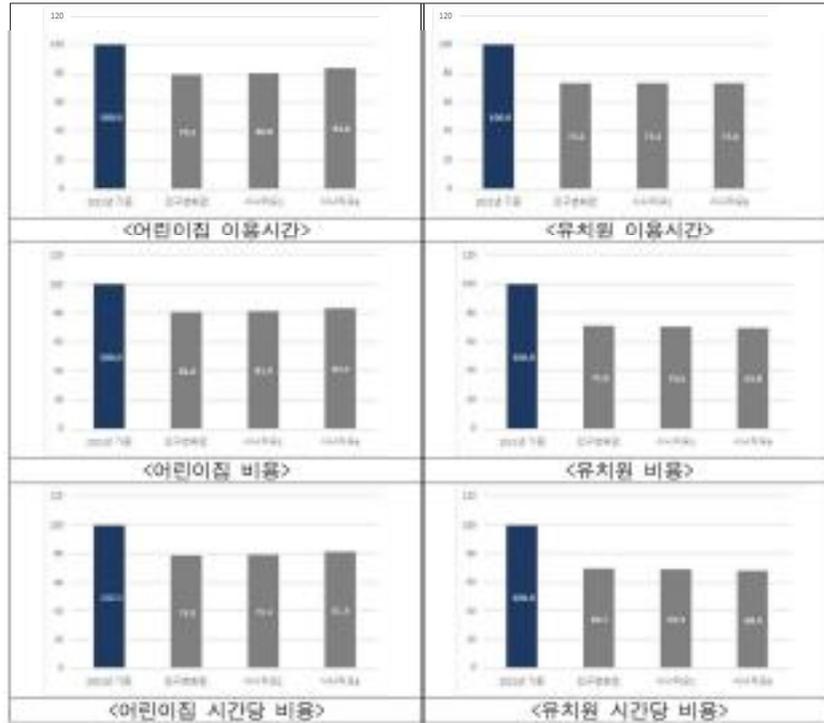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돌봄시간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돌봄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인구수 증가로 인해 2036년 103.8이 되며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106.9~124.0으로 증가한다. 어린이집 비용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2036년 104.4로 증가하고 시간당 비용은 103.4로 2021년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비용은 106~123.0, 시간당 비용은 105.7~120.7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비용 - 시나리오별 비교



유아의 경우에는 아동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38년의 이용시간과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시간과 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9.2 수준, 비용은 81, 시간당 비용은 78.9가 된다. 여기에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0~83.8, 비용은 81.4~83.3, 시간당 비용은 79.4~81.8이 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어린이집만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나 가구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우 모두 2021년 현재 수준의 70~7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호 등 대체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시간과 비용 - 시나리오별 비교



VI. 결론

본 연구는 장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이용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영유아의 인구수 변화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영유아 포함 가구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탐구하였다. 영유아수의 변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되 영유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비중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아동돌봄지원유형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선택확률을 돌봄서비스별 이용자 규모 산출에 활용하였다. 영유아 돌봄지원유형은 크게 (1) 양육수당 (2) 보육료지원 (3) 유아학비 지원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 시 친인척 등 개인 양육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중복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유형을 참고하여 (1) 부모돌봄만 (2) 어린이집 (3) 유치원 (4) 어린이집+개인양육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서비스(친인척 및 돌보미) 등 6개로 구분하였다.

2021-36년간 돌봄유형별 이용자 규모는 아동의 연령 및 가구유형별 인구수에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을 곱하는 셀 기반(cell-based)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영아(만0~2세)의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변화 가정에 따라 2021년 88.4만명에서 감소하다 반등을 보여 2036년 96.4만명으로 2021년 대비 1.09배 정도 소폭 증가한다.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 4가지 돌봄 유형의 이용 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했을 때 부모돌봄만 하는 경우는 2021년 49.7에서 2036년 56.1로 12.8% 증가,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1.4에서 43.0으로 3.9%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3에서 15.6으로 8.7% 정도 증가한다. 그런데, 영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비중 변화 등 가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부모돌봄은 49.7에서 2036년은 시나리오에 따라 46.1~53.9로 달라지고, 어린이집은 동기간 41.4에서 43~50.5로 6.6~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13.9~24.3으로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69.3%까지도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돌봄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2036년 103.8이 되는데, 가구구조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는 106.9~124.0으로 증가한다. 어린이집 비용(시설 및 부모지원금 포함)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2036년 104.4로 증가하나 가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106~123.0, 시간당 비용은 105.7~120.7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아(만3~6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에 따르면 2021년 160.3만명에서 크게 감소하여 약간 반등하나 2036년 76.0만명으로 2021년의 76% 수준이 되어, 전체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돌봄유형별 이용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이 커서 가구 구조 시나리오별 추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의 6가지 돌봄 유형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3.8에서 2036년 3.2로 15.3% 감소,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3.6에서 34.6으로 20.7% 감소, 유치원(유치원과 유치원+개인양육 합산)은 동기간 48.3에서 35.1로 27.4%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2.7로 약 27.0% 감소한다. 인구 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는 부모돌봄은 2021년 3.8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2.1~3.1로 19.9~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3.6에서 34.9~36.1로 17.4~20.0%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0~34.8로 27.9~29.7% 정도 감소, 개인 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1.8~26.1로 10.9~30.0% 감소한다. 이용시간과 비용으로 산정한 이용 규모의 변화는 2021년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9.2 수준, 비용은 81, 시간당 비용은 78.9가 된다. 여기에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감소 정도가 완화되는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0~83.8, 비용은 81.4~83.3, 시간당 비용은 79.4~81.8 정도가 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어린이집만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나 가구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우 모두 2021년 현재 수준의 70~7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의 인구수는 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수 외에도, 영유아 가구 구조의 변화, 특히 맞벌이 가구의 비중에 따라서 돌봄유형별 이용규모는 그 감소폭이 완화 혹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돌봄유형별 이용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시설 돌봄에 대한 접근성 및 질적 개선 등으로 수요가 증가해왔음을 고려하면 인구 변화에 따른 공적 돌봄 수요 감소폭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구 구조 변화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정책 마련과, 이용 인원과 같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는 서비스 이용 아동 1명당 돌봄 시간과 돌봄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비

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영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추가로,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로 인해 전체 돌봄서비스 수요 중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비중이 달라지고, 만약 영아와 유아 돌봄서비스 인력 및 시설이 완전히 대체적이지 않다면, 향후 영아 및 유아 돌봄서비스 인력 및 시설 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어린이집, 유치원, 개인 양육 등) 돌봄서비스 시설 및 인력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면 유형 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의 변화로 인해 장시간, 고비용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공급 측면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아이돌보미 등 개인양육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맞벌이가구 및 영유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개인양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로 인해 나타날 아동 돌봄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돌봄유형별 서비스에 대한 선호변화 등으로 인한 미래 돌봄서비스별 이용률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포함하지 못하고 최근 돌봄형태별 이용률을 기초로 계산하였으며, 돌봄유형 간의 대체가능성 및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혼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의 선택은 상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 및 아동 돌봄 여건 등에 따른 맞벌이 가구 및 돌봄유형의 결정에 대한 추가 분석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영유아 돌봄서비스 추계 방식에 영유아 가구구조의 변화와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영유아 돌봄이용 규모를 추계하는 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동훈·최효미·홍근석·김태우, 『양육지원정책 증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21-11, 육아정책연구소, 2021.
- 김지경,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민인식·최필선,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2019.
- 박진아·박창현·엄지원, 『유아교육과 보육 증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연구보고서 2015-13, 육아정책연구소, 2015.
- 백은주·한선아·강민정,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2011.
- 윤홍식, “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 직접양육, 가족자원, 보육시설”. 『사회과학연구』. 26(1): 1-2, 2010.
- 이영옥,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4-11,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윤희, “조부모 양육과 기관 양육을 선택하는 부모 특성 및 요인, 『열린유아교육연구』. 22(6): 353-3, 2017.
- 이정원·최효미·이혜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06, 육아정책연구소, 2018.
- 이지혜,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지혜·이철희,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한국인구학』, 47권 1호, 2024.
- 주은선·김사현·김민정,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1):1-31, 2014.
- 최상설·홍경준,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9(3): 29-57, 2012.
- 최지은·안미영,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유아 가구의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시기 비부모 돌봄유형과 예측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42(2): 390-4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하석철, “보육 정책의 확대에 따른 아동 돌봄 유형 선택 영향 요인의 변화”, 『사회과학논총』, 제21집 2호, pp.125-148, 2018.
- 하석철, “노인의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Vol.

46, No. 2, pp. 27–55, 2019.

Baker, Michael, Gruber, Jonathan, and Milligan, Kevin,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116, Number 4, 2008.

Banfi, Silvia, Farsi, Mehdi, and Filippini, Massimo, “An Empirical Analysis of Child Care Demand in Switzerland” ,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 80, Issue 1, pp. 37–66, 2009.

Blau, David M. and Hagy, Alison P., “The Demand for Quality in Child Care”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 1., 104–146, 1998.

Blau, D. M. & Currie, J., “Preschool, Day Care, and Afterschool Care: Who’s Minding the Kids” , Working Paper No. 10670., 2003.

Carnegie Task Force on Meeting the Needs of Young Children, “Starting Points: Meeting the Needs of Our Youngest Children” , New York, NY: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1994.

Connelly, Rachel, and Kimmel, Jean, “Marital status and full-time/part-time work status in child care choices” , *Applied Economics*, 35:7, 761–777, 2003.

Del Boca, Daniela., Marilena, Locatelli, and Vuri, Daniela, “Child-Care Choices by Working Mothers” ,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3, pp. 453 –477. 2005.

Del Boca, D., Vuri, D. “The mismatch between employment and child care in Italy: the impact of rationing” ,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 pp. 805–832, 2007.

Del Boca, Daniela, “Child Care Arrangements and Labor Supply” , IDB Working Paper Series, No. IDB-WP-56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5.

Del Boca, Daniela, Flinn, Christopher, et al, “Childcare Choices and Child Development: a Cross-Country Analysis” , No.556, Carlo Alberto working paper, 2018.

Heckman, J. J., “The Effect of Child-care Programs on Women's Work Effort”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p. 136–163, 1974.

Heckman, J. J.,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 *Annals of Economics and Social Measurement*, 5, 475–92, 1976.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 *Econometrica*, 47, 153–61, 1979.

Heckman, James J., Smith, Jeffrey, and Clements, Nancy, "Making the Most Out of Programme Evaluations and Social Experiments: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in Programme Impac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 (4): pp. 487-535, 1997.

Hofferth S.L. and Wissoker D.A., "Price, quality, and income in child care choice" ,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 pp. 70-111, 1992.

James-Burdumy, Susanne, "The Effect of Maternal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3, No. 1, pp.177~211, 2005.

Johansen, Anne S., Leibowitz, Arleen, and Waite, Linda J.,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8, No. 3, pp. 759-772, 1996.

Rose, Kensinger, and Elicker, J., "Parental Decision Making About Child Care" , *Journal of Family Issues*, 29(9), pp. 1161-1184, 2008.

Projection on the Young Childcare Services Based on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al Changes

Jihye Lee · Chulhee Lee

Abstract

This study projects the future demand for the young childcare services by considering potential changes in the household structure, such as dual-income households, alongside demographic shifts. Despite the predicted decline in the young child population, the demand for public care services may not decrease proportionately due to the rise in dual-income families, coupled with an increased preference for public c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suggest that future childcare policies should account for not only the quantitative changes in the population but also the pace of household structure changes, the preferences for types of c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he demand for quality in terms of time and costs.

keywords : Demand for the young childcare services, Household structure for the young children,
Decision of formal or informal childcare services

2 한국인구학,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이철희 교수, 이지혜 부연구위원

한국인구학 제47권 제1호(2024년), pp. 73~108

<https://doi.org/10.31693/KJPS.2024.03.47.1.4>

연구 논문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이지혜** · 이철희***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중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에 있어, 6세 이하 영유아 및 고령층 인구 구조의 변화 및 개인 특성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의 특성 및 가구구조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 및 고령층 장래가구추계 방법을 탐구하였다. 기존의 가구추계 중심의 가구 추계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패널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가구원을 중심으로 가구유형별 전이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의 가구 추계방법론을 적용하되, 영유아 및 고령층 가구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35년까지의 가구수 및 가구구조를 예측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가구 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에 따른 맞벌이 비중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구 분포를 추계하였고, 고령층 가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및 75세 이상으로 연령 구분, 성별 및 가구 내 고령자의 수 등을 구분하여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추계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나 영유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인구수 변화만큼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고령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인 가구 및 고령 부부 가구 비중의 확대, 그리고 변화 속도에 따라서 노인돌봄수요의 변화도 인구수 변화 양상과는 다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돌봄 정책 마련에 있어, 돌봄 대상 인구수의 양적 변화 외에도 대상 인구의 가구 특성 및 가구구조 변화 속도 등에 따라 돌봄 대상자 규모 및 수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였다.

핵심단어: 돌봄서비스 수요, 가구유형별 전이행렬, 영유아가구추계, 고령자가구추계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대응 연구> 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됨. 또한, 이지혜 (2023)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의 1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연수연구원(제1저자) | avenir79@snu.ac.kr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 | chullee@snu.ac.kr

I. 서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돌봄,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 주기 전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설계에 도전이 되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수급 범위 및 수급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나, 장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조 등의 변화는 사회서비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 및 노인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현수 외, 2015; 강혜규·안수란, 2018; 박세경, 2020).

그런데,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수요 및 이용 행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영유아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구원의 유무, 돌봄 필요 가구원수, 돌봄제공이 가능한 가구원들의 노동공급결정에 따른 돌봄 제공 여건 등에 따라 아동과 노인 개인의 서비스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돌봄 수요를 분석함에 있어, 서비스 대상자의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노인의 인구구조변화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를 통해 향후 출생이수 감소, 출산율 하락, 인구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른 규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구 추계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구구조 변화를 추계하여 가구주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장래가계추계(2020-2050년)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구원으로 영유아 및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구조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의 대상인 영유아 및 고령인구의 장래 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해당 인구가 속해있는 가구의 가구 유형 변화를 추계하는 대안적 방법을 탐구하였다. 영유아와 고령층의 가구 구조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구수 추계 방법 중 최근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가구유형 전이확률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여러 연도에 걸친 가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구 유형 전이행렬 도출이 용이하고, 가중치를 활용하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인구 및 가구 규모와 비중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의 장래 수요를 추계하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차별점을 갖는다. 대부분의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와 관련된 선

행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현재 서비스별 이용률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대상 인구의 가구 유형의 변화 가능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구구조변화 외에도 서비스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구조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여 서비스 대상자군의 가구 유형별 특성 변화에 따라 수요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가구유형의 전이확률을 이용하는 장래가구추계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서비스 대상 인구의 인구 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의 구조 변화 양상을 가구 내 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 및 가구 내 사회서비스 대상 인구수 등을 고려한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I장 서론, II장에서는 가구추계 및 가구 유형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연구방법론과 자료를 설명하며,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V장에서는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한다.

II. 현황 및 선행연구

1. 인구 및 가구 현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서는,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4,701만 명 수준에서 2020년 5,184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다 이후 출산율 및 혼인율이 줄어들면서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중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만 6세 이하(보육연령기준 만 5세 이하) 인구는 2000년 469만 명 수준에서 2020년 265만 명, 2050년 182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돌봄서비스의 주된 잠재 서비스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339만 명 수준에서 2020년 815.2만 명, 2050년 1,9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수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 상 2000년 이후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 등의 증가로 2040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수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래 가구추계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인구 기준의 장래 가구 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장래가구추계 상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가구주인 경우에는 가구 분포는 알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22.4%인 464만 가구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이며, 2050년에는 49.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는 34.9%, 부부가구는 34.7%, 2050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41.1%, 부부가구는 34.8%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 내 지위가 가구주인 경우는 50% 정도로, 이러한 통계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장래 가구 분포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수 추세(2020~2050년)



2. 가구추계 및 가구유형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1) 가구추계 방법론

장래가구수는 가구의 형성 및 해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출산, 사망, 혼인 등의 인구학적인 요인과 개인·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가구추계방법론으로, 가구주율¹⁾의 장래변동수준을 추계하고 성·연령·혼인상태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추계한 가구주율을 적용하여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장래 가구수를 산출하는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Method)을 활용하고 있다. 가구주율법은 미국에서 1930년대 센서스를 기초로 가구수 예측을 시행한 이후 영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시계열 모형 기반의 가구추계방법이다(곽하영 외, 2018; 통계청, 2022).

통계청의 가구추계 방법으로 도출되는 가구수는 다음과 같이,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산출하여 특성별 인구수에 가구주율을 곱하여 계산된다(통계청, 2022)²⁾.

$$H^s(x,t) = \sum_m P^s(m,x,t) \times h^s(m,x,t)$$

여기서, $H^s(x,t)$ 는 가구주의 성 s, 연령 x, 연도 t의 가구수

$P^s(m,x,t)$ 는 성 s, 혼인상태 m, 연령 x, 연도 t의 인구

$h^s(m,x,t)$ 는 성 s, 혼인상태 m, 연령 x, 연도 t의 가구주율

1) 가구주율이란 각 그룹별(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 중 가구주인 인구수를 의미함.

2) 보다 구체적으로는 (1) 대상 인구 추계 (2) 혼인상태별 장래 인구 추계 (3) 가구주율 추계 (4) 가구수 추계로 이뤄지며,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2020)을 참고.

[그림 2] 장래가구추계 방법론



자료: 오진호(2015), p.3. 재인용.

장래가구추계 방법론은 크게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으로 나뉜다(오진호, 2015). 통계청의 추계방법인 가구유출법은 정태적(static) 방법으로, 여러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고 시점 간의 가구 유형의 변화를 모형화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인구 추계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 추계는 가구의 총량적인 추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구의 생성, 성장, 축소, 해체라는 동적인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김유경, 1995). 정태적 방법과 반대로, 가구 내 개인의 상태 변화에 따른 가구 유형의 변화를 모형화하는 방식을 동태적(dynamic) 방법이라고 하는데, 동태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생성, 축소, 해체 등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할 수 있다. 정태적 방법은 독립적으로 추계되는 인구의 구성비나 비율에 따라 가구에 인구를 할당하여 추정하며, 동태적인 방법은 가구 상태 간의 변화나 전환을 측정하여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가구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오진호, 2015; 김현식 외, 2018; 통계청, 2020; Bell, Cooper and Les, 1995).

동태적 모형은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가구 구조를 추정하기 때문에, 인구요인이 가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나 코호트의 행태를 추적하여 가구의 형성 및 해체를 포함한 가구 상태 간의 변화나 전환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별, 연령, 가구 내 지위, 혼인관계 등에 관한 광대한 양 및 종류의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으며 과거 시점 간 변화에 대해서는 전이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나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일본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정태적 가구추계 모형 결과의 보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태적 가구추계방법으로는 네덜란드의 LIPRO(Life PROjection), 일본의 가구

전이율법(Household transition methods)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가구주 혹은 가구의 대표 준거인(marker)의 가구 내 지위의 변화, 혼인상태의 변화 등 개인 특성의 변화를 추적하여 모형화하는 것이다. LIPRO는 현재의 가구주 지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구주 지위 유지 혹은 가구 내 다른 지위로 변하는지를 추적하여 모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주 혹은 준거인을 중심으로 가구유형을 7개로 나누고, 성별·연령별로 한 년도에서 다음 연도 사이에 가구주의 지위가 변할 확률을 구하여 장래가구추계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가구주율법에 따라 추정된 가구추계와 비교하여 보정한다. 일본의 가구전이율법은 특정가구를 대표하는 준거인(marker)을 설정하고, 결혼 상태와 가구 유형을 고려하여 12개의 상태로 나눈 후 시점 간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전이확률을 도출하고, 전이확률이 향후에도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장래가구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김기환 외, 2016).

국내의 동태적 가구 추계 모형 연구로는 황지은 외(2011), 김현식 외(2018) 등이 있다. 황지은 외(2011)에서는 2000-2005년 인구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 및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하여 1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가구유형 전이확률을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구성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00-2005년의 5년간의 전이확률 평균값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의 10개의 가구유형별 비중을 예측하였는데, 통계청의 장래추계가구 추계보다 현실적인 가구유형별 변화를 반영하여 예측력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해당 논문은 전이확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고, 전이확률 계산을 위해 10개의 가구 유형 중 일부 유형으로의 전이만을 가정하는 등³⁾ 제약조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김현식 외(2018)에서는, 2010년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종단으로 연결하여 7개의 가구유형 및 가구주여부를 기준으로 전이확률을 도출하고 장래에도 전이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인구 및 가구수를 추계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전이확률 결과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기존 장래가구추계방식과 가구전이법의 결과에 대한 비교도 보류하고 있다. 다만, 인구의 상태변화가 일정하게 지속된다면 가구전이법의 설명력이 더 클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구유형의 변화가 빠르고 일관되게 변하고 있다면 다년간의 경향을 모형화한 기존의 가구주율법으로 추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가구추계모형은 정태적 혹은 동태적 모형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가구주를 중심으로 추계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 가구수 혹은 시도 전체 가구수를 추계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들이었다. 가구 내 일반 가구원인 영유아

³⁾ 1인가구(34세이하)에서는 그 다음기에 유지 또는 1세대 부부(34세 이하), 2세대 한부모+자녀, 35세 이상 1인가구로만 전이되는 것으로 봄.

나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이들이 속해있는 가구유형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구 추계 모형을 응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태 모형을 응용하여, 2015년 이후의 2~3개년도 간격의 가구유형별 전이확률을 도출하고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장래 가구 유형변화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전이확률을 계산하였으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활용하는 동태모형에서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자료 중 전이확률에 계산에 가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유형간 전이행렬을 도출하였다.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전이행렬을 활용하는 방법은 마코프 체인(Markov chain)에 기반한 것인데, 마코프 체인은 기술의 확산이나 인구의 이동 및 이주와 관련하여 활용도가 높은 개념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한 단계 전이(transition)를 거쳐서 미래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미래의 상황이 확률적인 과정을 따르며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변하는 확률은 현재의 특성에 근거한다고 간주하는 확률모형으로써, 인구가동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경수·장우, 2003; 김홍배 외, 2009). 가구 추계에 마코프 체인 기반의 전이확률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 먼저 전이확률이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정상 마코프 체인이라고 하며, 시간에 따라 외생변수가 변하면 전이확률도 달라지는 경우를 비정상 마코프 체인이라고 한다. 정상 마코프 체인에서 전이확률은 전체 가구유형(k개) 중, t-1기에 가구유형 i에서 t기에서 가구유형 j로 변화할 확률이다.

$$\Pr_t(H_t = j | H_{t-1} = i) = P_t^{ij}, \quad 0 \leq P_t^{ij} \leq 1$$

$$P_t = \begin{bmatrix} P_t^{11} & \dots & P_t^{1k} \\ \dots & \dots & \dots \\ P_t^{k1} & \dots & P_t^{kk} \end{bmatrix}, \quad \sum_{j=0}^k P_t^{ij} = 1$$

t시점에 i유형으로 유지 또는 전환된 가구수 $Y_j(t)$ 는 t-1기의 i유형의 가구수 $Y_i(t-1)$ 에 i유형에서 j유형으로 전환된 전이확률(P_t^{ij})을 곱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Y_i(t) = \sum_{j=1}^k Y_j(t-1) \times P_t^{ji}$$

그리고, 정상 마코프 체인에서는 전이확률 P가 미래에도 일정할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상태의 $Y(0)$ 값에 전이확률 P 를 t 번 곱하면 $Y(t)$ 의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n 년 후의 가구수를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다.

$$Y(t) = Y(0) \times P^t \text{ (where } P^t = P \cdot P \cdot \dots \cdot P \text{)}$$

구체적으로 전이확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면 가구유형별 $t-1$ 기와 t 기의 자료를 횡단면으로 연결하여 $t-1$ 과 t 기간 간의 유형별 가구수의 변화율, 즉 전이율을 계산하고 이를 전이확률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유형별 가구 변동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이나 성별 등 다른 가구 유형별 변화 요인 및 요인별 영향 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이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가구유형에 대한 결정모형과 선택확률을 도출하여 이를 전이확률로 이용하였다. 다만, 정상 마코프 체인 조건 하의 현재의 가구유형 전이확률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은 향후 가구유형별 변화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시점의 전이확률의 변화 가정을 도입해야 하는데 하나의 가구가 다음 기에 어떠한 가구 유형을 가질 것인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전이행렬의 각 원소별로 다음 기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가정과 함께 다음 기의 전체 유형별 가구 비중의 합은 1이 되도록 가정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오진호,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이확률 도출을 위한 모형을 도입하여 가구유형간 전이확률을 추정하고 해당 전이확률이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가구수를 추계하되, 과거 가구 유형별 전이확률의 변화패턴이 미래에 달라질 수 있다는 추가 가정을 시나리오로 적용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의 기초가 되는 대상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유형의 분포 변화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가구유형 결정요인

가구 유형은 주요 생애 과정 및 사건, 가족 관계,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구원들 간의 복합적인 결합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가구 유형의 변화 추세 및 특정 가구 유형과 연계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가구 유형의 변화와 그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중단 연구는 많지 않고, 최근 연구들은 1인 가구 및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유형의 변화에 관해 이뤄지고 있다(김경혜, 1998; 박현정·최혜경, 2001 등).

가구 유형의 변화 및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등이 알려져 있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박현정·최혜경, 2001; 김정석, 2005; 김정석, 2007). 청년 가구의 가구형성 결정 요인에 대한 김영철 외(2011)에서는, 가구의 연령이 낮을수록 분가 확률이 높다가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분가를 늦추고, 취업과 결혼 등은 분가를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노인가구 대상 가구 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뤄졌는데, 노인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의 건강·질환유무, 그리고 노인의 취업상태, 주택점유형태, 가구 총소득, 공적연금 수급여부 등의 경제상태, 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혜, 1988; 박현정·최혜경, 2001; 박능후 외, 2006; 오지연·최옥금, 2011; Holden, 1988).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으로는 시보다는 군에 거주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확률이 높고(박현정·최혜경, 2001),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만성질환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동거확률이 높아진다(이가옥 외, 1994; 김경혜, 1998).

사회서비스 수요 결정에 있어 가구 내 여성의 노동공급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를 포함한 가구의 맞벌이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황운재·최강식(1999), 김우영(2008), 김대일(2008) 등이 있으며, 보육정책 등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조운영(2006), 김정호·홍석철(2012) 등 다수 축적되어 있다. 한 가구 내의 부부의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특히 맞벌이 가구 내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기혼여성의 연령 및 학력, 자녀의 연령, 가구소득, 배우자 소득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숙, 2009; 한종석 외, 2017; Lundberg, 1988; Aaberge et al, 1999). 김현숙(2009)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은 가구 순소득, 연령, 학력, 영아·유아·고등학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짐을 보였고, 김우영(2008)에서는 자녀의 연령분포, 여성의 연령 및 학력, 가구 소득 등이 맞벌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권정현(2008)에서는 배우자의 소득효과가 줄어들고 있으나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자영(2012)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이 다름을 보였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외벌이 선택 여지가 높은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임금의 증가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을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가구, 3세대 가구, 기타가구 등 6개를 기본으로 하되, 영유아가구와 고령자가구의 주요 가구 유형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성하였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전이확률을 도출하고 가구유형 전이행렬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이행렬을 기준년도 가구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가구수를 추계한다. 즉, 기준년도의 가구유형별 가구수가 $Y(0)$ (1×6 행렬)이고 전이확률이 이후의 기간에도 동일하다고 하면, 미래의 가구유형별 가구수는 $Y(0)$ 에 전이확률을 곱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t 기의 가구수에 t 기와 $t+n$ 기 간의 전이확률을 곱하면 $t+n$ 기의 가구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t+2n$ 기의 가구수는 t 기의 가구수에 t 기와 $t+n$ 기 간의 전이확률의 제곱으로 도출된다.

$$Y(t+n) = Y(t) \times P_{t,t+n}$$

$$\text{여기에서 } P_{t,t+n} = \begin{bmatrix} P^{11} & \dots & P^{16} \\ \dots & \dots & \dots \\ P^{61} & \dots & P^{66} \end{bmatrix}, \quad \sum_{j=1}^6 P^{ij} = 1,$$

$$P^{ij} = \Pr(H_{t+n} = j | H_t = i), \quad 0 \leq P^{ij} \leq 1,$$

i 와 j 는 가구유형을 나타냄.

그런데, 최종 i 유형의 가구수(H_i)는 위에서 설명한 가구유형별 전이된 가구 외에도, 신규가구와 소멸가구도 고려해야 한다. 즉, i 유형의 가구수는 신규 가구(N)와 기존 가구 중 유지 및 타 유형에서 전이된 가구의 합에서, 타 유형으로 전이된 가구와 소멸가구(E)를 제외하여 계산된다.

$$H_i(t) = H_i(t-1)P^{ij} + N_i(t) - E_i(t)$$

가구수 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유형별 전이 확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활용 가능한데, 첫 번째 방법은 n 년도와 $n+1$ 년도의 2개 년도 패널데이터를 횡단면자료로 구성하여 n 년도의 가구유형 i 에서 $n+1$ 년도의 가구유형 j 로

변하는 가구수, 즉 가구유형별 변동률(P^{ij})을 구하고 이를 전이확률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구유형별 가구수 총계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구주 연령 등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다른 영향 요인들이 평균일 때의 전이확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구유형 결정모형을 구축하여,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성별 등 가구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다음 기(t+1)의 가구유형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확률을 산출하여 이를 전이확률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가구가 다음 기에 6개의 가구유형 중 1개를 선택하는데, i유형에서 다음기에 j유형을 유지하거나 다른 유형을 선택하는 등의 6개 선택확률의 합이 1

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sum_{i,j=1}^6 P_t^{ij} = 1$). 이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은 종속변수가 비순서형 선택(unordered choice)으로 선택 변수들의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 적용이 가능하며, 비순서형 선택모형은 가법적 확률효용(additive random utility)이론으로 모형에 접근하는 방식이다(민인식·최필선, 2019). 다항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독립변수와의 선행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여러 개의 범주를 갖는 경우로 확장된 모형이다. 종속변수가 1부터 k개의 범주를 가지며, 기준 범주를 k라고 하면 기준 범주에 대한 i 범주의 로짓 함수는 다음과 같다.

$$\ln\left(\frac{P(Y=j)}{P(Y=k)}\right) = \beta_{i0} + \beta_{i1}x_1 + \dots + \beta_{ie} \quad , \text{ 선택범주 } i = 1, \dots, k$$

가구 유형에 적용하면, t-1기에 i 유형의 가구가 t기에 j 유형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H_t = j | H_{t-1} = i) = F(\beta_{ij}x_t) \quad , \text{ where } F(\beta_{ij}x_t) = \frac{\exp(\beta_{ij}x_t)}{\sum_{k=1}^6 \exp(\beta_{ik}x_t)}$$

여기에서, 다음 기에 6개의 가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sum_{j=1}^6 \Pr(H_t = j) = 1$ 을 만족한다. 그리고 설명변수 x는 다음 기의 가구유형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t-1기의 가구주의 연령, 성별,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다.

2. 자료

최근 우리나라의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이행렬 구성이 가능한 패널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이하 인구패널조사)가 있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⁴⁾ 2015년 기준 일반가구 대상 2% 표본(가구 382,218건 및 인구 953,430건)에 대한 패널데이터⁵⁾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패널조사에는 행정구역, 가구유형, 가구주 및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 등에 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수준이나 경제 활동상태 등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패널 표본수가 크고,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에 맞춰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및 가구 구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분석 대상 인구의 가구 분포 및 가구 유형 변화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구패널조사 2015년~2021년 자료를 기본으로, 영유아가구는 2015년, 2018년,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5~2018년과 2018~2021년 전이확률을 계산하여 2021년 이후의 가구수를 추계하였다. 고령자가구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5~17년, 2017~19년, 2019~21년 간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2021년 이후의 가구수를 추계하였다.⁶⁾

본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을 사회복지서비스 결정에 유의미한 가구로 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정의한다. 먼저, 기본 가구 유형은 6개로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가구, 3세대 가구, 기타가구 등이다. 세분화하여, 영유아 돌봄 대상자들의 가구유형은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가구, 3세대, 기타가구 등 4개의 유형으로, 노인 돌봄 대상자들의 가구 유형은 1인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

4)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1년 주기: 행정자료 수집)와 표본조사(5년 주기: 면접조사)로 이뤄지고 있음. 전수조사에서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종류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여 제공하며, 표본조사에서는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1인가구 사유 등 55개 항목 수집함.

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분 인구패널은 2015년 이후로 1년 주기로 공표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일반가구 대상 약 2%의 표본에 대해 성,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수, 세대구성, 거주종류 등의 항목을 제공하나 경제활동상태는 알 수 없음. 2차년도 이후에는 2015년 원표본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사망, 해외거주 등에 해당하면 제외, 출생, 혼인, 합가 등의 사유로 추가된 비표본가구원도 포함, 원표본 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함.

6) 영유아와 고령자가구 추계에 있어 같은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2018년 고령층의 자료에서 부부가구가 과대 표집 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고령자 돌봄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노인돌봄서비스유형별 이용률 자료와의 결합이 필요한데, 이용률 자료가 영유아는 3년 단위, 고령자는 2년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영유아와 고령자의 자료 활용 연도 구분을 달리함.

가구, 기타가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15개 기본 가구유형 구분 중 영유아 및 고령자를 포함하는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의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0년 가구유형별 비중은 1인 가구(31.2%), 부부+미혼자녀가구(29.3%), 부부가구(16.8%), 한부모가구(9.8%), 3세대 가구(부부+미혼자녀+부/모)(1.7%) 순이다. 또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대표 가구유형으로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 한부모+자녀, 1인가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점을 참고하였다(김현식 외, 2018).

또한, 영유아를 포함하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 부부+미혼자녀, 3세대 가구(부부+미혼자녀+조부모/조부/조모)를 중심으로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3세대 가구에서는 미혼자녀의 부모인 자녀부부를 기준 부부 가구로 한다. 노인돌봄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의 기본 가구 유형에서는 맞벌이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가구 내 고령자가 1인인 경우와 2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였다.

〈표 1〉 가구유형 구분

기본 가구 유형(6가지) 및 영유아 돌봄 분석 대상(4가지 (3)~(6))		세부 구성	부부가구 포함여부	노인돌봄분석 대상 (65세 이상 가구원포함) 가구유형 (5가지)
	(1) 1인	1인가구	-	(1)
1세대	(2) 부부	부부가구	0	(2)
	(3) 부부 + 미혼자녀	부부 + 미혼자녀	0	(3)
2세대	(4) 한부모 + 미혼자녀	부 + 미혼자녀 모 + 미혼자녀	-	부부 + 부/모, 부모/부/모 + 기혼/미혼자녀
3세대	(5) 3세대	조부모/조부/조모 + 부부 + 미혼자녀	0 (자녀부부)	(4)
	(6) 기타	기타 가구 유형	-	(5)

IV. 장래 가구추계 결과

1. 6세 이하 영유아의 장래 가구 분포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돌봄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서비스 대상자인 영유아의 가구분포 추계를 진행하였다. 통계청에서는 6세 이하 인구의 인구수 및 장래인구수 추계결과는 제공하나, 6세 이하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유형에 관한 자료는 추가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부모의 노동공급 변화에 따라 영유아 돌봄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유형별 가구수 및 장래 가구구조 변화를 맞벌이어부를 포함하여 추산하였다.

추계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이하 인구패널)를 활용하는데, 2015년~2021년 자료의 6세 이하 영유아 인구 및 가구에 관한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 2015~2021년간 영아의 비중은 줄어들고 유아의 비중은 높아진다. 영유아의 가구 분포는 2015년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이 72.1%에서 2021년에는 79.2%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은 감소하고 있다.

〈표 2〉 인구패널 기초통계(2015, 2018, 2021년) - 6세 이하 인구

구분	2015년		2018년		2021년	
	관측수	비중	관측수	비중	관측수	비중
전체 영유아수	61,727명	100%	68,535	100%	64,449	100%
영유아 연령별						
(1) 만0세	8,281	13.5%	9,255	11.5%	8,222	11.3%
(2) 만1세	8,526	13.8%	9,766	12.7%	8,562	12.1%
(3) 만2세	8,661	14.0%	9,780	14.0%	8,923	12.9%
(4) 만3세	9,338	15.1%	9,900	15.3%	9,211	13.6%
(5) 만4세	9,141	14.7%	9,625	14.9%	9,729	15.0%
(6) 만5세	9,101	14.8%	9,734	15.2%	9,778	16.7%
(7) 만6세	8,679	14.1%	10,475	16.4%	10,024	18.4%
영유아 성별						
(1) 남성	31,581	51.3%	35,107	51.1%	33,158	51.4%
(2) 여성	30,146	48.7%	33,428	48.9%	31,291	48.6%
가구분포						
(1) 부부+미혼자녀	43,549	72.1%	48,893	75.6%	50,238	79.2%
(2) 한부모+미혼자녀	6,247	9.4%	4,932	7.4%	3,753	6.8%
(3) 3세대 가구	4,994	7.8%	6,244	7.4%	4,541	5.9%
(4) 기타	6,937	10.7%	8,466	9.6%	5,917	8.1%

주: 비중은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6세 이하 영유아가구수 추계를 위한 가구유형 전이확률을 산출하기 위해, 인구 패널 2015과 2018년, 2018과 2021년 자료를 횡단면으로 구성하고 다음 기의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다항로짓모형을 구축하여 전이행렬을 도출하였다. 2015-2018년의 경우, 2015년과 2018년의 2개 연도 패널을 영유아를 기준으로 결합하고, 종속 변수는 4개의 대표 가구유형(1=부부+미혼자녀가구, 2=한부모+미혼자녀가구, 3=3세대 가구, 4=기타가구)에 소멸가구를 포함한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독립변수는 가구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지난 기의 가구유형,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포함하였으며, u_i^s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log\left(\frac{P_i^s}{P_i^{base}}\right) = \beta_0^s + \beta_i^s X_i + u_i^s, \text{ where } u_i \sim N(0, \sigma_u^2)$$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기준 범주(base outcome, 여기에서는 기타가구)와 비교 범주 2가지에 대한 이항 로짓모형의 결과로 제시된다. 기준 범주 가구유형 1(부부+미혼자녀가구)와 가구유형 4(기타가구)를 비교하면 다음 기에 가구유형 1(부부+미혼자녀가구)로 이행 혹은 유지하는 확률은 전기에 부부+미혼자녀가구인 경우가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고,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광역시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가구유형 이행에 관한 모형의 추정결과(다항로짓모형)
- 2015~2018년 전이

구분	다음 기(t+1) 부부+미혼자녀가구 로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한부모가구로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3세대가구로 이행 (base:기타가구)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가구유형(기준=(1) 부부+미혼자녀가구)									
(2)한부모+미혼자녀가구	-1.76***	0.10	-0.28	1.16***	0.11	0.17	-1.07***	0.16	0.00
(2)3세대 가구	-1.61***	0.09	-0.21	-0.81***	0.13	0.01	2.21***	0.10	0.27
(3)기타가구	-3.24***	0.06	-0.20	-1.81***	0.09	0.04	-1.29***	0.10	0.03
가구주 성별(남성)	-0.1	0.07	-0.04	0.18**	0.08	0.01	0.12	0.09	0.00
가구주 연령	-0.06***	0.00	-0.02	-0.02***	0.00	0.00	0.00	0.00	0.00
지역(광역시이상)	0.03	0.05	0.02	-0.03	0.06	0.00	-0.09	0.07	0.00
상수	6.02***	0.14	-	1.05***	0.18	-	-0.34**	0.16	-

of obs.=61,727, Pseudo R2 =0.1173, *** p<0.01, ** p<0.05, * p<0.1

〈표 4〉 가구유형 이행에 관한 모형의 추정결과(다항로짓모형)
- 2018~2021년 전이

구분	다음 기(t+1) 부부+미혼자녀가구 로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한부모가구로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3세대가구로 이행 (base:기타가구)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가구유형(기준=(1) 부부+미혼자녀가구)									
(2)한부모+미혼자녀가구	-1.55***	0.11	-0.25	1.14***	0.12	0.14	-1.29***	0.22	0.00
(2)3세대 가구	-1.35***	0.10	-0.18	-0.86***	0.14	0.00	2.03***	0.11	0.19
(3)기타가구	-3.04***	0.06	-0.21	-1.76***	0.09	0.02	-1.14***	0.10	0.03
가구주 성별(남성)	-0.22***	0.06	-0.06	0.38***	0.08	0.01	0.09	0.08	0.00
가구주 연령	-0.07***	0.00	-0.02	-0.03***	0.00	0.00	-0.01***	0.00	0.00
지역(광역시이상)	-0.02	0.05	0.02	-0.12*	0.07	0.00	-0.02	0.07	0.00
상수	6.30***	0.15	-	1.35***	0.22	-	0.03	0.18	-

of obs. = 68,535, Pseudo R2 = 0.0975, *** p<0.01, ** p<0.05, * p<0.1

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전이확률(P), 즉 다음 기에 가구유형(s)을 선택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i^s = \frac{\exp(\beta_0^s + \beta_i^s X_i + u_i)}{\sum_{j=1}^5 \exp(\beta_0^j + \beta_i^j X_i + u_i)}$$

그 결과를 전이확률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부부+미혼자녀의 유지율은 2015-2018년의 경우에는 0.5040이며, 부부+미혼자녀가구에서 3세대 가구로 전환하는 확률은 0.0107이다. 한부모가구의 유지율은 0.2092이며, 3세대 가구의 유지율은 0.2757, 기타가구의 유지율은 0.2115로 나타났다. 2018-2021년의 경우에는 부부+미혼자녀가구의 유지율은 0.4782, 한부모가구의 유지율은 0.2026, 3세대 가구는 0.1881, 기타가구는 0.1702로, 전반적으로 가구 유형별 유지율이 2015-18년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소멸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멸가구는 3년동안의 기간에 4~6세 이하 아동이 7세 이상이 되는 등의 이유로 표본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멸가구로의 전이율을 제외하고 두 개 기간 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유지율은 유사하나, 3세대 가구에서 부부+미혼자녀 가구로의 변화율이 높아지고, 부부+미혼자녀가구의 신규 유입 비중이 205-18년 표본보다 2018-21년 표본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2015-18년, 2018-21년의 가구유형 전이확률 - 영유아 가구

구분		2018년				소멸
		부부 + 미혼자녀	한부모 + 미혼자녀	3세대 가구	기타 가구	
2015 년	부부 + 미혼자녀	0.5040	0.0249	0.0107	0.0139	0.4466
	한부모 + 미혼자녀	0.2039	0.2092	0.0091	0.0322	0.5456
	3세대	0.2049	0.0277	0.2757	0.0395	0.4521
	기타	0.1957	0.0539	0.0453	0.2115	0.4936
	2018년 신규	0.7198	0.0652	0.0853	0.1298	0.0000
구분		2021년				소멸
		부부 + 미혼자녀	한부모 + 미혼자녀	3세대 가구	기타 가구	
2018 년	부부 + 미혼자녀	0.4782	0.0249	0.0107	0.0142	0.4720
	한부모 + 미혼자녀	0.1983	0.2026	0.0064	0.0291	0.5636
	3세대	0.2159	0.0214	0.1881	0.0354	0.5392
	기타	0.1669	0.0415	0.0373	0.1702	0.5842
	2021년 신규	0.7697	0.0554	0.0685	0.1064	0.0000

2021년 이후의 영유아 가구수 및 가구비중을 산정하기 위해서, 앞 절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이 2015년 가구수에 2015-2018년 가구유형간 전이확률을 곱하여 2018년 가구수를 계산하고, 2018년 가구수에 2018-2021년 전이확률을 곱하여 2021년 가구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후의 가구수 및 가구비중을 산출하였다. 다만, 영유아 가구수가 추계 결과가 영유아 인구 수보다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6세 이하 영유아 수의 규모에 연동되도록 조정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영유아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 추계를 따르고 이들이 속한 가구 비중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의 가구 변화 패턴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다만, 최근 2-3년간의 영유아 가구유형 변화 패턴이 장래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다소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최근의 영유아 가구 유형별 변화는 반영하되 그 변화 패턴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였다. (1) 2018-21년 가구 유형 전이행렬이 2021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로, 최근 3년간의 변화 패턴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2) 2015-18년과 2018-21년 전이행렬 간의 변화율을 이후에도 적용하여 2015년 이후의 빠른 가구 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경우로 나눠서 도출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면 영아는 부모 돌봄이 중심이며,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 돌봄이 중심인데 돌봄 시설에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령대별 돌봄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이들의 가구 분포를 추정하였다⁷⁾.

그런데, 인구패널에서는 인구 및 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영유아 가구를 맞벌이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 2015-2021년 자료로 앞서 살펴본 맞벌이 결정요인 등을 고려하여 부부포함 가구의 맞벌이 가구⁸⁾ 전이확률을 도출하여 이를 가구 수 추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2036년까지의 맞벌이 가구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인구패널 결과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최종 가구 유형 분포를 산출하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노동패널 표본의 영유아가구 표본수도 적어 분석 결과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향후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OEC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⁹⁾. OECD의 가족 통계에서는 가구 내 막내의 연령이 0~2세, 3~5세인 경우의 유배우 가구의 맞벌이 비중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막내가 0~2세인 경우는 현재 부모가 모두 전일제인 맞벌이 비중이 37.5%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의 비중까지 포함하면 52.5%이다. 그리고, 막내가 3~5세인 경우는, 부모가 모두 전일제인 맞벌이 비중이 47.6%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의 비중까지 포함하면 65.0%이다.

정리하면, 최종 도출하는 가구 유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 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1)번 시나리오가 가장 완만하게 가구 유형이 변화되며, (6)번 시나리오가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다.

영유아는 영아(만0~2세)와 유아(만3~6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수의 변화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경우 2021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7년까지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에는 109.0 수준으로 증가한다. 영

7) 다만, 영아의 경우 2015년 대상자가 2018년 표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문제(2015년 0세 아동은 2018년 3세가 되어 2018년 영아 표본에서 제외) 때문에, 영유아와 유아로 나눠서 추정하고, 영아는 영유아의 결과에서 유아의 결과를 빼는 방식으로 값을 도출함.

8) 노동패널에서는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일주일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를 취업자로 분류함.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모두 취업자인 경우로 정의함.

9)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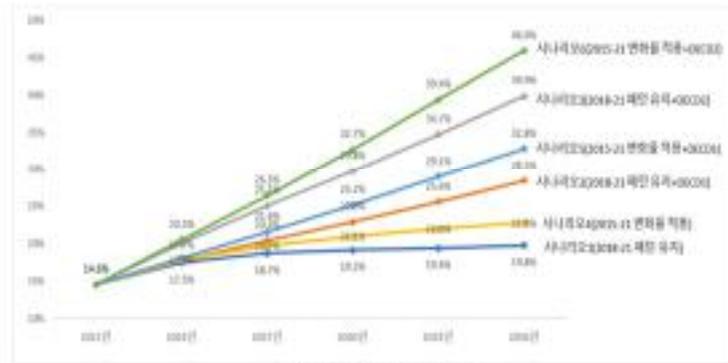
〈Table LMF2.2.A,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a〉 참고로, 0~14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 중 부모가 모두 전일제인 경우는 45.95%, 전일제+시간제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62.7%임.

아의 가구구조는 시나리오에 따라,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이 2021년 전체의 81.7%에서 2036년 81.4%~93.8%가 되며, 부부+미혼자녀가구-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14.6% 수준에서 2036년 19.8%~46.0%로 변화한다. 유아의 인구 규모는,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영아가 이후 유아의 인구가 되면서 인구 감소 패턴이 이어져 2036년에는 2021년의 7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가구 유형은,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이 2021년 전체 가구의 77.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8.1%~87.0%로 증가한다. 부부+미혼자녀-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22.2% 수준에서 2036년 27.2%~52.8%까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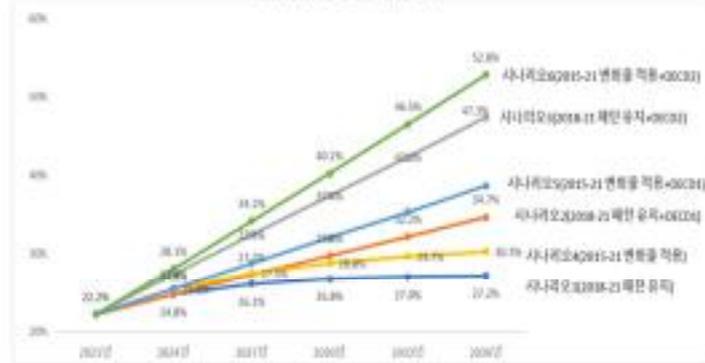
〈표 6〉 영유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1(2018-21 패턴 유지)

구분	인구수 변화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3세대가구			기타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만 0~2세〉									
2021년	100.0%	81.7%	14.6%	67.2%	5.7%	5.3%	2.4%	2.9%	7.3%
2024년	82.3%	83.5%	17.5%	66.0%	5.4%	4.6%	2.1%	2.4%	6.6%
2027년	83.4%	82.7%	18.7%	64.0%	5.4%	4.8%	2.3%	2.4%	7.1%
2030년	96.1%	81.5%	19.2%	62.3%	5.2%	5.3%	2.6%	2.7%	8.0%
2033년	105.1%	81.1%	19.4%	61.7%	5.0%	5.4%	2.7%	2.8%	8.4%
2036년	109.0%	81.4%	19.8%	61.6%	5.0%	5.4%	2.6%	2.7%	8.2%
〈만 3-6세〉									
2021년	100.0%	77.9%	22.2%	55.7%	7.6%	6.1%	2.7%	3.4%	8.4%
2024년	75.9%	78.4%	24.8%	53.6%	7.6%	5.9%	2.8%	3.1%	8.2%
2027년	62.0%	78.4%	26.1%	52.3%	7.6%	5.9%	2.9%	3.0%	8.2%
2030년	60.2%	78.2%	26.8%	51.5%	7.5%	5.9%	2.9%	3.0%	8.3%
2033년	68.9%	78.1%	27.0%	51.0%	7.5%	6.0%	3.0%	3.1%	8.4%
2036년	76.0%	78.1%	27.2%	50.9%	7.5%	6.0%	3.0%	3.1%	8.4%

[그림 3] 영유아 포함 부부+미혼자녀(맞벌이)가구 비중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영아(만 0~2세) 포함 가구>



<유아(만 3~6세) 포함 가구>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원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율(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율(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율 원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율(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율(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이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영유아 아동의 인구 구조 뿐만 아니라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구구조변화와 아동 어머니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되었다. 다만, 이 결과는 노동패널의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 양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향후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와 유사하다는 가정과, 2036년까지 OECD의 평균 수준까지 맞벌이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특히, OECD 수준까지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아동 돌봄 여건과 우리나라의 여건이 향후 10여 년간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영유아 가구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 65세 이상 및 75세 이상 인구의 장래 가구 분포

노인 돌봄서비스의 잠재 대상이 되는 고령 인구의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앞 절의 방식과 유사하게 인구패널의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구의 가구분포 변화를 추정하였다. 다만, 다른 연도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2018년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분포에서 자녀동거가구가 과표집된 것으로 나타나, 2015-17년, 2017-19년, 2019-21년 자료로 구분하여 전이행렬을 도출하고 연도간 변화율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먼저, 고령인구 및 가구 분포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65~74세 고령인구의 비중은 7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보다 2015-2019년에는 낮아지다가 2021년에는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분포에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18.9%에서 2021년 22.6%로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부부 모두가 고령자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27.5%에서 2021년 30.6%로 커졌다. 반대로, 자녀동거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 단위로 29.9%~17.1% 증가하고,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65-74세 인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7〉 인구패널 기초통계(2015, 2018, 2021년) - 고령인구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관측수	비중	관측수	비중	관측수	비중	관측수	비중
전체 고령자수	138,822	100%	163,463	100%	181,484	100%	199,411	100%
연령별								
(1) 65~74세	80,994	59.8%	91,305	57.8%	101,192	57.7%	114,985	59.5%
(2) 75세 이상	57,828	40.2%	72,158	42.3%	80,292	42.3%	84,426	40.5%
성별								
(1) 남성	58,453	42.5%	69,346	43.2%	77,782	43.7%	86,414	44.2%
(2) 여성	80,369	57.5%	94,117	56.8%	103,702	56.3%	112,997	55.8%
가구분포								
(1) 1인가구	27,893	18.9%	30,454	20.2%	32,985	20.9%	38,702	22.6%
(2) 부부X고령자1인	8,595	6.2%	9,482	6.3%	10,563	6.3%	11,337	6.1%
(3) 부부X고령자2인	39,402	27.5%	43,852	28.4%	49,560	28.5%	58,300	30.6%
(4) 자녀동거X고령자1인	20,528	16.1%	23,939	14.9%	25,063	13.6%	25,303	12.4%
(5) 자녀동거X고령자2인	13,627	10.6%	16,472	10.5%	18,518	10.4%	19,899	10.1%
(6) 기타가구X고령자1인	15,430	11.1%	20,498	10.3%	22,505	10.1%	22,792	9.1%
(7) 기타가구X고령자2인	13,347	9.6%	18,766	9.4%	22,290	10.1%	23,078	9.3%

주: 각 항목별 비중은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먼저, 65세 인구를 포함하는 가구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결정모형을 구축하였다. 가구 유형 중 관측수 및 선행 연구 등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1) 1인 가구, (2) 부부가구, (3) 자녀동거가구 (4) 기타가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구 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앞 결과 동일하게 다음 기의 가구유형을 결정하는 다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종속변수는 6개의 대표 가구유형에 소멸가구를 포함한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독립변수는 가구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지난 기의 가구유형, 연령, 성별,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포함하였다.

〈표 8〉 가구유형 이행에 관한 모형의 추정결과(다항로지모형)
- 2015~2017년 전이

구분	다음 기(t+1) 1인가구로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부부가구(고령자1인)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부부가구(고령자2인)로 이행 (base:기타가구)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가구유형(기준=(1) 1인가구)									
(2)부부가구-고령자1인	-2.46***	0.11	-0.67	4.44***	0.15	0.13	3.50***	0.11	0.47
(3)부부가구-고령자2인	-0.37***	0.08	-0.69	-1.67***	0.53	0.00	6.60***	0.09	0.83
(4)자녀동거-고령자1인	-2.00***	0.07	-0.65	1.68***	0.15	0.00	0.44***	0.11	0.00
(5)자녀동거-고령자2인	-1.19***	0.16	-0.72	2.87***	0.24	0.00	4.93***	0.15	0.14
(6)기타가구	-3.82***	0.06	-0.59	-0.75***	0.16	0.00	-1.79***	0.11	0.01
연령	-2.09***	0.09	0.00	0.11	0.25	0.00	2.95***	0.10	-0.02
남성	-0.02***	0.00	0.14	-0.23***	0.01	0.00	-0.07***	0.00	-0.12
가구원수	-0.13***	0.04	-0.08	-2.88***	0.10	0.00	-1.21***	0.04	0.00
지역(광역시이상)	-0.44***	0.03	-0.01	-0.01	0.03	0.00	-0.08***	0.02	0.01
상수	0.05	0.03	-	-0.01	0.05	-	0.14***	0.03	-

of obs.=138,822, Pseudo R2 =0.5153, *** p<0.01, ** p<0.05, * p<0.1

〈표 8〉 가구유형 이행에 관한 모형의 추정결과(다항로지모형) - 계속
- 2015~2017년 전이

구분	다음 기(t+1) 자녀동거가구(고령자1인)로 이행 (base:기타가구)			다음 기(t+1) 자녀동거가구(고령자2인)로 이행 (base:기타가구)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가구유형(기준=(1) 1인가구)						
(2)부부가구-고령자1인	0.71***	0.11	0.05	1.43***	0.17	0.01
(3)부부가구-고령자2인	0.49***	0.10	-0.03	3.91***	0.14	0.01
(4)자녀동거-고령자1인	3.06***	0.07	0.65	2.81***	0.14	0.05
(5)자녀동거-고령자2인	2.69***	0.14	0.01	7.63***	0.18	0.66
(6)기타가구	-1.58***	0.06	0.03	-1.47***	0.16	0.00
연령	-0.80***	0.11	0.00	2.83***	0.14	0.00
남성	-0.01***	0.00	0.06	-0.05***	0.00	-0.03
가구원수	-0.03	0.04	0.01	-1.28***	0.04	0.01
지역(광역시이상)	0.05***	0.02	0.00	0.15***	0.02	0.01
상수	0.12***	0.03	-	0.21***	0.04	-

*** p<0.01, ** p<0.05, * p<0.1

2015-21년간 고령인구의 가구유형 전이확률은, 2015-17년, 2017-19년, 2019-21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가 유지되는 확률은 연도에 따라 0.8258~0.8255, 부부가구×고령자 2인이 유지되는 확률은 0.8273~0.8046, 자녀동거가구×고령자 2인 이상인 경우 유지확률은 0.6908~0.5870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부부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에서, 고령자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변화하는 비중이 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표 9〉 2015-21년간 가구유형 전이확률

구분		2017년							소멸
		1인 가구	부부X 고령자1인	부부X 고령자2인	자녀동거X 고령자1인	자녀동거X 고령자2인	기타X 고령자1인	기타X 고령자2인	
2015년	1인가구	0.8258	0.0022	0.0080	0.0205	0.0016	0.0387	0.0078	0.0953
	부부X 고령자1인	0.0274	0.5411	0.3346	0.0242	0.0104	0.0193	0.0108	0.0321
	부부X 고령자2인	0.0530	0.0000	0.8273	0.0050	0.0147	0.0054	0.0324	0.0622
	자녀동거X 고령자1인	0.0594	0.0291	0.0174	0.6646	0.0644	0.0502	0.0083	0.1067
	자녀동거X 고령자2인	0.0109	0.0042	0.1245	0.0444	0.6908	0.0048	0.0472	0.0731
	기타X 고령자1인	0.1185	0.0191	0.0176	0.0719	0.0085	0.5808	0.0551	0.1284
	기타X 고령자2인	0.0451	0.0023	0.1610	0.0135	0.0556	0.0483	0.5782	0.0961
신규	0.1197	0.1392	0.1678	0.1946	0.1094	0.1409	0.1283	0.0000	
구분		2019년							소멸
		1인 가구	부부X 고령자1인	부부X 고령자2인	자녀동거X 고령자1인	자녀동거X 고령자2인	기타X 고령자1인	기타X 고령자2인	
2017년	1인가구	0.8012	0.0041	0.0150	0.0255	0.0029	0.0459	0.0143	0.0911
	부부X 고령자1인	0.0279	0.5137	0.3276	0.0240	0.0148	0.0264	0.0216	0.0441
	부부X 고령자2인	0.0508	0.0000	0.8013	0.0045	0.0207	0.0062	0.0447	0.0718
	자녀동거X 고령자1인	0.0697	0.0311	0.0211	0.5743	0.0692	0.0529	0.0107	0.1709
	자녀동거X 고령자2인	0.0136	0.0056	0.1282	0.0398	0.6143	0.0057	0.0507	0.1420
	기타X 고령자1인	0.1208	0.0186	0.0192	0.0635	0.0080	0.4593	0.0501	0.2605
	기타X 고령자2인	0.0443	0.0020	0.1351	0.0142	0.0414	0.0394	0.4827	0.2409
신규	0.1073	0.1222	0.1592	0.1885	0.1165	0.1567	0.1495	0.0000	
구분		2021년							소멸
		1인 가구	부부X 고령자1인	부부X 고령자2인	자녀동거X 고령자1인	자녀동거X 고령자2인	기타X 고령자1인	기타X 고령자2인	
2019년	1인가구	0.8255	0.0026	0.0134	0.0191	0.0016	0.0384	0.0101	0.0892
	부부X 고령자1인	0.0366	0.4513	0.3888	0.0205	0.0148	0.0170	0.0165	0.0545
	부부X 고령자2인	0.0551	0.0001	0.8046	0.0040	0.0187	0.0045	0.0354	0.0777
	자녀동거X 고령자1인	0.0869	0.0292	0.0239	0.5288	0.0735	0.0409	0.0101	0.2068
	자녀동거X 고령자2인	0.0138	0.0036	0.1494	0.0365	0.5870	0.0049	0.0396	0.1652
	기타X 고령자1인	0.1335	0.0144	0.0188	0.0549	0.0067	0.4034	0.0505	0.3178
	기타X 고령자2인	0.0517	0.0026	0.1439	0.0121	0.0418	0.0366	0.4078	0.3035
신규	0.1242	0.1210	0.1824	0.1786	0.1088	0.1463	0.1388	0.0000	

10) 한편, 소멸가구는 해당 표본이 이탈한 경우인데, 응답 거부나 사망 등으로, 신규가구는 65세 이상이 되는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함.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따르고, 이후의 가구 유형 변화는 2015-2021년 간 가구유형 전이확률 변화를 따르는 것으로 하여, 가구분포 시나리오를 3가지로 구성하였다. (1) 2019-2021년 가구유형 전이행렬이 이후에도 유지 (2) 2015-17년과 2017-19년간의 변화율, 2017-19년과 2019-21년간의 전이확률 변화율을 도출하고 2개 변화율의 평균변화율을 이후에 적용 (3) 2017-19년과 2019-21년간의 전이행렬간의 변화율을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다. (1) 번의 경우에는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번의 시나리오에서는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고령인구의 가구분포에서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수요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Covid-19으로 인한 최근의 가구 변화 양상이 2019년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전 기간의 변화 양상도 반영하여 향후 가구 유형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21년 65세 이상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 1인 가구의 비중은 2021년 23.0% 수준에서 시나리오별로 2035년 27.7~37.0%까지 증가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021년 30.9%에서 2035년 38.4~40.9%로 높아지는데,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33.5~37.9%까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동거 가구의 비중은 2021년 22.2%에서 2035년 11.6~18.4%까지 낮아지며 기타 가구의 비중도 2021년 18% 수준에서 2035년 10.5~16.6%까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가구 내 고령자 2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65세이상 인구의 가구 분포 - 시나리오별

시나리오 (1) 2019-21년 전이행렬 유지

구분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
2021년	23.0%	36.9%	6.0%	30.9%	22.2%	12.2%	10.0%	17.9%	8.8%	9.1%
2023년	24.1%	37.6%	5.8%	31.8%	21.1%	11.5%	9.6%	17.2%	8.4%	8.7%
2025년	24.9%	37.9%	5.7%	32.3%	20.4%	11.0%	9.4%	16.8%	8.2%	8.5%
2027년	25.6%	38.1%	5.5%	32.7%	19.8%	10.7%	9.1%	16.4%	8.0%	8.4%
2029년	26.4%	38.4%	5.2%	33.2%	19.3%	10.3%	8.9%	16.0%	7.8%	8.2%
2031년	27.0%	38.5%	5.1%	33.4%	18.9%	10.1%	8.8%	15.7%	7.7%	8.0%
2033년	27.4%	38.5%	5.0%	33.5%	18.6%	9.9%	8.7%	15.6%	7.6%	8.0%
2035년	27.7%	38.4%	4.9%	33.5%	18.4%	9.8%	8.6%	15.5%	7.6%	7.9%

시나리오 (2) 2015-21년간 전이행렬 평균변화율 적용

구분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
2021년	23.0%	36.8%	6.0%	30.8%	22.2%	12.2%	10.0%	18.0%	8.9%	9.1%
2023년	24.7%	37.6%	5.2%	32.4%	20.4%	10.8%	9.5%	17.4%	8.4%	8.9%
2025년	25.9%	38.1%	4.7%	33.4%	18.9%	9.7%	9.2%	17.1%	8.1%	9.0%
2027년	27.0%	38.8%	4.3%	34.5%	17.5%	8.8%	8.8%	16.7%	7.7%	9.0%
2029년	27.9%	39.2%	3.6%	35.5%	16.5%	8.0%	8.5%	16.4%	7.4%	8.9%
2031년	28.5%	39.3%	2.9%	36.3%	15.9%	7.5%	8.4%	16.4%	7.3%	9.0%
2033년	28.7%	39.3%	2.4%	36.9%	15.6%	7.2%	8.4%	16.4%	7.3%	9.1%
2035년	28.8%	39.1%	2.2%	36.9%	15.5%	7.2%	8.3%	16.6%	7.5%	9.1%

시나리오 (3) 2017-19년, 2019-21년간 전이행렬 평균변화율 적용

구분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	소계	고령자 1인	고령자 2인 +
2021년	23.0%	36.8%	6.0%	30.8%	22.2%	12.2%	10.0%	18.0%	8.9%	9.1%
2023년	25.6%	38.3%	5.1%	33.2%	20.1%	10.7%	9.4%	16.0%	8.0%	8.0%
2025년	28.1%	39.5%	4.4%	35.0%	18.1%	9.3%	8.8%	14.3%	7.3%	7.1%
2027년	31.1%	40.8%	3.9%	36.8%	15.8%	7.8%	8.0%	12.4%	6.4%	6.0%
2029년	33.4%	41.1%	3.5%	37.6%	14.2%	6.8%	7.4%	11.3%	5.8%	5.4%
2031년	34.9%	41.0%	3.1%	37.9%	13.1%	6.1%	7.0%	11.0%	5.7%	5.3%
2033년	36.2%	40.9%	2.9%	38.0%	12.2%	5.5%	6.7%	10.6%	5.5%	5.1%
2035년	37.0%	40.9%	3.0%	37.9%	11.6%	5.1%	6.5%	10.5%	5.4%	5.0%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65~74세의 경우의 1인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 가구의 20% 수준에서 2035년 24.3~38.0%까지 높아지고,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2021년 32.0%에서 2035년 35.1~39.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 가구의 27.3%에서 2035년 28.7~33.8%로, 부부 모두 고령자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2021년 29.2%에서 2035년 30.7~36.3%로 달라진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1인가구 및 부부가구 증가로의 가구구조 변화의 폭이 65~74세보다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75세 이상 인구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자녀 동거 및 기타 돌봄 제공 가능자 등과의 동거로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75세 이상 인구의 건강 개선이 2015~21년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면 이러한 가구 구조 패턴의 변화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건강 개선 등의 부분은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림 4] 시나리오별 1인가구 및 부부X고령2인 가구 비중



V. 결론

사회서비스 중 돌봄서비스 수요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분석함에 있어,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에 기반한 인구수 변화가 가장 큰 영향 요인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구구조나 가구 내 주된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참가 등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주요 수요 대상이 되는 6세 이하 영유아와 노인을 중심으로 해당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기존의 국가 통계에서 활용하는 가구 추계법은 가구를 중심으로 추계하여, 돌봄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및 고령층 인구의 가구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 유형이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변화 혹은 유지하는 양상을 모형에 적용하여 돌봄대상자의 가구비중 변화를 추계했다. 또한, 기본적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 가구 등의 가구 유형 외에, 영유아 가구에서는 맞벌이 유무도 추가로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가구유형 변화를 분석하여, 전통적으로 가구내 주된 돌봄제공자의 향후 노동공급 증가를 고려하여 돌봄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구 유형별 유지, 소멸, 생성 등의 동적인 변화 양상을 반영한 가구 유형별 전이확률을 활용하여 영유아와 고령층의 가구분포 변화를 도출하였다. 6세 이하 영유아와 고령층 인구수 변화는 통계청 2020년 이후 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하되, 이들의 가구분포 변화는 2015-21년간 가용한 인구패널 데이터를 2~3년 단위로 나누어 가구유형별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2021년 이후의 전이확률 변화가능성을 과거 변화 패턴을 반영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6세 이하 아동 인구는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영아는 부모 및 가정 양육 중심이고 유아는 유치원을 포함한 시설양육 중심으로 돌봄 유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어머니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에 따른 맞벌이 가구수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패널 2015-21년 자료를 기초로 맞벌이가구의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전이행렬이 2036년까지 유지된다는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전체 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중 변화를 계산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영유아 포함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다소 낮은 수준이나, 향후 OECD의 2019년 영유아 포함 가구의 맞벌이가구 비중까지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였다. 가구구조 및 맞벌이 비중 변화에 따른 6개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영아의 경우 2021년 영아 인구수를 100

으로 했을 때, 영아의 수는 2027년까지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에는 109.0 수준이 된다. 시나리오에 따라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81.6% 수준에서 2036년에는 81.4~93.8% 수준이 되며 이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21년 가구 전체의 14.6% 수준에서 2036년에는 19.8~47.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는 영아의 감소가 유아의 감소로 이어져 2036년까지 76.0 수준이 된다. 이들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은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 77.9%에서 2036년에는 78.1~87.0%가 되며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21년에는 전체의 22.2%에서 2036년에는 27.2~52.8%까지 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인구수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유아 가구의 가구구조 변화 및 부모의 맞벌이 증가 등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인구수 변화만큼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제공한다. 다만, 제시한 시나리오별 결과는, 영유아의 가구구조 변화가 부부+미혼자녀 가구 중심으로 변하는 최근 몇 년간의 양상이 지속되고 영유아 돌봄을 위한 돌봄시설 및 대체돌봄방법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 부모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가능성 확대 등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가구의 부모돌봄이 돌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이 향상된다는 전제를 가정으로 담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잠재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 분포는 성별 및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가구 내 고령자를 1인 포함하는 경우와 2인 포함하는 경우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해당 인구의 가구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5~21년간 인구패널의 가구유형별 전이행렬이 유지 및 변화율이 2021년 이후에도 적용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인구수 대비 2035년에는 1.88배, 65~74세 인구는 1.72배, 75세 이상 인구는 2.09배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 전체로 봤을 때, 1인가구의 비중은 2021년 23.0% 수준에서 시나리오별로 2035년 27.7~37.0%까지 증가하며, 부부가구는 2021년 30.9%에서 2035년 38.4~40.9%로 높아지며 이 중 부부 모두 고령자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33.5~3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자녀동거 가구의 비중은 2021년 22.2%에서 2035년 11.6~18.4%까지 낮아지며 기타 가구의 비중도 2021년 18% 수준에서 2035년 10.5~16.6%까지 감소한다. 다만, 가구 내 고령자 2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유아 및 고령층 가구의 구조 변화 속도 및 가구 내 주된 돌봄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의 변화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15~2021년 간의 가구 구조 변화가 2021년 이후 영유아 및 고령층에도 적용가능하다고 가정한 동 연구의 결과는 실제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동 연구에서는 영유아 및 고령층 돌봄서비스 수요를 산정함

에 있어 대상자의 양적 변화 뿐만 아니라 수요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가구 분포 변화 추계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돌봄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있어 기초가 되는 대상자의 규모에 대한 자료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혜규·안수란 (2018)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수립지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표

권정현 (2008)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1980-2005” 노동경제논집 31(2): 129-156.

김경수, 장욱 (2003) “정상 마르코프 연쇄모형에 의한 부산권 인구분포 예측 연구” 《국토계획》 제38권 4호.

김경혜 (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8권 1호: 107-122.

김대일 (2008)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노동경제논집》 제31권 2: 73~102.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55-90.

김영철·김연수·김인경 (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우영 (2008) 《기혼여성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유경 (1995)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한국인구학》 제18권 1호: 119~165.

김정석 (2005) “초고령노부모들의 세대구성별 가구형태” 《가족과 문화》 17(3):3-18.

_____ (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30(1):1-24.

김정호·홍석철 (2012) “보육료 지원의 여성노동공급 및 출산효과분석”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2-02,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숙 (2009) “우리나라 가구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제정학연구》 제2권 제2호: 1-37.

김현식·김근태·안재혁 (2018) 《가구전이법을 활용한 가구추계 동적모형 적용 연구》 경희대 산학협력단.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조사연구학회, Vol. 3, No. 1 : 65~90.

김홍배, 김재구, 임병철 (2009) “조성법과Markov Chain 모형을 결합한 지역인구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4권 제5호.

민인식·최필선 (2019)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박세경 (2020)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

- 연구원 : 49-65.
- 박현정·최혜경 (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63-75.
- 오지연·최옥금 (2011) “노인 가구 유형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3권: 7-28.
- 오진호 (2015) “다양한 장래가구추계 최신동향 검토”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_____.윤영규 (2020) 《장기제정전망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_____. (2021) “변동전이확률을 이용한 국내이동 예측” 한국인구학 제44권 제1호: 1~23.
- 윤자영 (2012) “외환위기 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 요인” 여성경제연구 제9집 제1호: 99-122.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중돈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운영 (2006) 《기혼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 생애주기모형》, 정책연구시리즈 2006-01, 한국개발연구원.
- 최현수·오미애·고제이 (2015)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예측 기반 마련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_____. (2021)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년》.
- _____. (2022)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50년》.
- 한중석·이영재·홍재화 (2017)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경제학연구 제65집 제3호.
- 황윤재·최강식 (199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Working Paper #9804, 한국노동연구원.
- 황지은·이창효·이승일 (2011) “마코프 체인모델을 이용한 수도권 장기 가구구조 변화 예측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Aaberge, Colombino and Strom (1999) “Labor Supply in Italy : An Empirical Analysis of Joint Household Decisions, with Taxes and Quantity Constrain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4: pp. 403~422.
- Bell, M., J. Cooper, and M. Les. (1995) *Household and Family Forecasting Models: A Review*.
- Holden, K. C. (1988) “Poverty and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3(1): 22-27.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을 위한 장래가구추계 107

Lundberg, Shelly (1988) "Labor Supply of Husbands and Wives : A Simultaneous Equations Approa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0, no.2 : pp. 224~235.

[2024. 01. 31 접수 | 2024. 02. 19 심사(수정) | 2024. 03. 05 채택]

A Study on the Future Household Structure Projection for Social Service Demand

Jihye Lee · Chulhee Lee

This study projects future household structures to estimate care service demand, factoring in demographic shifts, traits of infants and the elderly, and potential changes in household characteristics. Utilizing panel data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study employs transition probabilities focused on household members to estimate future households, considering various structural change scenarios until 2035.

For infants, the estimation incorporates potential shifts in the proportion of dual-income households due to increase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elderly analysis distinguishes age groups, gender, and the number of elderly individuals within households.

Results suggest that the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may not decline as much as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under 5 would indicate,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dual-income households within the infant population.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coupled with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raises questions about variations in demand for elderly care servic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quantitative changes in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changes within households when formulating future care service policies.

Keywords: Care Service Demand, Household Type Transition Matrix, Infant Household Estimation, Elderly Household Estimation

3. 워킹페이퍼, “사교육비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김태훈 교수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김태훈

I. 서론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초저출산의 문제이다. 합계 출산율은 1.24였던 2015년 이후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2023년에 0.72까지 낮아졌다. 출산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미래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문제이다. 한국의 극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요인으로 상승하는 주거 비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교육비 지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높은 주거 비용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은 선진국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한 사항이지만,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특수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 사교육이란 정규 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활동을 제외하고 영리 목적의 사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개인 과외 교습도 사교육의 일부지만, 개인 과외는 한 부분에 불과하며 한국의 사교육을 특징짓는 것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잘 조직된 사교육 업체들이다. 사교육 업체들의 일부는 기업화되어 전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사교육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2023년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정부가 공교육에 지출하는 전체 예산의 40% 수준에 이른다. 2023년 초·중등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78.5%이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전체 초·중등 학생에 대해 1인당 월 434,000원을 지출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 제한할 경우 이들은 평균 월 553,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2023년 가구 월소득의 중위값이 4,468,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자녀 1명당 기대되는 사교육비는 가구 중위 소득의 9.7%에 달한다.

베커의 출신 모형에서 부모의 효용은 자녀의 양과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베커의 모형의 주요한 함의는 자녀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tradeoff)이다. 이 모형에서 자녀 수의 외생적인 증가는 자녀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질의 외생적인 증가는 자녀 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모형에서 자녀의 질은 자녀를 위한 투자와 지출 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녀의 질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베커의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의 증가, 즉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질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베커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quantity-quality tradeoff)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자녀의 수의 증가가 자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녀 수의 외생적인 변화가 자녀의 질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쌍둥이 출산이나 자녀의 성별 구성을 자녀 수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해서 추정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자녀의 질에 대한 변수로는 학력, 인지 및 비인지 능력, 교육 투자, 노동시장 성과 등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자녀의 질이 자녀의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상황이다.

이 연구는 시도 단위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 후 7년 후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계획이나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이를 갖기 이전에 부부가 예상·기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다. 그러나 각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이후의 출산력을 모두 조사한 데이터는 드물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매년 조사 및 공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이용해서 기대 사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즉, 매년 공표되는 평균 사교육비가 해당 지역의 당해연도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기대 사교육비가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이원-고정효과(TWFE) 모형과 도구변수-고정효과(IV-FE) 모형을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도 단위에서 초중등학생의 평균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초중등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 차가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산을 고려하는 부모의 선택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결정된다. 먼저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시도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러나 시도에서 초중등학생의 평균 사교육비와 출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생략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IV-FE 모형을 이용해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구변수로 초·중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과 초·중등학생의 성비를 사용했다. 시도의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학력은 현재의 초중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시도 및 연도 고정효과와 성인 인구의 학력 등 관측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학력이 사교육 지출을 통한 경로 이외에는 출산을 고려하는 커플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초·중등학생의 성비 역시 시도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는 관계를 갖지만, 사교육 지출을 통한 경로 이외에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 초·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1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095%,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1873%,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출산율은 0.2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0.14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치보다 약간 더 크게 추정되었다. 출생순위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0835% 감소,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2947% 감소, 셋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35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둘째 이상 아이의 출산율에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 모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예비 부모들의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자녀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을 증가시켜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Becker의 출산 모형의 이론적인 예측과 부합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경우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출산의 감소와 사교육비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

II. 제도적 배경

한국의 초중등교육의 학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루어져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현재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자율형사립고나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에 관계없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시행되는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사교육 문제는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문제이며, 교육을 넘어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지출로 인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며, 학생들이 정규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말로 거슬러 올라갈만큼 유서가 깊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종료된 이후 1950년대말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수는 늘어난 반면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는 제한됨에 따라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사교육 과열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는 무시험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다시 고등학교 입시가 더욱 과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입시경쟁의 심화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됨에 따라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고등학교 배정을 학생의 지원 및 입학 성적에 따른 배정이 아닌,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거주지에 기반하여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등교육에서 입시 폐지는 중등학교의 공급 확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초중등교육을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입시가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폐지된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로 고등학교 진학률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학 입시경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대학 입시경쟁은 기존에도 치열했고,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도 높았다. 그러나 고등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 입시경쟁은 기존보다 더 치열해졌다. 이는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 참여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이 증가하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는 과거와 비교하여 어렵지 않게 되었으나,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노동시장에서의 보상과 노동시장 이외에서의 보상이 따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저학년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성인기의 보상이라는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로 그 동기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III. 데이터

1. 데이터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데이터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조사이다. 매년 2회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규모 및 대상은 전국의 3,034개 초·중·고등학교의 3,120개 학급의 학부모 약 7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학생 및 학부모의 인적사항, 유형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연도·지역별 평균 사교육비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핵심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그리고 연도·지역별 초·중·고등학생들의 부모의 교육 수준과 성비 변수를 만들고, 이를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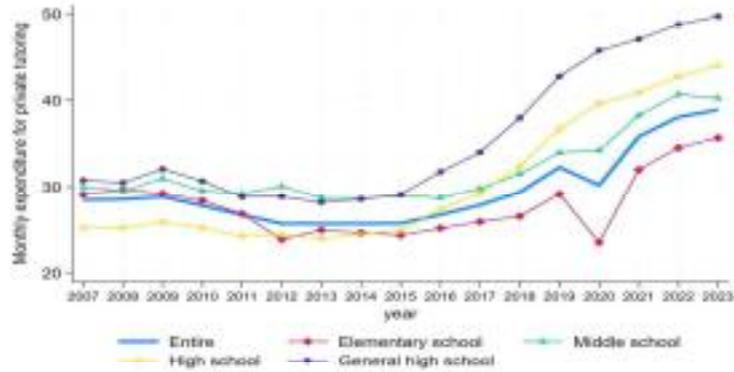
인구동향조사 출생은 출생신고서에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연도·지역별·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 변수를 만들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그 이외의 다른 통제변수들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해 구성한다.

2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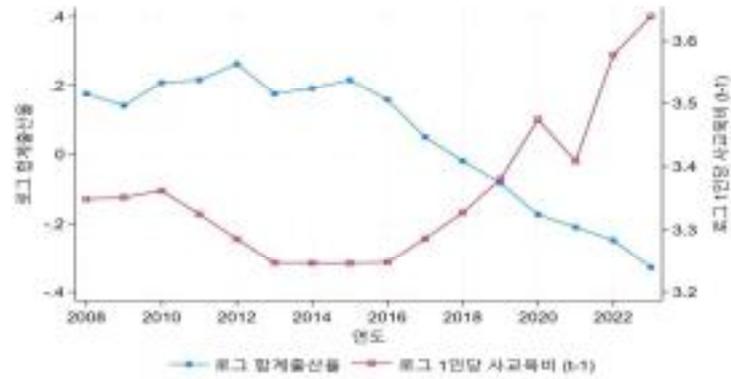
[그림 1]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초·중·고 각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평균의 추이를 보여준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역시 사교육비가 0으로 처리되어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교육비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상위 교육단계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크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뉘어진다. 고등학교 내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사교육비 지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대학 진학을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전체 및 학교급별 평균 사교육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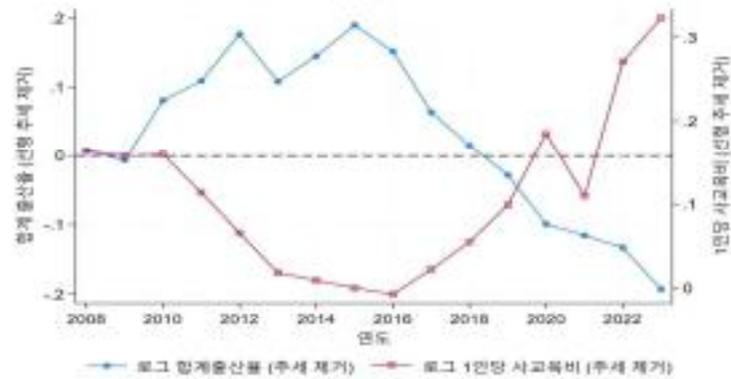


자료: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그림 2] 전국 단위 로그 사교육비 지출(t-1)과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



(a) 원자료



(b) 선형시간추세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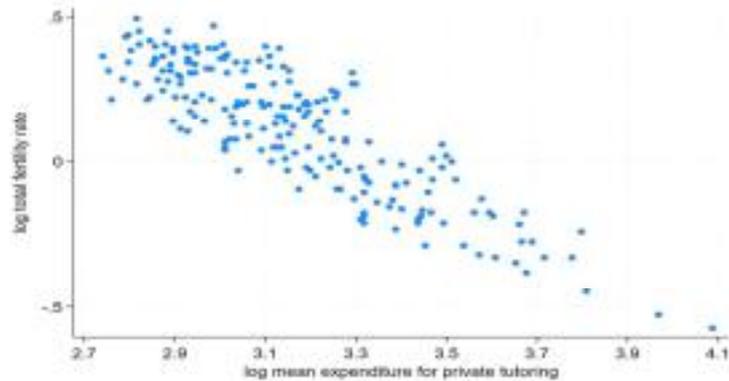
[그림 2]의 (a)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로그로 나타낸 1인당 사교육비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 가격)와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시간적으로 1년 전의 사교육비가 당시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1년 전의 사교육비를 나타낸다. 즉, 그림에서 2008년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는 실제로는 2007년의 사교육비이다. 해당 그림은 2015년 이후 사교육

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2009년 이후에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출산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강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림 2]의 (b)는 로그 1인당 사교육비와 로그 합계출산율 각각에 대해 선형 추세를 제거한 잔차들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사교육비가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교육비가 시간 추세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출산율은 추세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계열적인 관계가 사교육비와 합계출산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변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있을 높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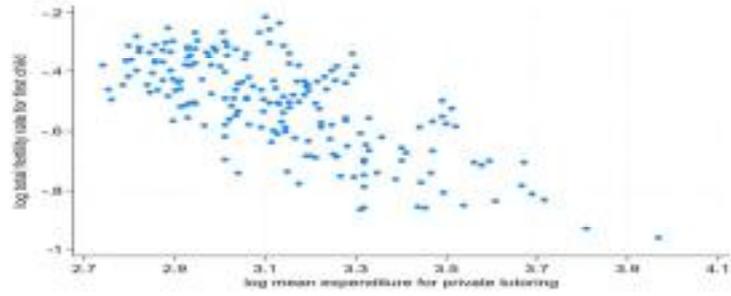
[그림 3]은 전국의 사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시계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림 3]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시도 단위의 로그 사교육비 지출과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역시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3] 시도 단위 로그 사교육비 지출(-1)과 로그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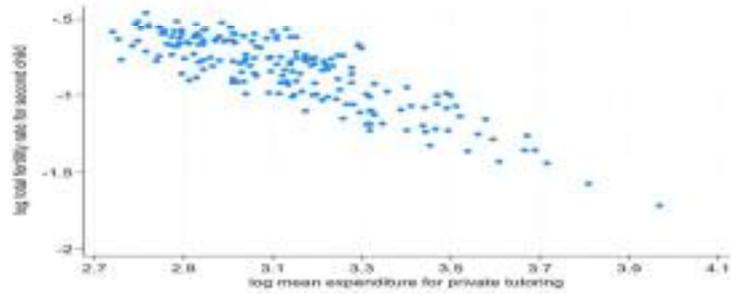


[그림 4]는 시도 단위의 로그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출생순위별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산포도를 통해 보여준다.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 출산율의 부정적인 관계는 출생순위가 올라가면서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에 대한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도 사교육비와 부정적인 관계가 관찰되지만, 둘째에 대한 합계출산율이나 셋째 이상에 대한 합계출산율보다는 그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사교육비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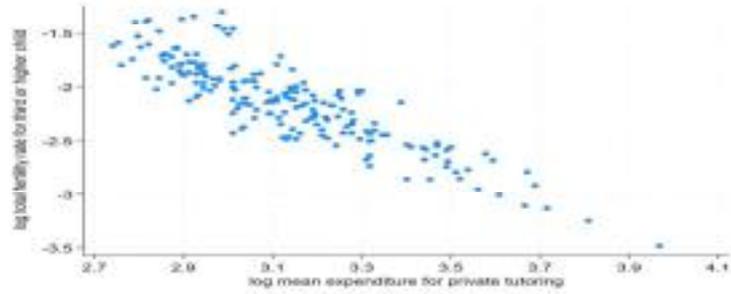
[그림 4] 시도 단위 로그 사교육비 지출(t-1)과 출생순위별 로그 합계 출산율



(a) 첫째 아이



(b) 둘째 아이



(c) 셋째 이상

IV.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다음의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로그 평균 사교육비가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log TFR_{s,t} = \beta \log T_{s,t-1} + X_{i,t-1} \gamma + \lambda_s + \delta_t + \epsilon_{s,t} \quad (1)$$

위의 모형에서 $\log TFR_{s,t}$ 은 지역 s 의 시점 t 에서의 로그 합계 출산율, $\log T_{s,t-1}$ 는 시점 $t-1$ 에서의 로그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다. $X_{i,t-1}$ 는 다른 통제변수들로 시점 $t-1$ 에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로그 시도 경제총생산, 로그 개인소득, 조혼인율,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당 학생 수가 포함되었다. λ_s 는 지역(시도) 고정효과, δ_t 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epsilon_{s,t}$ 는 오차항이다. 위의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에 더해 주요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임의효과 모형, Arellano-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 Blundell-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도 보고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할 때 위 모형이 가지는 한 가지 문제는 시도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생략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구변수 추정도 병행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초·중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과 초·중등학생의 성비이다. 시도 지역의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학력은 현재의 초·중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도 및 연도 고정효과와 성인 인구의 학력 등 관측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학력이 사교육 지출을 통한 경로 이외에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초·중등학생의 성비 역시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는 관계를 갖지만, 사교육 지출을 통한 경로 이외에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도구변수 추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 지역 내에서 해마다 초·중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 집단의 구성은 변한다. 어떤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감에 따라 이전의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집단에서 제외되고, 초등학교 취학 1년 전이었던 아동들의 부모가 집단에 새롭게 포함된다. 초·중등학생 부모의 구성이 변함에 따라 부모의 학력 구성 역시 변화한다. 도구변수 추정은 이러한 부모 집단의 학력 변화가 야기하는 사교육비 지출의 변이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초·중등학생들의 성비 도구변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초·중등학생들의 구성이 해마다 변화함에 따라 성비 역시 변화하는데, 이것이 야기하는 사교육비 지출의 변이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합계출산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구변수 추정의 1단계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og T_{s,t-1} = \pi_1 Z_1 + \pi_2 Z_2 + X_{i,t-1} \rho + \psi_s + \eta_t + \nu_{s,t} \quad (2)$$

위의 식에서 Z_1 은 초·중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도구변수이고, Z_2 는 초·중등학생의 성비이다. 다른 변수들은 식(1)과 같다.

V. 분석 결과

1.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한 사교육비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 추정

다음으로 패널데이터 및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데이터는 17개 시도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형은 패널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인 이원-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¹⁾ 그 이외에도 임의효과 모형, Arellano-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 Blundell-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도 보고한다. 통제변수들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로그 지역내총생산, 1년전 및 2년전의 조혼인율,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교시 1인당 학생 수, 로그 1인당 개인소득이 사용되었다. 공간의 제약상 다른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nuisance parameters)에 대한 추정 결과는 보고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인 사교육비 지출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만 보고한다.

<표 1>은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열(1)은 고정효과 모형, 열(2)는 임의효과 모형, 열(3)은 AB의 동적효과 모형, 열(4)는 BB의 동적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선호하는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기 때문에 열(1)의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분석 결과 1년 전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1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역시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1) 해당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og TFR_{s,t} = \beta T_{s,t-1} + X_{i,t-1} \gamma + \lambda_s + \delta_t + \epsilon_{s,t}$. 종속 변수는 시도 s의 시점 t의 로그 합계출산율이고, $T_{s,t-1}$ 는 시점 t-1의 로그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이다. $X_{i,t-1} \gamma$ 는 시점 t-1에서의 시도 s의 다른 특성들을 포함하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다. λ_s 는 시도 고정효과, δ_t 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표 1> 로그 1인당 사교육비(t-1)가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 FE	(2) RE	(3) AB	(4) BB
로그 1인당 사교육비 (t-1)	-0.1236** (0.0472)	-0.1045* (0.0577)	-0.0840** (0.0374)	-0.1420*** (0.0420)
관측치 수	224	224	208	224

주: 1. ***: p<0.01, **: p<0.05, *: p<0.1. 2. 열(1)은 고정효과 모형, 열(2)는 임의효과 모형, 열(3)은 Arellano-Bond의 동적효과 모형, 열(4)는 Blundell-Bond의 동적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 3. 괄호 안은 표준오차. 4. 표준오차는 시도 단위 지역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가 사용되었음.

다음으로 <표 2>는 사교육비 지출이 출생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에서 1년 전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095%,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1873%,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출산율은 0.2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교육비의 증가는 둘째 이상의 다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표 2> 로그 1인당 사교육비(t-1)가 출생순위별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 FE	(2) RE	(3) AB	(4) BB
첫째 아이 출산율	-0.0950 (0.0601)	-0.1118 (0.0699)	-0.0832 (0.0510)	-0.1300*** (0.0397)
둘째 아이 출산율	-0.1873** (0.0636)	-0.1048** (0.0435)	-0.1950*** (0.0498)	-0.2863*** (0.0534)
셋째 이상 출산율	-0.2180 (0.1267)	-0.1165 (0.1150)	-0.1556** (0.0703)	-0.2024** (0.0842)
관측치 수	208	208	192	208

주: 1. ***: p<0.01, **: p<0.05, *: p<0.1. 2. 열(1)은 고정효과 모형(FE), 열(2)는 임의효과 모형(RE), 열(3)은 Arellano-Bond의 동적효과 모형(AB), 열(4)는 Blundell-Bond의 동적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BB). 3. 괄호 안은 표준오차. 4. 표준오차는 시도 단위 지역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가 사용되었음.

2.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

<표 3>은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열(1)은 전체 합계출산율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데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0.1458% 감소한다. 1단계 추정에서 F값은 46.2로, 약한 도구변수의 문제가 있을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이 늘어난다.

열(2)는 사교육비 지출이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데,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이듬해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0835% 감소한다. 그러나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p 값=0.158). 열(3)은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이듬해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2947%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열(3)은 사교육비 지출이 셋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데,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이듬해 셋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35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구변수 추정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둘째 아이 혹은 그 이상의 출생순위 자녀의 합계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로그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t-1$)가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1) 전체	(2) 첫째	(3) 둘째	(4) 셋째 이상
로그 1인당 사교육비 ($t-1$)	-0.1458** (0.0630)	-0.0835 (0.0577)	-0.2947*** (0.0750)	-0.3501*** (0.1245)
1단계 추정 결과 부의 학력 (base=고졸 이하) 대졸(전문대 포함)	0.1504 (0.2297)	0.1857 (0.2559)	0.1857 (0.2559)	0.1857 (0.2559)
대학원 이상	1.218*** (0.2297)	1.354*** (0.4488)	1.354*** (0.4488)	1.354*** (0.4488)
모의 학력 (base=고졸 이하) 대졸(전문대 포함)	0.3675 (0.3124)	0.2717 (0.3167)	0.2717 (0.3167)	0.2717 (0.3167)
대학원 이상	1.101** (0.4896)	1.086** (0.4563)	1.086** (0.4563)	1.086** (0.4563)
학생 성비 (남학생의 비율)	-0.2625** (0.1307)	-0.2938** (0.1375)	-0.2938** (0.1375)	-0.2938** (0.1375)
F 값	46.2	43.3	43.3	43.3
관측치 수	224	224	224	224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표준오차는 시도 단위 지역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가 사용되었음.

VI. 해석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대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 서 추정했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

교육비가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이다. 즉, 2023년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이 약 4.34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은 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 가격으로 측정했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6.5% 증가했다. 추정 결과에 근거하면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약 4.53%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이 약 42.9%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해당 기간의 출산율 감소율의 약 10.6%를 설명한다.

반면에 도구변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이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 (약 4.34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은 1.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합계출산율이 5.33% 감소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해당 기간의 출산율 감소의 약 12.4%를 설명한다.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사교육비의 영향은 특히 둘째 이상의 아이 출산에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95%가 감소하는 반면,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2.18% 감소한다. 도구변수 추정에서는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835% 감소,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2.947% 감소, 셋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3.5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분석 방법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특히 둘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되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을 주저하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ecker (1960, 1993)의 출산 모형에 따르면 자녀의 질(quality) 혹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때 출산은 감소하는데, 질과 자녀 수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²⁾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출산 자녀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하는데 이러한 투자 지출의 증가는 다시 출산 자녀의 수를 줄어든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자녀 1명당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출산율 혹은 출산 자녀의 수를 줄어든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가구의 자녀당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하여 후속 세대의 출산

2) 특히 자녀의 수와 질이 강한 대체 관계를 가질 때 그럴 수 있다. “Even a small exogenous increase in n (or q) could be responsible for a large decrease in q (or n) if the interaction between n and q were sufficiently strong” (Becker, 1993, p146).

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Becker (1960, 1993)의 이론이 설명하는 “교육비 지출 증가↔출산을 감소”의 상호 작용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현재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현재 출산을 감소뿐 아니라 미래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및 출산을 저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교육의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이 연구에서 추정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VII. 정책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것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지출은 출산 외의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은 다른 급우들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존재한다 (Kim, Jang, and Kim, 2022a). 마치 군비 경쟁처럼 서로의 사교육 참여를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증가는 급우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Kim, Jang, and Kim, 2022b). 교실 안에서 경쟁 압력이 상승하고 사교육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개인의 최적 선택이 사회적으로는 최적 수준보다 과도한 소비 (혹은 생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사교육 지출보다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교육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그 결과는 “사교육 지출이 과도하며 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도 일치한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수요는 경쟁적인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쟁적인 대학 입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평판이 졸업 이후 얻게 되는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는 기술 변화가 야기하는 교육의 수익률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Ermisch, 2003). 즉, 사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술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교육의 수익률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고속권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기술 변화가 나타나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교육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인 성공 이후 다시 원상태로 회귀했던 주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존재하는 대학 서열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소비 혹은 생산에 대해 양적인 규제나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세금(피구세)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배출량에 대한 규제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 부가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교육에 대한 양적 규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예로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과외 금지나 2021년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이후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암시장 이 형성되었다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강압적인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완화된 형태의 규제 정책으로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고, 사교육 참여가 파급 효과 및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증적인 결과에서도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초등학생은 광역시도별로 교습 시간이 21시에서 24시 사이, 중학생은 22시에서 24시 사이, 고등학생은 22시에서 24시 사이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교습 제한 시간이 가장 이른 시도에 맞추도록 조절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합의와 소통에 기반하여 시간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즉,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오후 10시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반대하여 학원 영업의 자유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이 가진 부정적 외부효과와 군비 경쟁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장한 일요일 학원 휴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해결방안의 하나이다. Kim, Tertilt, and Yum (2023)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사교육세의 적절한 부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사교육 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교육세의 부과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고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 적용에서 많은 반발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신에 현존하는 학원 교습비 기준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제정 및 집행하여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사교육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사교육이 가진 부정적인 외

부효과와 파급효과로 인해 이러한 개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반대가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부과나 양적인 규제 및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발과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도록 설득, 소통,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지만, 사교육의 본질적인 성격 중 하나가 제한된 수의 명문대 입학 및 좋은 직장을 점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교육 감소 효과가 반드시 크게 나타날지 분명하지 않다. 즉, 공교육의 질적 향상은 학생들의 인적자본 축적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시스템하에서 다른 학생보다 약간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한 욕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사교육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체 관계의 정도를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p. 209-240).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oepke, M. (2015). Gary Becker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81(1), 59-66.
-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3).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the Family* (Vol. 1, No. 1, pp. 151-254). North-Holland.
- Ermisch, J. (2016). *An economic analysis of the fami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uo, R., Yi, J., & Zhang, J. (2022). The Child Quantity-Quality Trade-off. *Handbook of Labor, Human Resources and Population Economics*, 1-23.
- Keats, A. (2018). Women's schooling, fertility, and child health outcomes: Evidence from Uganda's free primary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5, 142-159.

Kim, S., Tertilt, M., & Yum, M. (2023). Status externalities in education and low birth rates in Korea. Available at SSRN 3866660.

Kim, T., Jang, H., & Kim, J. (2022a). Do peers affect private tutoring engagement in Korea? Evidence from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3(2), 271-283.

Kim, T., Jang, H., & Kim, J. (2022b). Peers' private tutoring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70(4), 658-665.

Monstad, K., Propper, C., & Salvanes, K. G. (2008). Education and fertility: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0(4), 827-852.

4. 한국인구학, “도시 중산층 이상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하정화 교수

한국인구학 제47권 제1호(2024년), pp. 41~72

<https://doi.org/10.31693/KJPS.2024.03.47.1.3>

연구 논문

도시 중산층 이상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질적 연구*

임예진** · 김동하*** · 조영태**** · 유승현***** · 이창숙***** · 하정화***** · 고우림*****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시도한다. 활동적 노화를 활용해 조사 질문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순자산 6분위 이상의 베이비붐 1세대 4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여 이들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노인과 다른 모습의 노인이 될 가능성을 삶 곳곳에서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주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스스로 하는 노후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참여 의지를 다지고, 취미 생활에서도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기보다 더 즐겁게, 더 잘 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상 속 곳곳에서 건강 관리에 힘쓰며 언젠가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면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요양 기관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부양 부담은 그동안 노인 인구로 인해 발생되었던 정도가 단순히 베이비붐 1세대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게 증가한 만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년기 성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이로써 미래 사회의 부양 부담 완화와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밝혀낸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삶과 생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학술적이며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다.

핵심단어: 베이비붐 1세대, 노년기 성향, 활동적 노화, 포커스 그룹, 도시 중산층 이상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인구학적 접근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발간 등록 번호: 11-1352000-003539-01).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수료(제1저자) | 94lyj@snu.ac.kr

***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 dhkim@daejin.ac.kr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공동저자) | youngtae@snu.ac.kr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공동저자) | syoo@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 수료(공동저자) | ckdtnrdl29@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공동저자) | junghwaha@snu.ac.kr

*****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조교수(공동저자) | reako@snu.ac.kr

I.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2030년경에는 한국이 덴마크,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35개 산업화 국가 중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ntis, Bennett, Mathers, Li, Foreman and Ezzati, 2017). 이러한 현상은 통계청의 추계 인구 작성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통계청은 추계 인구 작성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해 저위, 중위, 고위로 구분된 장래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국제 이동)을 활용한다. 이때 통계청은 고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사망에 대한 가정을 2030년에 여성 90.1세, 남성 85.1세로 설정하여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한편,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는 그 이름만큼이나 큰 코호트 크기로 고령 인구 비율의 가파른 증가세를 본격화시키기 시작했다.

베이비붐 1세대는 기존의 고령 인구가 유년기에 한국 전쟁을 경험한 것과 다르게 산업화와 도시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등 국가 성장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들 대다수는 젊은 시절 도시로 이주해 터전을 잡고 삶을 꾸리면서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성장과 함께 큰 혜택을 누렸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동시에 베이비붐 1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 받지 못해 스스로를 직접 부양하는 첫 세대라는 의미의 “마치 세대”로 불리며(조선일보, 2023) 이중 부양의 짐을 지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를 향한 다양한 시각은 한국의 고령 인구가 모두 베이비붐 1세대로 채워질 즈음에 과거와 다른 모습의 노인을 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사회 각 분야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저마다의 우려와 기대를 내놓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주로 보건 복지의 관점에서 베이비붐 1세대가 압도적으로 큰 인구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 진료비 분석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가 모두 고령 인구가 편입한 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김용하·임성은, 201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1). 베이비붐 1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20년부터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된 바 있었다(강태현, 2016). 하지만 소비 시장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가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성격의 수요자로 활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롯데멤버스, 2019). 과거 고령 인구는 소비력이 없는 비주류 수요자로 여겨지던 것과 달리 베이비붐 1세대는 노인이 된 후에도 경제력을 갖추고 활동적

인 소비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이석, 2020). 또한 노인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소비자적 욕구를 갖는다는 식의 기존 관념들도 베이비붐 1세대의 소비 패턴을 통해 점차 깨어지고 있음이 주장되었다(롯데멤버스, 2019).

베이비붐 1세대와 관련된 견해가 분분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뒤로한 채 그 규모에만 집중하여 노인 정책 대상자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본 연구와 같은 접근이 중요성을 갖지만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질문 1. 베이비붐 1세대는 노인과 노인의 삶(노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연구 질문 2. 베이비붐 1세대가 살아가는 노년기의 삶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가?
- 연구 질문 3. 베이비붐 1세대가 그리는 노년기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검토

1. 세대 개념과 이에 따른 한국의 베이비붐 1세대 정의

한국에서 베이비붐 1세대에 대한 연구는 2010년을 전후로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전, 세대라는 개념과 그 개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베이비붐 1세대란 어떤 인구 집단인지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성립 혹은 출현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한 세대(Generation)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설명력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최은영, 2015; 최선임, 2016). 세대 개념은 크게 네 가지 관점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는 특정 역사적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세대를 규정하여 넓은 의미에서는 코호트 개념을 포함한다(최은영, 2015). 이처럼 세대 개념의 기준이 되는 속성은 시간으로, 한 세대로 규정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공유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ies)으로부터 이후의 태도와 행위

1) ① 계보 상에서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이 동일한 항렬에 속한 사람들로 사용하는 방식, ②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동년배 집단으로 보는 방식, ③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칭하는 방식, ④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방식(최은영, 2015).

에 영향을 받게 된다(최선임, 2016). 최초로 세대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시작했던 만하임(Mannheim, 1952)은 세대를 사회적인 위치로 해석했는데, 태어난 시기에 따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서로 달라 세대라는 층이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최은영, 2015). 이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세대 개념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시기와 그 여파가 달라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출생 코호트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맥락에 맞는 세대 구분을 차용하여 연구 대상이 되는 베이비붐 1세대를 1955년부터 1964년까지의 출생 코호트로 한정하였다(조영태, 2021). 베이비붐 1세대는 학령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유신 정권, 부마사태, 4.19 혁명 및 5.16 군사혁명, 반공정책,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10.26 사태 등 격변하는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살아왔다(최은영, 2015). 교육 수준에 관해서는 이전 세대의 30%가 무학이고 중졸 이상의 학력도 29%에 불과했던 반면, 베이비붐 1세대는 공교육 제도 등의 변화로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근접했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70%에 이르렀다(최은영, 2015; 김희정·천혜정, 2016; 박주희, 2016).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절대 빈곤을 뒤로하고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주역으로서 경제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다(최은영, 2015; 박주희, 2016; 서울연구원, 2021). 하지만 왕성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던 중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게 되면서 베이비붐 1세대는 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감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의 고통까지도 모두 체험한 세대가 되었다(최은영, 2015; 김희정·천혜정, 2016; 박주희, 2016). 이 외에도 베이비붐 1세대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 형태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의료 기술 발달의 혜택을 받아 이전 세대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었다(김희정·천혜정, 2016; 박주희, 2016). 각종 마스크와 과학 기술의 발달, 세계 여행 개방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화의 선두에 있던 세대이기도 하다(박주희, 2016).

2. 한국 베이비붐 1세대에 대한 주요 연구 흐름

베이비붐 1세대는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이들이 만들어낼 사회적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관심들 중 많은 경우는 상업적 관점의 세대 논의였으며 이들에게 주목하는 주체는 학계가 아닌 업계가 다수였다(최은영, 2015). 일례로 한국의 전체 가계 순자산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이고 그중 베이비붐 1세대²⁾는 가구당 평균 4억 966만 원의 순자산을, 앞선 세대는 가구당 평균 3억 3,936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

었다(서울연구원, 2021). 베이비붐 1세대가 기존의 노인과는 다르게 소비 시장에서 소외 계층이 아닌 핵심 계층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들을 겨냥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해석되었다(조선일보, 2023). 베이비붐 1세대를 소비 시장의 큰손으로 보고 이들 대상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고령 인구가 각각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김수봉, 2011).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 모두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김수봉, 2011). 베이비붐 1세대를 소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 상정하는 연구도 볼 수 있었다. 베이비붐 1세대의 경제 활동 참여 실태와 향후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여 이들의 생산성이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동시에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연구가 그 예이다(이소정, 2011).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가 경제 주체로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들 대상 연구의 주요 흐름이었다. 베이비붐 1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로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베이비붐 1세대를 충분히 알기에 한계가 있어 보였다.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붐 1세대의 삶과 생활 세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들의 여러 역할에 대해 이해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노인 정책 수립에 앞장서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바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부터 1년간 매월 포럼을 개최하여 베이비붐 1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및 복지 욕구, 경제 활동, 노후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 2011).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내용은 학계나 그 밖의 관계 분야로의 공유가 미미해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등의 활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보건학계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의 건강 행태 및 건강 실태, 의료 이용에 관한 양적 연구를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동 세대 내 하위 집단 간의 비교였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1세대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선우덕, 2010; 김희옥, 2011; 선우덕, 2011; 김기향·김용민·정태영, 2013; 김경나·김건엽·남행미, 2016). 복지 분야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의 특성상 기존의 사회 제도나 사회 복지 접근 방식이 이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박영란,

2)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를 칭하는 데 있어서 문헌마다 '베이비부머',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전기'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 문헌에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동일한 집단을 의미한 경우에 한하여 '베이비붐 1세대'로 용어를 통일해 서술함.

홍백의·심우정·부가칭, 2011). 베이비붐 1세대가 현재 갖는 가족 관계, 사회관계, 가치관 등에 대한 특성은 노년기에 진입한 뒤에도 변화하지 않고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욕구 및 높은 기대 수준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경희, 2011). 따라서 베이비붐 1세대와 기존 고령 인구의 다름을 인정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었다(김소희, 2021). 하지만 복지 분야의 베이비붐 1세대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혼란이 있거나(박주희, 2016; 황남희·김경래·이아영·임정미·박신아·김만희, 2019),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양적 자료 활용에 치중하여 이들의 생활상을 포착하고 면밀히 설명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조경욱·이중섭·박신규, 2011; 한혜경, 2011; 유용식, 2013; 최은영, 2015; 유재남, 2019).

3. 성향에 대한 고찰과 접근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탐구한다. 이때 성향(性向)이란 성질에 따른 경향을 뜻하는 단어로 정치적 성향, 공격적 성향 등의 쓰임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 성향은 개인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성향”인데, 학계에서 채택되고 사용되어온 개념이라기보다 이번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선행 연구 검토 후 조작적 정의로써 마련된 개념이다. 먼저 개인 혹은 집단의 성향이 형성되는 배경이나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었다(백경미·이기춘, 1996; 김석우·전용주, 2012; 이원섭, 2014).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애 경험이 각종 성향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백경미·이기춘, 1996; 김석우·전용주, 2012; 이원섭, 2014). 이미 형성 및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개인의 태도와 더 나아가 행동으로까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들도 있었다(홍은실·황덕순·한경미, 1999; 하주연·고애란·정미실, 2005; 남슬아·주소현, 2022). 이 같은 성향의 형성과 발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정치, 금융, 소비,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고,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어느 일부에만 국한되는 논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해 형성 맥락, 태도로서의 발현, 생활 방식으로서의 표출 정도의 배경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관점을 토대로 베이비붐 1세대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노후의 삶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노년기 성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질적 조사 방법으로서 포커스 그룹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1세대가 보이는 노년기 성향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해석을 시도했다. 지금까지의 베이비붐 1세대 연구 대부분이 양적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질적 조사 방법의 하나인 포커스 그룹은 8명 내외의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Morgan, 1997).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며, 이때 집단 내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인 개인 심층 면접이나 참여 관찰과는 구분된다(최선임, 2016). 포커스 그룹으로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Charmaz, 2006).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가지는 태도와 의견, 경험과 관점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선임, 2016). 실제로 포커스 그룹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성향 혹은 유형을 발굴하거나 세대 간 차이를 알기 위한 연구에서도 활용되어왔다. 금연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입원 환자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의 지지 유형을 네 가지(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지지형, 소극적 무관심형, 적극적 거부형)로 구분한 연구가 한 가지 예이다(박일환·정유석, 2019). 병원 근무 간호사의 세대별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주제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 관찰이 어렵고 개인 내면의 잠재된 의견이나 태도를 끌어내야 한다는 연구 진행의 애로 사항을 포커스 그룹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최선임, 2016).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탐구하기 위한 실용주의 성격의 일반 질적 연구(Generic Qualitative Approach)이다(Kahlke, 2014). 이들 세대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노후의 삶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고 그로부터 노년기 성향을 도출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조사 방법으로 활용했다.

2. 연구 대상 지역

연구 대상 지역은 베이비붐 1세대의 분포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 중에서 다음

의 이유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선정하였다. '2021년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내국인)'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붐 1세대 중 약 78.4%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베이비붐 1세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24%)와 서울특별시(17%)였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3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8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소도시 17개, 군 단위의 지역 3개로 이루어져 도내에서 소지역 간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소지역 간에 인구 규모, 개발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참여자 모집

연구 참여자는 1955~1964년 출생의 베이비붐 1세대 중 가구 유형과 순자산 분위 조건에 따라 목적 표집 방법으로 모집되었다. 가구 유형은 베이비붐 1세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형태인 부부 가구와 부부+미혼 자녀 가구로 한정하였다.³⁾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였으나, 현재로서는 전술된 가구 유형들 각각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쳐 세대 내에서 주요한 가구 유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베이비붐 1세대의 가장 주요한 가구 유형으로 판단되는 부부 가구와 부부+미혼 자녀 가구에 한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순자산 분위는 중산층 이상의 6~10분위로 설정하였다.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산출한 순자산 10분위 분포에서 베이비붐 1세대의 과반이 6~10분위의 중산층 이상이었는데⁴⁾, 이들은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이루어진 경제 발전의 유익으로 신분 상승과 실용주의적 합리성을 추구해온 베이비붐 1세대의 특성을 표상한다(남경완, 2008). 이러한 이유에서 세대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노년기 성향을 보다 차별적으로 살펴보기에 중산층 이상의 순자산 6~10분위 연구 참여자 모집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모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사 업체 입소스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가구 유형과 순자산 분위 조건에 따른 연구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업체의 연구 참여자 모집 전문 인력이 업체 내부의 패널리스트를 토대로 유선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3)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베이비붐 1세대는 22개 가구 유형으로 살고 있었고 부부 가구(33.5%)와 부부+미혼 자녀 가구(30.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이었음.

4) MDIS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베이비붐 1세대 가구의 56.5%가 순자산 기준 10분위 중 6분위 이상이었고 10분위(1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통화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연구 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취약한 연구 대상자란 의사소통의 취약성 등을 갖는 자로, 연구 참여 과정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순자산이 9억 이상으로 중산층 범위⁵⁾ 밖이면서 순자산과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액이 순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만큼 차이 나는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던 중 순자산 8분위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순자산 8분위의 연구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아, 주어진 조사 여건상 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은 포커스 그룹을 구성 및 조사하게 되었다.

<표 1> 포커스 그룹 구성

세대 가구 유형	베이비붐 1세대 (1955~1964년 출생)			
	부부 가구		부부+미혼 자녀 가구	
순자산 분위	6, 7분위	9, 10분위	6, 7분위	9, 10분위
총 8개 그룹 (총 49명)	2개 그룹 (6명, 7명)	2개 그룹 (6명, 6명)	2개 그룹 (6명, 6명)	2개 그룹 (6명, 6명)

순자산 6, 7분위 4개 그룹 평균 순자산 약 3억 8천만 원 (± 4천만 원)
순자산 9, 10분위 4개 그룹 평균 순자산 약 16억 2천만 원 (± 5억 9천 만 원)

4. 자료 수집

포커스 그룹을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 질문 개발이 우선 이루어졌다. 제2차 고령화 세계 총회(United Nations, 2002)에서 제시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개념을 토대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활동적 노화는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보장(Security)', 세 개의 영역과 이를 설명하는 다차원적 결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이는 노인의 삶 전반을 다룰 뿐만 아니라 현상태를 포함하여 과거의 배경부터 미래의 지향까지 포괄하고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라 중위소득 혹은 중위 자산의 75~200%를 중산층의 범위로 적용. 2022년 순자산 기준, 약 3억 3천만 원 이상 8억 8천만 원 미만은 중산층의 범위로 도출 및 활용됨.

있어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개념적 틀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적 노화 개념에서 개발된 지표(UNECE, 2015)를 참고하여 아래 <표 2>의 반구조화 질문을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였다. 포커스 그룹은 조사 업체 입소 스코리아에 마련되어 있는 좌담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당 평균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모두 자리하여 조사가 시작되면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이름, 나이, 거주지(자치구), 경제활동 참여 여부, 가구 구성원 정도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반구조화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반구조화 질문에 대해 각자 응답을 하면 진행자는 세대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토론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된 내용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묻고 답하도록 하여 그룹 다이내믹을 관찰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능한 텍스트 정보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촬영한 영상의 음성을 평균 4일 이내에 전자 문서 형태로 전사하였다.

<표 2> 반구조화 질문

이상적인 노후 및 노후를 위한 계획	Q1.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후 생활은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Q2. 여러분이 원하거나 그리는 이상적인 노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Q3. 이상적인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Q4. 원하는 노후의 삶을 위해 지금까지 계획하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5. (계획이나 준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왜 아직 노후를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Q6.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서 지낼 예정이신가요? 만약 노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실 거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6) 이때의 돌봄은, 정기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할애되고 본인의 일상에 일정 수준 이상 부담을 가지게 되는 정도의 돌봄을 뜻함.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었음.

〈표 2〉 반구조화 질문(계속)

노후를 위한 관리 및 계획	건강	Q7.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현재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또 앞으로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Q8. 노후에 질병이 생겨 병원 치료, 요양, 간호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을 기준으로 미리 생각해 두신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Q9. 퇴직하신 이후를 위한 노후 대비 자금은 어떤 구성으로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재정	Q10. 앞서 말씀하신 노후 대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Q11. 퇴직하신 이후에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가	Q12. 평소 즐기고 계신 여가 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두 말씀해 주세요.	
		Q13. 노후에는 어떤 여가 활동을 배우거나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돌봄 6) 경험 및 계획	부모님	Q14.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현재 돌보고 계시거나, 과거에 돌보신 적이 있나요?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Q15. (현재까지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돌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돌봄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자녀	Q16.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돌보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점이 고민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Q17. 손자녀 돌봄에 현재 참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Q18. (현재까지 손자녀 돌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돌봄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신/ 배우자	Q19.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점이 고민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Q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하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표 2〉 반구조화 질문(계속)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의 역할	Q21. 여러분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서비스,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 나눈 건강, 재정, 여가 활동, 돌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에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

5.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토마스(Thomas, 2006)가 제시한 일반 귀납적 접근법(General Inductive Approach)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분석하려는 자료를 여러 차례 꼼꼼히 읽음으로써 그룹 토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 친숙함이 느껴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되었던 세 가지 연구 질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미 단위(Text Segment)를 모두 표시하였다. 분석 자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 의미 단위 전후의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모든 의미 단위에 코드를 부여하여 83개의 코드를 정리하였다. 코드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1차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30개의 기초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 간에 공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2차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11개의 하위 범주로 재구성되었다. 이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6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전체 범주 구조를 전사된 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로 정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표 3).

〈표 3〉 기초 범주, 하위 범주, 상위 범주

기초 범주 (30)	하위 범주 (11)	상위 범주 (6)
돌봄 제공의 동기		
돌봄 제공 방식	돌봄 제공자로서 겪는	노후에 대한
돌봄 제공의 지지 요인	희생에 대한 인식	주체적 태도
돌봄 제공의 장애 요인		
건강 최우선주의	노후시기의 건강에 대해 갖는 인식	
여러 중요한 가치 중 하나		필수로
앞으로의 연금에 대한 기대		자리 잡은
앞으로의 소득에 대한 계획	노후에 가처분소득을 마련하기	노후 준비
마련해둔 자산에 대한 기대	위한 자원 포트폴리오	
기타		

〈표 3〉 기초 범주, 하위 범주, 상위 범주(계속)

기초 범주 (30)	하위 범주 (11)	상위 범주 (6)
소득 창출		
정서적 유익 없음	경제 활동에 대한 기대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인
물리적 접근성		경제 활동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들	
알선 채널		
건강 측면의 유익 은퇴 후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의 유익	취미/여가 활동 참여 동인	취미 생활 방식의 확장
채널 매개	취미/여가 활동 참여 방법	
직접적인 경험	건강 관련 걱정을 시작하는 계기	
간접적인 경험		일상 속의 습관이 된 건강 관리
내가 겪게 되는 영향	건강 약화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기반	건강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	
의료기관 기반		
기대하는 돌봄 방식		높아지는
돌봄 비용 마련을 위한 자원	돌봄 수요자로서 갖는 인식	요양 기관 선호도
요양 병원/시설에 대한 기대		
요양 병원/시설에 대한 걱정		

6.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링컨과 구버(Lincoln and Guba, 1985)가 제시한 준거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 가능성(Dependa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을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였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포커스 그룹 진행시 매 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응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전자 문서 형태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응답과 의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연구 참여

자 모집 과정에서 고려 조건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분석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받아 의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의미하는 확인 가능성 측면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는 동안에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그룹 토의 진행 시 작성된 현장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계획 및 자료 수집 절차 전반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승인받았다(No. P01-212306-01-037).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베이비붐 1세대는 여성의 비율(55%)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63.1세였다. 주거지는 동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의 비율(33%)이 높았으며 경제 활동 여부는 '아니오'에 해당하는 비율(63%)이 높았다 <표 4>.

<표 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전체		49명	100%
성	남자	22명	45%
	여자	27명	55%
평균 연령(표준편차)		63.1세 (±2.5세)	
가구 유형	부부 가구	25명	51%
	자녀 동거 가구	24명	49%
순자산	6, 7분위	25명	51%
	9, 10분위	24명	49%
주거지	동북권	16명	33%
	동남권	12명	24%
	서남권	15명	31%
	서북권	3명	6%
	도심권	3명	6%
경제 활동 여부	예	18명	37%
	아니오	31명	63%

2. 포커스 그룹 분석 결과

도시 중산층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탐구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내용을 분석하였고 여섯 가지의 특징적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발견된 성향들은 서로 간에 배타적이지 않지만 일정 수준 독립적이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성향이 함께 작동하거나 발견되는 것 또한 가능해 보였다.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찾아낼 수 있었던 여섯 가지 노년기 성향 각각의 발생 배경과 표출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의 구성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노후에 대한 주체적 태도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참여자 대부분은 현행법의 65세보다 높은 나이를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일부 65세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그 이유로 현행법을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 연구 참여자 중 65세 이상인 참여자들은 자신을 노인이라고 칭하기에 아직 젊다는 반응이었다. 마찬가지로 65세 미만인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은 노인이 되기까지 한참 남았다는 의견이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참여자들이 65세부터 주어지는 사회 곳곳의 노인 복지 혜택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 나이와 다르게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 복지 혜택을 고맙게 느끼기보다 비용이 아깝다거나 오히려 자신을 노인으로 대한다는 데에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일 수 있겠다며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노후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이어지는 노후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다.

제가 지금 65세잖아요. 아직은 진짜 너무 노인 취급받기가 싫어서. 요즘은 지하철도 65세로 하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 통장님이 며칠 전에 오셨어요. 어르신 이제 교통카드 하라고. 제가 왜 하냐고 그랬더니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짧게 살고 하니까 70은 왜야 노인이지 않냐?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9, 10분위)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자신의 노후를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건강 관리, 경제 활동, 취미 생활 등으로 삶을 다채롭게 채워나가길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부모님 혹은 손자녀 돌봄이 요구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들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님이나 손자녀

돌봄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가족 밖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려는 양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형제나 자매와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부모님을 요양 기관으로 모시고 손자녀를 보육 시설 혹은 사설 교육 기관에 맡기는 방법을 들었다. 본인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경우 개인 시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희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들 대부분은 그 이유로 꼽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이나 금전적인 요소 못지않게 자신의 삶과 건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이 나타나는 대목이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다가 연로해서 힘드시니까 남편한테, 아들한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남편이 자기 집에서 안 된다고 그레버렸대요. 남편이 왔다 갔다 하고 돌보다가 자기 허리가 잘못하면 이제 병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나중에 모신 거죠.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6, 7분위)

2) 필수로 자리 잡은 노후 준비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주변의 선배 세대를 목격해온 경험상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노후를 잘 살아가려면 건강을 꼭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수라는 의견이었다. 반대로 노후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따라온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모두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상적인 노후 준비에 대한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얼마간 다른 반응을 보였다. 부부 가구로 살고 있는 참여자들은 대체로 건강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비하기 위해 힘써왔다는 의견이었다. 이들의 준비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방식이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노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과거부터 마련된 것들이었다. 반면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참여자들의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해 크게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여럿이었다. 지금껏 자녀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과 자녀와 함께 살면서 노후가 멀게만 느껴져 미루게 되었다는 의견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이들은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노력할 수 있는 건강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준비 상황에 더 우려를 표했다.

저는 50대 초반에 개인연금을 들었어요. 요즘 그것도 받고 있고요. 또 옛날부터 건강 때문에 보험, 암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챙겨서 들었고 실손도 들었고. 이런 게 다 노후에 대책이 아닌가. 그 이후에는 또 비과세 보험도 조금씩 제가 준비를 한 거죠. IRP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이런 게 다 지급에 의서는...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9, 10분위)

노후 대책으로 뭐를 준비해 놓는 걸 떠나서 아직까지 아이가 있을 때는 게 때문에 내가 노후라는 생

각을 못 해요. 젊어도 얼마, 늙어도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가고 났을 때, 그때 노후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중략) 개가 시집을 가야 현실감이 올 것 같다 이 얘기에요. (여성, 자녀 둘거 가구, 순자산 9, 10분위)

부부 가구로 살고 있는 참여자 내에서도 순자산 분위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 그중에서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순자산 분위와 상관없이 노후 준비에 애쓰고 있다는 베이비붐 1세대 참여자들 대부분에게서 응답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들은 다른 방법들 또한 강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순자산 분위가 낮은 그룹에서는 근로 소득 기반의 저축금을 활용하고자 했고 순자산 분위가 높은 그룹에서는 작은 규모로나마 임대 소득 마련을 도모하고 있었다. 부동산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의 특성상 순자산 분위가 높은 그룹에서의 임대 소득은 노후 생활비의 적지 않은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동력이 쇠퇴하고 결국에는 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시점에 도래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은 임대 소득에 비해 그 끝이 명확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순자산 6, 7분위의 베이비붐 1세대 참여자들에게 근로 소득은 여전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미만 순자산 분위의 베이비붐 1세대에게서는 노후를 위한 근로 소득 기반의 저축금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이 짐작되었다.

국민연금하고 오피스텔 월세하고 주식 배당금. 그다음에 정기예금, 예금 이자. 그런 식으로 (남성, 부부 가구, 순자산 9, 10분위)

조금씩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거 있고 제 개인연금이 있고요. 짐사람 국민연금 조기 신청해서 받는 거 좀 있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 조금. (남성, 부부 가구, 순자산 6, 7분위)

3)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인 경제 활동

베이비붐 1세대 참여자들은 경제 활동에 대해 소득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예로, 참여자들은 육체적 노동력이나 과거의 경험 및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성원으로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자 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퇴직 이후에 필요 이상으로 주어지는 여가 시간을 일정 부분 정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할애하여 의미 있게 보내고 무료함도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일정 강도의 활동량을 규칙적으로 가지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의 응답도 있었다. 과거에 경제 활동 경험이 많지 않았던 참여자의 경우, 삶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경제 활동 참여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이는 특히 부부 가구 유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참여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으로 부부 가구 유형의 참여자보다 소득을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경제 활동이 갖는 그 외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보면 일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떠나서 (중략) 돈 액수를 떠나서 그냥 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6, 7분위)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현직의 분야에서 연계하거나 확장해 구직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는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대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고민 중이라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구직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등에서 발굴 및 알선하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보고 지원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민간의 사업장에서 계시하는 구인 공고를 찾아보고 시간제 근무, 계약직, 단기 일자리에 지원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구직 및 경제 활동 참여에 더 유리한 서울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은퇴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 있어요. 그런 일하고 올해 또 모집하겠죠. 할 예정이고. (남성, 자녀 동거 가구, 순자산 9, 10분위)

4) 취미 생활 방식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취미 활동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SNS를 이용하여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채널을 다양하고 확보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 주변 지인과 함께 하거나 지역 사회 내의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니더라도 취미 활동을 위한 SNS 모임에서 여건과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거리낌 없이 함께 하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취미를 함께 즐기는 지인의 범위를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 일부는 주변에서 체험해 보거나 배우기 어려운 취미 활동의 경우에 관련 SNS 모임을 찾아 들어가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도 답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다는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에서 이러한 응답들을 이해할 수 있

었다.

밴드 같은 데 들어가서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입해 놓으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까. (여성, 자녀 동거 가구, 순자산 6, 7분위)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취미로 무언가를 배울 때에도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어 보였다. 예컨대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 같은 공공 기관에서의 강좌는 내용 난이도나 짜임새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들도 지역 기관 기반의 강좌들이 사설 기관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접근성까지 좋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쉬운 내용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구성이 충분히 알차지 않아 흥미를 잃고 꾸준히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린 시절부터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습 경험이 취미 활동 상황에서도 발현되어 이들 연령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일부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이러한 아쉬움은 순자산 분위가 높은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나라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찾아가 보면 너무 기초적인 거 A, B, C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하나 하나 흥미를 잃어서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나이 드셨어도 조금 수준 높게 그런 반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 자녀 동거 가구, 순자산 6, 7분위)

5) 일상 속의 습관이 된 건강 관리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은 일상 전반에 녹아있었다. 이들은 평상시의 일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내면서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고 그 효과를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일상 속 방법들은 신체 활동, 식이 관리, 정신 건강 관리, 의료 기관 이용 정도로 구분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경제 활동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과 연계하거나 지인과 모임을 형성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식이 관리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식단을 계획적으로 꾸리고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 식이 관리에 대한 최신의 정보는 많은 경우 자녀들로부터 전달된다는 응답이었으며, 이러한 정보 공유는 부부 가구에서보다 자녀 동거 가구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 보였다. 이 밖에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정신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사고, 명상, 각종 모임·사고 활동, 배움과 같

은 노력이 함께 이야기되었다. 국가 제공의 건강 검진 외에도 정기적이고 선제적인 건강 검진 수검, 평소 가까운 의원에서 상담받기와 같은 의료 기관 이용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질병 치료를 넘어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의료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연구 대상 지역인 서울특별시 보건 의료 시설로의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걸어 다녔었어요. 기본으로 걷고 하는 게 되다 보니까 항상 어느 정도 체중은 유지를 하려고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7시 반에서 8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영양제 많이 먹는데 한두 가지만 먹으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요일은 꼭 교회에 가는 거. 어디에 적을 뒀야 평생 사람 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내 건강도 유지가 되고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생활 속에서.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9, 10분위)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 참여자들에게 일상생활 속 여러 가지 행동들은 건강 관리와 연관 지어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 상당수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 혹은 돌봄을 받게 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일상 곳곳에서의 행동으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해되었다.

오랜 기간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이 보이잖아요. 나도 20년 뒤면 1, 20년 뒤에 저 모습일 텐데 싶으니까 내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자식이 우울해지더라고.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9, 10분위)

6) 높아지는 요양 기관 선호도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인해 요양 기관에 대해 한 번 이상 고민을 해보았다고 응답했다. 그 고민 끝에 부모님을 요양 기관으로 모셨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말년에 있어서는 요양 기관을 긍정적인 선택지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본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자녀의 삶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부양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참여자는 부모님을 위해 요양 기관을 알아보면서 기대 이상의 서비스와 시설에 거동조차 불편해지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이었다. 비슷한 사정의 동년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 걱정을 덜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요양 기관에 대한 메스컴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요양 기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계신데 저희 다섯 남매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자식이 많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지만 저희는 하나나 둘이잖아요. 하나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많이 아플 때는 요양원을, 요양병원을 가야 될 것 같고 요양병원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성, 부부 가구, 순자산 9, 10분위)

한편, 참여자들 내에서 요양 기관에 대한 인식은 순자산 분위에 따라 다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양 기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순자산 분위가 낮은 그룹 보다 높은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순자산 분위에 따라 이들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요양 기관이 상이하여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자산 분위가 높은 그룹만큼이나 낮은 그룹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요양 기관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요양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해 현행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요양 기관에 들어가게 되기 전까지 남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보다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확대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대부분 요양 시설하면 너무 죽는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앞으로 다 그런 데 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조금 더 잘 꾸며서 그것이 어려운 데가 아니라 거기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 자녀 동거 가구, 순자산 6, 7분위)

V.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으로 탐색하였다. 도시 중산층 이상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의 노인과는 다른 노인이 될 가능성을 삶 곳곳에서 드러냈다. 이들은 노후의 삶에 큰 의미를 두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며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 활동, 취미 생활, 건강 관리, 돌봄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1세대로서의 고유한 노년기 성향을 보였다.

먼저 베이비붐 1세대의 주체적인 성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 노인의 주체적인 성향이 갖는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로 밝혀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에릭슨(Erikson, 1950)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여덟 단계의 사회심리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익히게 되면서 중국에 자신의 자아를 통합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반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자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아가 인간이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아 통합과 절망의 단계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쇠약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금 자주적인 태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주체성을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하는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써 건강한 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Ng and Ho, 2020). 이에 따르면 개인은 건강한 노화를 이루기 위해 노년기에 접어들 후에도 주체적인 결정에 따라 삶의 목표를 정하고 힘써야 한다. 또한 노인의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노인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성향이 강조되어온 것과 달리 그동안 한국의 노인들은 주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다(장은혜·남석인, 2015; 김준표·김순은, 2018). 하지만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와 함께, 활동적 노화의 실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이들의 자주적인 성향이 나이가 더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호길, 2017). 이렇게 베이비붐 1세대는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인 성향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에 힘입어 성공적인 노화를 도모하고 이들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베이비붐 1세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준비된 노인이 되어 원하는 노후를 살아가고 싶은 베이비붐 1세대에게 노후 준비는 필수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부모님 혹은 선배 세대의 노후를 옆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가늠해 보고 건강이나 가계 관련 노후 준비에 저마다의 주관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녀 동거 가구 그룹에서 적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이 특히 가계와 관련된 노후 준비를 마음과는 다르게 실행에 옮기지 못해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해 보였다. 이러한 도움은 비단 기초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의 독립 지원부터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 알선까지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베이비붐 1세대는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부양 부담이 큰데(최영준, 2015; 정순돌, 2018; 이여봉, 2019), 청년 지원 정책은 미혼 자녀의 독립을 장려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중위 순자산 6~7분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추후

에도 계속 근로 소득에 의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처럼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한 베이비붐 1세대들이 노인 일자리로써 자신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이들이 2030년경부터 중기 노인 대열(75~84세)에 진입하여 경제 활동 전반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시작할 시점 전까지가 중요한 기회이다. 이로써,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강조된 주체성을 발현시키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밝혀진 바(김정순, 1989; Gaye Heathcote, 2000), 베이비붐 1세대의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베이비붐 1세대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효능감 향상, 무료함 해소, 건강 유지 등 금전적인 수입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노동의 대가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인이 된 베이비붐 1세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외에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방하남·이성균·우석진·김기현·김지경·한국노동연구원, 2011).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 베이비붐 1세대의 폭발적인 노인 일자리 수요를 소화하려면 민관의 협동은 필수이다(이성균, 2010; 변루나·김영숙·현택수, 2011). 하지만 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충분한 양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 특정 업무나 직종에서 조직의 고령화가 생산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고(김기민, 2018; 김우영, 2019; 정종우·이철희, 2022; Lallemand and Rycs, 2009), 이는 특히 민간 분야에서의 노인 일자리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1세대는 이전 노인 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들이 중산층 분야와 관련된 재교육으로써 생산성 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수요가 이미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아, 공급량이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강은나, 2017). 이번 연구에서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자리가 돈벌이 그 이상으로 인식됨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금은 기존의 금전적 형태를 벗어나 노후에 활용도 높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까지 확장될법하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지지한다(고용노동부, 2023). 이렇게 노인 인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노동 시장이 조성되고 자리 잡으면 베이비붐 1세대는 경제 활동으로 사회 참여를 실현하고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Havighurst, 1961).

다음으로는 베이비붐 1세대의 취미 생활과 관련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미 생활을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를 넘어서 SNS와 같은 온라인 영역으로 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향유할 취미 활동 콘텐츠에 각자

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베이비붐 1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경험한 바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정경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유재남, 2019). 과거에는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오늘날에는 예전만 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1세대는 많은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SNS까지도 일상 속에서 능숙히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 시 이 점을 활용한다면 더 높은 만족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김미령, 2012; 임정훈·이혁준·이지훈, 2020). 한편,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은퇴 경험 후에도 사회에서 역할하며 효능감을 얻고자 했는데, 노인으로서 새로운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맥락상 취미 활동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듯했다. 노인이 된 베이비붐 1세대가 최적의 생산성으로 개인적인 성취를 얻고 나아가 사회에까지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의 재교육이 필수적이다(류근관·전계형, 2013; 유재남, 2019). 베이비붐 1세대에게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재교육을 할 때에도 취미 생활과 관련된 이들의 노년기 성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최근 학령 인구의 감소로 극심한 진통을 겪는 교육계에서 배움을 비롯한 취미 생활에 적극적인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이 민간 시장이나 고등 교육 기관의 기회로 작용하게 될지 지켜볼만하다.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이 충분히 고려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은 이들이 인생의 2막에서 더 풍요로운 경험을 토대로 사회 성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베이비붐 1세대의 건강 관리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베이비붐 1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힘쓰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크게 신체 활동, 식이 관리, 정신 건강 관리, 의료 기관 이용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행위들로 채워진 일과를 보내며 건강 관리 효과를 기대하고 또 느끼고 있었다. 김효정과 박영숙(1997)의 연구에 따르면 1936년 출생까지의 과거 노인 인구는 건강 증진 행위의 낮은 수행 정도를 보였고 신체 활동, 정신 건강 관리에서 특히 취약했다. 이 때문에 당시까지의 노인 대상 건강 증진은 1차나 2차 예방이 아닌, 질병 과정과 관련된 장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3차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하지만 질병에 걸린 후 의료 서비스를 받기보다 발병 전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편이 삶의 질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이미 퍼지기 시작한 바 있다(김효정·박영숙, 1997). 이와 더불어 공공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건강 생활 실천으로 노후의 장기 요양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시작했다(이석구·전소연, 2006). 사업 단위로 수행되는 공공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 개발이 이루어졌고(서영

준·손동국·이동현·정승원·정애숙, 20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대부분의 지표는 진행된 사업 건수, 사업 참여자의 참여율이나 이수율 정도였다. 해당 지표들은 건강 증진 사업의 진행 절차와 과정을 성과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의 효과, 즉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남정자, 2005). 따라서 참여자가 건강과 관련된 공공의 사업이나 서비스로의 참여 전후를 쉽게 비교하고 건강 수준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로써 공공의 노력이 개인의 건강 생활 습관 개선을 넘어서 건강 증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시계열 범위가 긴 보건 의료 분야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연령, 시점 기준의 풍부한 대조군으로 베이비붐 1세대가 갖는 건강 관련 노년기 성향의 영향을 밝혀볼 만하다(허중호·전선영·오창모·황중남·오주환·조영태, 2017; 여유진·남찬섭·조한나, 2018).

마지막은 베이비붐 1세대의 돌봄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추후 자신의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일찍부터 우려하고 가족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요양 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보였다(김수봉, 2011; 박영란 외, 2011), 이는 노후 준비 정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그렇기에 낮은 순자산 분위에서는 요양 기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자산 분위의 참여자들만큼이나 명확한 이용 의향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앞으로 많은 요양 기관이 지금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노인 돌봄을 위한 요양 시설과 인력의 시의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짐은 물론, 요양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공공 차원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여성경제신문, 2023). 한편 베이비붐 1세대와 뒤따라올 베이비붐 2세대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다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시설 확충보다는 장기적인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하는 근거 기반의 공급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후 준비가 미흡한 베이비붐 1세대를 중심으로는 재가 복지 서비스 수요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요자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과학계에서는 노인 돌봄에 인공 지능을 접목하는 시도와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Loveys, Prina, Axford, Domenec, Weng, Broadbent, Pujari, Jang, Han, and Thiagarajan, 2022). 실제로 노인 대상의 정서적 지지나 인지 기능 훈련 측면에서 인공 지능의 효과가 입증된 가운데(김연미·송미영·양정숙·나현미, 2022), 이를 현행의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도입해 디지털 돌봄 기술을 상용화하고 부족한 인력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김경미·이용재, 2023). 이

로써 가족이 떠안던 부양 부담을 덜고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꾀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포커스 그룹은 베이비붐 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베이비붐 1세대의 대표적 가구 유형인 부부 가구 혹은 자녀 동거 가구가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순자산 6~10분위의 도시 거주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베이비붐 1세대 전체의 맥락과 상황이 담겨있다고 이해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질적 연구를 확장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 기반의 양적 조사를 시도할 수 있고, 이로써 유의성이 밝혀진 내용은 베이비붐 1세대 노인 대상의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가 가능할 것이다. 또 이번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노인인 산업화 세대와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질문으로 추후 산업화 세대 대상의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여 두 세대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인구 집단이 베이비붐 1세대로 채워질 한국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아 보인다.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의 노인 인구가 살아가게 될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세대 성향이 잘 발현된다면 지금까지의 노인 인구가 만들어내었던 사회적 부담이 단순히 그 연장선에서 베이비붐 1세대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양적 자료 기반의 기존 베이비붐 1세대 연구 대부분에서 추구하기 어려웠던 맥락적 이해와 해석을 도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번 연구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겪게 될 일부 신흥공업국 등 여러 국가의 고령 인구 대상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태현 (2016)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6-38호.
- 고용노동부 (2023년 07월 31일) 고용노동부 "(설명) 동아일보, "일하는 노인 매년 늘지만.. 체계적 고용정책 안 보인다" 기사 관련[보도설명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_seq=15332/.
- 김경나·김건엽·남행미 (2016)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서비스이용 연구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0(4): 97-107.
- 김경미·이용재 (2023) "노인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인공지능(AI), ICT활용사례연구" 《AI와 인간사회》 4(1): 55-78.
- 김기향·김용민·정태영 (2013)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료경영학연구》 7(1): 1-12.
- 김미령 (2012) "베이비붐세대의 적응역량이 디지털기기 활용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8: 303-324.
- 김석우·전용주. (2012)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3): 23 - 44.
- 김소희 (2021)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의 행복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591-602.
- 김수봉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실태와 고령친화 산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74: 28.
- 김연미·송미영·양정숙·나현미 (2022) "AI로봇 통합관리프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2): 511-523.
-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조선일보 (2023.7.1.) 《한국 자산의 46% 가진 '파워 실버'... 경제 주무르는 큰손으로》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7/01/JTVNXCRBJRCFTGMLHL7TYJ5PFQ/> 에서 2023.07.06 인출.
- 김정순 (1989)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Health & Nursing (구 간호과학)》 1: 31.
- 김준표·김순은 (2018) "노인의 노화태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결속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38(3): 521-536.
- 김효정·박영숙 (1997)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

- 기본간호학회지》 4(2): 283-300.
- 김희옥 (2011)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질환별 진료비 비교"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YUHSpace.
- 김희정·천혜정 (2016) "1차 베이비붐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간 일 가치관, 여가태도 및 은퇴준비행동 비교" 《여가학연구》 42: 17-41.
- 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노인복지연구》 42: 151-173.
- 남경완 (2008) "대기업 화이트칼라 계층의 '퇴직 후' 정체성 연구 - '현대이벤' 활용 전략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 한양대학교 대학원] HANYANG Repository.
- 남슬아·주소현 (2022) "밀레니얼 세대의 금융지식 및 위험수용성향과 금융자산투자행태" 《Financial Planning Review》 15(2): 23 - 49.
- 남정자 (2005) "우리나라 건강증진평가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99: 108.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1.12.19.) 《베이비붐 세대,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24246/2023.07.01> 인출.
- 롯데멤버스 (2019) 《2020 트렌드픽(TREND PICK)》 롯데멤버스.
- 류근관·전계형 (2013) "취업, 재교육과 전직, 조기은퇴 등 분석을 위한 중첩세대 모형 :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의 분석》 19(2): 66.
- 박영란·홍백의·심우정·부가청 (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박일환·정유석 (2019) "입원 환자 금연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도"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19(3): 128-137.
- 박주희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1-17.
- 방하남·이성균·우석진·김기현·김지경·한국노동연구원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백경미·이기춘 (1996)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HER(Human Ecology Research)》 34(1): 161.
- 변루나·김영숙·현택수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31(4): 315-344.
- 보건복지부(2011) 《건강에 관심 많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충격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01.27.)
- 서영준·손동국·이동현·정승원·정애숙 (2003)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지표

- 개발”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2): 141.
- 서울연구원 (2021) “세대 간 자산 격차 분석: 가계금융보지데이터” 서울연구원 Data insight report 05.
- 선우덕 (201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의식수준” 《보건복지포럼》 174: 19.
- _____·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남찬섭·조한나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 철학적 기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경제신문 (2023.8.2.) 《100만 대군 요양보호사...그런데 시설에선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호소》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28/>에서 2023.08.07 인출
- 유용식 (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2): 738-747.
- 유재남 (2019)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9: 183-200.
- 이석 (2020) “이슈&트렌드: 새로운 소비 권력으로 떠오른 오팔(OPAL) 세대” 서울시50플러스포털 [50+리포트 2020] 19(1): ②.
- 이석구·전소연 (2006) “지역사회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상태와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6(4): 929-947.
- 이성균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노동능력” 《노동리뷰》 37-47.
- 이소정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4: 11.
- 이여봉 (2019)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자녀부양의식 및 가족 관계망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교환이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0(2): 249-264.
- 이원섭 (2014)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795 - 809.
- 조선일보 (2023.5.30.)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쳐 세대'를 아시나요...짠내 나는 60년대생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30/CZYK3LZQWJDLTFY3NEA5HD7LUY/에서 2023.09.12 인출
- 이호길 (2017)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심리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6): 227-243.
- 임정훈·이혁준·이지훈 (2020)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요인: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9): 475-485.
- 장은혜·남석인 (2015) "노인의 4고(苦)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9: 123-151.
- 정경희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
-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 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2018) "베이비부모 가족현황과 지원방향" 《서울시50플러스포털 [50+리포트]》 08호: ②.
- 조경옥·이중섭·박신규 (2011)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 조영태 (2021) 《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북스톤.
- 최선임 (2016)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분석 : 포커스집단 면접 적용"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S-Space.
- 최영준 (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 근거 이론적 접근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3): 353-378.
- 최은영 (2015)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Space@EWha.
- 하주연·고에란·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 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 29(5): 715 - 726.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매뉴얼》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이슈보고서 :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월간 경영계》 380: 32.
- 한혜경 (2011)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복지욕구와 지원체계 연구-미국, 일본 사례 비교연구" 《한국연구재단》.
- 허종호·전선영·오창모·황종남·오주환·조영태 (2017) "The unrealized potential: Cohort effects and age-period-cohort analysis" 《Epidemiology and Health》 39(0): 1-7.
- 홍은실·황덕순·한경미 (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가정과삶의질연구》 19(1): 143 - 158.
- 황남희·김경래·이아영·임정미·박신아·김만희 (2019) "신증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Publications.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 Co.
- Heathcote, G. (2000). Autonomy, health and ageing: transnational perspectiv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5(1), 13-24.
- Kahlke, R. M. (2014). Generic Qualitative Approaches: Pitfalls and Benefits of Methodological Mix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3(1), 37-52.
- Kontis, V., James, B., Colin, M., Guangquan, L., Kyle, F., & Majid, E. (2017).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proje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 *The Lancet*, 389(10076), 1323-1335.
- Lallemand, T., & Rycx, F. (2009). Are Older Workers Harmful for Firm Productivity? *De Economist (Netherlands)*, 157(3), 273-29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Loveys, K., Prina, M., Axford, C., Domènec, O., Weng, W., Broadbent, E., Pujari, S., Hyobum, J., Zee A, Han., & Thiyagarajan, J.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for older people receiving long-term care: a systematic review of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studies. *The Lancet, Healthy Longevity*, 3(4), e286-e297.
- Mannheim, K.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Routledge & Kegan Paul.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Ng, B., & Ho, G. (202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Healthy Aging: Comparative Contexts on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1st Edition 2020)*. Singapore: Springer.
- Thomas, D. R. (2006).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Analyzing Qualitative Evaluation Data. *The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7(2), 237-246.
- United Nations. (2002). *Report of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8-12 April 2002*.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electronic resource]: a gu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ECE. (2015). *Active Ageing Index 2014*. UNECE Analytical Report.

[2023. 11. 22 접수 | 2024. 01. 26 심사(수정) | 2024. 02. 26 채택]

A Qualitative Study of Old Age Traits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in the Urban Middle and Upper Classes

Lim, Ye Jin · Kim, Dong Ha · Cho, Youngtae · Yoo, Seunghyun · Lee, Changsook · Ha, Jung-Hwa · Ko, Woorim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old age traits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with profound understanding. Based on the framework of active ageing, a focus group total of 49 participants from the urban middle and upper classes' first baby boom generation was conducted for empirical research on their traits in old age. As a result, participants from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demonstrated the potential to differ from the typically perceived passive and dependent image of the old people in various aspects of life. They held an autonomous attitude towards their life in old age and considered self-preparation for ageing as essential. Furthermore, they attributed multiple meanings to economic activities, strengthening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y considered leisure activities not only for participation but also for genuine enjoyment and improvement. Additionally, these individuals actively engaged in health management in their daily lives and expressed a desire to reside in a sanatorium when living alone became challenging, for the well-being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Considering the old age traits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aregiving burden in Korean society may not increase proportionally with the size of the gene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uild social support to facilitate the manifestation of their old age traits, contributing to alleviating future caregiving burden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old population. This study has policy-wise and academic contributions in improving insight into the life and living world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Keywords: First Baby Boom Generation, Old Age Traits, Active Ageing, Focus Group, Urban Middle and Upper Classes

각 행사 프로그램과 발표자료

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 포럼 개최

I. 포스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시 2023년 8월 11일(금) 14:00-16:30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대형강의실(107호)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30-14:00	등록	
14:00-14:15	개회식	
	주최 황지수 서울대 차남찬연구팀 교수 공동주최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경제학부 교수 주최 한동훈 노무부 장관	
14:15-15:15	주제 발표	
	발표1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발표2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 발표3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4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임성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관 서울대학교 연구개발처 교수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15:15-15:30	휴식	
15:3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주최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공동 김지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홍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초청 박 고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태훈 OECD Economist	

주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후원  노무부

II. 행사사진





III. 발표자료(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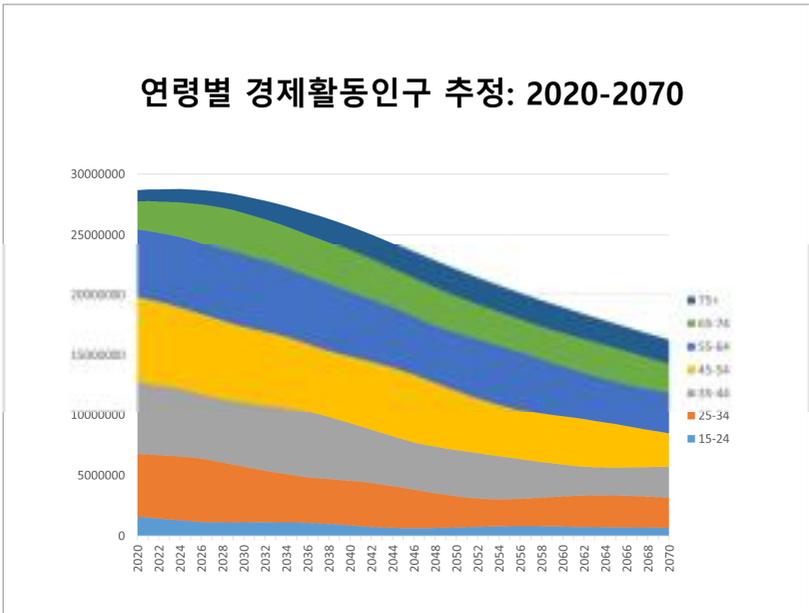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모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1.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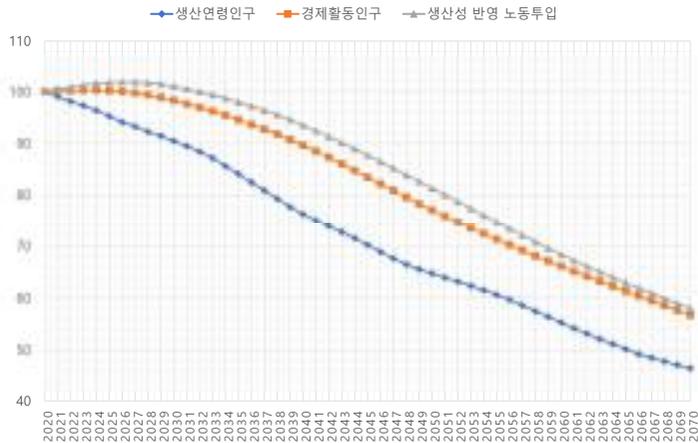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 철 희

전체 연구의 배경 (1)

-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인력수급여건 변화할 것.
 -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까지 현재의 46%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노동인구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
 - 노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음.
-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해 부문별로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향후 약 20년 동안에는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인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문 간, 노동인력 유형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철희 2022).
 - 향후 5~6년 후에는 청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급감하게 될 노동시장 신규 진입인력을 대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철희·권정현·김태훈 2023).
 -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부문의 특정 유형 인력만 부족해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장래 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변화 추계결과 비교 (중위추계 기준, 2020=100)
 2045년 생산연령인구 70.2; 경제활동인구 83.5;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87.7
 2070년 생산연령인구 46.4; 경제활동인구 56.7;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58



전체 연구의 배경 (2)

- 특정부문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 공급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 잠재적인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여성고용 및 장년고용 확대, 인적자본 강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단기적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내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일부 국내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의 유입이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Kim 2021).
 - 반면 국내의 높은 교육수준과 저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력 유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사업체와 내국인 임금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음(Kim, Lee, and Peri 2022).
- 인구 및 산업 변화로 초래하는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면서 내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력 정책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유형별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규모와 외국인 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전체 연구의 배경 (3)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래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정도를 부문별·숙련수준별로 정치하게 전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서로 다른 부문·숙련수준의 노동인력은 대체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분화된 부문 및 숙련 수준별로 장래의 노동수급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래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형별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 및 숙련수준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노동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하게 추정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부문의 경우 외국인 도입 규모 결정에 있어서는 과다 공급을 피하는 목표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
 - 반면,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작은 부문 및 유형의 경우, 외국인 도입 규모 결정에 있어서는 과소 공급을 피하는 목표에 더 큰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음.

전체 연구의 목적과 내용

- 2021년~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각 부문별(산업 및 직업)·유형별(학력별) 노동공급의 변화와 기술 및 산업 변화를 반영한 부문별·유형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전망하여, 장래의 부문별·유형별 노동수급 불균형 규모를 예측.
 - 2026년과 2031년 시점의 각 부문(산업 및 직업) 및 유형(학력)별 노동인력 수급 불균형(인력 부족 혹은 초과) 규모를 추정함.
-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의 부문별·유형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특정한 규모의 외국인력 유입이 각 부문 및 유형의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추정함.
 - 외국인 유입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부문 및 인력 유형을 식별함.
- 장래의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추정결과와 외국인력 유입의 노동시장 영향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부문별·유형별 외국인력 적정 도입 규모 산출.
 - 각 부문 및 유형별로 장래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외국인 도입 규모를 산출함.

2021년~2031년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분석 개요

- 2021년~2031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구 전망.
- 2021년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취업률을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별 취업인구 전망.
- 2021년~2031년 기간에 대해 인구변화로 인한 각 부문(산업 및 직업)의 연령별·학력별 취업인구 규모 변화를 추정.
 - 인구변화 이외에는 현재의 노동시장의 동학적인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인구변화에 의한 내생적인 노동시장 변화 무시 → 경직적인 노동시장 가정
- 전체 및 학력(고학력, 저학력)별로 각 부문(산업, 직업, 산업-직업)에 대해 인구변화로 인한 취업인구 변화(노동공급 변화) 전망.

장래 학력별 인구 추계 (1)

-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자료 이용.
- 학력을 1) 대졸, 2) 고졸, 3) 고졸 미만으로 구분.
- 2021년 현재 30세 이상인 출생코호트의 경우, 2021년의 성별·출생코호트별 학력분포가 유지된다고 가정.
- 2021년 20~29세 출생코호트의 경우 20세 때의 대학입학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 20~30세 대졸 비율을 추정.

$$G_y^a = \alpha + \beta E_y^{20} + \epsilon_y$$

- 여기에서 a는 연령, y는 출생연도, G는 대졸 비율, E_y^{20} 은 20세 대학 재학 비율을 나타냄.
- 2020년 30세 미만이었던 출생코호트는 30세 이후 대졸 비율 유지된다고 가정

장래 학력별 인구 추계 (2)

- 2021년 19세 이하였던 출생코호트는 같은 해 20세였던 출생코호트와 동일한 연령-대졸비율 궤적 가정.
- 2021년 20~29세 이상 출생코호트의 30세까지의 고졸미만 비율은 2020년 관찰된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 2021년 20~29세 이상 출생코호트의 30세까지의 고졸비율은 대졸 비율과 고졸 미만 비율의 잔차로 추정.
- 장래의 15~19세 인구 고졸미만 및 고졸 비율은 2001년 관찰된 값이 유지된다고 가정.

총 취업인구 추정

- 2021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취업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장래 취업인구 추정.

$$LF_t = \sum_e \sum_s \sum_c \overline{E^{e,s,c}} P_t^{e,s,c}$$

a: 연령; s: 성별, e: 학력, t: 연도

E: 2021년 성별·연령별·학력별 취업률

P: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장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

부문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방법 (1)

- 2014~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동학과 관련된 파라미터들 추정(인구 이외에 현재 노동시장 수급여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

- 코로나19의 단기적인 영향 제거 위해 2019년까지의 데이터 이용
- 아래에는 산업별 분석 방법 제시: 직업 및 산업-직업 결합 분석 방법은 유사
- 산업잔존확률(industry survival rate): 특정시기(t), 특정산업(j)에 고용된 특정 연령(a)과 학력(k)을 가진 고용인력이 다음 시기(t+1)에도 동일한 산업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

$$S_a^{k,j,t} = (1 - d_a^{k,j,t}) \times (1 + m_a^{k,j,t}) = N_{a+1}^{k,j,t+1} / N_a^{k,j,t}$$

d: 사망률 + 순 해외이주 비율
 m: 특정 산업으로의 순 진입률
 N: 고용인력의 수

- 노동시장 진입인력이 특정 산업(j)로 진입하는 비율 (θ)
- 노동시장 진입연령에 있는 인구의 고용률 (E₀)

부문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방법 (2)

- 이상의 파라미터(θ₀, E₀, S₀)와 현재의 산업·연령별 고용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이용하여 장래의 산업·연령별 고용인구 추정

- 각 산업에 진입하는 노동시장진입연령 연구:

$$N_0^{k,j,t} = \theta_0^{k,j} E_0^k P_0^{k,t}$$

- t+1기에 산업 j에 고용된 연령 a+1 취업연구:

$$N_{a+1}^{k,j,t+1} = S_a^{k,j} N_0^{k,j,t}$$

- 실제의 추정에서는 5년 단위 연령구간 이용,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20~24세로 가정:

$$N_{20-24}^{k,j,t+5} = S_{20-24}^{k,j} \theta_{20-24}^{k,j} E_{20-24}^k P_{20-24}^{k,t}$$

$$N_a^{k,j,t+v} = \prod_{s=0}^{v-1} S_{a-s}^{k,j} \theta_0^{k,j} E_0^k P_0^{k,t}$$

부문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방법 (3)

- 인구변화 전망은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를 이용.
- 각 연도 각 산업/직업의 전체 및 특성별 취업인구의 합이 2021년의 인구특성별 취업률과 2021년의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전망한 전체 및 특성별 취업인구의 합과 동일해지도록 장래 취업인력 추정치 조정
 - 각 부문의 상대적인 노동공급 변화 비교.
- 산업/직업 재분류: 지나치게 취업인구가 작은 일부 유사한 산업들을 통합.
 - 산업은 58개 산업군, 직업은 40개 직업군으로 분류.
 - 취업인구가 적어서 특정한 연령층 취업자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부문잔존확률을 추정하기 어려움.

부문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방법 (4)

- 산업-직업 결합 분석: 58개 산업군을 4개 직업군으로 구분:
 - ① 전문직군: 1. 관리자, 2. 전문가
 - ② 준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 5. 판매,
 - ③ 숙련직: 6. 농림/어업 숙련, 7. 기능원
 - ④ 비전문직: 8. 장치, 기계조작, 조립, 9. 단순노무 종사자
- 일부 산업-직업군의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산업 전체에 대해 추정한 파라미터를 적용.
- 각 산업 내 4개 직업군 노동공급 변화의 합이 해당 산업 노동공급 변화와 같아지도록 조정.
 - 산업-직업 결합분석의 결과는 각 산업 내 숙련수준별 인력 비중 변화 산출에 이용.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전체, 2021-2031년)

순위	산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95,810	931,818	880,033	-263,992	-51,785	-315,777
2	전문직별 중사업	1,339,964	1,210,422	1,117,613	-129,542	-92,809	-222,351
3	소매업, 자동차 제외	2,012,812	1,879,206	1,799,127	-133,606	-80,079	-213,685
4	음식점 및 주점업	1,897,525	1,884,544	1,732,266	-12,981	-152,278	-165,259
5	농림업	1,177,451	1,064,814	1,065,556	-112,637	742	-111,895
6	사업지원 서비스업	981,705	901,980	880,662	-79,725	-21,318	-101,043
7	기타 서비스업	618,999	563,942	523,917	-55,057	-40,025	-95,082
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8,010	409,576	395,045	-68,434	-14,531	-82,965
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48,059	300,373	283,358	-47,686	-17,015	-64,701
10	보험 및 연금업	289,427	239,444	233,609	-49,983	-5,835	-55,818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3,287	234,600	220,380	-38,687	-14,220	-52,907
12	종업 건설업	779,056	761,949	727,000	-17,107	-34,949	-52,056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3,964	115,741	108,600	-38,223	-7,141	-45,364
14	식품품 제조업	399,248	383,466	357,126	-15,782	-26,340	-42,122
1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64,551	339,334	328,063	-25,217	-11,271	-36,488
16	1차 금속 제조업	150,354	119,852	114,538	-30,502	-5,314	-35,816
17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가죽·가방·신발 제조업	202,367	183,411	172,063	-18,956	-11,348	-30,304
18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98,208	289,456	269,484	-8,752	-19,972	-28,724
1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5,879	40,099	37,558	-15,780	-2,541	-18,321
20	전기장비 제조업	265,921	262,569	249,187	-3,352	-13,382	-16,734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전체, 2021-2031년)

순위	산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2,663	123,622	116,411	-9,041	-7,211	-16,252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6,373	64,167	60,403	-12,206	-3,764	-15,970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6,301	64,734	61,957	-11,567	-2,777	-14,344
24	보건업	1,120,667	1,156,968	1,106,604	36,301	-50,364	-14,063
25	어업	76,113	67,524	63,658	-8,589	-3,866	-12,455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7,749	111,598	105,379	-6,151	-6,219	-12,370
27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	168,958	165,977	158,000	-2,981	-7,977	-10,958
2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5,975	58,909	57,578	-7,066	-1,331	-8,39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6,792	480,258	459,378	13,466	-20,880	-7,414
30	목재·나무제품·가구 제조업	110,067	111,961	103,979	1,894	-7,982	-6,088
31	기타 제품 제조업	96,165	92,137	90,200	-4,028	-1,937	-5,965
32	금융업	304,526	306,726	301,848	2,200	-4,878	-2,678
33	연구개발업	244,532	259,689	243,678	15,157	-16,011	-854
34	방송통신업	187,605	188,335	187,093	730	-1,242	-512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292,332	304,022	294,808	11,690	-9,214	2,476
36	음료·담배 제조업	29,616	35,068	32,434	5,452	-2,634	2,818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6,054	455,200	429,648	29,146	-25,552	3,594
3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107,303	1,131,653	1,112,118	24,350	-19,535	4,815
39	수상·항공 운송업	64,016	71,964	70,928	7,948	-1,036	6,912
4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78,093	299,156	287,159	21,063	-11,997	9,066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전체, 2021-2031년)

순위	산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41	임대업, 부동산 제외	115,356	133,223	125,297	17,867	-7,926	9,941
4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9,038	164,398	159,029	15,360	-5,369	9,991
4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37,551	152,862	148,678	15,311	-4,184	11,127
4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7,220	157,696	151,849	20,476	-5,847	14,629
45	광업	10,641	32,640	31,407	21,999	-1,233	20,766
46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화학물질·화학제품·의료 용물질·의약품 제조업	287,952	327,950	312,053	39,998	-15,897	24,101
47	숙박업	121,505	155,131	154,266	33,626	-865	32,761
4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94,674	262,867	246,286	68,193	-16,581	51,612
49	협회 및 단체	259,885	296,692	314,758	36,807	18,066	54,873
50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	514,517	595,066	575,578	80,549	-19,488	61,061
5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36,217	373,145	399,089	36,928	25,944	62,872
52	전문 서비스업	499,891	582,935	564,133	83,044	-18,802	64,242
53	정보기술 서비스업	222,155	287,532	287,119	65,377	-413	64,964
5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7,834	256,438	257,551	78,604	1,113	79,717
55	교육 서비스업	1,851,965	1,947,102	1,965,478	95,137	18,376	113,513
56	사회복지 서비스업	1,320,177	1,416,813	1,441,111	96,636	24,298	120,934
5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외국기관	1,082,347	1,220,767	1,206,146	138,420	-14,621	123,799
58	부동산업	521,464	655,434	692,073	133,970	36,639	170,609

2031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산업

	전체	고하려	지하려
전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연구개발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문직별 공사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농림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광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	종합 건설업
	보험 및 연금업	음표·담배 제조업	보건업
20~34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교육 서비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보건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보건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광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기장비 제조업

2031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산업

	전체	고학력	저학력
35~54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문직별 공사업	1차 금속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보험 및 연금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종합 건설업	종합 건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농림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농림업
	기타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합 건설업
55~74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유류·담배 제조업	농림업
	농림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서비스업	어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종합 건설업
	어업	목재·나무제품·가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목재·나무제품·가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직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전체, 2021-2031년)

순위	직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292,161	1,111,285	1,032,919	-180,876	-78,366	-259,242
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508,734	1,448,585	1,320,130	-60,149	-128,455	-188,604
3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575,818	420,272	398,445	-155,546	-21,827	-177,373
4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418,557	307,994	274,569	-110,563	-33,425	-143,988
5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10,050	629,683	568,895	-80,367	-60,788	-141,155
6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448,687	379,187	353,340	-69,500	-25,847	-95,347
7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004,976	958,324	924,192	-46,652	-34,132	-80,784
8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487,122	442,305	407,974	-44,817	-34,331	-79,148
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451,134	398,755	378,492	-52,379	-20,263	-72,642
10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357,589	302,114	288,361	-55,475	-13,753	-69,228
11	목재·가구·악기·간판·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271,733	220,694	202,919	-51,039	-17,775	-68,814
12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650,253	637,192	593,661	-13,061	-43,531	-56,592
13	기타 기능 관련직	211,361	174,136	161,436	-37,225	-12,700	-49,925
14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434,108	414,259	385,339	-19,849	-28,920	-48,769
15	영업직	635,743	607,024	588,248	-28,719	-18,776	-47,495
16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73,397	143,017	127,141	-30,380	-15,876	-46,256
17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186,601	161,588	146,124	-25,013	-15,464	-40,477
18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412,565	377,039	378,272	-35,526	1,233	-34,293
19	전기·전자·정보통신·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427,798	411,667	395,963	-16,131	-15,704	-31,835
20	농림·축산·수산업	1,125,887	1,087,668	1,095,127	-38,219	7,459	-30,760

직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전체, 2021-2031년)

순위	직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21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207,839	193,233	177,759	-14,606	-15,474	-30,080
22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09,153	292,107	283,736	-17,046	-8,371	-25,417
23	상하수도·재활용처리·목재·인쇄·기타 기계 조작직	179,796	162,846	157,094	-16,950	-5,752	-22,702
24	어업 숙련직	59,332	46,827	44,113	-12,505	-2,714	-15,219
25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3,850	83,554	73,027	-296	-10,527	-10,823
26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656,205	1,704,826	1,649,418	48,621	-55,408	-6,787
27	금융 사무직	293,326	302,692	290,003	9,366	-12,689	-3,323
28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134,149	1,127,579	1,137,133	-6,570	9,554	2,984
29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71,625	82,198	75,998	10,573	-6,200	4,373
3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18,052	231,182	224,759	13,130	-6,423	6,707
3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79,574	210,299	190,441	30,725	-19,858	10,867
32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85,873	422,545	402,891	36,672	-19,654	17,018
3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30,889	777,879	752,283	46,990	-25,596	21,394
34	관리직	398,371	389,044	448,885	-9,327	59,841	50,514
35	법률 및 감사 사무직	79,995	137,433	132,749	57,438	-4,684	52,754
36	과학·정보통신·공학 전문가 및 관련직	1,581,832	1,636,629	1,645,587	54,797	8,958	63,755
37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51,845	1,666,026	1,649,358	114,181	-16,668	97,513
38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946,632	4,206,342	4,111,622	259,710	-94,720	164,990
39	법률·행정·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601,639	759,983	800,241	158,344	40,258	198,602
40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10,620	1,618,922	1,601,687	408,302	-17,235	391,067

2031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직업

	전체	고학력	저학력
전체	운전 및 운송 관련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어업 숙련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농림축산 숙련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20~34세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과학·정보통신·공학 전문가 및 관련직	과학·정보통신·공학 전문가 및 관련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영업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031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직업

	전체	고학력	저학력
35~54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관리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운송 관련 단순 노동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운송 관련 단순 노동직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업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영업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동직	운송 관련 단순 노동직
	제조 관련 단순 노동직	금융 및 비금융 관련 기계 조작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기타 기능 관련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정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동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동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동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제조 관련 단순 노동직
55~74세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제조 관련 단순 노동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어업 숙련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제조 관련 단순 노동직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기타 기능 관련직	금융 및 비금융 관련 기계 조작직	농림축산 숙련직
	어업 숙련직	기타 기능 관련직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동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제조 관련 단순 노동직
	금융 및 비금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동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가판·금융·성형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각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취업인력 규모 (전체, 2021-2031년) - 감소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95,810	931,818	880,033	-263,992	-51,785	-315,777
	전문직군	15,814	12,779	13,412	-3,035	633	-2,402
	준전문직군	102,069	113,841	112,624	11,772	-1,217	10,555
	숙련직군	26,960	29,836	28,555	2,876	-1,281	1,595
2	비전문직군	1,050,967	775,362	725,442	-275,605	-49,920	-325,525
	전문직군	1,339,964	1,210,422	1,117,613	-129,542	-92,809	-222,351
	전문직군	98,194	83,554	84,253	-14,640	699	-13,941
	준전문직군	166,481	178,334	174,002	11,853	-4,332	7,521
3	숙련직군	804,271	719,763	651,728	-84,508	-68,035	-152,543
	비전문직군	271,018	228,771	207,629	-42,247	-21,142	-63,389
	스매업; 자동차 제외	2,012,812	1,879,206	1,799,127	-133,606	-80,079	-213,685
	전문직군	104,066	135,049	135,705	30,983	656	31,639
4	준전문직군	1,628,223	1,488,104	1,422,938	-140,119	-65,166	-205,285
	숙련직군	53,079	51,823	49,974	-1,256	-1,849	-3,105
	비전문직군	227,444	204,231	190,510	-23,213	-13,721	-36,934
	음식점 및 주점업	1,897,525	1,884,544	1,732,266	-12,981	-152,278	-165,259
5	전문직군	18,349	23,033	25,051	4,684	2,018	6,702
	준전문직군	1,520,234	1,350,768	1,262,228	-169,466	-88,540	-258,006
	숙련직군	39,409	31,355	28,281	-8,054	-3,074	-11,128
	비전문직군	319,533	479,389	416,707	159,856	-62,682	97,174
6	농림업	1,177,451	1,064,814	1,065,556	-112,637	742	-111,895
	전문직군	1,650	2,473	2,722	823	249	1,072
	준전문직군	10,312	19,478	20,983	9,166	1,505	10,671
	숙련직군	1,102,506	1,002,549	1,008,507	-99,957	5,958	-93,999
7	비전문직군	62,983	40,314	33,343	-22,669	-6,971	-29,640
	사업지원 서비스업	981,705	901,980	880,662	-79,725	-21,318	-101,043
	전문직군	50,479	50,933	52,686	454	1,753	2,207
	준전문직군	332,877	365,534	345,955	32,657	-19,579	13,078
7	숙련직군	52,334	48,350	53,732	-3,984	5,382	1,398
	비전문직군	546,015	437,163	428,289	-108,852	-8,874	-117,726
	기타 서비스업	618,999	563,942	523,917	-55,057	-40,025	-95,082
	전문직군	9,738	6,485	6,694	-3,253	209	-3,044
7	준전문직군	412,174	430,514	401,662	18,340	-28,852	-10,512
	숙련직군	5,477	2,947	2,794	-2,480	-148	-2,628
	비전문직군	191,665	124,000	112,767	-67,665	-11,233	-78,898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취업인력 규모 (고학력, 2021-2031년) - 감소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1	연구개발업	228,692	199,381	196,896	-29,311	-2,485	-31,796
	전문직군	198,921	167,416	167,021	-31,505	-395	-31,900
	준전문직군	26,150	24,534	22,867	-1,616	-1,667	-3,283
	숙련직군	1,182	1,487	1,388	305	-99	206
	비전문직군	2,439	5,944	5,621	3,505	-323	3,182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5,918	284,581	282,060	-11,337	-2,521	-13,858
	전문직군	123,903	92,282	96,163	-31,621	3,881	-27,740
	준전문직군	84,728	124,458	119,622	39,730	-4,836	34,894
	숙련직군	18,063	18,482	17,081	419	-1,401	-982
	비전문직군	69,224	49,360	49,194	-19,864	-166	-20,030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6,344	44,142	44,849	-12,202	707	-11,495
	전문직군	16,109	10,323	11,052	-5,786	729	-5,057
	준전문직군	20,615	13,581	13,268	-7,034	-313	-7,347
	숙련직군	6,534	6,371	6,501	-163	130	-33
	비전문직군	13,087	13,866	14,028	779	162	941
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8,319	152,882	156,929	-15,437	4,047	-11,390
	전문직군	14,603	7,703	8,533	-6,900	830	-6,070
	준전문직군	95,759	116,829	120,887	21,070	4,058	25,128
	숙련직군	8,738	3,925	4,095	-4,813	170	-4,643
	비전문직군	49,219	24,425	23,414	-24,794	-1,011	-25,805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1,060	60,356	62,353	-10,704	1,997	-8,707
	전문직군	21,222	15,075	15,907	-6,147	832	-5,315
	준전문직군	21,401	22,228	22,422	827	194	1,021
	숙련직군	17,858	14,770	15,539	-3,088	769	-2,319
	비전문직군	10,580	8,283	8,485	-2,297	202	-2,095
6	1차 금속 제조업	75,152	63,427	66,560	-11,725	3,133	-8,592
	전문직군	10,861	3,685	4,658	-7,176	973	-6,203
	준전문직군	26,767	8,452	10,604	-18,315	2,152	-16,163
	숙련직군	6,968	1,920	2,422	-5,048	502	-4,546
	비전문직군	30,555	49,770	48,876	18,815	-494	18,321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031	15,441	15,903	-7,590	462	-7,128
	전문직군	1,229	282	282	-941	0	-941
	준전문직군	3,397	3,436	3,332	39	-104	-65
	숙련직군	17,688	11,078	11,527	-6,610	449	-6,161
	비전문직군	717	645	762	-72	117	45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취업인력 규모 (저학력, 2021-2031년) - 감소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21	2026	2031	2021-2026 변화분	2026-2031 변화분	2021-2031 변화분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79,909	637,827	552,133	-242,082	-85,694	-327,776
	전문직군	2,701	1,426	1,151	-1,275	-275	-1,550
	준전문직군	38,536	37,604	32,456	-932	-5,148	-6,080
	숙련직군	10,928	10,205	8,232	-723	-1,973	-2,696
	비전문직군	827,744	588,592	510,295	-239,152	-78,297	-317,449
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156,516	991,413	863,714	-165,103	-127,699	-292,802
	전문직군	6,930	5,997	5,286	-933	-711	-1,644
	준전문직군	949,146	812,181	710,277	-136,965	-101,904	-238,869
	숙련직군	33,361	31,905	27,292	-1,456	-4,613	-6,069
	비전문직군	167,079	141,331	120,859	-25,748	-20,472	-46,220
3	제조업별 공사업	880,450	737,640	620,352	-150,002	-117,296	-260,090
	전문직군	17,542	13,967	11,581	-3,575	-2,386	-5,961
	준전문직군	66,986	68,165	58,744	1,179	-9,421	-8,242
	숙련직군	577,922	486,401	405,986	-91,521	-80,415	-171,936
	비전문직군	226,000	169,115	144,041	-56,885	-25,074	-81,959
4	음식점 및 주점업	1,336,634	1,305,905	1,127,442	-30,729	-178,463	-209,192
	전문직군	3,829	3,720	3,189	-109	-531	-640
	준전문직군	1,043,486	880,480	762,076	-163,006	-118,404	-281,410
	숙련직군	17,633	15,068	12,997	-2,565	-2,071	-4,636
	비전문직군	271,686	406,637	349,180	134,951	-57,457	77,494
5	농림업	999,377	852,593	809,444	-146,784	-43,149	-189,933
	전문직군	311	228	182	-83	-46	-129
	준전문직군	3,535	2,717	2,296	-818	-421	-1,239
	숙련직군	937,821	811,459	776,042	-126,362	-35,417	-161,779
	비전문직군	57,710	38,188	30,924	-19,522	-7,264	-26,786
6	사업지원 서비스업	653,648	524,323	475,011	-129,325	-49,312	-178,637
	전문직군	6,291	6,424	5,589	133	-835	-702
	준전문직군	147,789	123,588	105,357	-24,201	-18,231	-42,432
	숙련직군	40,273	20,179	17,854	-20,094	-2,325	-22,419
	비전문직군	459,295	374,132	346,211	-65,163	-27,921	-113,084
7	기타 서비스업	443,081	369,772	324,193	-73,309	-45,579	-118,888
	전문직군	4,623	2,091	1,735	-2,532	-356	-2,888
	준전문직군	274,920	263,125	232,978	-11,795	-30,147	-41,942
	숙련직군	4,848	2,463	2,270	-2,385	-193	-2,578
	비전문직군	158,690	102,092	87,211	-56,598	-14,881	-71,479

III. 발표자료(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엄상민 교수)

2. 산업·기술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부문별·유형별 노동수요 전망

엄 상 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산업·기술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별·유형별 노동수요 전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엄상민

분석 배경 및 목적

- 기술변화·인구변화 등으로 부문별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의 심화 우려
 - 기술발전은 직업 및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를 야기
 - 최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대두,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
 - 가파른 출생 감소·인구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여건도 빠르게 변화
- 최근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부문별 노동수요를 전망할 필요
 - 경제전체 전망과 일관되면서도 부문별 이질성을 유연하게 반영
 - 최근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야기한 구조적 변화에 주목
 - 산업부문간, 직업부문간, 숙련정도간 불완전 대체성에 주목

모형 구축

- 주어진 경제전체 자본(K) 및 노동(L), 기술(A, M, B) 하에서 부문간 노동 배분이 결정

> 학력별 근로자(s) → 다양한 직업(j) → 다양한 산업(i)

> $Y = Y \left(Y_i \left(A_i, Z_i \left(B_s, S_i(M_j, L_{ij}^s), U_i(M_j, L_{ij}^u) \right) \right) \right)$ (내부 함수형태)

> $K = \sum_i K_i, L^S = \sum_i \sum_j L_{ij}^S, L^U = \sum_i \sum_j L_{ij}^U$



- 부문간 노동수요 배분에 영향을 주는 기술변화 등은 산업(A_i), 직업(M_j), 학력(B_s)에 편향된 생산성 변화

모수 설정

- 30개 산업, 8개 직업(국민계정,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간, 직업간 대체탄력성은 외부자료로 별도 추정
- 이외는 모형에서의 적률과 데이터의 적률간 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Calibration
 - > 가중치 모수들은 2013년 산업, 직업별 고용 비중 등을 타겟하여 설정
 - > A_i 는 각 년도의 산업별 고용비중, M_j 는 각 년도의 직업별 고용비중, B_s 는 경제전체 숙련근로자 대비 비숙련 근로자 비율 등을 타겟
 - >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η)은 산업별 자본동학을 타겟
 - > 산업별 숙련-비숙련간 대체탄력성(ρ_i)은 산업별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2013-21년간 변화를 타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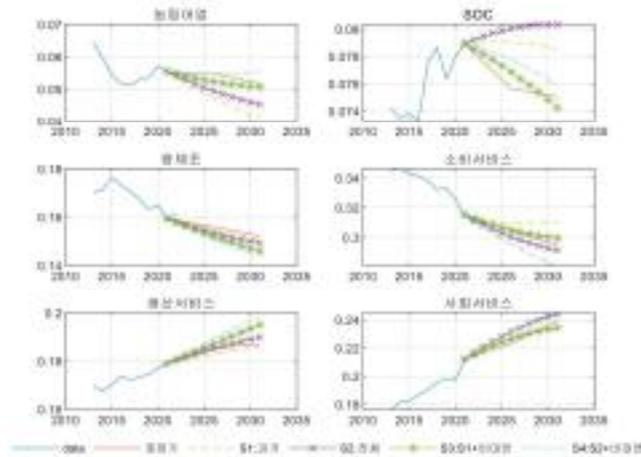
[모수추정결과](#)
[모형적합도](#)

전망 시나리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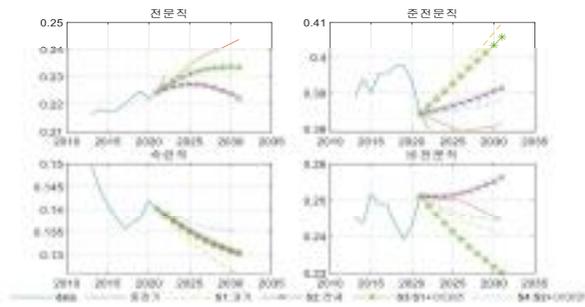
- 경제 전체 중장기 요소 전망
 - 숙련별 노동총량(L^S, L^U)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공급
 - 자본(K)은 2021년 투자율에 영구재고법 반영(KDI 장기경제전망 수준)
- 부문별 생산성 변화(A, M, B): 과거 추세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 다만 최근 팬데믹 영향을 고려
 - 팬데믹 기간 변화도 추세에 반영 vs 팬데믹 자체는 일시적 충격이지만 CBTC 가속
 - CBTC(대면직무 편향 기술변화)?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비중 낮은 업무의 생산성 증가가 더 빨라질 가능성
 -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비중 낮은 직무의 비용 크게 증대 → 대면 업무 관련 기술발전 빨라질 가능성 고려(O2O 거래 급증, 키오스크, 배달앱, 원격의료, 스마트 금융, 온라인 교육 등)

	2013-2019 추세	2013-2021 추세
CBTC 미반영	시나리오1	시나리오2
CBTC 반영	시나리오3	시나리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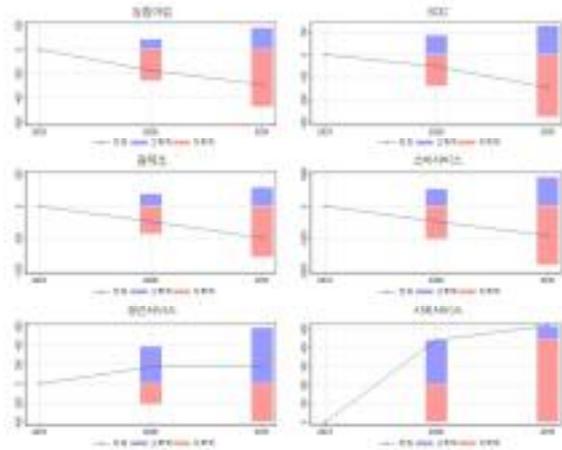
전망 시나리오별 산업별 고용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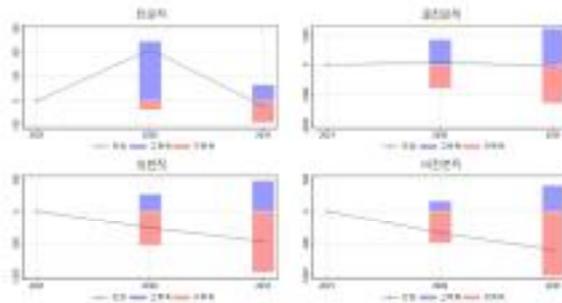
전망 시나리오별 직업별 고용비중



산업별 학력별 고용변화



직업별 학력별 고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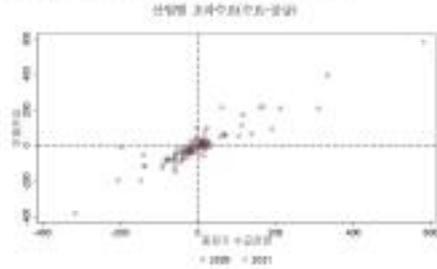


최종 전망 결과 제시방안

- 모형의 전망 결과는 고용정보원 중장기 수급전망에서의 부문내 세부 분류 비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
 - 대안으로 모형부문내 세부 부문 비중이 2021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과 큰 차이는 없음(상관관계 0.96)
- 최종적으로는 전체 추세 반영 방식(시나리오2)과 과거 추세에 CBTC를 반영한 방식(시나리오3)의 평균값 제시
 - 각 시나리오에서 전망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초과 수요 측면에서 각 시나리오간 상관관계도 매우 높음
 - 중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고학력 중심), 보건업(고학력, 저학력 모두) 등
 - 증가율로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고숙련 중심), 수도업(고숙련 중심), 사회복지서비스업(고숙련 중심), 창작·예술(저숙련 중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고숙련, 저숙련 모두)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참고> 중장기 수급전망과 모형 전망

- 고용정보원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노동수요는 개별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에 비추어 필요한 부문별 노동수요를 전망
 - > 개별 산업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우리의 전망방식은 경제전체 생산요소 전망 및 부문별 생산성 추세를 바탕으로 부문별 인력배분을 전망
 - > 경제 전체 흐름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미치는 부문별 상호 작용을 비교적 쉽게 반영할 수 있음
- 어느 하나의 방식이 다른 하나를 대체하기보다 불확실한 노동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상호 보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



모형의 함수 형태 [\(go back\)](#)

$$Y = Y \left(A_i \left(Z_i \left(B_s S_i (M_j, L_{ij}^s), U_i (M_j, L_{ij}^u) \right) \right) \right)$$

$$K = \sum_i K_i, L^s = \sum_i \sum_j L_{ij}^s, L^u = \sum_i \sum_j L_{ij}^u$$

⇒

$$Y = \left(\sum_i \gamma_i^\epsilon Y_i^\epsilon \right)^{\frac{\epsilon}{\epsilon-1}}$$

$$Y_i = A_i \left(\alpha_i^\eta K_i^{\frac{\eta-1}{\eta}} + (1 - \alpha_i)^\eta Z_i^{\frac{\eta-1}{\eta}} \right)^{\frac{\eta}{\eta-1}}$$

$$Z_i = \left(v_i^{\frac{1}{\rho_i}} (B_s S_i)^{\frac{\rho_i-1}{\rho_i}} + (1 - v_i)^{\frac{1}{\rho_i}} U_i^{\frac{\rho_i-1}{\rho_i}} \right)^{\frac{\rho_i}{\rho_i-1}}$$

$$S_i = \left(\sum_j \omega_{ij}^s \frac{1}{\sigma} (M_j L_{ij}^s)^{\frac{\sigma-1}{\sigma}} \right)^{\frac{\sigma}{\sigma-1}}, U_i = \left(\sum_j \omega_{ij}^u \frac{1}{\sigma} (M_j L_{ij}^u)^{\frac{\sigma-1}{\sigma}} \right)^{\frac{\sigma}{\sigma-1}}$$

산업, 직업, 자본-노동 대체탄력성 (go back)

- 모형의 1계 조건으로부터 아래 식을 추정한 후 $\sigma = 1 - \frac{1}{\epsilon}$ 으로 계산

$$\ln(y_1 Y_1 / y_2 Y_2) = \alpha_1 + \theta \ln(y_2 / y_1) + \delta_1 + u_{11}$$

- 유사하게 아래 식을 추정하여 $\sigma = 1 - \frac{1}{\epsilon}$ 로 계산

$$\ln(w_1 R_1 / w_2 R_2) = \alpha_2 + c \ln(w_2 / w_1) + \gamma_1 + u_{21}$$

- θ 는 모형과 데이터의 자본동학 거리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설정

	산업간 대체탄력성 (ϵ_I)	직업간 대체탄력성 (ϵ_V)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 (ϵ_K)
추정계수	0.5524 (0.2322)	0.3777 (0.1832)	0.5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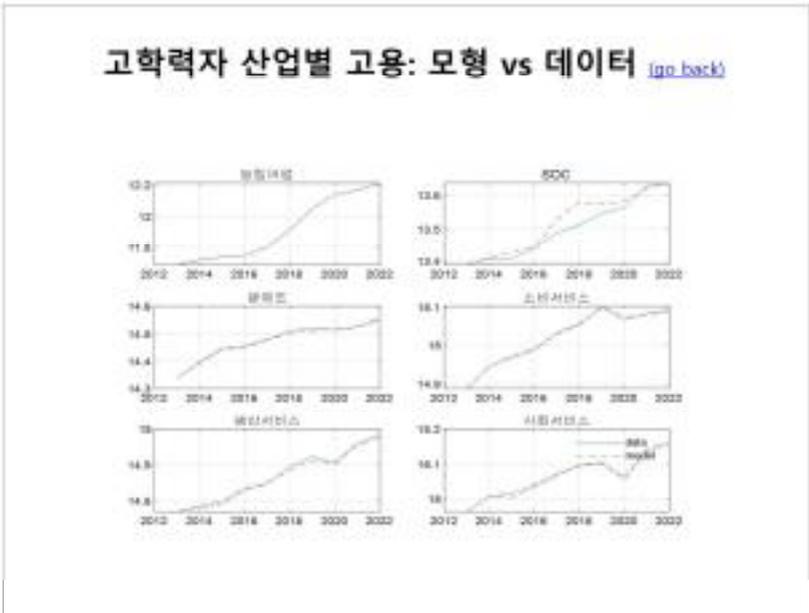
주: θ 는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캘빈스킨델러에 의한 표준편차당 계수로 작업비용 및 자본비용조사를 활용하여 적용

산업별 구조모수 (go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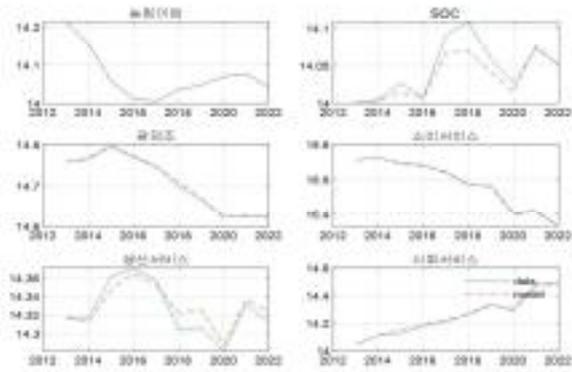
산업구분	산업명	α_1	γ_1	θ	σ
1	농림어업	0.7591	0.0301	0.0794	1.2860
2	광업	0.3443	0.0194	0.0015	0.4344
3	화학제품제조업	0.3857	0.0390	0.2779	0.8009
4	금속기계류제조업	0.6335	0.0496	0.2113	0.7739
5	유기, 플라스틱, 인조섬유제조업	0.6000	0.0489	0.2872	0.8014
6	의약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및 제품 제조업	0.3793	0.0514	0.4408	0.8119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6405	0.0606	0.4033	0.8914
8	기계류제조업	0.6884	0.0792	0.4331	0.9096
9	자동차제조업	0.6773	0.0908	0.3388	0.8308
10	항공기, 우주선 및 우주선 부품제조업	0.6966	0.0481	0.5347	0.7342
11	전기전자제조업	0.6390	0.0390	0.4378	0.8548
12	기타정밀기기제조업	0.6074	0.0314	0.3778	0.8495
13	화학제품제조업	0.3857	0.0496	0.2779	0.8009
14	기타제조업(정밀기기제조업기타제조업)	0.7472	0.0492	0.4344	0.8179
15	의약품, 의약품, 화학제품제조업	0.3793	0.0514	0.4408	0.8119
16	유기, 플라스틱, 인조섬유제조업, 석유제품	0.6000	0.0489	0.2872	0.8014
17	전력업	0.6000	0.0000	0.0000	0.0000
18	가스사업	0.6000	0.0000	0.0000	0.0000
19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0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1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2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3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4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5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6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7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8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29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30	국립공공기업	0.6000	0.0000	0.0000	0.0000

산업·직업별 구조모수 [\(go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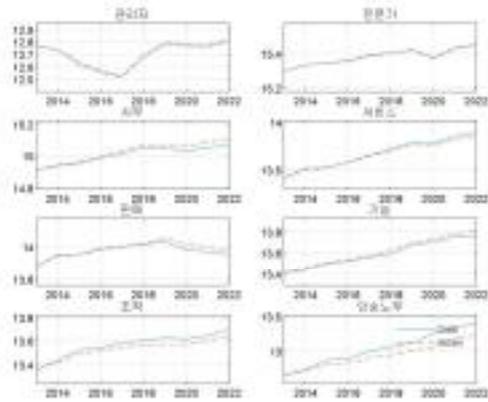
산업·직업군	역대(1)							
	1	2	3	4	5	6	7	8
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	0.013	0.013	0.113	0.009	0.000	0.384	0.331	0.127
3	0.004	0.002	0.059	0.011	0.017	0.323	0.157	0.291
4	0.000	0.012	0.070	0.003	0.016	0.100	0.217	0.254
5	0.006	0.018	0.154	0.006	0.019	0.034	0.267	0.197
6	0.005	0.016	0.145	0.006	0.027	0.130	0.235	0.127
7	0.005	0.016	0.128	0.004	0.015	0.130	0.237	0.062
8	0.008	0.014	0.132	0.001	0.019	0.072	0.264	0.100
9	0.005	0.035	0.151	0.003	0.010	0.045	0.228	0.122
10	0.014	0.036	0.128	0.001	0.021	0.072	0.267	0.100
11	0.006	0.040	0.163	0.002	0.013	0.224	0.498	0.052
12	0.006	0.021	0.108	0.003	0.002	0.207	0.224	0.079
13	0.000	0.020	0.110	0.003	0.025	0.612	0.114	0.119
1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5	0.011	0.008	0.143	0.001	0.004	0.043	0.481	0.288
16	0.006	0.016	0.062	0.000	0.006	0.242	0.126	0.212
17	0.005	0.016	0.090	0.000	0.008	0.072	0.070	0.145
18	0.003	0.003	0.005	0.000	0.070	0.069	0.003	0.219
19	0.004	0.007	0.077	0.005	0.006	0.119	0.742	0.138
20	0.034	0.011	0.317	0.012	0.289	0.005	0.005	0.028
21	0.029	0.267	0.167	0.001	0.010	0.077	0.058	0.415
22	0.006	0.275	0.254	0.016	0.108	0.114	0.038	0.149
2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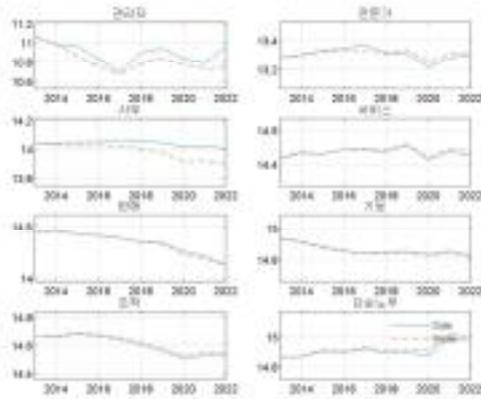
저학력자 산업별 고용: 모형 vs 데이터 [\(go back\)](#)



고학력자 직업별 고용: 모형 vs 데이터 [\(go back\)](#)



저학력자 직업별 고용: 모형 vs 데이터 [\(go back\)](#)



III. 발표자료(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종관 교수)

3.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 종 관

서론

- 인구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장래의 노동공급 / 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력의 장기적 유입은 필연적
- 하지만 외국인력의 유입은 단순히 내국인 노동력의 대체만을 의미하지 않음.
 - 외국인력은 내국인 근로자와 상이한 교육 수준, 문화적 배경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발생
- 외국인력 유입의 대표적인 영향은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 고용효과: 이론적 경로

-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간단한 노동수요-공급 모형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은 노동 공급 증가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노동공급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경로
 - 외국인과 내국인의 불완전한 대체관계(imperfect substitutability)
 - 평균적인 내외국인 간 숙련이 동일X (예: 고숙련 내국인/저숙련 외국인)
 - 내외국인 간의 직무 전문화(task specialization)
 - 외국인력은 단순반복 직무에 비교우위를 가지지만, 언어능력은 떨어짐.
 - 따라서 외국인력 증가로 내국인은 의사소통 관련 직무로 이동
 - 자본-숙련 보완성 / 생산성 향상
 - 내생적 기술변화로 생산성 향상 → 지역 소비 증가 → 서비스 고용 ↑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 고용효과 추정

- 정책적 의미에서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 고용효과 추정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총효과(Total Effect)에 근접한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지역노동시장 단위의 접근
 - 특정 부문 외국인 유입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가능
 -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외국인의 지역 거주로 인한 소비 효과
-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총효과(Total Effect)가 작음을 보고하지만, 세부적인 부문별로는 상이한 효과가 나타남.
 - 부정적 고용효과 및 긍정적 고용효과가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남.

분석자료

- 2013~2019년 162개 지역별 외국인력 유입의 차이를 이용, 외국인력이 많이 유입된 지역의 내국인 고용 변화를 관찰
 - 지역별 외국인 유입: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2013~2019년)
 - 지역별 고용변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2013~2019년)

<시군별 외국인 수 및 외국인 유입 상위 10개 지역>

순위	지역	외국인수 (2019년)	지역	외국인 유입 (2013-2019년)	지역	인구대비 유입 (2013-2019년)
1	서울특별시	469,882	서울특별시	78,452	음성군	0.223
2	인천광역시	140,956	창원시	71,870	진도군	0.153
3	안산시	112,259	인천광역시	56,303	김포시	0.133
4	창원시	99,596	청주시	48,428	아산시	0.129
5	화성시	89,526	화성시	42,984	세종특별자치시	0.121
6	부산광역시	84,952	안산시	40,546	화성시	0.119
7	수원시	72,587	수원시	31,285	금산군	0.114
8	청주시	63,506	아산시	26,054	안성시	0.111
9	대구광역시	60,474	광주광역시	25,201	전천군	0.111
10	시흥시	59,589	부산광역시	25,200	고성군(강원)	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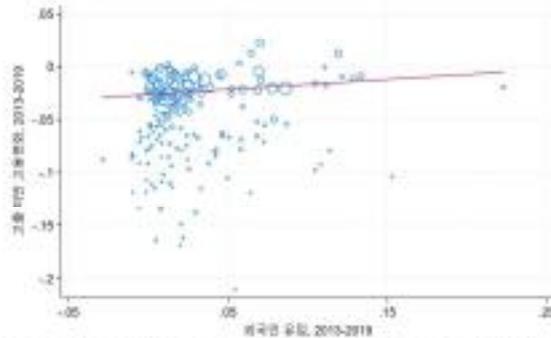
분석방법

$$\frac{\Delta N_t}{L_{t,2011}} = \beta \frac{\Delta L_t}{L_{t,2011}} + \delta X_t + \eta_t + \Delta \epsilon_t$$

-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각각 내국인 고용과 외국인력의 2013~2019년 사이의 변화를 의미
 - 지역의 크기로 인한 규모효과(scale effect)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로 표준화
- 통제변수: 로그 인구, 대졸자 인구비중, 제조업 고용비중, 농업 고용비중, 여성인구 비중, 청년인구 (16~29세) 비중, 고령인구 비중(60~65세 이상), 서울로부터의 거리, 인구증가율, 노동수요 충격, 로봇침투율
- 추정치 β 는 외국인 1명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내국인 취업자 수를 의미

단순 상관관계

- 외국인 유입과 저숙련(고졸 미만) 고용의 상관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는 외국인의 지역 선정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변이할당(shift share) 도구변수를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함.
 - 기존 이민자 커뮤니티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를 이용하여 노동수요 효과를 제거

외국인력 유입의 고용효과 (직업별)

- 내-외국인과의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등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외국인력이 1명 유입됨에 따라 서비스, 판매 종사자 약 0.1명 감소
 - 외국인력이 1명 유입됨에 따라 단순노무종사자 약 0.08명 감소

2SLS	외국인 1명 증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125 (0.445)
사무종사자	0.346 (0.337)
서비스, 판매종사자	-0.109 (0.14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097 (0.096)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0.141 (0.112)
단순노무종사자	-0.077 (0.092)

주: 통계적 유의수준: ***p<0.01, **p<0.05, *p<0.1

외국인력 유입의 고용효과 (종사상지위별)

-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임시일용근로자가 유의하게 감소
 - 외국인력이 1명 유입됨에 따라 임시일용근로자 약 0.3명 감소

2SLS	외국인 1명 증가
상용근로자	0.712 (0.909)
임시일용근로자	-0.315* (0.16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15 (0.0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101 (0.097)
무급가족종사자	0.041 (0.045)

주: 통계적 유의수준: ***p<0.01, **p<0.05, *p<0.1

산업	외국인	산업	외국인	산업	외국인
농업	0.06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27	출판업	0.082***
임업	0.001	전기장비 제조업	-0.01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019**
어업	0.0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269***	방송업	0.012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0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34	우편 및 통신업	-0.007
금속 광업	0.00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7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00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중 제외	-0.003	가구 제조업	0.054	정보서비스업	0.005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04***	기타 제품 제조업	0.034**	금융업	0.018
식료품 제조업	-0.01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008	보험 및 연금업	0.006
음료 제조업	0.0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1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018
담배 제조업	0.001	수도업	-0.005	부동산업	0.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54	하수, 폐수 및 분노 처리업	0.011**	연구개발업	0.03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32**	폐기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016	전문 서비스업	0.0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00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0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106***	종합 건설업	0.07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13	전문직별 공사업	-0.17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049
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063***	사업지원 서비스업	0.0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02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1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4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09	소매업; 자동차 제외	0.119	교육 서비스업	-0.06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7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21	보건업	-0.0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026	수상 운송업	0.002	사회복지 서비스업	-0.070
1차 금속 제조업	-0.066**	항공 운송업	0.03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1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16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00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0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29***	숙박업	0.02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051**
		음식점 및 주점업	-0.133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50**

외국인력 유입의 고용효과 (지역별)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감소가 나타나며, 전반적인 저숙련화로 관리자, 전문가의 감소도 나타남.

2SLS	(1)	(2)	(2)
	전체	비수도권	인구 10만 미만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125 (0.445)	-0.622** (0.272)	-0.216 (0.267)
사무종사자	0.346 (0.337)	-0.071 (0.176)	0.134 (0.220)
서비스, 판매종사자	-0.109 (0.146)	-0.071 (0.184)	0.100 (0.1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097 (0.096)	0.034 (0.116)	-0.044 (0.132)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0.141 (0.112)	0.050 (0.177)	-0.057 (0.159)
단순노무종사자	-0.077 (0.092)	-0.171** (0.083)	-0.157** (0.069)

주: 통계적 유의수준: **p<0.01, *p<0.05, *p<0.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문별로는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며, 일자리 총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이익을 얻는 부문과 피해를 보는 부문이 상존
- 따라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부문의 경우, 외국인력 유입에 신중할 필요
 - 고용이 감소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다른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점진적 외국인력 확대 및 직업교육 필요
-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유입이 필요하므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증가시킬 필요
 - 노동공급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경로 (예: 생산성 향상)는 장기에서 발생하므로, 단기간 외국인력의 급격한 증가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함.

III. 발표자료(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4.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

이 철 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경제학부 교수)

4.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 철 희

분석 개요

- 2026년과 2031년까지의 부문·유형별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변화 전망 결과를 결합하여 부문·유형별 수요/공급 초과 규모 산출.
- 유형 및 부문 간 노동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부문 및 유형별 노동 부족/과잉 규모 추정.
- 산업별·숙련수준별(비자 유형별)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추정.
- 국외 정책사례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방법 모색.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수급 현황 결과 (전체, 2026년) - 노동력 부족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26년 공급	2026년 수요	부족분
1	사회복지 서비스업	1,416,813	1,810,852	-394,039
	전문직군	664,938	928,517	-263,579
	준전문직군	544,126	604,762	-60,636
	숙련직군	1,909	13,851	-11,942
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05,840	263,723	-57,883
	전문직군	931,818	1,141,409	-209,591
	준전문직군	12,779	38,769	-25,990
	숙련직군	113,841	244,445	-130,604
3	농림업	29,836	46,260	-16,424
	전문직군	775,362	811,934	-36,572
	준전문직군	1,064,814	1,273,788	-208,974
	숙련직군	2,473	4,759	-2,286
4	전문직별 공사업	19,478	16,453	3,025
	전문직군	1,002,549	1,151,613	-149,064
	준전문직군	40,314	100,963	-60,649
	숙련직군	1,210,422	1,382,665	-172,243
5	기타 제조업	83,554	163,910	-80,356
	전문직군	178,334	204,725	-26,391
	준전문직군	719,763	625,588	94,175
	숙련직군	228,771	388,442	-159,671
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2,137	158,790	-66,653
	전문직군	17,754	9,852	7,902
	준전문직군	20,522	27,708	-7,186
	숙련직군	37,608	93,780	-56,172
7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53	27,450	-11,197
	전문직군	901,980	968,456	-66,476
	준전문직군	50,933	47,774	3,159
	숙련직군	365,524	335,917	29,617
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8,350	73,489	-25,139
	전문직군	437,163	511,277	-74,114
	준전문직군	409,576	470,349	-60,773
	숙련직군	95,719	122,203	-26,484
9	전문직군	152,589	139,950	12,639
	준전문직군	38,966	27,630	11,336
	숙련직군	122,301	180,566	-58,265
	비전문직군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수급 전망 결과 (고학력, 2026년) - 노동력 부족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26년 공급	2026년 수요	부족분
1	사회복지 서비스업	634,260	956,327	-322,059
	전문직군	553,245	749,345	-196,100
	준전문직군	61,076	181,340	-120,264
	숙련직군	210	4,767	-4,557
2	음식점 및 주점업	19,738	20,875	-1,137
	전문직군	578,639	781,463	-202,824
	준전문직군	21,275	31,985	-10,710
	숙련직군	479,194	651,399	-172,205
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355	19,810	-2,455
	전문직군	60,816	78,268	-17,452
	준전문직군	293,991	484,572	-190,581
	숙련직군	11,102	33,556	-22,454
4	전문직군	74,856	189,700	-114,844
	준전문직군	19,281	31,635	-12,354
	숙련직군	188,752	229,681	-40,929
	비전문직군	887,793	1,050,043	-162,250
5	전문직군	133,317	133,842	-525
	준전문직군	674,152	807,449	-133,297
	숙련직군	19,620	29,228	-9,608
	비전문직군	60,704	79,523	-18,819
6	전문직별 공사업	472,774	576,551	-103,777
	전문직군	76,987	153,819	-76,832
	준전문직군	118,281	161,574	-43,293
	숙련직군	223,797	195,492	28,305
7	기타 서비스업	53,709	65,666	-11,957
	전문직군	194,170	279,029	-84,859
	준전문직군	4,424	78,025	-73,601
	숙련직군	167,656	120,252	47,404
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1	52,510	-52,039
	전문직군	21,619	28,241	-6,622
	준전문직군	284,581	335,357	-50,776
	숙련직군	92,282	118,151	-25,869
9	전문직군	124,458	119,345	5,113
	준전문직군	18,482	20,566	-2,084
	숙련직군	49,360	77,295	-27,935
	비전문직군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수급 전망 결과 (지역별, 2026년) - 노동력 부족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26년 공급	2026년 수요	부족분
1	보건업	225,931	559,827	-333,896
	전문직군	124,973	116,214	8,759
	준전문직군	77,868	278,020	-200,152
	숙련직군	3,832	5,963	-2,131
2	비전문직군	19,258	159,631	-140,373
	총 합	852,593	1,016,775	-164,182
	전문직군	228	917	-689
	준전문직군	2,717	2,622	95
3	숙련직군	811,459	922,214	-110,755
	비전문직군	38,188	91,022	-52,834
	사회복지 서비스업	782,545	854,525	-71,980
	전문직군	61,665	177,390	-115,725
4	준전문직군	518,777	424,372	94,405
	숙련직군	1,825	9,102	-7,277
	비전문직군	200,277	243,662	-43,385
	전문직별 공사업	737,648	806,114	-68,466
5	전문직군	13,967	10,036	3,931
	준전문직군	68,165	43,102	25,063
	숙련직군	486,401	430,138	56,263
	비전문직군	169,115	322,838	-153,723
6	요크스·연단·식유장제품·화학물질·화학제품·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94,527	142,418	-47,891
	전문직군	601	2,326	-1,725
	준전문직군	15,461	22,872	-7,411
	숙련직군	2,043	5,354	-3,311
7	비전문직군	76,421	111,866	-35,445
	기타 제품 제조업	43,963	83,350	-39,387
	전문직군	2,286	1,113	1,173
	준전문직군	7,666	9,499	-1,833
8	숙련직군	22,469	52,551	-30,082
	비전문직군	11,541	20,187	-8,6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10,042	441,751	-31,709
	전문직군	14,649	5,703	8,946
9	준전문직군	278,423	322,000	-43,577
	숙련직군	13,376	13,455	-79
	비전문직군	103,594	100,593	3,001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수급 전망 결과 (전체, 2031년) - 노동력 부족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31년 공급	2031년 수요	부족분
1	사회복지 서비스업	1,441,111	2,023,699	-502,508
	전문직군	674,262	933,171	-258,909
	준전문직군	538,113	728,931	-190,818
	숙련직군	1,867	16,788	-14,921
2	비전문직군	226,869	344,809	-117,940
	전문직별 공사업	1,117,613	1,337,167	-219,554
	전문직군	84,253	157,051	-72,798
	준전문직군	174,002	205,316	-31,314
3	숙련직군	651,728	602,825	48,903
	비전문직군	207,629	371,975	-164,346
	음식점 및 주점업	1,732,266	1,946,285	-214,019
	전문직군	25,051	37,218	-12,167
4	준전문직군	1,262,228	1,511,786	-249,558
	숙련직군	28,281	32,651	-4,370
	비전문직군	416,707	364,630	52,07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80,033	1,091,767	-211,734
5	전문직군	13,412	38,176	-24,764
	준전문직군	112,624	256,949	-144,325
	숙련직군	28,555	50,533	-21,978
	비전문직군	725,442	746,108	-20,666
6	보건업	1,106,604	1,221,559	-114,955
	전문직군	844,855	563,287	281,568
	준전문직군	227,950	440,003	-212,053
	숙련직군	8,221	10,134	-1,913
7	비전문직군	25,578	208,136	-182,558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	575,578	676,299	-100,721
	전문직군	425,430	400,154	25,276
	준전문직군	136,376	190,402	-54,026
8	숙련직군	1,667	43,316	-41,649
	비전문직군	12,105	42,428	-30,323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	158,000	256,962	-98,962
	전문직군	14,993	28,221	-13,228
9	준전문직군	53,833	61,572	-7,739
	숙련직군	3,867	10,175	-6,308
	비전문직군	85,307	156,993	-71,686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수급 전망 결과 (고학력, 2031년) - 노동력 부족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31년 공급	2031년 수요	부족분
1	음식점 및 주점업	604,824	979,378	-374,554
	전문직군	23,341	34,112	-10,771
	준전문직군	506,856	816,141	-309,285
	숙련직군	15,894	24,872	-8,978
2	사회복지 서비스업	58,734	104,253	-45,519
	전문직군	680,994	964,604	-283,620
	준전문직군	582,923	738,050	-155,127
	숙련직군	74,699	197,251	-122,552
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66	5,429	-5,163
	전문직군	23,097	23,874	-777
	준전문직군	327,900	556,006	-228,106
	숙련직군	12,080	34,394	-22,314
4	기록물 출판 제작 배급업	79,216	213,479	-134,263
	전문직군	20,082	38,073	-17,991
	준전문직군	216,522	270,060	-53,538
	숙련직군	479,807	606,581	-126,774
5	소매업, 자동차 제외	368,126	386,445	-18,319
	전문직군	104,618	163,240	-58,622
	준전문직군	761	33,611	-32,850
	숙련직군	6,302	23,284	-16,982
6	전문직군	935,413	1,054,800	-119,387
	준전문직군	134,817	123,444	11,373
	숙련직군	710,665	811,925	-101,260
	비전문직군	22,440	31,255	-8,815
7	전문직별 공사업	67,491	88,177	-20,686
	전문직군	497,261	616,187	-118,926
	준전문직군	79,403	149,287	-69,884
	숙련직군	122,496	169,636	-47,140
8	전문직군	237,281	221,438	15,843
	준전문직군	58,081	75,827	-17,746
	숙련직군	256,112	344,869	-88,757
	비전문직군	2,541	4,479	-1,938
9	전문직군	18,688	17,333	1,355
	준전문직군	232,465	308,964	-76,499
	숙련직군	2,419	14,094	-11,675
	비전문직군			

산업 및 직업별 20-74세 수급 전망 결과 (저학력, 2031년) - 노동력 부족 규모 큰 7개 산업

순위	산업	2031년 공급	2031년 수요	부족분
1	보건업	194,295	639,298	-445,003
	전문직군	106,561	115,925	-9,364
	준전문직군	66,973	321,887	-254,914
	숙련직군	3,361	6,873	-3,512
2	사회복지 서비스업	17,400	194,613	-177,213
	전문직군	760,127	1,059,095	-298,968
	준전문직군	50,671	192,047	-141,376
	숙련직군	491,046	533,255	-42,209
3	전문직별 공사업	1,696	11,386	-9,690
	전문직군	216,714	322,407	-105,693
	준전문직군	620,352	720,980	-100,628
	숙련직군	11,581	7,605	3,976
4	전문직군	58,744	35,526	23,218
	준전문직군	405,986	381,504	24,482
	숙련직군	144,041	296,345	-152,304
	비전문직군	81,616	127,096	-45,480
5	코스메틱스·연탄·석유정제품·화학물질·화학제품·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429	1,836	-1,407
	전문직군	11,693	19,652	-7,959
	준전문직군	1,629	4,933	-3,304
	숙련직군	67,865	100,676	-32,811
6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	84,686	129,116	-44,430
	전문직군	1,269	1,384	-115
	준전문직군	23,544	18,094	5,450
	숙련직군	3,230	5,943	-2,713
7	기타 제품 제조업	56,643	103,695	-47,052
	전문직군	38,163	64,862	-26,699
	준전문직군	2,038	755	1,283
	숙련직군	6,679	6,935	-256
8	전문직군	19,472	41,150	-21,678
	준전문직군	9,974	16,022	-6,048
	숙련직군	126,429	151,271	-24,842
	비전문직군	765	1,072	-307
9	전문직군	44,087	12,299	31,788
	준전문직군	1,565	3,522	-1,957
	숙련직군	80,012	134,379	-54,367
	비전문직군			

노동인력 부족/과잉 규모 추정 (1) 부문 및 유형 간 대체성에 대한 가정

- 각 산업 및 직종의 노동수급 불균형은 상이한 학력/산업/직업 인력 간 불완전한 대체로 인해 발생하게 됨.
- 노동수급 불균형의 규모는 부문 및 유형 간 대체성 정도에 의해 달라짐.
- 이 분석에서는 부문 및 유형 간 대체성에 대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음.
- **시나리오 1 (S1):** 학력/산업/직업 간 대체가 발생하지 않음 → 전체 노동인력 부족분은 부문/유형별로 노동인력 부족분의 합으로 결정됨.
 - 예컨대 특정 산업/직업에서 고학력 인력은 과잉, 저학력 인력은 부족인 경우,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에 고려할 노동인력 부족분은 저학력 노동인력 부족 규모에 의해 결정됨.
 - 이는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가장 크게 만드는 가정.

노동인력 부족/과잉 규모 추정 (2) 부문 및 유형 간 대체성에 대한 가정

- 시나리오 2~3: 학력 간 노동인력 대체가 발생하며, 대체 정도는 각 산업의 학력 간 대체탄력성 크기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가정.
 - 어떤 산업에서 특정한 학력(예컨대 고학력) 인력 부족이 공급과잉인 다른 학력(저학력) 인력 흡수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
 - 그 정도는 학력 간 대체탄력성과 과잉 학력 인력의 초과공급 정도에 비례한다고 가정(뒤의 설명 참조).
 - 숙련수준 간 대체가 가장 큰 비율로 발생하는 산업에서의 대체 정도에 대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2 (S2):** 학력 간 대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학력 간 노동인력 대체 비율이 50% - 과잉인 학력 인력의 50%가 부족한 학력 인력으로 전환되어 부족분을 채움.
 - **시나리오 3 (S3):** 학력 간 대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학력 간 노동인력 대체 비율이 100% - 과잉인 학력 인력의 100%가 부족한 학력 인력으로 전환되어 부족분을 채움.

학력 간 대체 정도 결정: 추가 설명 (1)

- 대체탄력성 정의에 따라,

$$\rho_i = d \log (w_u / w_s) / d \log (L_{i,s} / L_{i,u})$$
- 외생적으로 저숙련 공급이 축소되면 저숙련 임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저숙련 수요를 줄이고 고숙련 수요를 늘리게 됨.
- 구체적으로 저숙련 임금이 1% 증가하면 $L_{i,s} / L_{i,u}$ 는 ρ_i % 증가
- $L_{i,u}$ 가 초과 공급되는 산업은 추가적인 $d \log (w_u / w_s)$ 의 감소가 있어야 하나 여러 이유로 $d \log (w_u / w_s)$ 가 경직적이라면 추가적인 비용 증가 충격(ΔC)이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d \log (L_{i,s} / L_{i,u})$ 이 $\rho_i \times \Delta C$ 만큼 증가.
- 이 경우 비용충격(ΔC)에 대응되는 $d \log (L_{i,s})$ 의 증가분을 모두 $L_{i,s} / L_{i,u}$ 의 추가고용으로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그 크기는 아래 식과 같음

$$\Delta L_{i,s} = \rho_i \times \Delta C \times L_{i,s}$$

학력 간 대체 정도 결정: 추가 설명 (2)

- 충격의 크기는 $L_{i,u}$ 의 추가공급이 클수록 크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 예를 들어, 충격의 크기가 $L_{i,u}$ 추가공급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임의의 상수 a 에 대하여 $\Delta C = a \times \Delta L_{i,u} / L_{i,u}$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따라서 $\Delta L_{i,s} = \rho_i \times a \times \Delta L_{i,u} \times (L_{i,s} / L_{i,u})$ 만큼이 비숙련 인력 추가공급을 흡수한다고 가정.
- 여기서 a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 즉 결과에 따라 가장 대체가 많이 되는 산업에서 초과공급의 $x\%$ 가 흡수되게끔 a 를 설정. 즉,

$$a = x / \max (\rho_i \times L_{i,s} / L_{i,u})$$

노동인력 부족/과잉 규모 추정 (3) 부문 및 유형 간 대체성에 대한 가정

- **시나리오 4 (S4):** 학력 간 뿐만 아니라 산업 간에도 인력 대체 발생. 시나리오 4에 따른 학력 간 대체와 산업 간 노동인력 대체율 50% 가정
 - ▶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하여 각 학력/산업/직업 노동수급 불균형 규모 산출.
 - ▶ 전체 산업의 과잉 공급 노동인력의 50%가 노동 인력이 부족한 타 산업 인력으로 흡수.
 - ▶ 직업 간에는 노동인력 대체가 발생하지 않음.
- 이번 분석에 이용된 시나리오 이외에도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대안적인 시나리오 적용 가능.

시나리오별 노동 인력 부족분 전망 (2026년, 2031년) - 일부 사례

분류	산업명	2026				2031			
		S1	S2	S3	S4	S1	S2	S3	S4
1	농림업	-208,974	-208,974	-208,974	-104,487	-94,406	-94,406	-94,406	-47,203
	전문직군	-1,419	-1,419	-1,419	-710	-941	-941	-941	-471
	준전문직군	-272	-272	-272	-136	-714	-714	-714	-357
	숙련직군	-172,025	-172,025	-172,025	-86,012	-71,967	-71,967	-71,967	-35,983
3	비전문직군	-35,258	-35,258	-35,258	-17,629	-20,784	-20,784	-20,784	-10,392
	어업	-13,382	-13,382	-13,382	-6,691	-12,645	-12,645	-12,645	-6,322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855	-554	-201	-101	-663	-476	-269	-134
5	숙련직군	-11,946	-12,206	-12,511	-6,255	-11,414	-11,576	-11,756	-5,878
	비전문직군	-581	-622	-670	-335	-568	-592	-620	-310
	광업	0	0	0	0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1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식품 제조업	-29,992	-29,940	-29,887	-14,944	-80,729	-80,593	-80,458	-40,229
11	전문직군	-215	-89	37	19	-2,471	-2,311	-2,146	-1,073
	준전문직군	0	0	0	0	-16,316	-15,479	-14,618	-7,309
	숙련직군	-14,315	-14,363	-14,412	-7,206	-28,958	-29,380	-29,815	-14,908
	비전문직군	-15,462	-15,487	-15,513	-7,756	-32,985	-33,425	-33,879	-16,939
13	음료·담배 제조업	-1,569	-1,343	-1,117	-558	-4,581	-4,581	-4,581	-2,291
	전문직군	-99	-76	-56	-28	-333	-307	-280	-14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1,470	-1,267	-1,061	-530	-4,249	-4,275	-4,301	-2,151
13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조	0	0	0	0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시나리오별 노동 인력 부족분 전망 (2026년, 2031년) - 일부 사례

분류	산업명	2026				2031			
		S1	S2	S3	S4	S1	S2	S3	S4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09,591	-209,591	-209,591	-104,795	-228,106	-226,817	-225,527	-112,764
	전문직군	-14,143	-14,143	-14,143	-7,071	-15,161	-15,075	-14,989	-7,495
	준전문직군	-76,790	-76,790	-76,790	-38,395	-92,791	-92,266	-91,742	-45,871
	숙련직군	-11,446	-11,446	-11,446	-5,723	-15,598	-15,510	-15,421	-7,711
	비전문직군	-107,212	-107,212	-107,212	-53,606	-104,557	-103,966	-103,375	-51,687
50	수상·항공 운송업	-21,978	-16,842	-11,706	-5,853	-18,316	-15,602	-12,888	-6,444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21,978	-16,842	-11,706	-5,853	-18,316	-15,602	-12,888	-6,444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0,364	-27,638	-24,912	-12,456	-24,900	-24,900	-24,900	-12,45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3,324	-3,047	-2,767	-1,383	-2,685	-2,698	-2,712	-1,356
	비전문직군	-27,040	-24,591	-22,145	-11,073	-22,215	-22,202	-22,189	-11,094
55	숙박업	-7,797	-729	6,339	3,169	-2,361	1,233	4,828	2,414
	전문직군	-832	-174	-1,037	-519	-2,361	1,233	4,828	2,414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16	2	76	38	0	0	0	0
	비전문직군	-6,949	-557	7,300	3,650	0	0	0	0
56	음식점 및 주점업	-202,824	-190,263	-177,702	-88,851	-374,554	-360,474	-346,393	-173,197
	전문직군	-10,252	9,677	9,094	4,547	-11,242	-10,856	-10,467	5,233
	준전문직군	-170,646	-160,459	-150,225	-75,113	-309,874	-298,570	-287,242	-143,621
	숙련직군	-3,449	-3,093	-2,753	-1,377	-9,089	-8,594	-8,109	-4,055
	비전문직군	-18,477	-17,035	-15,629	-7,815	-44,349	-42,454	-40,574	-20,287
58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	-39,094	-20,763	-2,433	-1,216	-126,774	-113,748	-100,721	-50,361
	전문직군	-10,334	-3,970	-247	-123	-45,635	-37,544	-29,932	-14,966
	준전문직군	-12,951	-7,538	-978	-489	-41,507	-38,959	-36,169	-18,084
	숙련직군	-9,202	-5,387	-703	-352	-22,395	-21,046	-19,564	-9,782
	비전문직군	-6,606	-3,868	-505	-252	-17,237	-16,199	-15,057	-7,529

시나리오별 노동 인력 부족분 전망 (2026년, 2031년) - 일부 사례

분류	산업명	2026				2031			
		S1	S2	S3	S4	S1	S2	S3	S4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	0	0	0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외국기관	-2,370	-343	1,685	842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1,078	-157	773	386	0	0	0	0
	숙련직군	-90	-13	65	33	0	0	0	0
	비전문직군	-1,203	-173	847	423	0	0	0	0
85	교육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86	보건업	-333,896	-333,552	-333,207	-166,604	-445,003	-444,628	-444,253	-222,126
	전문직군	-15,167	-15,148	-15,129	-7,564	-29,987	-29,958	-29,929	-14,964
	준전문직군	-185,456	-185,265	-185,075	-92,537	-241,676	-241,474	-241,273	-120,636
	숙련직군	-2,519	-2,516	-2,514	-1,257	-3,824	-3,821	-3,817	-1,909
	비전문직군	-130,754	-130,622	-130,490	-65,245	-169,515	-169,375	-169,234	-84,617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94,039	-394,039	-394,039	-197,020	-582,588	-582,588	-582,588	-291,294
	전문직군	-201,811	-201,829	-201,847	-100,923	-241,801	-241,809	-241,816	-120,908
	준전문직군	-140,062	-140,056	-140,050	-70,025	-174,815	-174,820	-174,825	-87,413
	숙련직군	-15,764	-15,765	-15,767	-7,883	-24,473	-24,473	-24,474	-12,237
	비전문직군	-36,403	-36,389	-36,376	-18,188	-141,499	-141,485	-141,472	-70,736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527	-11,902	-9,277	-4,638	-20,219	-19,048	-17,876	-8,938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14,527	-11,902	-9,277	-4,638	-20,219	-19,048	-17,876	-8,938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노동인력 부족/과잉 규모 추정 결과 활용방안

- 추정 결과의 절대적인 규모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약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장래 노동수요와 공급을 추정.
 - 각 부문의 상대적인 노동수급 변화를 추정하였음: 총 노동 공급량과 수요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
- 장래의 각 유형/부문 노동 수급 상황의 상대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른 국가(호주, EU 등)의 사례와 같이 장래 노동수급 전망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데 활용.
 - 장래 노동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유형을 식별하는 데 활용.
 - 다른 방식의 분석 결과(현재 노동수급 여건 조사, 질적인 조사 등)와 결합하여, 특정한 산업에서 필요한 대략적인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정책 방향 (1)

-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대체로 ① 현재(최근) 노동시장 여건에 관한 수량적인 분석 결과, ② 장래 5~10년 노동수급에 대한 수량적인 전망, ③ 고용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인 조사 등에 기초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결정 → **각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결정 방식 필요.**
- 이 연구와 유사하게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 장래 노동수급(부문별 노동 부족분) 전망하는 사례는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
 -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Multisectoral Macroeconomic Model 이용하여 향후 10~15년 숙련 노동력 수요 추정. 연령/코호트별 인구 규모 및 교육수준 변화에 기초하여 숙련 수준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 호주의 미래수요 평가(Future Demand Rating): 산업, 직업, 기술수준별로 향후 5년 동안 노동수요 및 공급 전망하여 미래 수요를 ① 강함, ② 중간, ③ 약함 등 3개 범주로 구분.
 - 캐나다의 직업별 노동력 부족 예측 시스템(Canadian Occupational Projection System): 산업 및 직업별로 향후 10년 간 노동 수요 및 공급 변화 예측. 2년마다 업데이트.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정책 방향 (2)

- 현재(최근)의 직업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
 - 가용한 최근의 노동시장 지표를 이용하여 노동력 부족한 부문을 식별.
 - 예컨대 영국 이민자문위원회(MAC)가 구성하는 노동력 부족 직업 리스트(SOL: Shortage Occupation List)는 ① 시간당 실질 임금의 중간값, ② 전체 노동시간, ③ 고용 변화, ④ 빈 일자리 수 등 4개 변수에 기초하여 노동력 부족 추정.
 - 몇 가지 문제: ① 시차(1~2년 전 데이터에 의존), ② 해당 변수들이 노동력 부족이 아닌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 현재의 직업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정성적인 조사 및 외국인 도입 타당성 검토
 - 고용주 및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조사
 - 노동력 부족 현상에 이민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검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정책 방향 (3)

- 한국의 경우 중기·장기적인 노동수요 및 공급 전망 분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중요함.
 -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빠른 인구변화와 산업/기술 변화 진행
 - 35세 미만 노동인력이 15년 사이 30% 이상 감소하는 국가는 없음.
 - 1~2년 전 데이터에 기초한 노동수급 파악은 충분하지 못함.
 - 중간 및 고숙련 인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는 국가들과 달리, 장래 수급불균형에 대응한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 중장기 전망과 최근 노동수급사정 추정 결과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사례: 현재 노동시장 평가(부족, 부족하지 않음)와 미래 수요 평가(강한 수요, 중간 수요, 약한 수요)를 결합하여 6개 등급의 우선순위 리스트(SPL: Skills Priority List) 작성.
- 노동력 부족 부문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적정성 평가 시스템 마련 필요.
 - 해당 부문 외국인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 평가 및 고려(이종관 교수 발표 결과 참고)
 - 내국인 진입 및 훈련 강화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가능성 고려.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정책 방향 (4)

- 고속런 인력의 경우에는 특정한 쿼터를 설정하기 보다는 현재 노동수급 조사 및 장래전망에 기초하여 부족 부문/유형 리스트를 작성하여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 유인/가능성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스웨덴의 경우, 노동력 부족 직업 리스트에 있는 직업은 고용허가 신청 시 우선 고려되고, 국내 체류 시 출국 필요 없음.
 - 영국의 경우, SOL에 등재된 직업은 더 낮은 임금 조건, 비자 신청 지원비 등 혜택이 주어짐.
- 저속런 인력의 경우에는 현재의 노동수급 여건, 중장기적인 노동수급 전망, 고용주 및 이해 당사자 의견 조사,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영향 평가 등에 기초하여 적절한 도입 규모 결정.
 - 노동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산업별, 숙련수준(비자유형)별 취업비자 쿼터 설정.
 -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쿼터를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외국인 수 제한하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

2.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경제학회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1. 포스터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책토론회**

2023. 9. 22. (금) 14:00~16:30
은행회관 국제회의장(2F)

프로그램

개회 14:00-14:10	휴식 15:10-15:20
사회자 인사 및 행사 취지 소개 주최사: 황윤재 학회장(한국경제학회) 협명사: 김병연 원장(국가미래전략원) 속 사: 김영미 부위원장(서울신교양사회위원장)	다과 및 장대정돈
주제 발표	패널토론 15:20-16:20
주제1 14:10-14:30 연구고령화 시대, 돌봄의 경제학적 의미 이명욱 연구위원(KDI)	사회: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재훈 교수(연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지영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자혜 대표(광연한세연구소) 김건원 대표(케어세이브) 이윤신 과장(노년복지부 노인정책과) 송영길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주제2 14:30-14:50 인구변화와 미래 돌봄 수요 전망 이철희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폐회 16:20-16:30
주제3 14:50-15:10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홍서철 상임위원(서울신교양사회위원장)	토론 마무리

주최 **KEE 한국경제학회** **IFS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후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신문**

II. 행사사진





III. 발표자료(KDI 이영욱 연구위원)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 돌봄의 경제학적 의의 : 사회구조 변화 속 돌봄

2023. 9. 22.
이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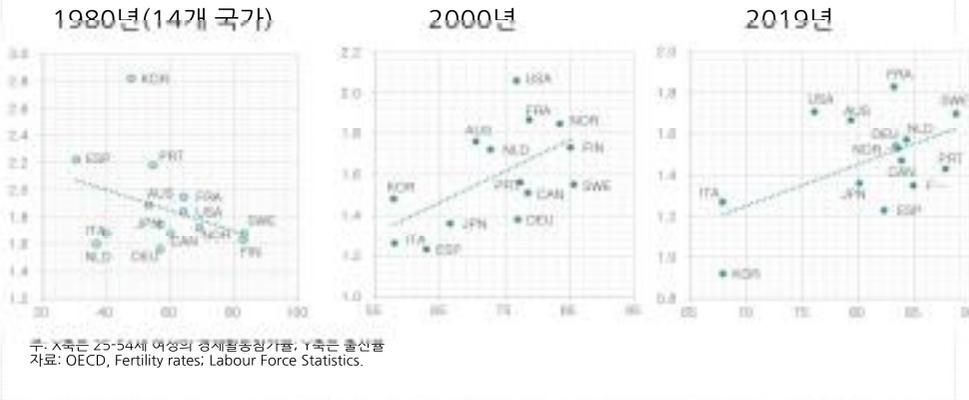


초저출산 관점에서의 아동돌봄

- 경제모형 내 아동돌봄
 - (+)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
 - (-) 출산과 양육의 비용
 - 1) 직접적인 양육비용
 - 2)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기회비용
 - 경력단절, 인적자본 축적 저해(career cost)
 - 사회구조 변화 속 아동돌봄
 - 자녀부양에 대한 기대 약화, 자녀에 대한 효용 감소
 - 여성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욕구 증대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 출산 감소, 출산시기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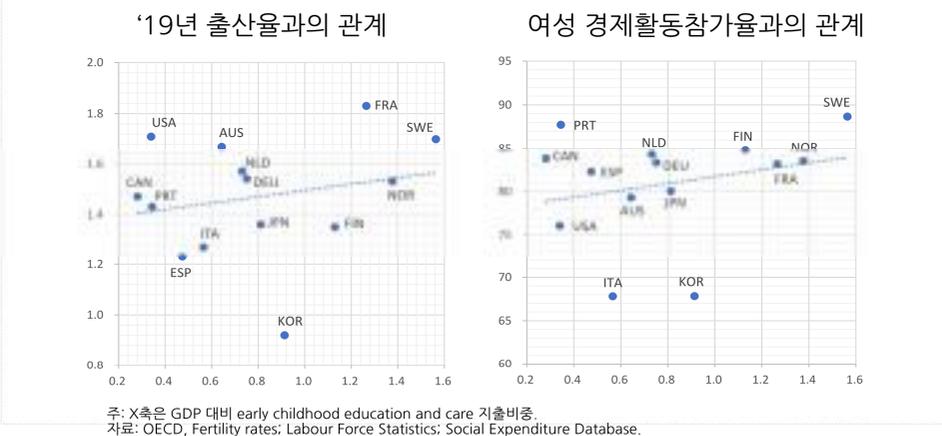
사회구조 변화와 돌봄의 가치 변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 변화**
 (Ahn and Mira 2002; Del Boca 2002; Apps and Rees 2004; Adsera 2004; Doepke et al. 2022)



사회구조 변화와 돌봄의 가치 변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과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비중 간의 관계**
 (Olivetti and Petrongolo 2017; Doepke et al. 2022)



초저출산 시대 아동돌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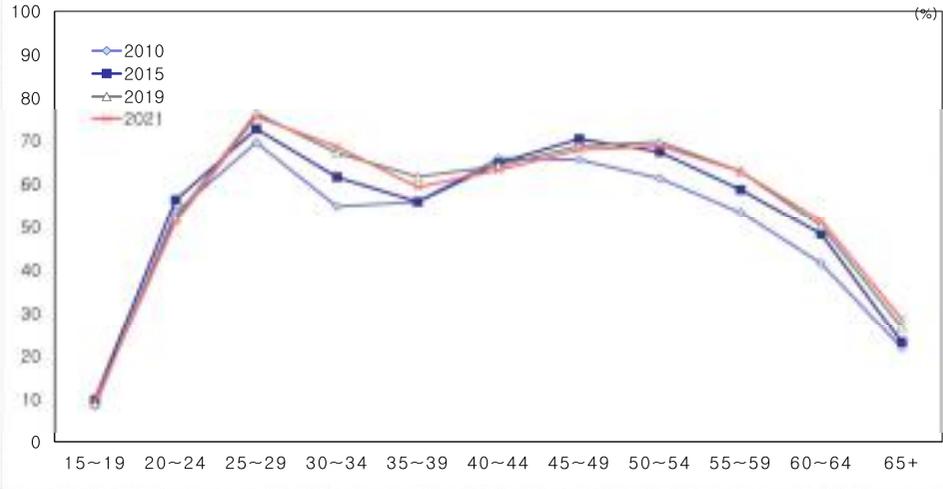
- 사회구조 변화 속 아동돌봄서비스 중요성 증대
 - 아동돌봄의 시장화(marketization)
 - 공공돌봄서비스(public provision) 확대
- 저출산 원인에 대한 해결책: 출산비용 감소
 - 1) 직접적인 양육비용
 - 2)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기회비용
- 저출산에 따른 문제 대응책: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
 -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현 경제활동인구 증대
 - 2) 초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다음 세대 생산성 증대

사회구조 변화 속 돌봄의 의의

- "A dynamic transition period to the new social order" (Myrdal, 1934)
 - 저출산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 사회 변혁(remodeling of society)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정생활간 조화 보장이 핵심
 - 자녀양육의 부담을 부모로부터 사회로 전환
 - 현금지원(in cash)보다는 서비스 지원(in kind)이 중요
- 저출산대책으로서 돌봄은 일과 가정을 선택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장애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정책) 내에서 완화시키는 방향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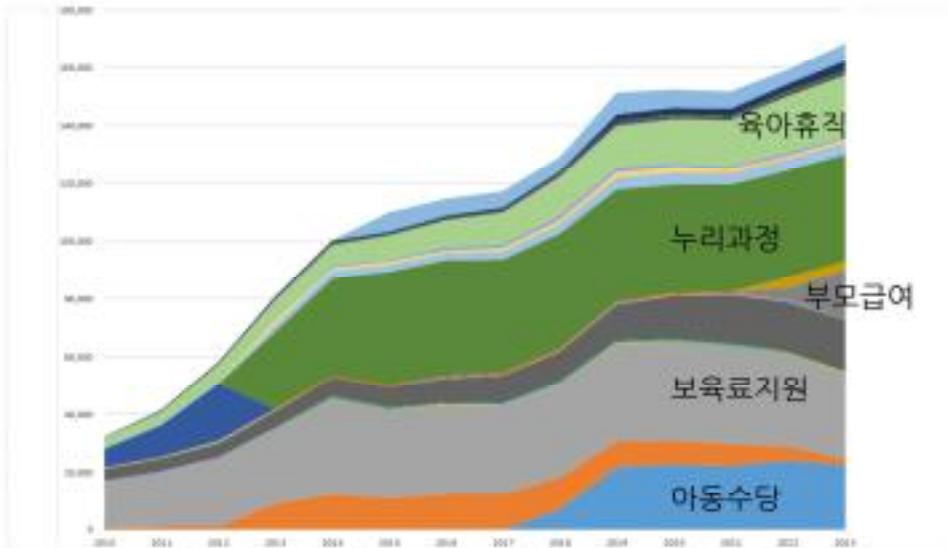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 여성 고용률

- 출산육아기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 14.8('10) 16.8('15) 14.6('19) 16.2('21)



자료: KOSIS,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양육지원정책 예산 추이



자료: 김성훈·윤정환(2021), '일자리발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및 사업실행자료'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평가

-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확대
 - '12년에는 영아(만0~2세) 및 5세, '13년에는 유아(만3~4세)까지 만0~5세 전소득계층 대상 무상보육 실시
- 보육료 지원 확대는 뚜렷한 정책목표/방향 없이 정치권 논쟁에 따라 확대
 - 모든 가구에 대한 종일제 보육료 지원
- 무상보육을 둘러싼 보육기관에 대한 초과수요, 재정부담, 질적 수준 하락 등 논란이 지속
 - 오히려 맞벌이 가구가 보육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 '12년 영아 대상 무상보육 시행이 여성의 노동공급 및 시간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이영옥, 2014).
 - 전액 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 증가, 자녀돌봄시간 감소
 - 하지만 여성 노동시장참여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1)	(2)	(3)	(4)	(5)	(6)
	보육기관 이용비용	보육기관 이용 여부	노동시장 참여	주당 노동시간	직접 자녀 돌봄시간	부모외 개인돌봄시간
2012년x만 0~2세 자녀	-106.065*** (12.748)	0.123*** (0.022)	0.015 (0.033)	1.094 (1.431)	-0.566** (0.235)	-0.196 (0.171)
관측치 수	2,132	4,062	4,062	4,062	4,062	4,062

출처: 이영옥(2014)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 특히 저학력, 저소득 가구에서 보육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 부모 돌봄시간 감소

	(1) 보육기관 이용비용	(2) 보육기관 이용 여부	(3) 노동시장 참여	(4) 노동 시간	(5) 직접 자녀 돌봄시간	(6) 부모 외 개인돌봄시간
I. 여성의 학력:						
(1) 고졸 초과	-164.596*** (25.568)	0.134*** (0.037)	0.014 (0.054)	0.961 (2.281)	-0.149 (0.412)	-0.483 (0.327)
(2) 고졸 이하	-58.608*** (13.120)	0.114*** (0.027)	0.012 (0.041)	1.053 (1.861)	-0.679** (0.286)	-0.111 (0.189)
II. 가구소득:						
(1) 고소득(4분위)	-241.678*** (33.633)	0.158*** (0.047)	-0.054 (0.061)	-3.042 (2.677)	0.493 (0.508)	-1.249** (0.507)
(2) 고소득(3분위)	-149.108*** (22.133)	0.177*** (0.042)	0.012 (0.063)	0.487 (2.726)	-0.866* (0.467)	-0.363 (0.333)
(3) 저소득(2분위)	-37.402* (19.125)	0.151*** (0.044)	0.019 (0.060)	2.445 (2.601)	-1.118*** (0.418)	-0.026 (0.237)
(4) 저소득(1분위)	-22.741 (14.996)	-0.008 (0.043)	0.021 (0.055)	1.367 (2.357)	0.042 (0.398)	0.160 (0.165)

출처: 이영욱(2014)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 미취업여성: 저학력, 저소득가구에서 기관 보육 증가가 부모의 직접 돌봄 시간 뚜렷하게 대체
 - 고학력, 고소득 가구에서 저학력, 저소득가구보다 영아 보육기관 이용률 수준 자체도 더 낮은 수치를 보임.

	보육기관 이용비용	보육기관 이용 여부	직접 자녀 돌봄시간	부모 외 개인 돌봄시간
시장노동 참여 안 함:				
(1) 고소득(4분위)	-225.090*** (56.175)	0.084 (0.074)	-0.220 (0.562)	-0.006 (0.373)
(2) 중고소득(3분위)	-187.092*** (34.854)	0.111* (0.058)	-0.627 (0.451)	0.063 (0.195)
(3) 중저소득(2분위)	-28.075 (22.482)	0.113** (0.053)	-0.869** (0.439)	0.219 (0.210)
(4) 저소득(1분위)	-17.685 (15.875)	-0.032 (0.049)	0.448 (0.401)	-0.045 (0.132)

출처: 이영욱(2014)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관찰

	보육기관 질에 대한 총 지불의사금액
가구소득	0.007** (0.003)
여성의 학력: 고졸 초과	40.928*** (7.109)
여성의 나이	0.630 (0.673)
해당 자녀의 나이(기준: 만 0세)	
만 1세	-145.762*** (10.191)
만 2세	-79.073*** (8.760)
만 3세	-33.651*** (8.822)
만 4세	29.540*** (6.973)
만 5세	37.006*** (7.030)
남편의 학력	27.781*** (5.710)
2012년	-66.846*** (6.779)
관측치 수	4,035

출처: 이영옥(2014)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 보육시설공급정도에 따라 이질적인 무상보육의 효과(민규량·이철희, 2020)
 -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어려움이 경력유지율 감소 가능성
 -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다자녀 취업여성의 경력유지에는 긍정적
- 보육시설공급률, 국공립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무상보육 시행 이후의 합계출산율 증가효과 관찰(민규량·이철희, 2020; 이철희, 2022)

VARIABLES	(1)	(2)		(4)	(5)		(7)	(8)		(9)
	전체	작업유무 한자녀	다자녀	전체	신규취업 한자녀	다자녀	전체	경력유지 한자녀	다자녀	
보육료지원확대 *영아모 *보육시설공급률	0.345 (0.403)	-0.069 (0.598)	0.295 (0.603)	0.005 (0.438)	0.185 (0.634)	-0.057 (0.631)	1.100* (0.601)	1.012 (0.703)	1.962* (1.092)	
보육료지원확대 *영아모	-0.296 (0.294)	-0.022 (0.438)	-0.268 (0.437)	-0.085 (0.316)	-0.300 (0.467)	0.035 (0.448)	-0.716* (0.421)	-0.514 (0.478)	-1.434* (0.778)	

출처: 민규량, 이철희(2020)

돌봄지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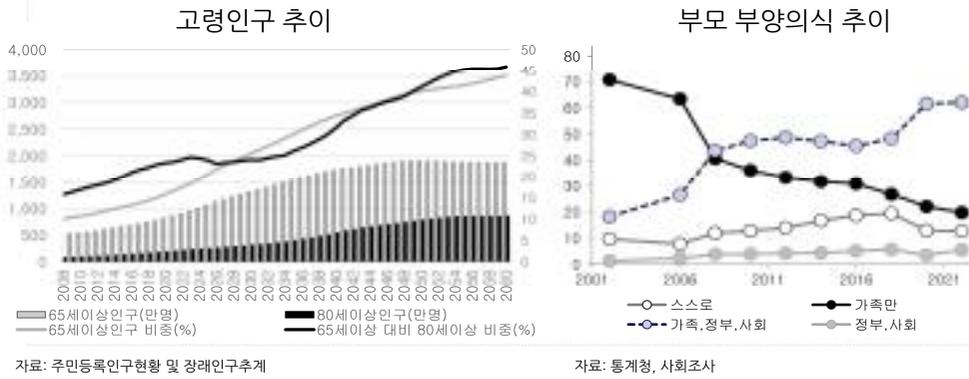
- 양육부담 경감
- 일가정양립 지원
 - 커다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방향
 - 단순한 예산, 지원시간 확대가 아닌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여성의 시간배분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아동발달 지원
 - 저출산 시대에서 한 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
 - 이를 위해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

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돌봄,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
- 일가정양립을 위해 부모의 근무시간동안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중요
 -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시간 확대만으로는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
- 장시간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무상보육 하에서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
 - 보편적인 지원 하에서 가구상황 및 필요에 따라 지원과 부담 차등
- 한편,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의 재량성 확보를 통해 일을 하면서도 부모의 양육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의 변화 또한 필요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돌봄

- 고령화의 결과로서 노인돌봄 수요 증가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 사적부양의식 약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 가족 내 노인돌봄이 약화되고 가족 외 노인돌봄 수요 확대



초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의 의의

- 사회구조 변화 속 노인돌봄서비스 중요성 증대
 - 사적 돌봄시장 조성
 -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장기요양보험) 확대
 - 비공식돌봄 지원
- 고령화와 비공식돌봄 감소에 따른 노인돌봄수요 증가에 대응
 - 노인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전통적 가족구조 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비공식돌봄의 비용 해소
 -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참여 감소: 개인의 기회비용, 경제전체 비용
 -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 감소: 돌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담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대응책: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
 - 성인자녀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비공식 돌봄의 비용: (1) 경제활동참여

- 가족돌봄제공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감소

- 돌봄제공시간이 길수록 경제활동참여 감소비용 커짐.
- 경제활동참여 측면의 비용은 남성에게서 크게 관찰

(Bolin *et al.*, 2008b; Van Houtven *et al.*, 2013; Geyer and Korfhage, 2018; Fu *et al.*, 2017; 함선유, 2017; 최경덕·안태현, 2019)

	경제활동참여 여부	
비공식 돌봄 여부	-0.062** (0.025)	
주 10시간 이상 비공식 돌봄 여부		-0.126*** (0.034)
	여성	남성
비공식 돌봄 여부	0.008 (0.033)	0.061** (0.025)
관측치 수	12,736	11,355

자료: 이영욱(2019)

비공식 돌봄의 비용: (2) 삶의 질

- 가족돌봄제공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감소

(Van den Berg, Fiebig, and Hall 2014; Niimi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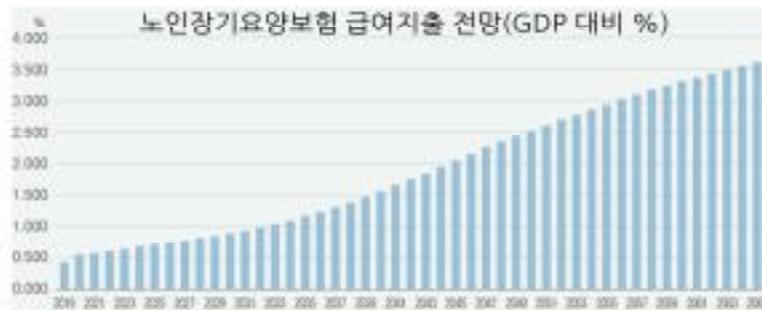
- 돌봄제공시간이 길면 삶의 질 감소비용 커짐.
- 삶의 질 측면의 비용은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관찰

	삶의 질(0~100점)	
비공식 돌봄 여부	-1.717** (0.802)	
주 10시간 이상 비공식 돌봄 여부		-2.448** (0.981)
	여성	남성
비공식 돌봄 여부	-2.904*** (1.027)	-0.282 (1.268)
주 10시간 이상 비공식 돌봄 여부	-2.395** (1.208)	-2.396 (1.679)

자료: 이영욱(2019)

공적 노인돌봄의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 재정전망 (김용하, 2020)
 - 전체 사회보험 급여지출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전망 (연평균 7.1%)
 - (후기)고령층 확대,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수가 인상, 인정률 증가
- 비공식돌봄의 감소에 따른 공식돌봄 이용 증가 고려 시 18%의 추가적 급여 지출 증가 전망 (이영욱, 2019)



자료: 김용하(2020)

노인돌봄에 대한 시사점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부담이 높은 시설돌봄보다는 본래 살던 곳에서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지원방향 전환
 - 돌봄-의료-주거서비스 간 연계 강화
- 비공식돌봄 지원: 재가돌봄과의 보완적 관계
 - 비공식돌봄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지원 필요
 - 삶의 질에 대한 비용: 상담지원, 교육 및 훈련, 단기휴가 및 휴식 (Livingston *et al.*, 2014; Northouse *et al.*, 2010; Jensen *et al.*, 2015)
 - 경제활동참여 비용: 돌봄휴가·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
- 다양해지는 노인돌봄의 수요에 대응한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려
 - 베이비부머 노인층 진입에 따른 노인세대의 특성 및 수요의 다양화
 - 엄격한 가격·서비스 통제, 정보비대칭 해소

인구변화와 미래 돌봄 수요 전망

2023년 9월 22일(금)
정책토론회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1.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 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은 사회서비스, 특히 아동과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돌봄 서비스 수요는 돌봄 대상자인 아동과 고령층의 인구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의 구조 변화,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전망을 위해서는, (1) **돌봄 대상자의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와 (2) **돌봄 서비스별 선택 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2020-2050년)는 가구주 중심의 가구 구조만 제공,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인 영유아와 고령층이 속한 가구의 구조 변화 및 맞벌이 가구 비중 변화 가능성 고려 필요.

2

2. 현황 - 장래 인구수

- 전체 인구는 5,184만명('20)→4,736만명('50) 감소추세
 - 영유아 수는 265만명('20)→182만명('50) 감소
 - 65세 이상인구는 815.2만명('20)→ 1,900만명('50) 증가

[그림] 장래인구추계(2000-2050년)



주. 영유아돌봄서비스의 보육대상은 보육연령 기준 - 보육연령 기준 만0세는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출생자(최대 23개월까지 포함), 이후 보육연령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세는 2021년에 출생한 아동, 만2세는 2020년에 출생한 아동임.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의 연령 구분으로는 0~1세가 보육연령 만0세, 2세가 보육연령 만1세로 볼 수 있어,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유아를 6세 이하 아동으로 설정함.

3

2. 현황 - 장래가구수

- 전체 가구수는 2,073만 가구('20) → 2,285만 가구('50), 204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9%('20)→41.1%('50), 특히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에서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중 증가

[그림] 장래가구추계(2000-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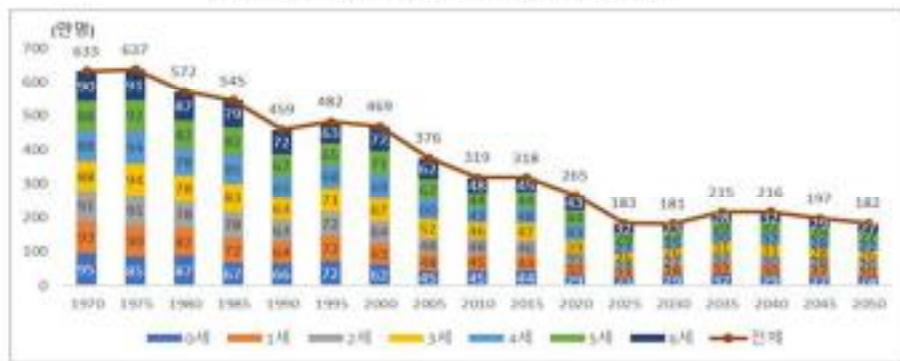


4

2. 현황 - 영유아 수

- 2020년 현재 6세 이하 영유아 수는 265만명(전체 인구의 5.1%)에서, 이후 감소, 반등, 감소하여 2050년 182만명(전체 인구의 3.8%) 예상, 가구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음.
- 각세별 비중은 0세 11%~6세 16.3%로 영아가 적은 구조, 2030년부터 0세 16.2%~6세 12.6%로 영아 증가, 2040년 부터는 각세별 비중 13.4~15.0% 로 비중차이 감소.

[그림] 영유아 장래인구추계(1970-2050년)



2. 현황 - 영유아돌봄서비스 이용자수

- 2021년 현재, 아동돌봄 서비스 수혜 아동 수는 약 240만명이며, 이중 양육수당 56.1만명(전체의 23.4%),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118.5만명(49.4%), 유아 학비 58.3만명(24.3%), 아동돌봄 서비스(시간제 포함)는 7.2만명(3%) 정도임.

[그림]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수(2015-2021년)



2. 현황 - 고령자수 및 가구 구조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8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임. 2050년 1,900만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기 고령자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 중 65~69세의 비중은 22.7%('20) → 19.5%('50), 70~74세는 24.4%('20) → 19.0%('50), 75~80세는 19.7%('20) → 20.4%('50), 80세 이상은 23.2%('20) → 41.1%('50)로 변화

[그림] 65세 이상 고령자수(2020-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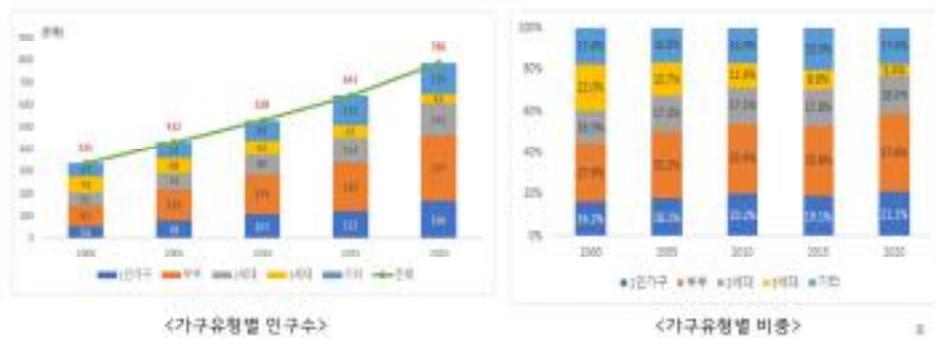


7

2. 현황 - 고령자 수 및 가구 구조

-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00~2020년 간 1인 가구, 부부가구의 비중이 증가해왔으며, 3세대 가구의 비중은 감소 추세
- > 2020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5%, 부부가구는 30.3%, 2세대는 14.3%, 기타가구 22.1%임.
- > 2020년 이후 고령층의 가구구조 추계는 부재하여, 이에 대한 추계 필요

[그림] 고령자의 가구유형별 분포(인구 총조사)



8

2. 현황 - 고령자 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대상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의료보장 대상인구는 891.3만명,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128.1만명(전체 인구의 14.4%), 등급 인정자는 95.4만명(10.7%)임. 1등급 5%, 2등급 9.7%, 3등급 27.4% 등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기능 및 건강유지, 악화 예방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노인이나 돌봄 필요자에게 무료로 제공
 - 2020년 기준 지원대상자수는 약 45만명(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50% 정도)

9

3. 영유아 및 고령자 장래가구추계 방법 (1)

- (방법) 가구유형을 6개로 나누고, 2015~2021년(2~3년 단위) 가구유형별 전이확률을 도출, 전이행렬을 적용하여 가구수 추계.
 - t기의 가구유형별 가구수는 가구유형별로 t-1기 가구 중 해당 유형을 유지한 가구, 타 유형에서 전이해온 가구, 그리고 t기의 해당 유형의 신규가구(N)의 합에서, 타 유형으로 전이된 가구와 소멸가구(E)수를 제외하여 산출됨. (P_{ij} 는 가구유형 전이확률)
$$H_i(t) = H_i(t-1)P_{ij} + N_i(t) - E_i(t)$$
- (자료)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이행렬 구성이 가능한 패널 데이터인, 통계청의 인구패널조사 2015~2021년의 자료를 활용함.
 - 2015~2021년간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이 전이확률을 활용하여 향후 가구수 및 가구유형별 비중 등을 산출함. 추가로, 맞벌이가구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패널 2015년~2021년 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함.

10

3. 영유아 및 고령자 장래가구추계 방법(2)

- 전이확률 도출방법 - 2가지 방법 병행
 - (1) 패널데이터 2개 연도를 횡단면으로 구성, 가구 유형별 t-1기와 t기의 i유형에서 j 유형으로의 전환율을 계산, 이를 전이확률로 활용
 - (2) 가구유형결정모형 구축 : t+1기 가구유형이 t기의 가구 특성에 따라 결정, k개의 가구유형 중 가구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j 유형을 선택
 - 다항로짓모형 적용: 이항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가 다항으로 확장된 모형으로, 종속변수가 비순서형 선택(unordered choice)인 경우 적용, 여러 개의 범주(유형)들의 선택확률 도출

$$\Pr(H_t = j | H_{t-1} = i) = F(\beta_{ij}x_t) \quad F(\beta_{ij}x_t) = \frac{\exp(\beta_{ij}x_t)}{\sum_{k=1}^6 \exp(\beta_{ik}x_t)}$$

11

3. 영유아 및 고령자 장래가구추계 방법(3)

- (가구유형의 정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에서의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전체 가구를 1인 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맞벌이 가구를 정의하기 위해 부부를 포함한 가구를 설정함.

기본 가구 유형(6가지)	세부 구성	부부가구 포함여부 (맞벌이 분석)	영유아 포함 가구유형 (4가지)	고령자 포함 가구유형 (4가지)
(1) 1인	1인가구	-		(1)
1세대	(2) 부부	부부가구	0	(2)
2세대	(3) 부부+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	0	(1)
	(4) 한부모+미혼자녀	부/모+미혼자녀	-	(2)
3세대	(5) 3세대	조부모/조부/조모 +부부+미혼자녀	0 (자녀부부 기준)	(3)
	(6) 기타	기타 가구 유형	-	(4)

- 영유아가구는 (1)부부+미혼자녀 및 맞벌이 (2) 부부+미혼자녀 및 비맞벌이 (3)한부모 (4) 3세대 및 맞벌이 (5) 3세대 및 비맞벌이 (6) 기타가구 등 6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영아와 유아 구분.
- 고령자가구는 (1) 1인 가구, (2) 부부 및 고령자1인 (3) 부부 및 고령자2인 (4) 자녀 동거 및 고령자1인 (5) 자녀 동거 및 고령자2인 (6) 기타 및 고령자1인 (7) 기타 및 고령자2인 등 7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성별과 연령대(65~74세와 75세 이상) 구분.

12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영유아 가구수 추계

- 영유아 인구구조 변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따르며, 가구구조 변화는 다음의 시나리오로 구성 및 결과 도출
 - 2018-2021년 가구 전이행렬이 2021년 이후에도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 최근 3개년 패턴 반영 ; 가구유형별 변화가 크지 않음
 -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 2015-2018과 2015-2021 전이행렬 간의 변화율 적용+맞벌이 가구 비중 완만한 증가 → Covid19의 전후 변화 가능성 포함
 -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 (1)번 시나리오가 2021년 수준에서 가장 완만하게 가구유형이 변화되며, (6)번 시나리오가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큼.

13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영유아 가구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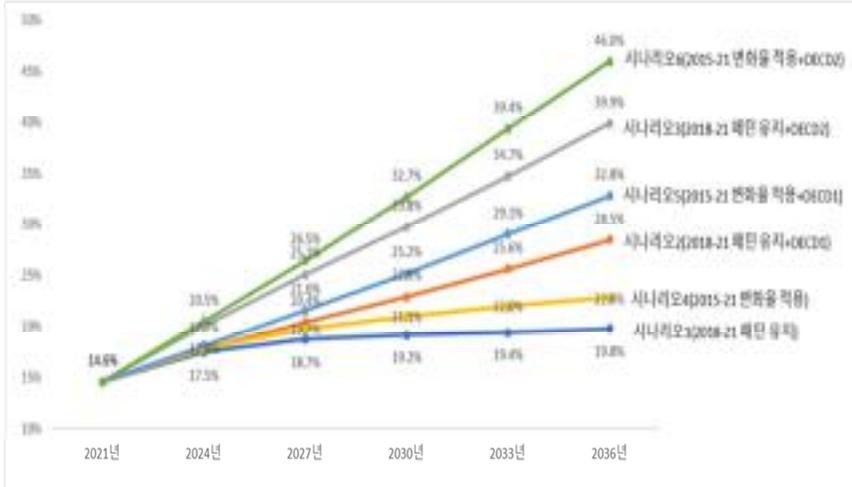
- (시나리오1 결과) 2018-21년 가구전이행렬과 맞벌이가구 변화패턴(노동패널 2015-21년 활용) 이 2021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가구유형의 완만한 변화

구분	인구수 변화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3세대가구			기타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만 0-2세>									
2021년	100.0%	81.7%	14.6%	67.2%	5.7%	5.3%	2.4%	2.9%	7.3%
2024년	82.3%	83.5%	17.5%	66.0%	5.4%	4.6%	2.1%	2.4%	6.6%
2027년	83.4%	82.7%	18.7%	64.0%	5.4%	4.8%	2.3%	2.4%	7.1%
2030년	96.1%	81.5%	19.2%	62.3%	5.2%	5.3%	2.6%	2.7%	8.0%
2033년	105.1%	81.1%	19.4%	61.7%	5.0%	5.4%	2.7%	2.8%	8.4%
2036년	109.0%	81.4%	19.8%	61.6%	5.0%	5.4%	2.6%	2.7%	8.2%
<만 3-6세>									
2021년	100.0%	77.9%	22.2%	55.7%	7.6%	6.1%	2.7%	3.4%	8.4%
2024년	75.9%	78.4%	24.8%	53.6%	7.6%	5.9%	2.8%	3.1%	8.2%
2027년	62.0%	78.4%	26.1%	52.3%	7.6%	5.9%	2.9%	3.0%	8.2%
2030년	60.2%	78.2%	26.8%	51.5%	7.5%	5.9%	2.9%	3.0%	8.3%
2033년	68.9%	78.1%	27.0%	51.0%	7.5%	6.0%	3.0%	3.1%	8.4%
2036년	76.0%	78.1%	27.2%	50.9%	7.5%	6.0%	3.0%	3.1%	8.4%

14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영유아 가구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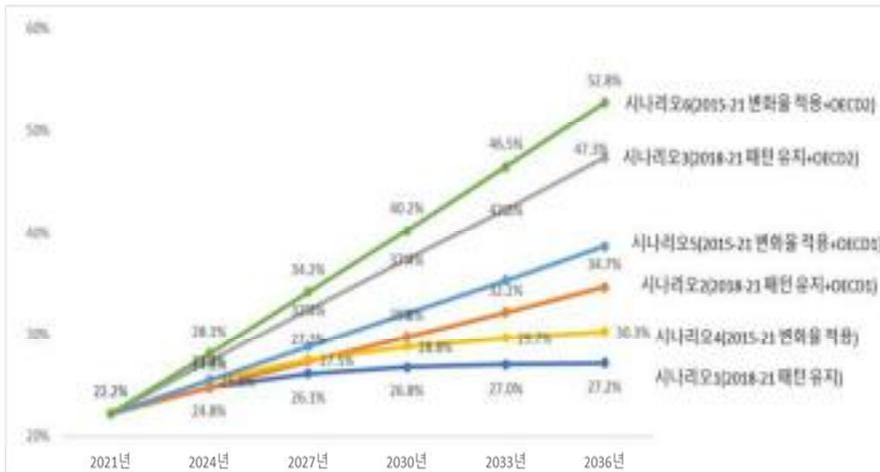
- 영아의 가구 구조 변화 - 부부+미혼자녀 및 맞벌이가구 비중의 변화(2021~36년)



15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영유아 가구수 추계

- 유아의 가구 구조 변화 - 부부+미혼자녀 및 맞벌이가구 비중의 변화(2021~36년)



16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분석 모형 - 다항프로빗모형

$$Y_{ij} = \beta_j X_i + \epsilon_{ij} \quad i \text{는 개인, } j \text{는 돌봄유형.}$$

$$\text{where } y_{ij} = \max U(y_{i1}, y_{i2}, \dots, y_{ij})$$

- (모형1) 종속변수(6가지-돌봄 유형 중복 고려): (1) 양육수당(부모 돌봄) (2) 어린이집 (3) 유치원 (4) 어린이집+개인양육(친인척 혹은 비동거인)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서비스
-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 아동특성 - 아동 성별, 연령, 출생순위, 출생분기 (2) 가구 및 부모 특성 - 어머니 연령, 가구내 다른 영유아 수, 가구소득, 맞벌이여부, 가구 유형, 지역 등 (3) 보육교육시설의 특징 - 접근성(거주지 주변 기관수), 신뢰할 만한 기관 유무 등을 고려

- 분석 자료 - 보육실태조사(2018년)

17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영유아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어린이집 (base: 부모돌봄)		공립유 (base: 부모돌봄)		어린이집+개인양육 (base: 부모돌봄)		유치원+개인양육 (base: 부모돌봄)		개인양육-친인척/비동거 (base: 부모돌봄)	
	추정계수	s.d.	추정계수	s.d.	추정계수	s.d.	추정계수	s.d.	추정계수	s.d.
아동 특성										
남성	-0.09	0.11	-0.06	0.13	-0.06	0.13	0.05	0.14	-0.21	0.14
연령	0.77***	0.06	1.41***	0.07	0.98***	0.07	1.56***	0.07	0.76***	0.07
출생순위	-0.04	0.09	-0.14	0.11	-0.10	0.11	-0.27**	0.12	-0.19	0.11
출생분기	0.09*	0.04	0.26***	0.06	0.21***	0.06	0.32***	0.06	0.09	0.06
가구/부모 특성										
어머니 연령	-0.04***	0.01	-0.02	0.02	-0.01	0.02	-0.04**	0.02	0.00	0.02
어머니교육연수	-0.03	0.03	0.03	0.03	-0.02	0.03	-0.02	0.04	0.05**	0.04
다른 영유아수	0.38**	0.16	0.31*	0.18	0.24*	0.18	0.13	0.19	0.15	0.19
가구소득	0.08**	0.04	0.16	0.04	0.28	0.04	0.30***	0.05	0.30***	0.05
맞벌이여부	1.26***	0.13	0.98***	0.15	2.16***	0.16	1.63***	0.17	1.42***	0.16
가구유형(기준:부부+미혼자녀)										
한부모가구	0.26	0.33	0.37	0.40	0.20	0.46	1.00	0.43	0.14	0.53
3세대 가구	-0.18	0.18	0.23	0.21	0.96***	0.20	0.84***	0.23	0.79***	0.21
기타 가구	-1.54***	0.51	-1.37**	0.64	0.45	0.52	0.16	0.57	0.06	0.51
지역 (기준: 대도시)										
(2) 중소도시	0.20*	0.12	0.28*	0.15	-0.12	0.15	-0.31**	0.16	0.05	0.16
(3) 읍면지역	0.27**	0.13	0.22	0.16	-0.43***	0.16	-0.50***	0.17	-0.18	0.17
보육교육시설 특성										
접근성	-0.04	0.11	0.03	0.13	-0.16	0.13	-0.05	0.14	-0.24	0.14
신뢰기관 유무	0.53***	0.15	0.58***	0.20	0.39**	0.20	0.32	0.22	0.14	0.20
상수항	-0.48	0.61	-5.72	0.77	-4.24	0.78	-5.68***	0.85	-4.22***	0.89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관측치 = 3,232 / Log pseudolikelihood = -3137.73 / Prob > chi2 = 0.0000

18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 영유아 돌봄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결과 - 돌봄 유형별 선택확률

연령	가구유형	(1)부모 돌봄만	(2)어린이집	(3)개인양육	(4)유치원	(5)유치원+개인양육	(6)개인양육
0세	유형1	0.5257	0.1680	0.0223	-	-	0.2841
	유형2	0.9108	0.0454	0.0000	-	-	0.0438
	유형3	0.7060	0.0634	0.0000	-	-	0.2306
	유형4	0.3181	0.0606	0.1070	-	-	0.5143
	유형5	0.8222	0.0156	0.0003	-	-	0.1619
	유형6	0.7024	0.0018	0.0012	-	-	0.2947
1세	유형1	0.2063	0.4664	0.1435	-	-	0.1838
	유형2	0.6508	0.3032	0.0009	-	-	0.0451
	유형3	0.6459	0.3515	0.0009	-	-	0.1330
	유형4	0.0884	0.1952	0.3908	-	-	0.3256
	유형5	0.6149	0.2090	0.0117	-	-	0.1644
	유형6	0.3404	0.0124	0.2572	-	-	0.3900
2세	유형1	0.0204	0.6415	0.2980	-	-	0.0401
	유형2	0.2270	0.7417	0.0107	-	-	0.0206
	유형3	0.1097	0.8339	0.0000	-	-	0.0564
	유형4	0.0074	0.3062	0.6042	-	-	0.0822
	유형5	0.1907	0.6129	0.1006	-	-	0.0958
	유형6	0.2608	0.0478	0.4323	-	-	0.2591
3세	유형1	0.0167	0.5812	0.1547	0.1433	0.0629	0.0412
	유형2	0.1252	0.6108	0.0286	0.1999	0.0186	0.0170
	유형3	0.0908	0.6104	0.0524	0.1510	0.0953	0.0000
	유형4	0.0145	0.3951	0.3072	0.1230	0.1160	0.0441
	유형5	0.1061	0.4923	0.0929	0.2083	0.0622	0.0382
	유형6	0.1680	0.2953	0.3536	0.0445	0.1326	0.0060
4세	유형1	0.0051	0.4255	0.1710	0.2079	0.1320	0.0585
	유형2	0.0533	0.4884	0.0407	0.3295	0.0575	0.0305
	유형3	0.0517	0.3997	0.0595	0.2899	0.1992	0.0000
	유형4	0.0040	0.2807	0.2048	0.1506	0.2024	0.0575
	유형5	0.0380	0.3396	0.1019	0.3252	0.1504	0.0450
	유형6	0.1614	0.1918	0.3287	0.0641	0.2385	0.0155
5세	유형1	0.0010	0.2361	0.1656	0.2720	0.2436	0.0818
	유형2	0.0159	0.3053	0.0452	0.4545	0.1318	0.0473
	유형3	0.0240	0.2487	0.0224	0.4202	0.2848	0.0000
	유형4	0.0007	0.1398	0.2671	0.2201	0.3107	0.0615
	유형5	0.0108	0.2002	0.1140	0.3624	0.2723	0.0402
	유형6	0.0323	0.1013	0.3852	0.0891	0.3751	0.0170
6세	유형1	0.0002	0.1224	0.1433	0.2318	0.3514	0.0910
	유형2	0.0054	0.1797	0.0412	0.5243	0.1867	0.0627
	유형3	0.0008	0.1128	0.0596	0.3321	0.4947	0.0000
	유형4	0.0001	0.0706	0.1954	0.2275	0.4342	0.0722
	유형5	0.0020	0.1052	0.0872	0.4297	0.3304	0.0455
	유형6	0.0076	0.0432	0.2881	0.0978	0.5478	0.0154

주: 가구유형1은 부부+미혼자녀-맞벌이, 2는 부부+미혼자녀-비맞벌이, 3은 한부모+미혼자녀, 4는 3세대-맞벌이, 5는 3세대-비맞벌이, 6은 기타가구임. 19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시간 및 비용

■ 분석 모형 - Heckman 선택모형

- 먼저, 돌봄 유형별 이용 여부를 선택하고 돌봄 시간과 비용이 결정되는 것을, 표본선택편의를 고려하여 Heckman(1976)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y_{2j} = \beta x_j + u_j \quad : \text{돌봄 시간 및 돌봄 비용의 결정}$$

$$y_{1j}^* = \alpha z_j + v_j \quad : \text{돌봄 이용여부 결정}$$

$$y_{1j} = 1, \text{ if } y_{1j}^* > 0 \quad y_{1j} = 0, \text{ otherwise}$$

- Z는 돌봄 유형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돌봄 시간 및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외조건을 포함한 설명 변수이며, 오차항은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함.
- 설명변수(X)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 아동 및 가구 특성 - 성별, 연령, 어머니 연령 및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가구유형, 지역, (2) 기관 특성 - 보육프로그램 수, 사립기관 여부 등 고려, 제외조건(Z)는 근처에 신뢰할 만한 기관 유무, 근처에 충분한 수의 기관 유무 등 고려

20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돌봄유형별 시간 및 비용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1단계 분석	어린이집 이용여부		어린이집 이용여부		어린이집 이용여부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아동 연령	0.00	0.01	0.03**	0.01	0.04***	0.01
어머니 연령	-0.02***	0.01	-0.02***	0.00	-0.01***	0.00
맞벌이여부	0.38***	0.04	0.28***	0.04	0.24***	0.04
근저 신뢰할만한 기관 유무	0.14***	0.04	0.13***	0.04	0.09***	0.03
상수항	0.34*	0.18	0.19	0.17	0.08	0.17
2단계 분석	이용시간(log)		보육비용(log)		시간당 비용(log)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아동 연령	0.02***	0.00	-0.18***	0.01	0.02***	0.01
아동 성별(남성)	-0.01	0.01	-0.01	0.01	0.01	0.01
어머니 연령	0.00	0.00	0.00*	0.00	-0.01***	0.00
어머니 교육연수	-0.01***	0.00	0.00	0.00	0.01***	0.00
다른 영유아수	-0.01	0.01	-0.01	0.01	-0.01	0.01
가구소득(등소득제외)	-0.04***	0.01	0.00	0.01	0.02*	0.01
(부부+미혼자녀)X맞벌이	0.09**	0.04	0.04	0.05	-0.02	0.04
(부부+미혼자녀)X비맞벌이	0.03	0.04	0.11**	0.05	-0.06	0.04
한부모가구	0.11**	0.05	0.06	0.06	-0.06	0.05
3세대X맞벌이	0.05	0.04	0.00	0.05	-0.01	0.04
3세대X비맞벌이	0.06	0.05	0.12**	0.05	-0.07	0.05
대도시 여부	-0.03***	0.01	0.00	0.01	0.04***	0.01
프로그램수	0.00	0.00	0.02***	0.00	0.06***	0.00
상수항	2.38***	0.08	6.53***	0.10	-0.13	0.10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관측수 = 3,249 (Selected = 1,544)
 Log likelihood = -1709.1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관측수 = 3,249 (Selected = 1,544)
 Log likelihood = -2149.7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관측수 = 3,249 (Selected = 1,544)
 Log likelihood = -2064.7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21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시간 및 비용

■ 유치원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1단계 분석	유치원 이용여부		유치원 이용여부		유치원 이용여부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아동 연령	0.38***	0.03	0.42***	0.03	0.32***	0.03
어머니 교육수준	0.12***	0.03	0.11***	0.03	0.11***	0.03
맞벌이여부	-0.14**	0.06	-0.06	0.05	-0.04	0.05
기관수 충분여부	0.09**	0.04	-	-	-	-
근저 신뢰할만한 기관 유무	0.03	0.04	0.10**	0.04	0.05**	0.02
상수항	-2.26***	0.19	-2.44***	0.19	-2.09***	0.17
2단계 분석	이용시간(log)		보육비용(log)		시간당 비용(log)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아동 연령	-0.08***	0.01	0.10***	0.01	0.42***	0.04
아동 성별(남성)	0.00	0.01	-0.01	0.01	-0.04	0.03
어머니 연령	0.00**	0.00	0	0.00	0	0.00
어머니 교육연수	-0.02***	0.00	0.02***	0.00	0.07***	0.02
가구소득(등소득제외)	-0.01	0.01	0.07***	0.02	0.13***	0.05
(부부+미혼자녀)X맞벌이	0.00	0.04	0.02	0.06	-0.05	0.13
(부부+미혼자녀)X비맞벌이	-0.14***	0.04	0.03	0.06	0.03	0.13
한부모가구	-0.03	0.05	0.02	0.07	-0.07	0.16
3세대X맞벌이	-0.02	0.04	0.05	0.06	0.01	0.14
3세대X비맞벌이	-0.08	0.05	0.00	0.07	0.02	0.15
대도시 여부	-0.05***	0.01	0.03**	0.02	0.07*	0.04
프로그램수	0.01***	0.00	0.06***	0.00	0.06***	0.01
사립유치원 여부	0.02	0.01	1.62***	0.02	0.85***	0.06
상수항	2.80***	0.10	3.05***	0.14	-4.05***	0.44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관측수 = 1,806 (Selected = 869)
 Log likelihood = -834.1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관측수 = 1,649 (Selected = 809)
 Log likelihood = -1109.9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관측수 = 1,649 (Selected = 809)
 Log likelihood = -2184.3 / Prob > chi2 = 0.0000
 / LR test(rho=0) : Prob > chi2 = 0.0000

22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영유아 돌봄 유형별 이용자수

$$NCCS_j^f = \sum_a \sum_f P_j^{af} N_i^{af}$$

- NCCS는 아동돌봄 유형별 이용자수, N는 가구유형 및 연령을 고려한 아동 수, P는 연령별 가구유형 돌봄 유형별 돌봄 이용 확률, f는 가구유형(맞벌이여부 포함), a는 아동 연령, j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 유형을 나타냄.

- 영유아 돌봄유형별 이용시간 및 비용

$$NCCS1_i^f = \sum_a \sum_f P_j^{af} N_i^{af} Hour_i^{af}$$

$$NCCS2_i^f = \sum_a \sum_f P_j^{af} N_i^{af} Cost_i^{af}$$

- NCCS1은 아동돌봄 유형별 총시간, NCCS2는 총비용, N는 가구유형 및 연령을 고려한 아동 수, P는 연령별 가구유형 돌봄 유형별 돌봄이용 확률, f는 가구유형(맞벌이여부 포함), a는 아동 연령, j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 유형을 나타냄.

23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영아(0~2세)의 시설양육 규모는,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는 경우 41.4('21) → 44.1('36), 가구변화 고려하는 경우 41.4('21) → 50.5('36)로, 개인양육은 14.3('21)에서 17.8('36)과 21.3('36)으로 부부 맞벌이비중에 따라 시설+대리양육 비중 증가

[그림] 영아의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2021~36년)



#. 2021년 인구수(88.4만명)=100으로 환산

24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2021년과 2036년 결과를 시나리오별 비교하면, 영아(0~2세)의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과 맞벌이 비중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시설과 개인양육(친인척, 돌보미)의 비중이 44.7(시나리오4)에서 53.9(시나리오3)로 달라질 수 있음.

[그림] 영아의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 시나리오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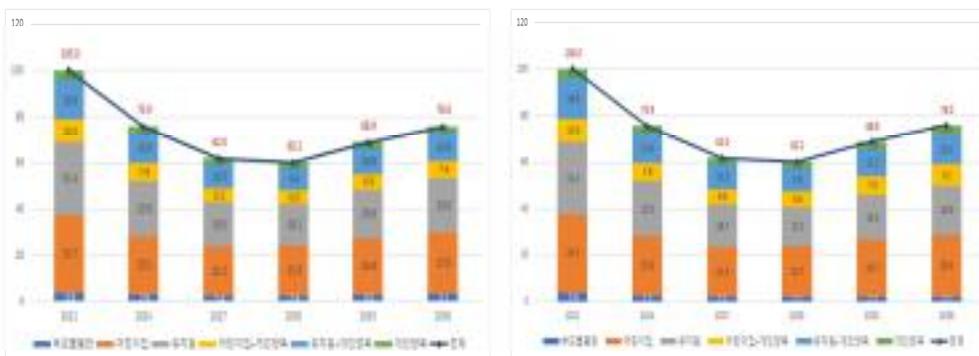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25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유아의 시설양육(어린이집+유치원) 규모는,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는 경우 91.9(‘21) → 69.7(‘36), 가구변화 고려하는 경우 91.9(‘21)→ 70(‘36)로, 개인양육은 31.2(‘21)에서 각각 23.7(‘36)과 26.1(‘36)로 변화(인구감소로 전체규모는 감소)

[그림] 유아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2021~36년)



<인구변화만 고려 시>

<가구변화-시나리오6 (맞벌이비중 최대) 고려 시>

#. 2021년 인구수(160.3만명)=100으로 환산

26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유아 가구의 전체 규모는 감소하나 맞벌이 비중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어린이집은 43.6('21)→ 34.6~36.1('36), 유치원은 48.3('21)→34~35('36), 개인양육은 31.1('21)→ 21.8~27.7('36)로 변화

[그림] 유아의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 시나리오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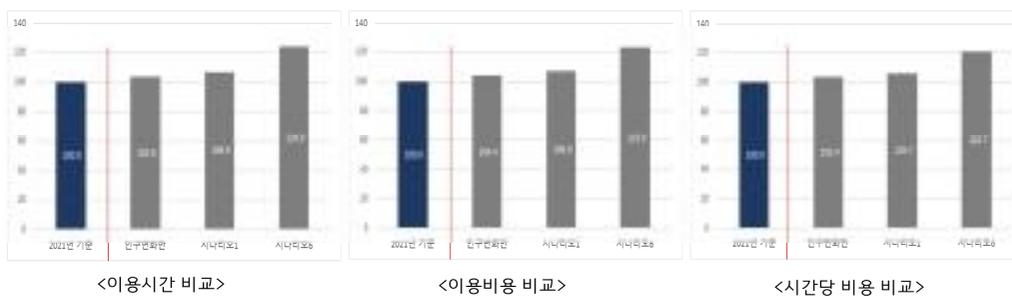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27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기준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시, 맞벌이가구 비중에 따라서 이용시간은 2021년 수준을 100이라고 하면 2036년 106.9~124.0으로, 비용은 106.9~123.0으로, 시간당 비용은 105.7~120.7로 변화

[그림] 영아의 2036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비용 규모 - 시나리오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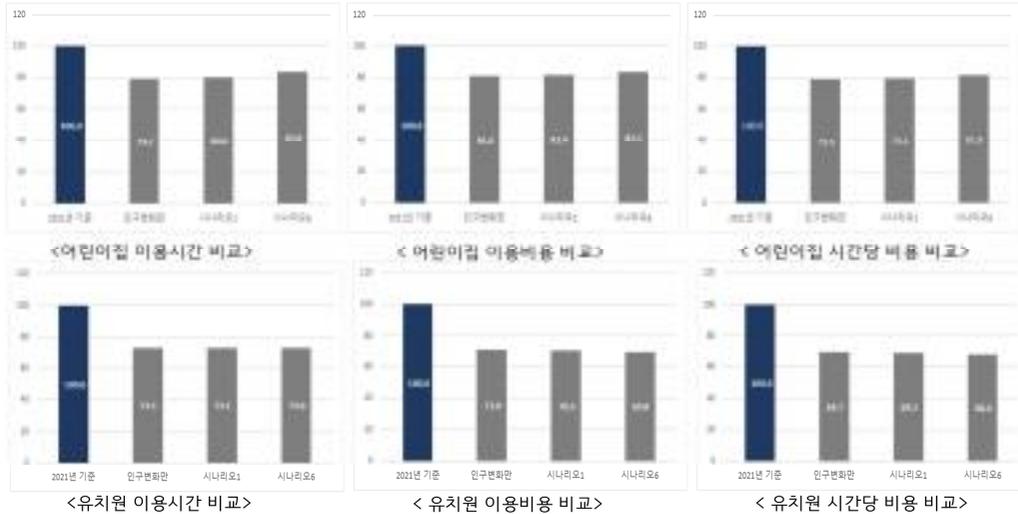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를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를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28

4. 영유아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그림] 유아의 2036년 시설 이용시간 및 비용 규모 - 시나리오별 비교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29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고령층 가구수 추계

- 고령층 인구구조 변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따르며, 가구구조 변화는 다음의 시나리오로 구성 및 결과 도출.
 - 2019-2021년 가구 전이행렬이 2021년 이후에도 유지 → 가구유형별 변화가 크지 않음.
 - 2015-17년과 2017-19년, 2017-19년과 2019-21년 전이행렬 간 평균변화율 적용 →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의 완만한 증가.
 - 2017-19년, 2019-21년 전이행렬 간의 변화율 →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의 가파른 증가.
- 추가로, 연령대(65~74세, 75세 이상), 성별 구분, 가구 내 고령자 수에 따라 구분.

30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고령층 가구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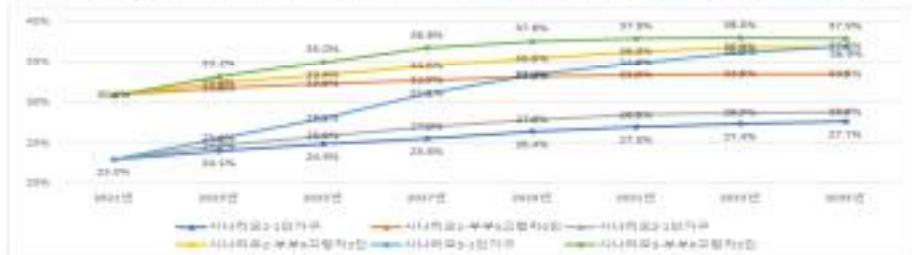
- (시나리오1 결과) 2019-21년 가구전이행률이 2021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가구유형의 완만한 변화

구분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소계	고령사 1인	고령사 2인	소계	고령사 1인	고령사 2인+	소계	고령사 1인	고령사 2인+
2021년	23.0%	36.9%	6.0%	30.9%	22.2%	12.2%	10.0%	17.9%	8.8%	9.1%
2023년	24.1%	37.6%	5.8%	31.8%	21.1%	11.5%	9.6%	17.2%	8.4%	8.7%
2025년	24.9%	37.9%	5.7%	32.3%	20.4%	11.0%	9.4%	16.8%	8.2%	8.5%
2027년	25.6%	38.1%	5.5%	32.7%	19.8%	10.7%	9.1%	16.4%	8.0%	8.4%
2029년	26.4%	38.4%	5.2%	33.2%	19.3%	10.3%	8.9%	16.0%	7.8%	8.2%
2031년	27.0%	38.5%	5.1%	33.4%	18.9%	10.1%	8.8%	15.7%	7.7%	8.0%
2033년	27.4%	38.5%	5.0%	33.5%	18.6%	9.9%	8.7%	15.6%	7.6%	8.0%
2035년	27.7%	38.4%	4.9%	33.5%	18.4%	9.8%	8.6%	15.5%	7.6%	7.9%

31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고령층 가구수 추계

- 고령층(65세 이상)의 가구 구조 변화 -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비중 (2021~36년)



- 75세 이상 인구의 가구 구조 변화 -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비중 (2021~36년)



32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분석 모형 - 다항로짓모형

$$Y_{ij} = \beta_j X_i + \epsilon_{ij} \quad \text{이 는 개 인, } i \text{ 는 돌봄유형}$$

where $y_{ij} = \max U(y_{i1}, y_{i2}, \dots, y_{ij})$

- (모형1) 종속변수(5가지): (1) 비공식돌봄, (2) 비공식+공식돌봄, (3) 공식돌봄, (4) 돌봄 필요하나 도움받지 못함, (5) 도움 필요 없음(건강 양호)
- 설명변수(X)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 고령자 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여부 등, (2) 가구 특성- 가구유형, 근거리 거주 자녀 수, 가구소득 등, (3) 건강 상태: 일상생활제한 정도, 만성질환수 등 고려

■ 분석자료: 고령화패널조사자료(2014~2020년)

33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 노인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기준: (5)돌봄 필요없음- 건강양호)	(1) 비공식돌봄		(2) 비공식 +공식돌봄		(3) 공식돌봄		(4) 도움없음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남성	0.60***	0.07	-0.28	0.18	-0.02	0.17	0.54***	0.09
연령	0.12***	0.00	0.14***	0.01	0.14***	0.01	0.08***	0.01
고졸 이상	-0.1	0.08	0.27	0.21	-0.09	0.22	0.08	0.10
가구유형(기준:1인가구)								
부부가구X고령자1인	0.65***	0.25	1.02**	0.48	-0.32	0.54	-1.69***	0.59
부부가구X고령자2인	0.76***	0.10	0.57***	0.21	-0.83***	0.20	-0.18*	0.11
자녀동거X고령자1인	0.98***	0.13	0.39	0.27	-0.53**	0.24	0.17	0.14
자녀동거X고령자2인	1.22***	0.11	0.83***	0.24	-0.33	0.21	0.43***	0.12
기타가구X고령자1인	0.56**	0.26	-0.15	0.62	-1.07*	0.61	0.32	0.27
기타가구X고령자2인	0.90***	0.20	-0.13	0.55	-0.78*	0.45	-0.76**	0.34
건강상태(나쁜편)	1.13***	0.07	2.03***	0.22	2.13***	0.20	0.69***	0.08
adi 및 iadi지수	0.53***	0.02	0.61***	0.05	0.48***	0.05	0.30***	0.03
만성질환개수	-0.02	0.03	0.11*	0.06	0.15***	0.05	0.05*	0.03
근거리 거주 자녀수	0.08***	0.02	0.05	0.05	0.02	0.05	0.05*	0.03
의료급여 수급여부	-0.23*	0.12	0.50***	0.20	0.85***	0.17	0.46***	0.12
가구소득(log)	0.21***	0.04	0.08	0.09	0.28***	0.08	-0.13***	0.05
연도(기준: 2014년)								
2016년	-0.13	0.08	0.12	0.20	0.12	0.20	0.30***	0.11
2018년	-0.32***	0.08	-0.46**	0.21	0.12	0.19	0.07	0.11
2020년	-0.50***	0.09	-0.16	0.20	0.02	0.20	0.09	0.11
상수	-14.6***	0.47	-18.5***	1.12	-19.3***	1.05	-9.08***	0.56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관측치 = 17,220 / Log likelihood = -8782.5 / Prob > chi2 = 0.0000 / Pseudo R2 = 0.2147

34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추가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대체효과 고려 - 이변량프로빗 모형

- ▶ 공식 돌봄(Y1)과 비공식 돌봄(Y2)의 선택은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공식 혹은 비공식 돌봄 선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Z_{1i} = \alpha_1 + \beta_1 Z_{2i} + \gamma_1 X_{1i} + \epsilon_{1i}$$

$$Z_{2i} = \alpha_2 + \beta_2 Z_{1i} + \gamma_2 X_{2i} + \epsilon_{2i}$$

$$Y_{1i} = 1, \text{ if } Z_{1i} > 0 \quad Y_{1i} = 0, \text{ otherwise}$$

$$Y_{2i} = 1, \text{ if } Z_{2i} > 0 \quad Y_{2i} = 0, \text{ otherwise}$$

-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X)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 건강 상태 등이며, 두 식의 오차항은 상관관계가 있음.
- 설명변수(X)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 고령자 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 (2) 가구 특성- 가구유형, 근거리 거주 자녀 수, 가구소득 등, (3) 건강 상태: 일상생활제한 정도, 만성질환수 등 고려

35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돌봄유형별 결정요인

■ 노인 돌봄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비공식 돌봄			공식 돌봄		
	추정계수	s.e.	dy/dx	추정계수	s.e.	dy/dx
비공식 돌봄 여부	-	-	-	-0.63***	0.18	-0.004
남성	0.27***	0.04	0.030	-0.21***	0.08	-0.002
연령	0.03***	0.00	0.003	0.02***	0.00	0.0001
고졸 이상	-0.09**	0.04	-0.010	0.01	0.09	0.0001
가구유형(기준:1인가구)						
부부가구X고령자1인	0.44***	0.12	0.042	0.31	0.20	0.006
부부가구X고령자2인	0.32***	0.06	0.028	-0.32***	0.09	-0.004
자녀동거가구X고령자1인	0.43***	0.07	0.042	-0.30***	0.11	-0.004
자녀동거가구X고령자2인	0.37***	0.06	0.035	-0.65***	0.11	-0.005
기타가구X고령자1인	0.34**	0.14	0.030	-0.2	0.25	-0.003
기타가구X고령자2인	0.28**	0.12	0.024	-0.87***	0.24	-0.006
건강상태(나쁜편)	0.37***	0.04	0.039	0.50***	0.08	0.003
adi 및 iadi지수	0.18***	0.00	0.019	0.17***	0.01	0.001
만성질환개수	0.04***	0.01	0.004	0.13***	0.02	0.001
근거리 거주 자녀수	0.06***	0.01	0.006	-0.00	0.02	-0.000
의료급여 수급여부	-0.26***	0.07	-0.029	0.42***	0.08	0.003
가구소득(log)	0.07***	0.02	0.007	0.03	0.04	0.0002
연도(기준: 2014년)						
2016년	-0.08*	0.05	-0.010	0.20**	0.09	0.001
2018년	-0.16***	0.05	-0.018	0.07	0.09	0.000
2020년	-0.21***	0.05	-0.023	0.28***	0.09	0.002
상수	-4.82***	0.26	0.001	-4.74***	0.47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관측치 = 17,219 / Log likelihood = -4433.94 / Prob > chi2 = 0.0000 / LR test of rho=0: chi2(1) = 4.56401 / Prob > chi2 = 0.0303

36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돌봄시간 및 비용 분석

■ 돌봄 유형별 돌봄 시간 및 비용 추정

- 공식 돌봄 혹은 비공식 돌봄의 이용 여부를 선택하고, 돌봄 유형별 돌봄 시간과 돌봄 비용이 결정되는 것을, 표본선택편의를 고려하여 Heckman(1976)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y_{2j} = \beta x_j + u_j \quad \text{: 돌봄 시간 및 돌봄 비용의 결정}$$

$$y_{1j}^* = \alpha z_j + v_j \quad \text{: 돌봄 이용여부 결정}$$

$$y_{1j} = 1, \text{ if } y_{1j}^* > 0 \quad y_{1j} = 0, \text{ otherwise}$$

- Z는 돌봄 유형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돌봄 시간 및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외조건을 포함한 설명 변수이며, 오차항은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함.
- 설명변수(X)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 고령자 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여부 등, (2) 가구 특성- 가구유형, 근거리 거주 자녀 수, 가구소득 등, (3) 건강 상태: 일상생활제한 정도, 만성질환수 등 고려

37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시간 및 비용 분석

■ 돌봄 유형별 돌봄 시간 및 비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1st stage)	model (1) 비공식돌봄 여부		model (2) 공식돌봄 여부		model (3) 공식돌봄비용	
	추정 계수	s.e.	추정 계수	s.e.	추정 계수	s.e.
남성	0.09***	0.03	-0.25***	0.07	-0.09	0.06
연령	0.06***	0.00	0.04***	0.00	0.04***	0.00
1인가구	-0.23***	0.04	0.13	0.17	0.08	0.14
부부가구	-0.06*	0.04	0.19	0.17	0.08	0.14
자녀동거가구	0.01	0.04	0.24	0.17	0.2	0.14
근거리 거주 자녀수	0.05***	0.01	0.10***	0.03	0.08***	0.02
친밀 자녀수	0.02***	0.01	-	-	-	-
활동제한 질환수	0.29***	0.01	0.20***	0.02	0.19***	0.02
의료급여 수급여부	-	-	0.63***	0.08	0.62***	0.07
가구소득(log)	0.04***	0.01	-0.09***	0.03	-0.10***	0.03
상수	0.04***	0.01	-5.11***	0.47	-4.9***	0.40
구분 (2nd stage)	비공식돌봄시간(log)		공식돌봄시간(log)		공식돌봄비용(log)	
	추정 계수	s.e.	추정 계수	s.e.	추정 계수	s.e.
남성	-0.02	0.06	-0.05	0.12	-0.32	0.23
연령	-0.10***	0.00	0.01	0.01	0.03**	0.02
고졸 이상	0.04	0.04	-0.39**	0.17	0.26	0.31
건강상태(나쁜편)	0.02	0.02	0.08	0.07	0.62**	0.26
adl 및 iadl지수	0.03***	0.00	0.02**	0.01	0.09***	0.01
치매여부	0.01**	0.00	-	-	-	-
활동제한 질환수	0.00	0.01	-	-	-	-
만성질환수	-	-	0.01	0.04	0.15**	0.07
상수	13.7***	0.43	0.93	1.04	-6.7***	1.83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Number of obs=16,928 selected=1,563 Log likelihood=-6443.08 Prob > chi2=0.0000 LR test of indep. eqns. (rho=0): Prob > chi2=0.0000		Number of obs=16,928 selected=194 Log likelihood=-1075.78 Prob > chi2=0.0053 LR test of indep. eqns. (rho=0): Prob > chi2=0.0589		Number of obs=16,928 selected=287 Log likelihood=-1802.07 Prob > chi2=0.0000 LR test of indep. eqns. (rho=0): Prob > chi2=0.0000	

38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노인 돌봄 유형별 이용자수

$$NECS_t^j = \sum_s \sum_a \sum_f P_j^{saf} N_t^{saf}$$

- NECS는 노인돌봄 유형별 이용자수, N는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을 고려한 고령자수, P는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돌봄 유형별 돌봄 이용확률, s는 성별, a는 연령대(64-75세, 75세 이상), f는 가구유형, j는 돌봄 유형(비공식, 비공식+공식, 공식, 도움필요, 도움 필요 없음)을 나타냄.

- 노인 돌봄 유형별 이용시간 및 비용

$$HECS_t^j = \sum_s \sum_a \sum_f P_j^{saf} N_t^{saf} \times H_j^{saf}$$

- HECS는 노인돌봄 유형별 돌봄 시간, N는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을 고려한 고령자수, P는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돌봄 유형별 돌봄이용 확률, H는 돌봄 시간, s는 성별, a는 연령대(64-75세, 75세 이상), f는 가구유형, j는 돌봄 유형(비공식, 비공식+공식, 공식, 도움필요, 도움 필요 없음)을 나타냄.

39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65세 이상 인구의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는, 비공식 돌봄은 (1) 인구변화만 고려 시 2021년 6.5(=비공식 돌봄 5.6 + 중복유형 0.9) → 2035년 12.5로 증가, (2) 가구구조변화 고려 시 2035년 10.8이 됨.
- 공식 돌봄은 모두 2021년 2.5 규모 → 2035년 4.8로 변화(공식 돌봄 비중이 작기 때문)하나, 돌봄이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인구 규모 7.8까지 고려하면 공식 돌봄 필요규모는 12.6까지 증가 가능성

[그림] 고령자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2021~36년)



5. 노인 돌봄 수요 전망 - 장래 이용규모 추계

- 75세 이상 인구의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는, 비공식 돌봄은 (1) 인구변화만 고려 시 2021년 12.9(=비공식 돌봄 9.4 + 중복유형 3.5) → 2035년 26.8로 증가, (2) 가구구조변화 고려 시 2035년 23.9~25.9로 변화
- 공식 돌봄은 모두 2021년 5.1 규모 → 시나리오에 따라 9.1(인구변화), 9.7~9.9(가구변화)로 변화, 돌봄이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인구 규모 13.4를 고려하면 공식 돌봄 필요규모는 23.3까지 증가 가능성, 공식 돌봄 시간은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의 2.5~2.7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고령자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 추계 결과(2036년) - 75세 이상



6.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인구변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변화를 전망할 때,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아동(특히 영아)의 경우, 가구구조 변화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하여 아동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돌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 가구 구조 특성 변화는 **돌봄 유형별 수요, 돌봄 시간, 돌봄의 질(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가구구조 및 맞벌이 가구 증가는 시설 돌봄의 비중, 돌봄 시간, 돌봄 비용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아동 돌봄의 질적인 미스매치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2035년 고령돌봄에 대한 수요(전체 및 공식 모두)는 현재의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돌봄 인력 부족이 우려됨.
 - 향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인력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철희·엄상민·이종관 2023).
 - 건강 관리 및 개선, 고령화 대응 주거/도시 환경 변화를 통한 **돌봄 수요 확대 억제**와 **돌봄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

시나리오별 노동 인력 부족분 전망: 2026년과 2031년 - 일부 사례 (이철희 외 2023)

분류	산업명	2026				2031			
		S1	S2	S3	S4	S1	S2	S3	S4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	0	0	0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84	항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외국기관	-2,370	-343	1,685	842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1,078	-157	773	386	0	0	0	0
	숙련직군	-90	-13	65	33	0	0	0	0
	비전문직군	-1,203	-173	847	423	0	0	0	0
85	교육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86	보건업	-333,896	-333,552	-333,207	-166,604	-445,003	-444,628	-444,253	-222,126
	전문직군	-15,167	-15,148	-15,129	-7,564	-29,987	-29,958	-29,929	-14,964
	준전문직군	-185,456	-185,265	-185,075	-92,537	-241,676	-241,474	-241,273	-120,636
	숙련직군	-2,519	-2,516	-2,514	-1,257	-3,824	-3,821	-3,817	-1,909
	비전문직군	-130,754	-130,622	-130,490	-65,245	-169,515	-169,375	-169,234	-84,617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94,039	-394,039	-394,039	-197,020	-582,588	-582,588	-582,588	-291,294
	전문직군	-201,811	-201,829	-201,847	-100,923	-241,801	-241,809	-241,816	-120,908
	준전문직군	-140,062	-140,056	-140,050	-70,025	-174,815	-174,820	-174,825	-87,413
	숙련직군	-15,764	-15,765	-15,767	-7,883	-24,473	-24,473	-24,474	-12,237
	비전문직군	-36,403	-36,389	-36,376	-18,188	-141,499	-141,485	-141,472	-70,736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527	-11,902	-9,277	-4,638	-20,219	-19,048	-17,876	-8,938
	전문직군	0	0	0	0	0	0	0	0
	준전문직군	-14,527	-11,902	-9,277	-4,638	-20,219	-19,048	-17,876	-8,938
	숙련직군	0	0	0	0	0	0	0	0
	비전문직군	0	0	0	0	0	0	0	0

III. 발표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9월 22일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책토론회

* 본 발표 자료의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문제제기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제반 사회경제문제는 돌봄의 문제로 귀결
 - 돌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
 - 돌봄은 노후와 더불어 노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빠른 인구고령화로 가족과 국가의 돌봄 부담 증가
 - 돌봄의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국가 책임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
- 증가하는 돌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마련 시급
 - 돌봄의 다양한 영역에서 초과수요 발생, 점차 심화 전망

'반년 대기 기본' 부모가 '울..갈 길 먼' 아이돌봄'

돌봄비 신청 후 긴 대기 시간..1년도 기다려
근무 태도 관리 시스템 없고 징계도 유명무실
대안 없는 맞벌이 부부, 돌봄비 눈치 보기도

YTM2023.5.31]

국민연금만큼 노인 돌봄 문제가 급하다

[정희권의 눈가의 기술]



2.

문제제기

- 돌봄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 이에 맞춰 정부도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발표

'갑자기야근, 애는 아파하니...'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도입된다
자녀 등·하원 때 1시간만 이용가능한 아이돌봄미 서비스 도입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 추진...한국형 '유니트 케어' 도입
장기요양보험, 폭발적 수요 감당 위해 돌봄 기술 다양화 절실
갑작스런 질병·부상 땀 '국민 긴급돌봄'...청년·중장년도

- 그러나 초과수요와 서비스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
- 오늘 발표에서는,
 -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에서 오랫동안 고착되어온 가격과 공급 규제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돌봄서비스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3

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약 요인 (1) 가격 규제와 초과 수요

- 공공부문 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가격 결정 구조
 - 공공성 확대 목적(수요자 비용 부담 완화)으로 돌봄서비스 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고 수요자에게는 바우처(낮은 자부담) 제공
 - 가격은 돌봄 시장 내 수요자(비용)와 공급자(소득)의 가장 큰 유인체계
- 돌봄서비스 수급을 왜곡하는 “이중 가격 규제”
 - 낮은 서비스 가격이 초래하는 공급 제한
 - 열악한 종사자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종사자 임금
 - 양질 종사자의 진입을 억제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재교육 등 투자 한계
 - 낮은 자부담(유효가격)은 수요를 높이는 영향
-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맞물려 돌봄서비스의 가격 규제는 초과수요를 심화하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품질을 낮출 가능성

4

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약 요인 (2) 경직적인 공급 규제

- 경직적인 공급 구조는 초과 수요 문제를 악화
-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경제 환경
 - 매년 30-50만 명의 생산연령인구감소 전망
 - 산업 전반의 경황 인구 부족 상황에서 돌봄 인력 확충은 갈수록 어려울 것
- 사업자와 종사자의 진입을 막는 공급 규제
 -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규제
 - 예: 요양시설 사업자의 건물·토지 소유 의무 규제
 - 채용 기반 공공 서비스 공급 구조
 - 예: 파트타임 종사자 진입 억제, 경직 금지
 - 종사자 자격 규제
 - 예: 일정 기간 교육 이수 필수(아이돌보미 100시간), 직역간 칸막이
- 합리적 공급 규제 필요
 - 공급 규제 정책은 품질 관리의 편익과 공급 제한의 비용이 공존
 - 인구변화가 심화될수록 공급 규제의 한계편익은 줄고 한계비용 커질 것
 - 품질 관리와 공급 제한의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고려해야

5

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약 요인 (3) 규제와 갈등으로 분절적 돌봄 서비스의 고착화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돌봄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유형과 범위는 분절적·제한적
 - 사례 1: 의료-요양으로 이분화된 노인 돌봄
 - 노인 건강 수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는 의료-요양 간 연속적·복합적이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이분화된 제도와 비합리적인 유인체계로 인해 사회적 입원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 사례 2: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
 -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이돌봄과 가사 도움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 존재
그러나 분절적인 공급 구조(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가사서비스: 고용노동부)
- 경직적인 법과 제도, 이익집단 간 갈등은 분절적인 돌봄서비스 문제를 악화
 - 공공의 돌봄서비스 사업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
 - 경직적인 제도로 나뉜 이익집단 간 갈등은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공급을 제한
 - 정부 부처 역시 혁신적인 정책 도입 유인을 낮추고 부처간(내) 업무 칸막이 초래

6

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약 요인 (4) 민간 돌봄 역할 강화 기반 부족

- 민간 역할 없이는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는 불가
 -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공공의 돌봄서비스 공급 부족·부재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
 - 그러나 시장 실패와 정책 지원 미흡으로 민간 역할 활성화 어려움
- 시장 실패 사례
 - 간병서비스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와 비용 부담이 급증
 - 그러나 간병 인력 관리 체계 부재, 간병 시장 내 정보비대칭 만연,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 부재
- 정책 지원 부족 사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 비용 지원 없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들은 민간 제공 서비스 활용
 - 그러나 돌봄 종사자 신원 검증 어려움
 - 돌봄 기술 투자
 - 2021년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7504억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2.7%
 -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대부분 신약, 의료기기, 치료, 첨단 의료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지기술 R&D 규모는 매우 미흡

7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1)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정부 역할

- 일부에서는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돌봄 공급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돌봄의 공공성? 돌봄 종사자의 정당한 처우, 낮은 부담으로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 혜택
 - 정부가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필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21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하지만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돌봄 인력은 부족한 지금은 공급 통제와 규제만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갈수록 어려울 것
 - 종사자 처우를 높이고 수요자의 부담을 낮출 유일한 방법은 국가 부담을 늘리는 것
 -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한국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침체를 겪고 국가 부채 대국('23년 GDP 대비 223%)이 된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지출을 국가 채무로 총당한 것과 밀접히 관련
- 지금 필요한 정부 역할은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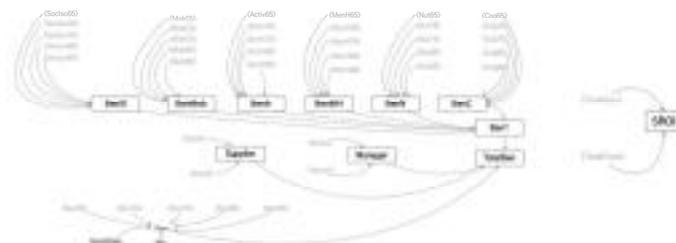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2) 가격 체계 개선과 돌봄 가치 제고

- 돌봄서비스 이중가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도모해야
- 서비스 유형과 품질을 고려하여 가격 다변화
 - 특히 고품질·고난도 돌봄서비스에 대한 가격 조정 필요
 - 양질 종사자 진입 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의 서비스 품질 및 처우 개선에 도움
 - 노인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등급에 따라 상이한 수가가 적용, 그러나 등급이 실질적인 서비스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 민간 돌봄서비스 플랫폼의 가격 결정은 유익한 시사점 제공
 -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 ↔ 가격 Bidding ↔ 소비자평가·가격 경쟁으로 품질 관리
- 자부담 합리화
 - 공급 확대가 우선이지만, 과도한 수요와 지출 증가로 시장 실패 발생하면 수요 조정을 위한 자부담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할 것
 - 일본, 개호보험 본인부담률 인상: 10% → 20%(2015년) → 30%(2018년)
 -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한 자부담 조정
 - 예: 요양병원의 사회적 임원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자부담(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 등) 격차 조정

9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2) 가격 체계 개선과 돌봄 가치 제고

- 돌봄 초과 수요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지만, 가격 규제는 이를 외면
 - 가격 다변화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 높아질 부담은 정부와 개인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
-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추정 연구 (2022)
 - 고속자(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사례
 - 사회적 투자수익률 = 1.62
 - (사회적 편익 항목) 사회적 고립감 해소, 활동 제한 완화 효과, 사회적 활동 효과, 인지 개선 효과, 우울감 개선 효과, 영양 개선 효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효과, 사업관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효과



10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3) 유연한 제도

- 제도 유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당장의 이해관계와 갈등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사회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유연화의 장단점을 따져야
- 의료-요양서비스의 분절적 상황 개선 시급
 -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의 분절적 공급 구조의 문제
 - 한국 병상 수 세계 최고('21년 인구 천명 당 병상수 한국 12.8, OECD 평균 4.3)
 - 요양병원 입원 10명 중 7명 입원 불필요한 노인
 - 원인: 재가 돌봄 부족, 맞춤형 시설 부족, 사회적 입원을 유발하는 비용 체계
 - 막대한 의료 재정 낭비 초래
 - 건강 수준과 돌봄 필요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대안 시설 도입 및 유인 체계 개선 필요
 - 아급성기(재활) 병원: 건강 및 기능 상태 회복과 지역 복귀 지원
 - 의료요양원: 요양서비스에 가벼운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시설
 - 정부, 재가급여 인상으로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의료-요양 기능 재정립 후 고려해야
 - 만성화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해결없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가능

11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3) 유연한 제도

- 민간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논란
 - 허용 찬성 주장
 - 치매 노인 증가 등에 따른 시설 요양 수요 증가
 - 높은 지가로 인한 도시의 돌봄 수요 대응 어려움
 - 규제 완화로 양질의 서비스 사업자 진입 허용
 - 허용 반대 주장
 - 폐업에 따른 노인 주거 불안정 우려
 - 대기업 자본 도입에 따른 시장화 우려, 계층에 따른 서비스 격차 우려
 - 공공 요양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 공공성을 강화 시사
-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잠재적 부작용을 근거로 임대 허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
 - 임대 허용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고민해야
 - 임대 허용 사업자 기준과 조건을 강화
 - 임대 요양시설에 대한 경영·재무 계획 및 현황 모니터링 강화
 - 현재 대기업은 주로 프리미엄 요양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점차 중산층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유인
 - 공공 부문의 서비스 질 개선과 투자 확대의 경쟁적 유인이 될 것

12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3) 유연한 제도

-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다변화
 - 채용 기반 공급 체계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제약
 - 다양한 선호와 근로 여건을 가진 공급자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공급 체계 다변화 필요
 - 민간 매칭 플랫폼 시스템의 활용 및 협력, 종사자 이력 등록·관리 등 공급 인프라 강화 필요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추진 방향
 - 주요 개정 사항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도화: 지정기관 또는 등록기관
 - 정부 비용 보조가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시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아이돌봄사 채용(또는 배치) 필수
 - 높은 시간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공급도 채용이 불필요한 종사자로 다변화 필요
 - 엄격한 자격제를 유지하여 공급을 규제하기 보다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 필요
 - 공공 자격증을 갖지 못한 민간의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품질은 낮을까?

13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4) 인력 확보 방안

- 가격 규제와 공급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돌봄 인력 확충 없이는 공급 확대 불가능
 - 특히 주요 산업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돌봄 인력 확충은 갈수록 어려울 것
- 내국인 돌봄 인력 다변화
 - 가족돌봄, 노노케어 등 확대
 - 노노케어는 노인일자리 공급을 통한 노인 경제 여건 개선에도 기여
 - “독일, 요양보호사 부족에 ‘가족 돌봄’ 새 판 짜다” (서울신문 2023.7.3.)
- 외국인 인력 도입 방안의 선제적 검토 필요
 - 돌봄의 상대적 가치가 타 산업 가치보다 낮다면 공급 부족 심화될 것
 - 점차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필요성 커질 가능성
 - 외국인 인력 도입 시 고려 사항
 - 비용 타당성: 예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최저임금 적용)
 - 국내 돌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 인력 송출국의 여건과 선진국 간 인력 확보 경쟁력

14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6) 품질 관리 강화

- 품질 관리는 양질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가격 결정과 돌봄 가치 제고의 기반
- 품질 관리 강화의 목표 재설정
 - 그 동안 품질 관리는 공급자 통제 목표가 우선
 - 수요자 만족도 증진에 초점을 두고, 민간과 공공의 기능 강화 목적에 집중해야
- 품질 관리 지표 다변화
 - 실적 위주 지표를 넘어 실질적인 품질 지표인 서비스 이용자 피드백까지 관리 지표 다양화
 - 품질 관리 기반 서비스 표준화·다양화 추진
- 실질적인 환류 방안 검토
 - 기관 및 사업자의 경영 관리 평가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품질 기반 가격 차별화 및 돌봄 종사자 재교육 지원 등 연계 검토

17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7) 돌봄 기술 활성화

- 돌봄 기술 활용의 기대 효과
 - 서비스 공급의 한계비용을 낮춰 공급을 늘리는 효과
 - 종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처우 개선 효과 클 것
 - 돌봄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돌봄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
- 돌봄 기술 투자의 방향
 - 현존 기술을 돌봄이 직면한 문제와 접목하여 돌봄서비스의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투자 필요
 - (예방 기술) 발병을 늦추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은 매우 높은 비용-효율적
 - 예: 노인의 근감소 예방 기술 → 낙상 및 활동장애 예방
 - (공간 장벽 해소 기술) 돌봄을 요하는 아이와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 IT 기술에 기반한 공간 장벽 해소는 상당한 시간 비용 절감 효과
 - 예: 비대면 진료, 모바일 병원
 - (재활 및 보조 기술) 노인 거동 지원은 삶의 질을 획기적 개선, 돌봄 종사자의 돌봄 활동에도 기여
 - 예: 웨어러블 로봇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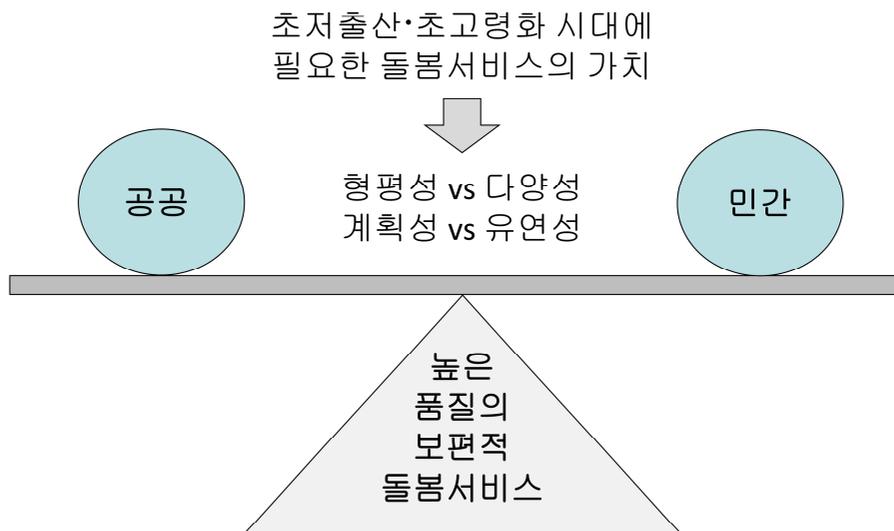
돌봄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7) 돌봄 기술 활성화

- 돌봄 기술 활성화의 핵심은 상용화 전략
 - R&D 투자로만 그치지 말고 돌봄서비스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특히 높은 비용으로 수요가 낮아진다면 기술의 부가가치를 창출 불가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활용하여 기술 확산
 - 기업의 근로자 복지와 연계하여 비용 부담 줄여야

- 돌봄 기술 활용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과 총괄 조직도 중요
 - 돌봄 기술의 편익은 비정형적이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 발생
 - 예: 웨어러블 로봇의 편익은 노인의 활동량 증가이고 그에 따른 발병 지연의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발생
 - 돌봄 기술 활용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편익의 경제적 가치에 추정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 예: 발병 지연에 따라 의료비와 장기요양 지출 절감 등
 - 돌봄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 기술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중요하며, 돌봄 기술 투자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공공 조직 필요

19

요약



20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고령화 관련 포럼 공동개최

1. 포스터

제34회 인구포럼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일시 2024. 3. 21 (목) 14:00-16:50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Health and Demographic Research Institute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Future Strategy Institute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회: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4:10-15:30	주제발표
발표 1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발표 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
발표 3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발표 4	고령자 범죄피해 특성과 정책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15:30-15:50	휴식
15:50-16:50	종합토론 및 폐회
좌장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안태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Tel. 044-287-8367 | E-mail. waiting23c@kihasa.re.kr

II. 행사사진





III. 발표자료(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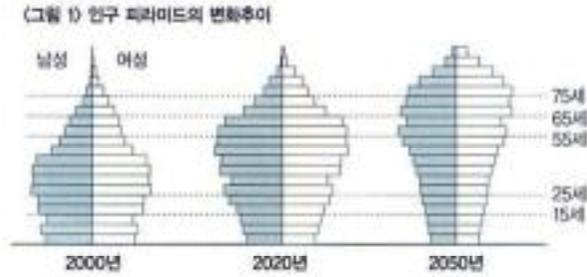
제39회 인구포럼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2024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 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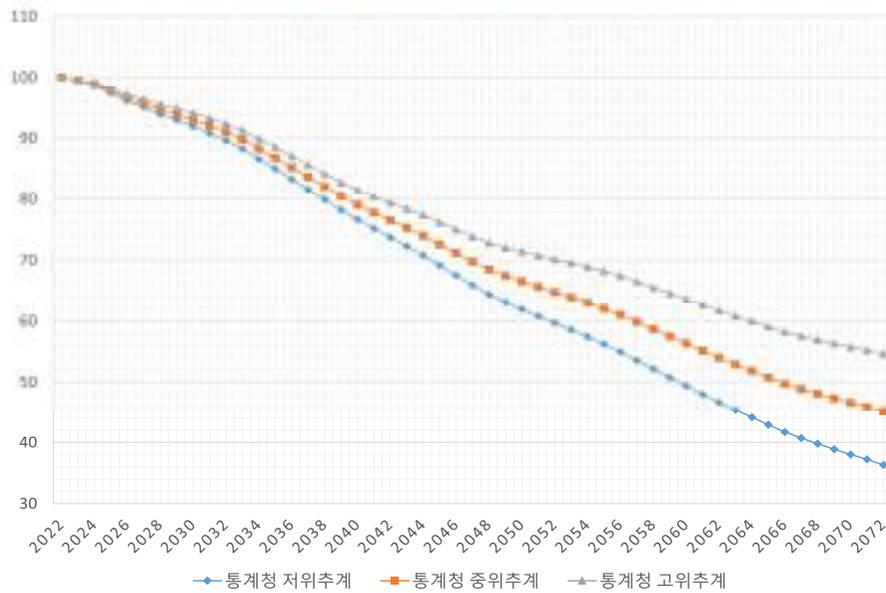
발표 개요

- 인구변화는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
- 미래 고령인구과 고령인력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 고용에 어떤 과제를 던지는가?
- 기술변화가 장래 한국의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인구와 기술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 고령자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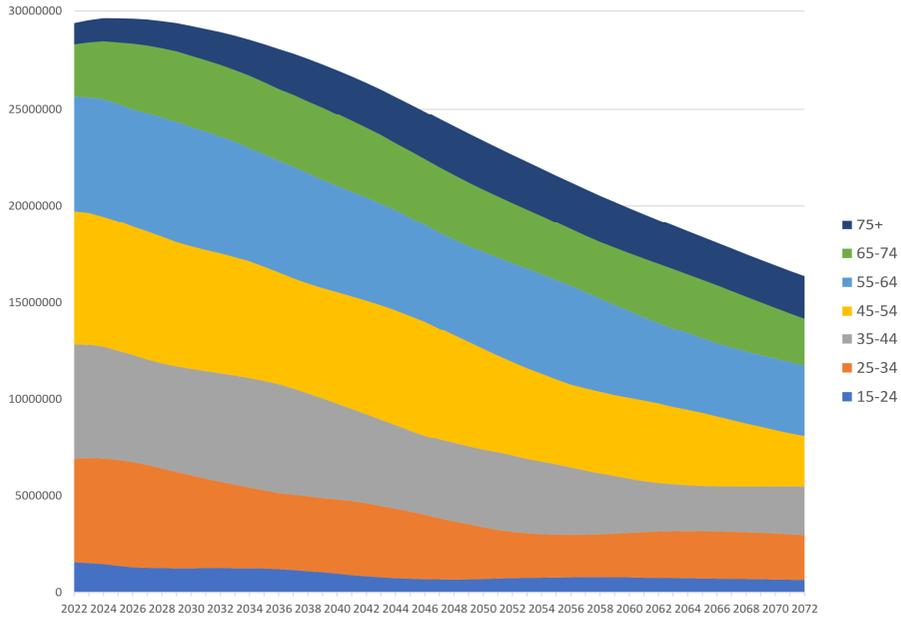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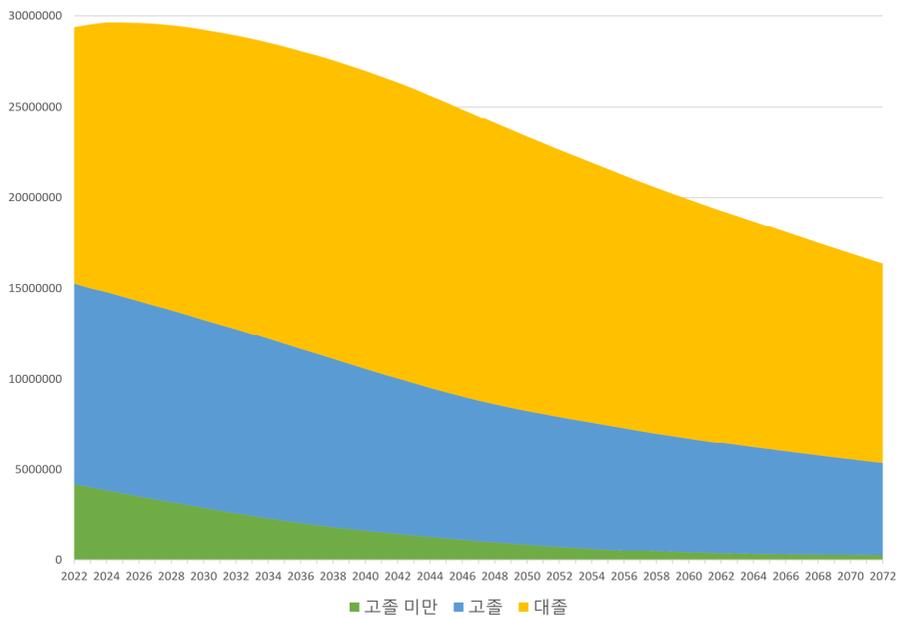
2022-2072년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계 중위: 2042년 76.4%, 2072년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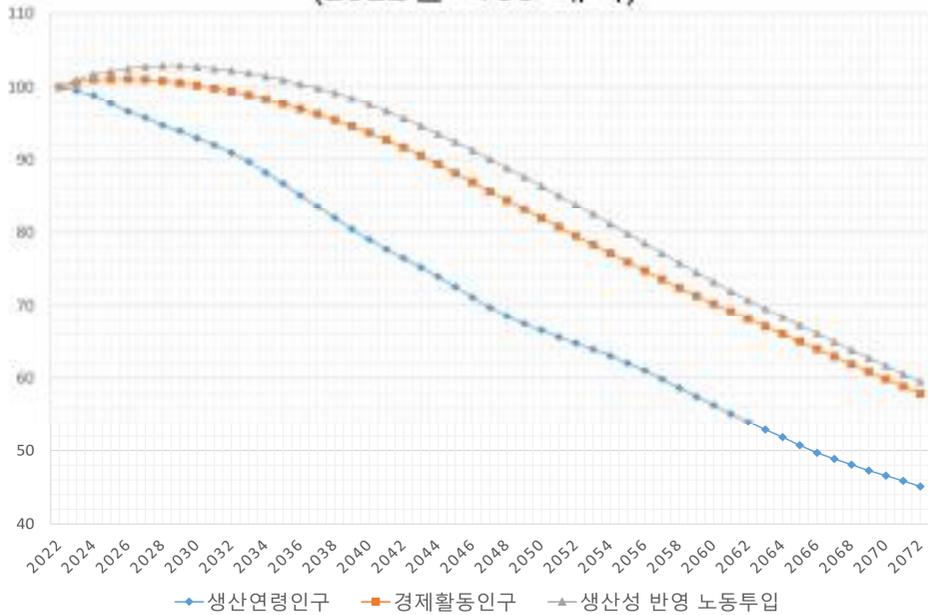
장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중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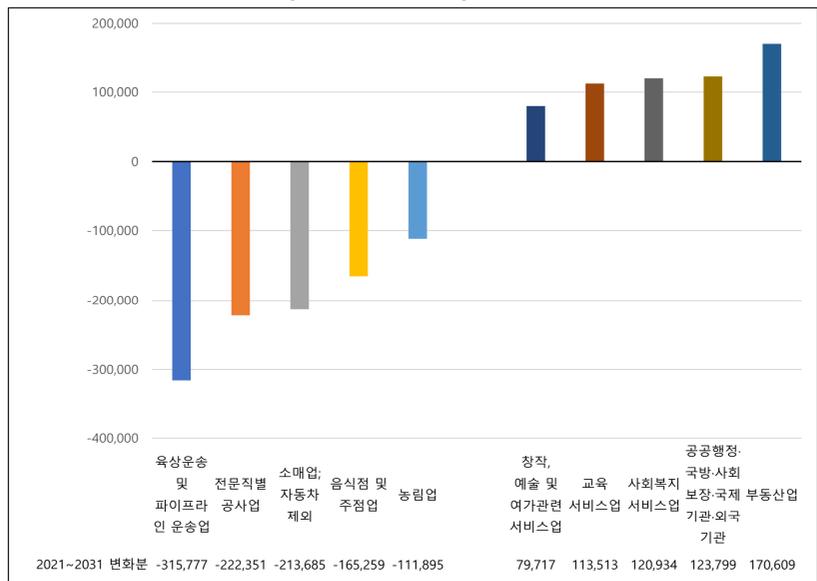
장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중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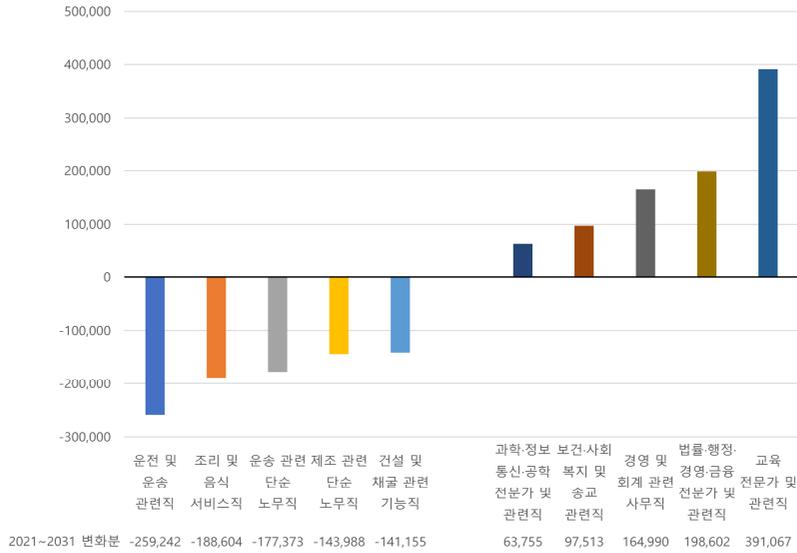
장래 노동 투입 지표 추계 비교 (2022년=100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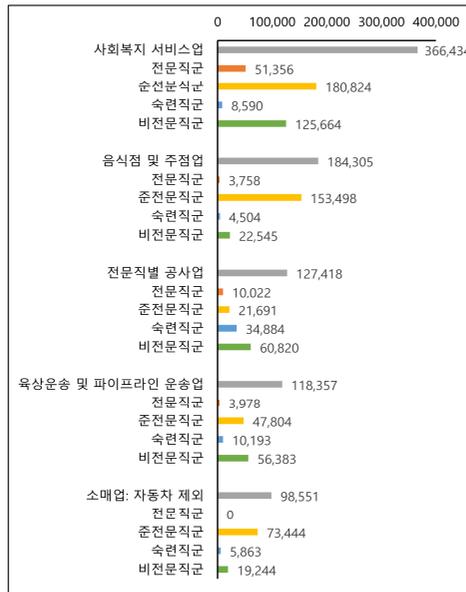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상위 및 하위 5개 산업 (이철희 2024)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직업별 노동공급 변화: 상위 및 하위 5개 직업 (이철희 2024)



2021~2031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 부족 규모: 상위 5개 산업 (이철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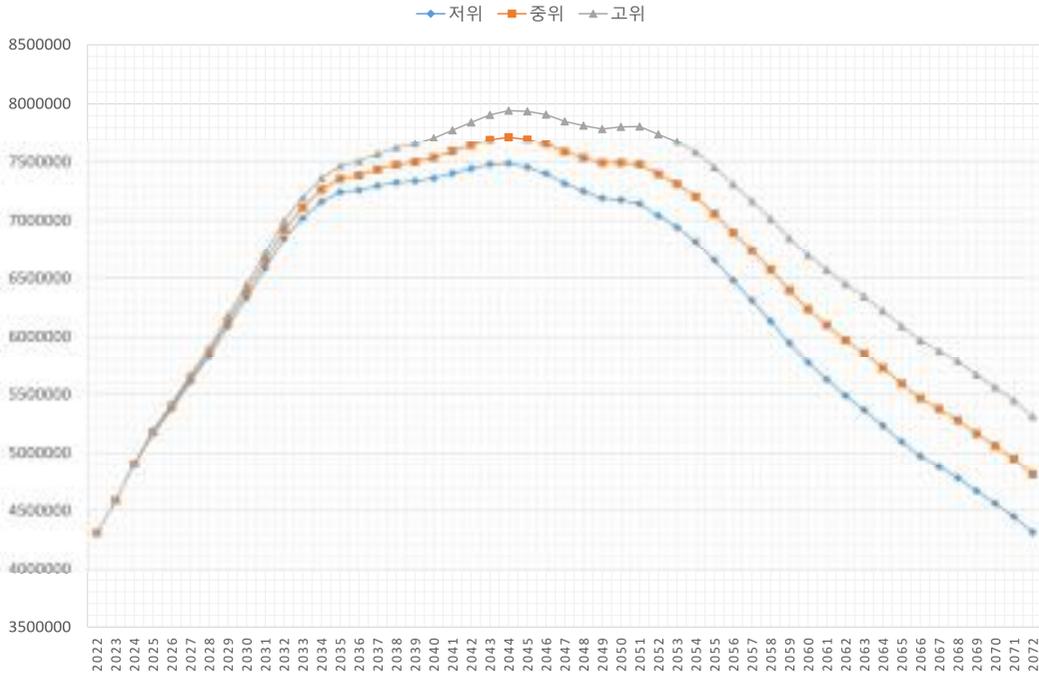
장래 노동시장 수급 변화 전망

- 당분간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
- 인구변화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부문 간, 인력유형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부문에 따라 노동부족과 공급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취업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학력별 인력의 비중도 산업/직업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연령·학력별 노동 인력 간 대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부문 간에는 물론, 각 부문 내에서도 연령·학력별 노동인력 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불균형 규모는 부문 및 유형(고령자와 청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대체 가능성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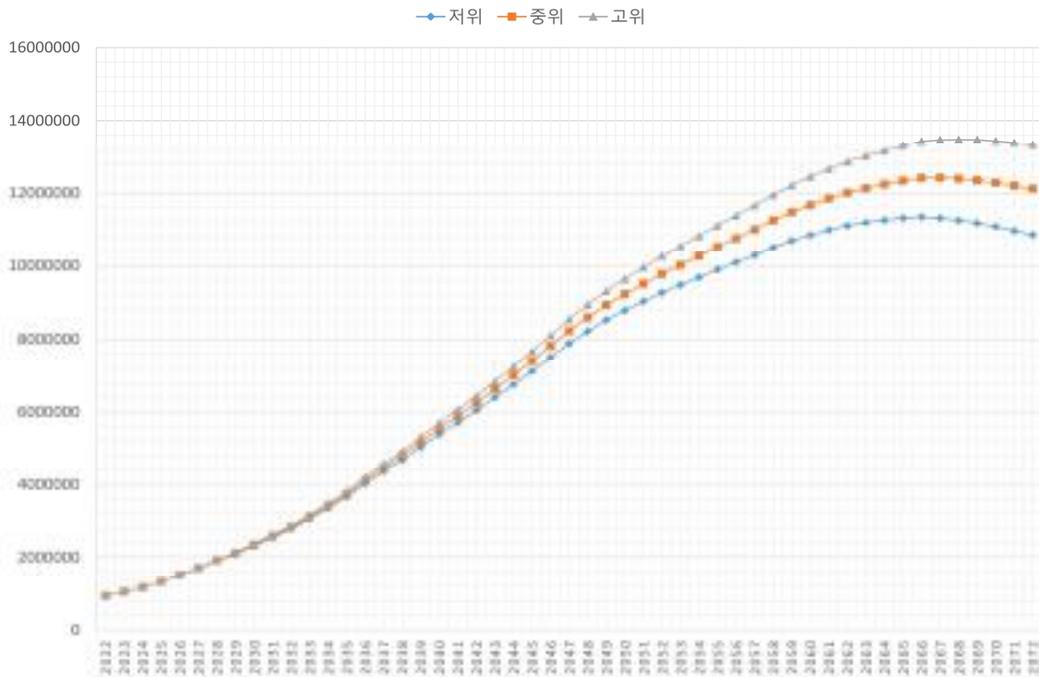
고령인구의 변화: “파워 시니어(Power Senior)” 활용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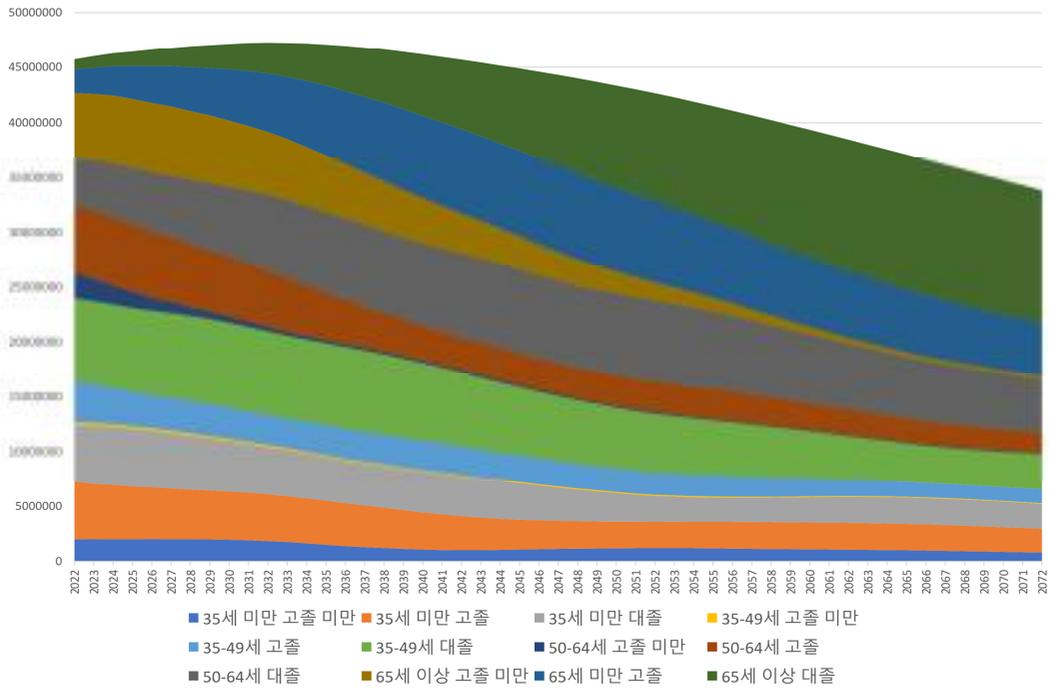
50~64세 대졸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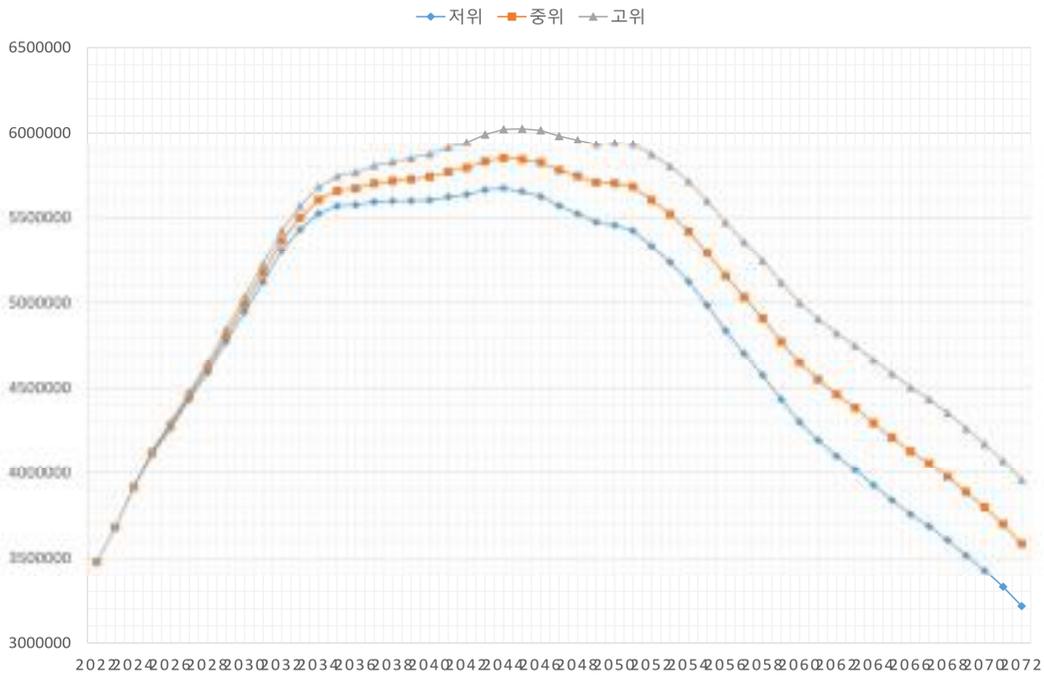
65세 이상 대졸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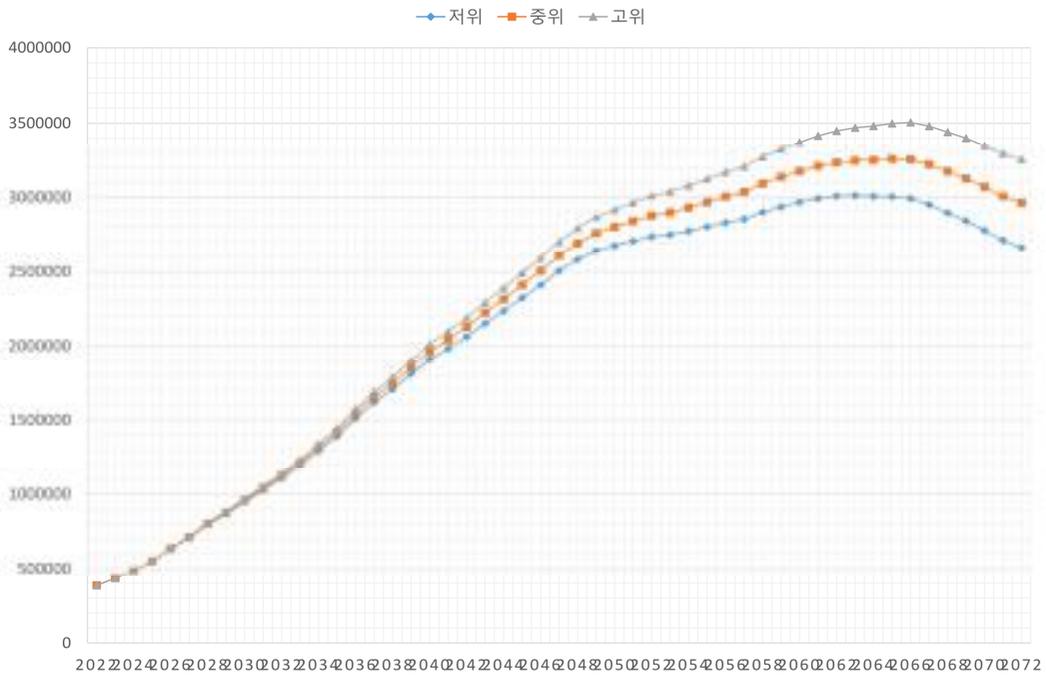
연령별 학력별 인구 구성 변화 전망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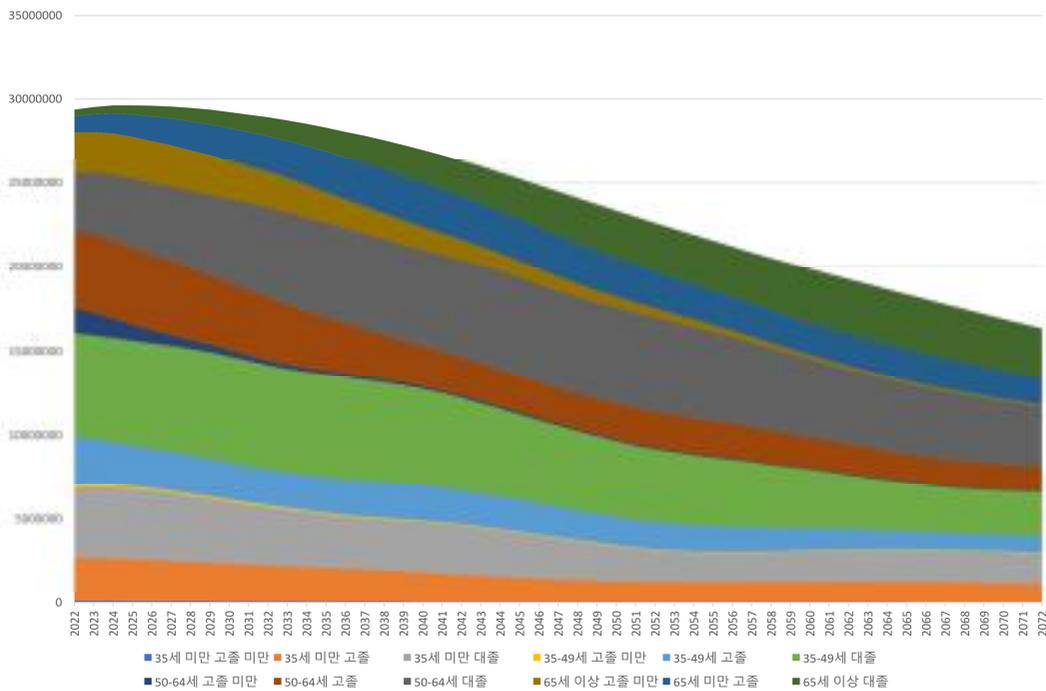
50~64세 대졸 경활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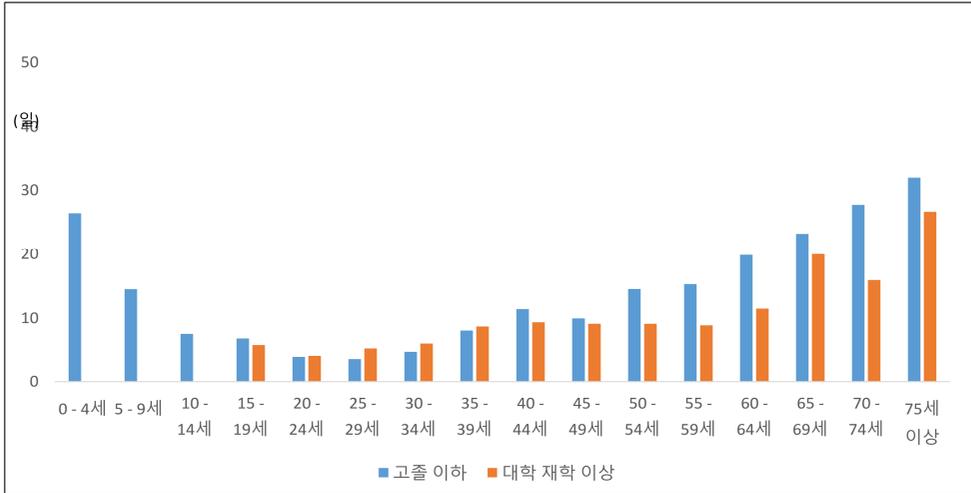
65세 이상 대졸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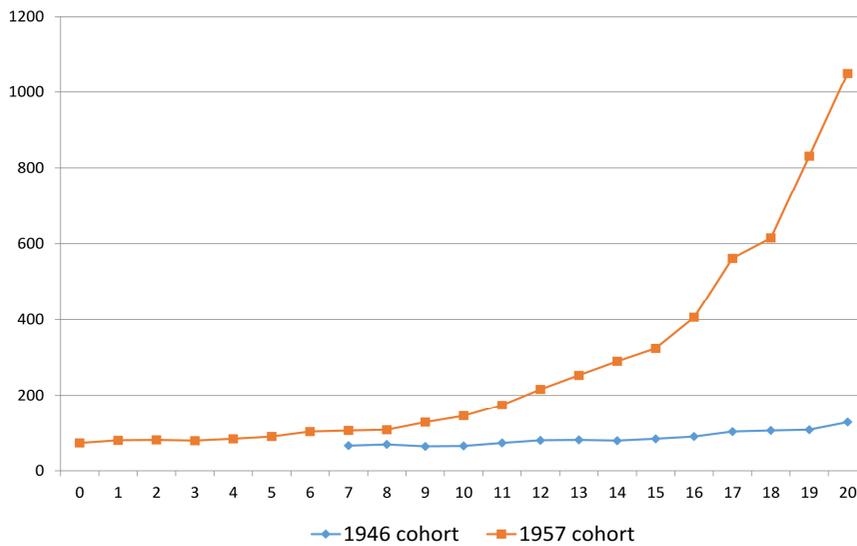
연령별 학력별 경찰인구 구성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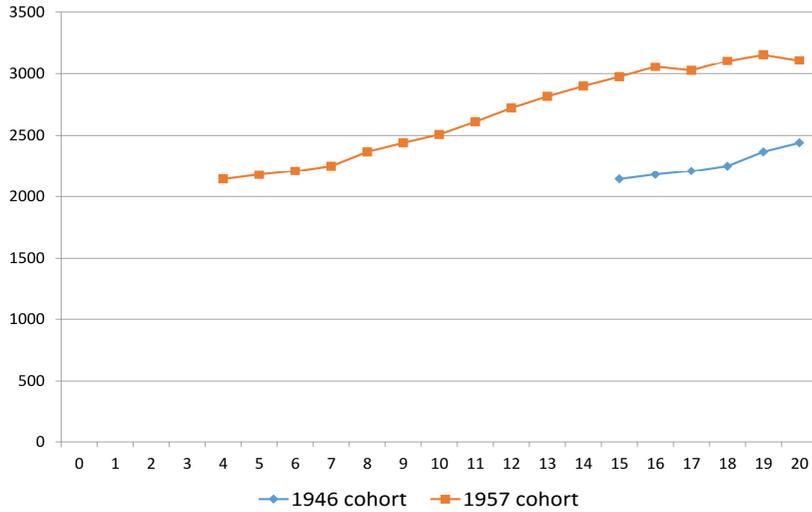
2019년 기준 학력 수준별 건강(연간 내원일수) 차이 이철희·권정현·김태훈(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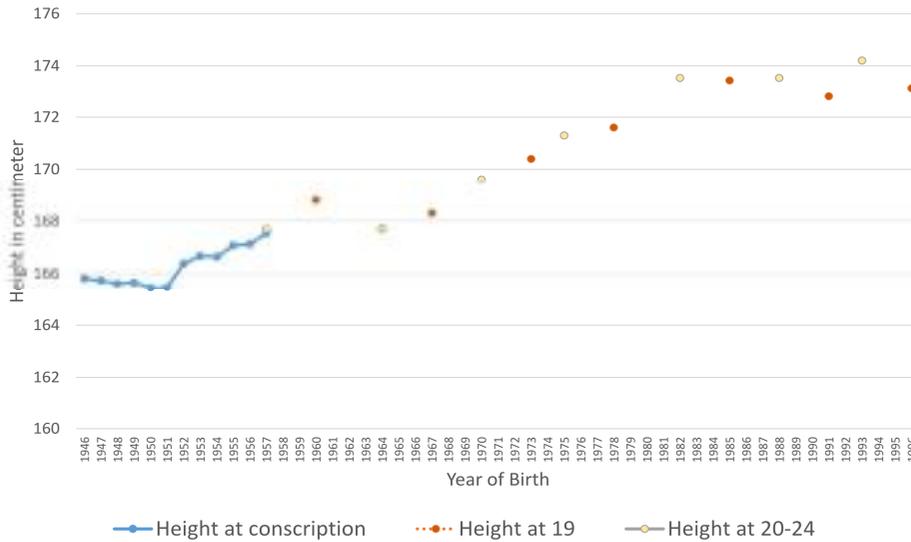
1946년생과 1957년생의 각 연령별 일인당 GDP (US Dollars in 2010 Constant Price)



1946년생과 1957년생의 연령별 하루 일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



한국의 장기적인 남성 평균신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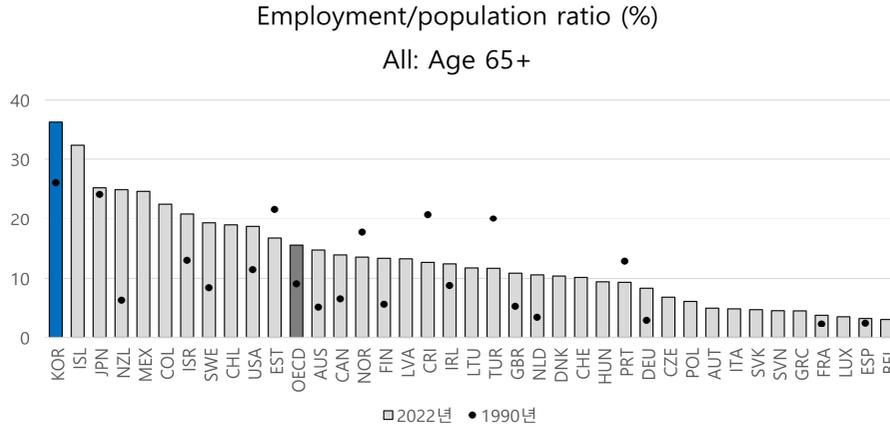
고령인구의 질적 변화 고려할 필요

- 고령인구의 생산성과 건강수준의 변화 등을 전망할 때 미래의 고령자가 현재의 고령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교육 확대, 영양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현재의 고령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더 건강하며, 건강한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장년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장년층이 생계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있는 경향 → 고학력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숙련도와 생산성이 높은 고령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노동투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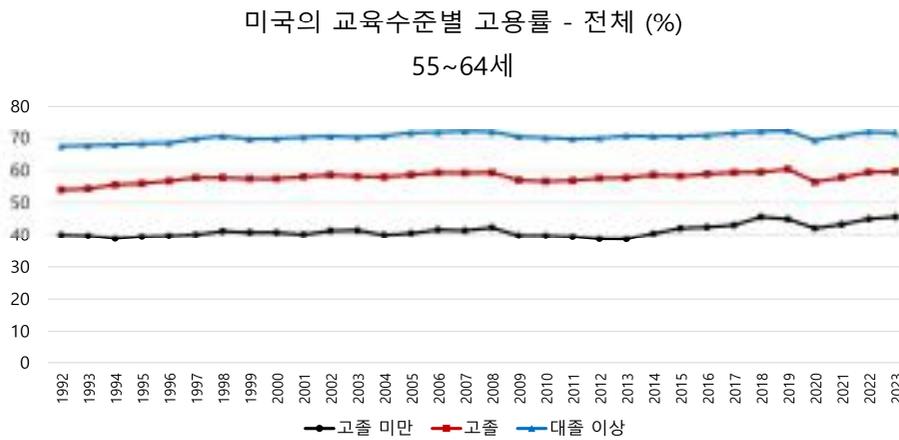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 (2022년): 남성, 55~64세



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 (2022년): 전체,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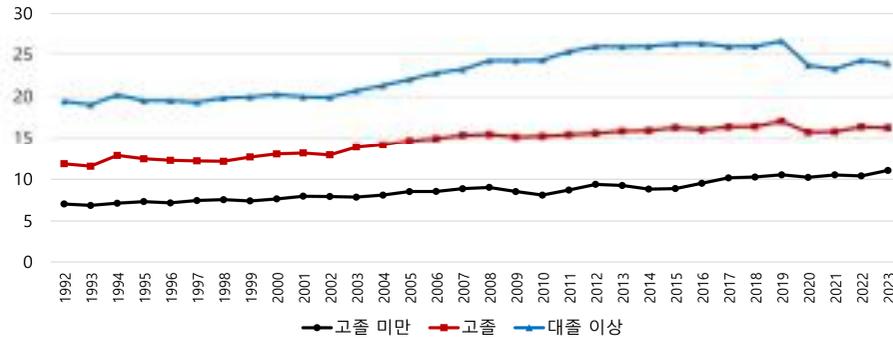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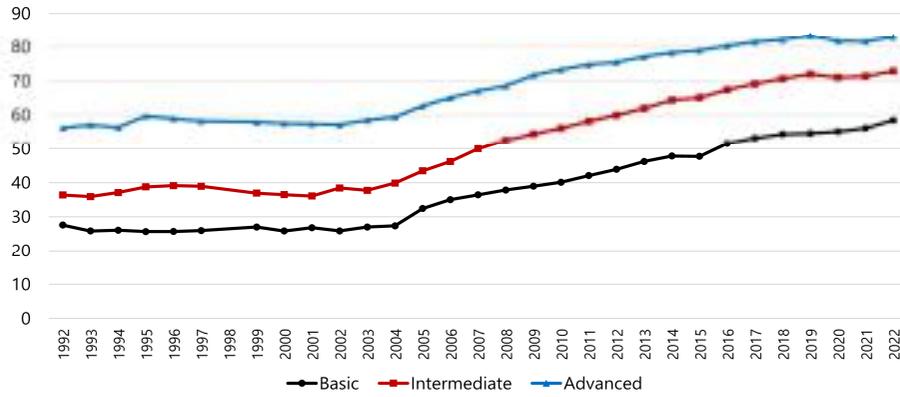


미국 62~74세 인구 교육수준별 노동력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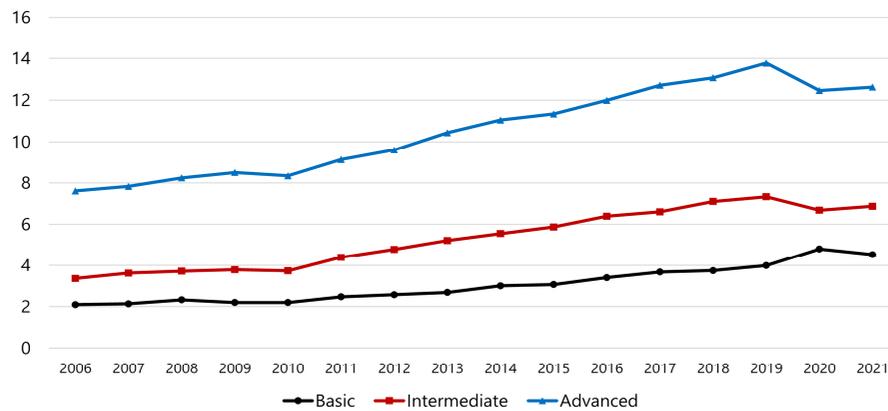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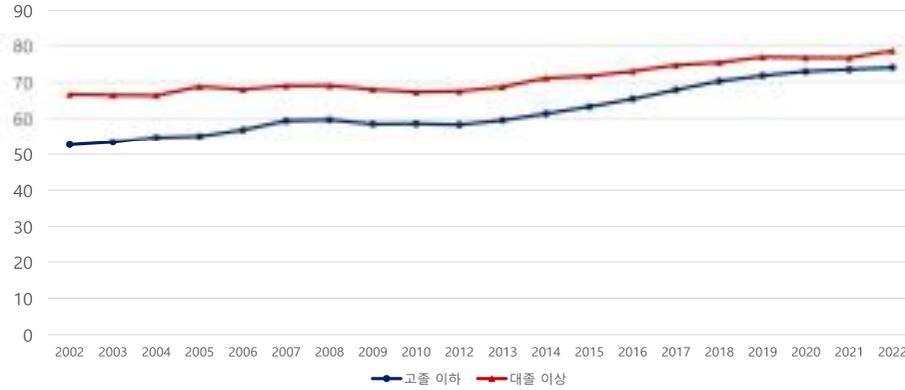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독일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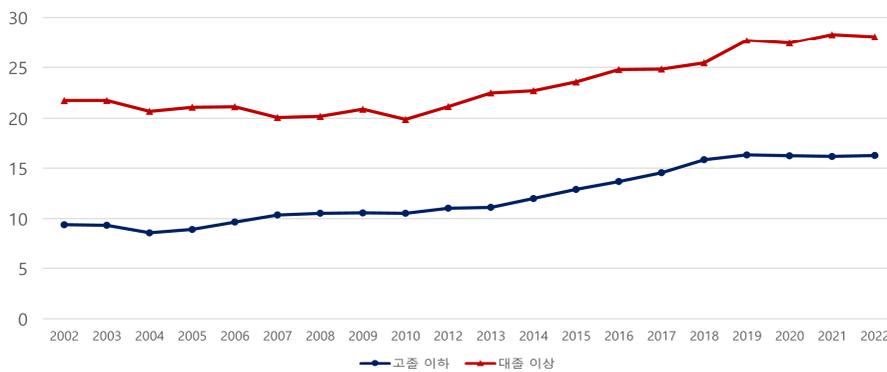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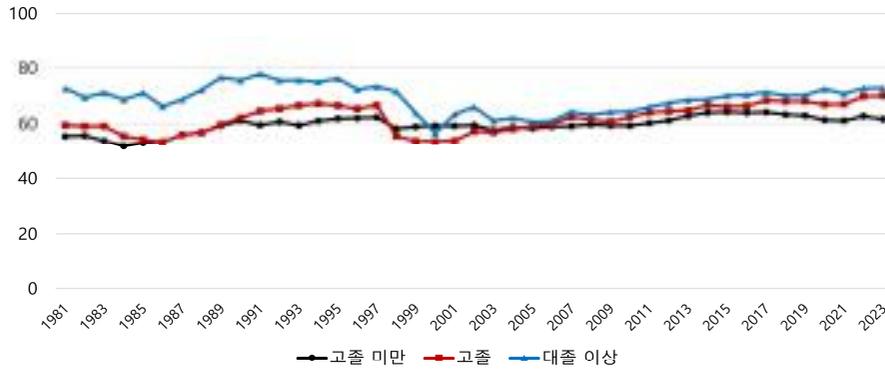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일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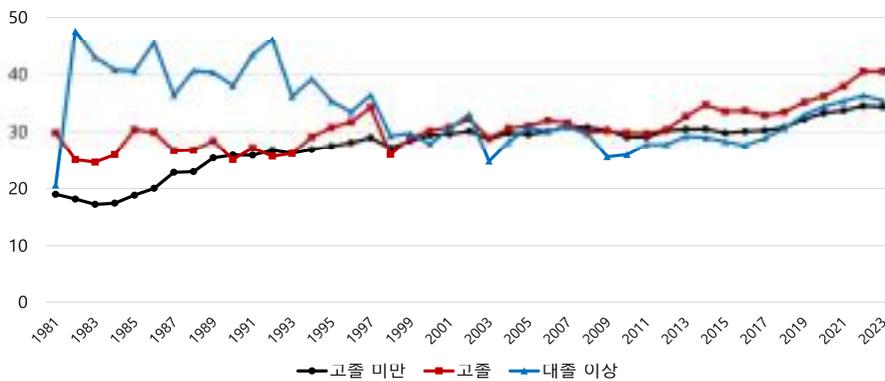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55~64세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55~64세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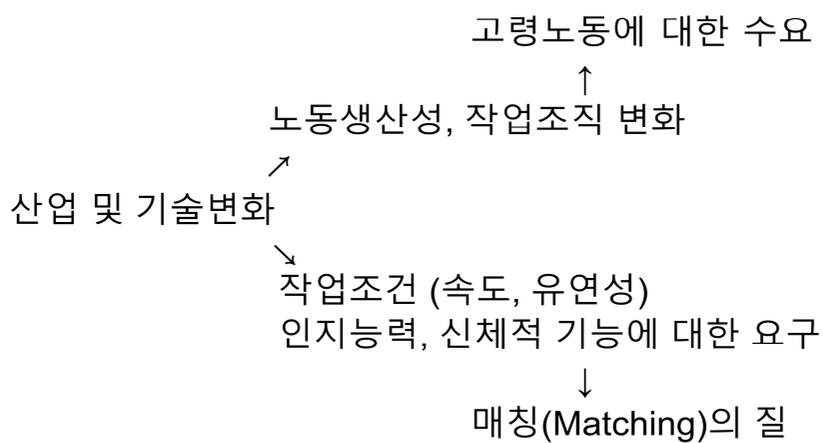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 전체 (%)
65세 이상



산업과 기술의 변화와 고령노동



산업 및 기술변화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령인력 노동수요 변화 상대적 노동수요 변화 추정방법

$$\frac{\Delta D_k}{E_k} = \sum_j \left(\frac{E_{jk}}{E_k} \right) \left(\frac{\Delta E_j}{E_j} \right) = \frac{\sum_j \alpha_{jk} \Delta E_j}{E_k}$$

- Katz and Murphy(1992) 방법 적용
- 특정연령(k) 고용인력 가운데 특정산업(j)에 고용된 인력의 비율 X 그 산업 고용의 증가율
- 각 연도 총 고용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
- 25-44세(청장년),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세 이상 등 다섯 개 연령 그룹에 대해 분석수행.

고령인력 노동수요 변화 상대적 노동수요 변화 추정결과 (이철희 2006, 2012, 2020)

- 1980년 이후 줄곧 고령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음. 이는 고령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호의적인 산업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 또한 고령자의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산업잔존확률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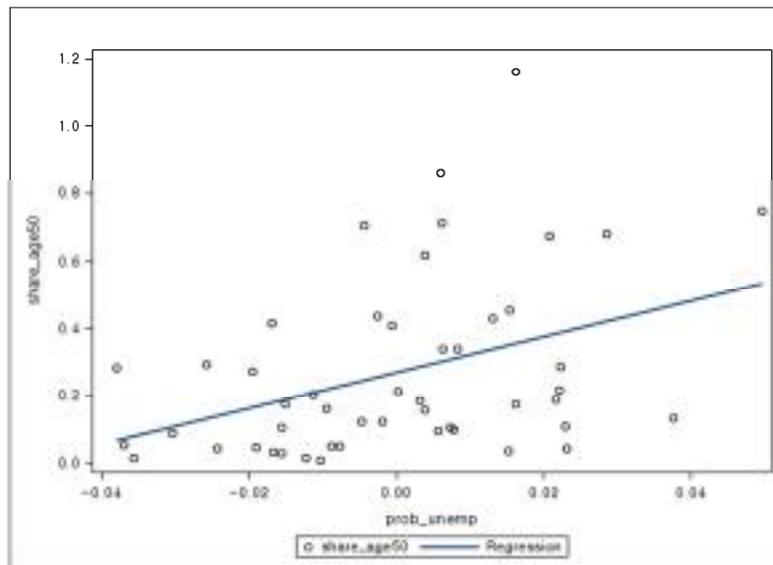
Lee (2015): 20세기 초 제2차 산업혁명기 미국의 산업/기술 변화는 제조업 종사하는 장년 근로자 고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Older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Chulhee Lee

This study explores how industry-specific technological,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practices affected the employment of old male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Industrial characteristics favorably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old industrial workers include high labor productivity, low capital- and material-intensive production, short workdays, low intensity of work, high job flexibility, and formalized employment relationships. Results show that aged industrial workers were heavily concentrated in "unfashionable" industries, suggesting that the contemporary argument of "industrial scrap heap" was applicable for most of the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각 산업 50세 이상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50세 제조업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share_age50)과 각 산업 50세 이상 제조업 종사자의 장기실업 위험률(prob_unemp)



**Chung and Lee (2023):
한국의 기술변화(자동화,
IT 장비 도입)가 고용에
미친 영향 - 고령근로자
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정
적이었음**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023, 00, 1–26
DOI: <https://doi.org/10.1093/icc/dtac001>
Original Article

OXFORD

Technology, job characteristics, and retirement of aged workers: evidence from automation and IT adoption of firms in Korea

Jongwoo Chung¹ and Chulhee Lee^{1,2*}

¹Minrye & Institutional Economics Team,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50 Namdeung-ro, Jung-gu, Seoul 04527, Republic of Korea, e-mail: jchung@bri.or.kr and ²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5208, Republic of Korea, e-mail: chulleel@snu.ac.kr
*Main author for correspondence.

Abstract

We investigated how the adoption of a new production technology differently affects the risk of job separation of young and old employe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linked with administrative employment insurance records on individual workers.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associated with a firm's technology adoption, we reestimated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s with a two-stage least-squares (2SLS) approach. The results suggest that technology (indicated by newly adopted automation and increased purchase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positively affects the overall employment of incumbent workers. However,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is less favorably affected by newly adopted technologies compared to that of younger workers. In some conditions, technology adoptions increase the retirement risk of older workers absolutely as well as relative to that of younger workers. Newly adopted automation negatively affects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who are engaged in manual and support occupations or employed in th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Estim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reason for retirement suggest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echnology adoption on employment may be related to both labor demand and supply.

JEL Classification: J14, J23, O33

자동화 도입의 효과: 45세 미만 근로자 대비 장년 근로자의 상대적인 퇴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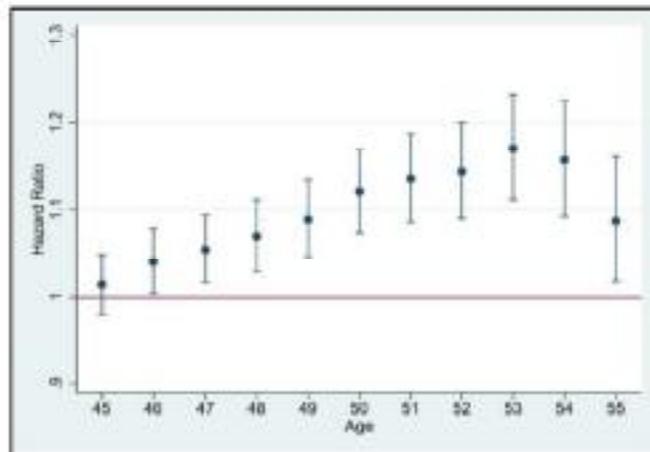


Figure 4. Estimated hazard ratios of retireme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older workers and new automation. Note: Data from the Workplace Panel Survey 2015 and Korean Employment Insurance are used

IT 장비 도입의 효과: 45세 미만 근로자 대비 장년
근로자의 상대적인 퇴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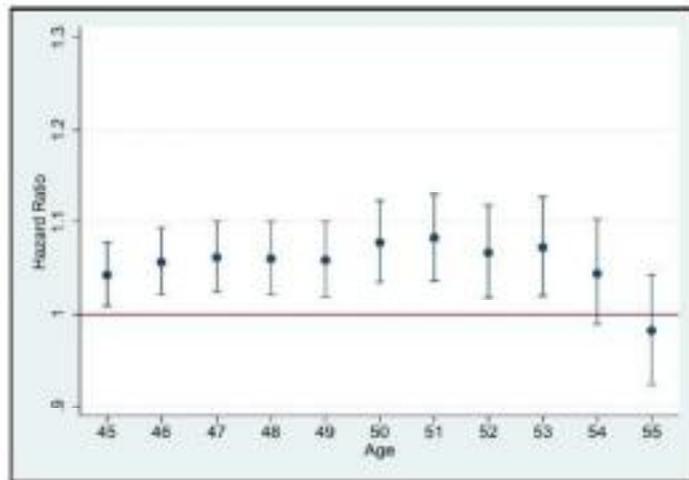


Figure 5. Estimated hazard ratios of retireme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older workers and IT-related equipment.
Note: Data from the Workplace Panel Survey 2015 and Korean Employment Insurance are used

미래 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년연장은 좋은 대응책일까? (1)

- 정년연장만으로는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적어도 향후 15~20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에 효과적일지 의문.
- 노동수급 불균형은 부문/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정년연장은 이론적으로 "모든 부문/유형" 고령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정책.
-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서 정년연장의 고용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음.
 - ▶ 고학력: 음식점 및 주점업의 준전문직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문직 및 준전문직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비전문직군.
 - ▶ 저학력: 보건업의 전문직군 및 준전문직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준전문직군, 전문직별 공사업의 비전문직군.
- 인력부족 부문에서는 정년연장이 없어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큼.

정년연장은 좋은 대응책일까? (2)

- 동일한 부문 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그러나 정년연장의 고령자 고용증가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한요셉 2019; Chung and Lee 2024).
- 고령자 고용에 성공한다고 해도 고령 취업자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청년 취업자를 잘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
- 장기적으로는 (고령인력의 생산성과 이동성 제고를 전제로) 고령자 고용확대가 잠재적인 노동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중요할 것.
- 그러나 "나이" 만을 고려하여 은퇴시기 및 임금(임금피크제 등)을 결정해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시니어 활용을 늘리기 어려움.
 - ▶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은퇴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유보임금이 높음.

한국의 고령인력(특히 Power Seniors) 활용 과제

- 장래 공급측면에서 고령인력 활용 잠재력은 높음.
 - 한국 고령자들의 근로의욕 높고, 실제로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의 고령연금제도는 은퇴유인이 높지 않음.
 - 고령인구의 교육수준, 건강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다만 평생 교육/훈련 및 전직/재취업 서비스 개선 필요함.
- 수요측면에 장애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고령인구의 높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의해 은퇴시기와 임금이 결정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 일자리 내 혹은 일자리 간 이동을 통한 점진적 퇴직의 어려움.
- 개선의 방향성
 - 나이를 따지지 않는(age-blind) 노동시장
 - 고령 친화적인(age-friendly) 작업환경: 이는 향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 생계형 고령취업이 줄고, 질 높은 일자리에서 젊은 노동인력 공급 부족해지면 기업들에게 중요해질 것.

일자리 고령친화지수(age-friendliness index)

- Maesta et al. (2018): 일자리의 다양성 특성에 대해 근로자들의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 측정.
 - 특정한 특성 일자리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임금의 크기 추정.
 -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특성: ① 작업 스케줄 스스로 결정; ② 원격근무; ③ 낮은 신체적 부담; ④ 일하는 방식 스스로 결정; ⑤ 긴 유급휴가, ⑥ 독립적인 작업 등
- Acemoglu et al. (2022): 위의 연구 결과와 직업사전(O'Net)의 각 일자리 특성에 관한 정보 결합하여, 각 직업의 고령친화지(AFI) 수를 추정 →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분석.
 - 미국 일자리 고령친화지수는 상당한 개선을 보임.
 - 1990년 이후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
 - 여성과 젊은 고학력자에게도 매력적.
- Lee and Eggleston (2024): 미국의 직업별 AFI를 한국의 센서스 자료에 적용 →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분석

Acemoglu et al. (2022):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친화지수 높아
졌음(각 일자리 내 조건이 개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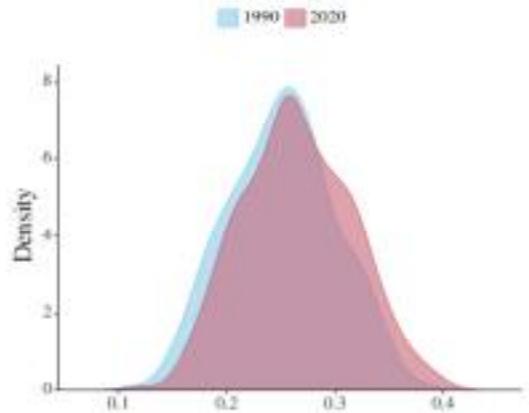


Figure 3: Distribution of AFI by Occupations 1990 and 2020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친화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용
된 취업자 비율이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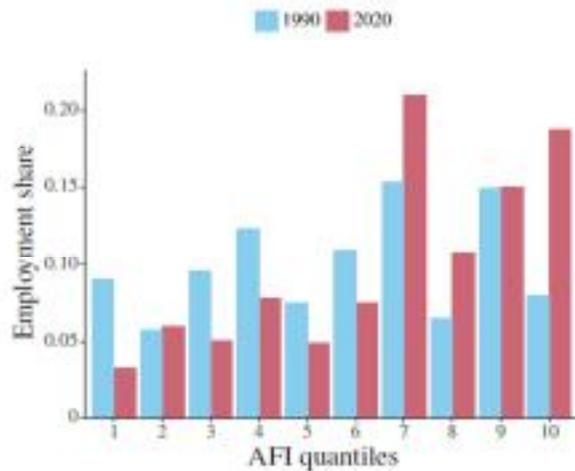


Figure 4: Shifts in Employment Share by AFI Decile

평균적인 고령친화지수가 높아진 인구집단(50~74세 대졸 여성, 15~49세 대졸 여성 등)이 상대적인 고용 증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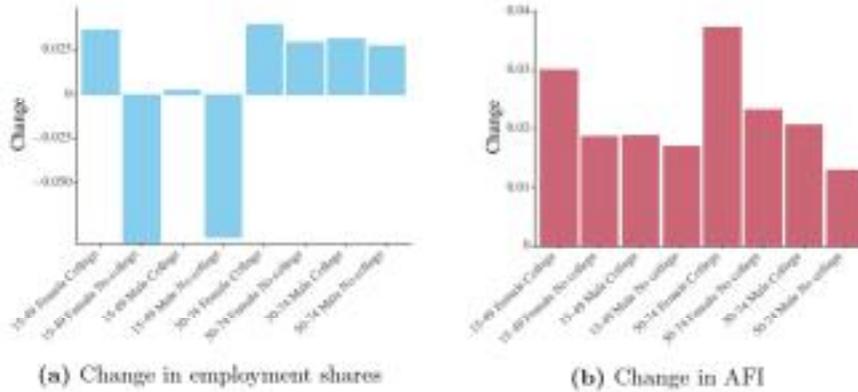


Figure 6: Changes in Employment Shares and AFI by demographic groups

Employment Status, Quality of Matching, and Retirement in Korea: Evidence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Chulhee Lee · Jinsoo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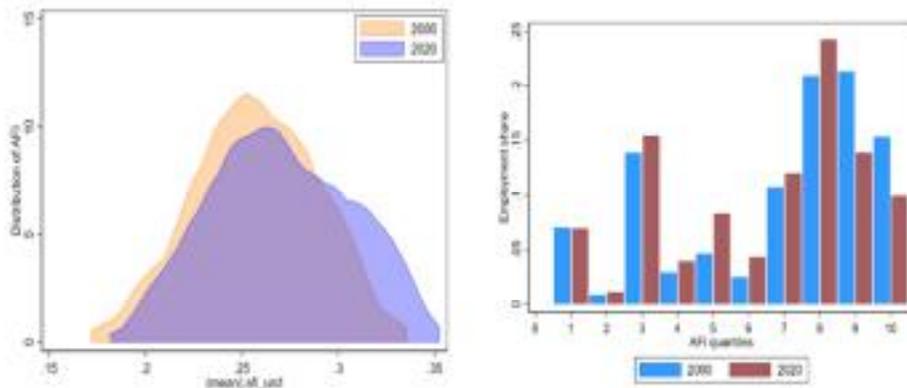
Received: 21 September 2012 / Accepted: 27 December 2012 / Published online: 9 January 2013
 ©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2013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ing probabilities of retirement for self-employed and wage-and-salary workers. It finds self-employed workers are less likely to retire than wage-and-salary ones, and that differences in retirement incomes, health, productivity, job characteristics, and compulsory retirement practices do not explain the disparity. The difference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and-salary workers in the quality of matching between the job and the worker (i.e., between required and desired amount of work) explains the later retirement of the self-employed. We not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labor-force participation at older ages and how policies might boost employment of the elderly.

Keywords Retirement · Self-employment · Employment · Aging · Job flexibility

Lee and Lee (2013): 한국에 있어서 근로시간 유연성(변경 가능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고령자 퇴직 확률이 낮았음.

Lee and Eggleston (2023): 한국의 경우, 각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는 개선되었음. 그러나 고령친화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용된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미국과는 반대)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중요성

- 장래에는 고령친화적 작업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
- 파워시니어는 은퇴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음 → 고령친화적 일자리에 취업 유인 가질 것.
-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학력의 젊은 취업자와 여성도 고령친화적 일자리에 매력을 느낄 것.
 - 소위 “MZ세대”의 일자리 선호 변화.
- 일자리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 문화, 업무방식 등을 바꾸어야 할 것.
- 비용이 드는 작업이지만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일 것.
 - 과거 미국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건설 사례.
 - 인구변화, 새로운 세대의 선호와 태도 등은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 이철희(2006):『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년 4월)
 - 이철희(2012):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령인력의 고용」, 『노동경제논집』 제35권, 제1호, 55-88.
 - 이철희(2014):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이영훈 편 『한국형 시장경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년 12월), 제7장.
 - 이철희 (2024): 『인구변화와 노동의 미래』, 위즈덤 하우스, 근간.
 - 이철희, 이에스더(2015): 「한국 장년임금근로자들의 퇴직: 사업체 규모별 위험모형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8권, 제2호 (2015년 4월), 31-65.
 - Lee, C. (2015):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Older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History* 39(4) (Winter 2015), 551-579.
 - Lee, C. (2021): "Sectoral Shift, Technological Change, and Old Labor," In K. Eggleston, J. Park, and G. Shin eds., *Demographics and Innovation in the Asia-Pacifi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21), 103-130.
 - Lee, C., and K. Eggleston (2024): "Age Friendliness Index in Korea, 2000~2020," Paper in progress.
 - Chung, J., and C. Lee (2023): "Technology, Job Characteristics, and Retirement of Aged Workers: Evidence from Automation and IT Adoption of Firms in Korea,"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http://doi.org/10.1093/icc/dtad001>).
 - Chung, J., and C. Lee (2024): "Mandatory Retirement Age and Labor Substitutability: Evidence from Korea," Paper presented in ASSLE.
-

III. 발표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최경덕 부연구위원)



CONTENTS

연구 배경 등

연구 결과(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연구 결과(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관련 제도 검토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등

- 1.1 - 연구의 배경
- 1.2 - 연구의 방법 및 목적



PART 1

01. 연구의 배경



연구 배경

- 고령화로 인해 노인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 증가
- 노인 돌봄에 있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

고령화 추이

- 65세 이상 인구비율: 10.8%(’00) → 15.7%(’20) → 25.5%(’30)
- 노년부양비: 14.8(’00) → 21.8(’20) → 38.0(’30)
- 노령화지수: 67.5(’00) → 129.3(’20) → 312.0(’30)

※ 65세 이상 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백만명) ÷ 총인구(백만명)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백만명) ÷ 총인구(백만명) × 100
 노령화지수 = 노년부양비(%) × 100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

구분	구분별	단위: 백만명					
		수용	돌봄	비공식	공공	공공	비공식
총	71.4	89.4	87.0	85.3	85.1	85.1	85.1
성별	남	36.7	36.1	36.1	35.7	35.7	35.7
	여	34.7	34.7	34.7	34.7	34.7	34.7
연령	65-69세	18.1	18.1	18.1	18.1	18.1	18.1
	70-74세	18.1	18.1	18.1	18.1	18.1	18.1
	75-79세	18.1	18.1	18.1	18.1	18.1	18.1
	80-84세	18.1	18.1	18.1	18.1	18.1	18.1
	85세 이상	18.1	18.1	18.1	18.1	18.1	18.1
지역	총	71.4	87.0	85.3	85.1	85.1	85.1
	수도권	47.3	62.3	61.1	61.1	61.1	61.1
	비수도권	24.1	24.7	24.2	24.0	24.0	24.0
지역별	서울	18.1	18.1	18.1	18.1	18.1	18.1
	경기	18.1	18.1	18.1	18.1	18.1	18.1
	충청	18.1	18.1	18.1	18.1	18.1	18.1
	호남	18.1	18.1	18.1	18.1	18.1	18.1
	영남	18.1	18.1	18.1	18.1	18.1	18.1

01. 연구의 배경

연구
배경

- 비공식 돌봄 제공자 중 상당수는 생산가능인구
- 노동공급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특성 및 노동공급 수준과 경제성장 간 연관성

- 한국 69%, 독일 68%, 영국 80%, 캐나다 77%, 호주 83% 등 비공식 돌봄 중 상당수는 64세 이하 연령대에 의해 제공됨(Labor et al., 2005)
- 노동력의 양적 변수로서 관계출산율이 경제성장률과 양의 관계가 있음 (곽소희, 김호범, 2007)
- 노동공급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총요소생산성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생산성을 둔화시킴(조하현 외, 2019)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0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목적

- 비공식 돌봄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관련 제도 정책적 시사점 제공

비공식 돌봄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관련 제도 현황 분석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분석(part2),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part3)
-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및 장기요양실태조사 활용하여 관련 현황 분석(part4)
- 비공식 돌봄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 제공

02. 돌봄 제공 현황: 돌봄 여부

- '지난 1년 중 이분들 가운데 수렴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은 어머니(37.5%), 배우자(22.3%), 배우자의 어머니
(12.9%) 순으로 높음,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는 모두 1% 미만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

(응답 1,000명)		단위: 명(%)	
대상자	인도(비율)	대상자	인도(비율)
배우자	223 (22.3)	형제자매	25 (2.5)
배우자의 어머니	129 (12.9)	배우자의 형제자매	2 (0.2)
배우자의 아버지	92 (9.2)	손자녀	9 (0.9)
자녀의 배우자	85 (8.5)	손자녀의 배우자	8 (0.8)
자녀	73 (7.3)	자녀의 배우자	11 (1.1)
손자녀	15 (1.5)	형제자매	967 (9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1-7차 조사)입니다. https://survey.kihasa.or.kr/ShowArticle.asp?code=2023_03_03_1을
참조하십시오.

03. 돌봄 제공 현황: 돌봄 강도

- '지난 1년 중 해당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년 중 해당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36.0시간, 돌봄 제공 기간은 44.1주
- 상대적으로 저강도인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비율은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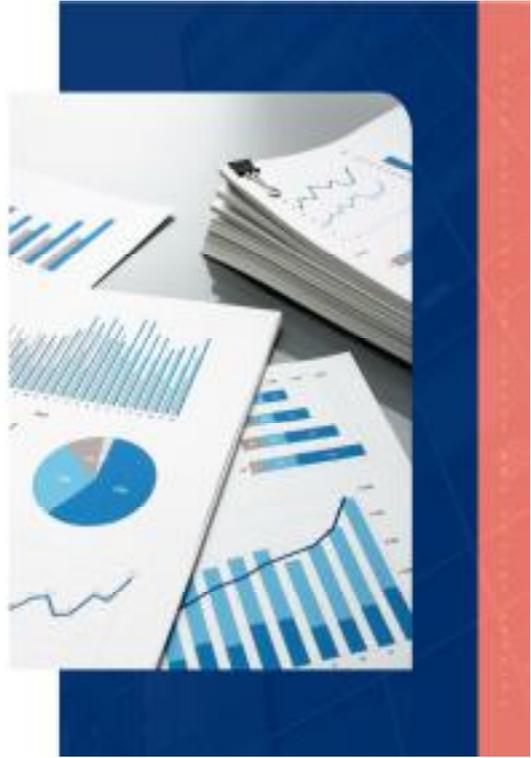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강도

(응답 1,000명)		단위: 시간, 주, %	
주당 평균 돌봄 시간	시간	돌봄 제공 기간	시간
평균시간	36.0	평균주	44.1
10시간 이하	38.6	100주 이상	38.2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11.3	100주 초과 200주 이하	8.6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23.1	200주 초과 300주 이하	11.9
30시간 초과	27.0	300주 초과	41.3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1-7차 조사)입니다. https://survey.kihasa.or.kr/ShowArticle.asp?code=2023_03_03_1을
참조하십시오.

3. 연구 결과(돌봄제공자의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 3.1 ·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 3.2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 3.3 ·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PART 3

01.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실증분석 모형

$$L_{it} = \beta_1 C_{it} + X_{it} \Gamma_0 + \alpha_i + \varepsilon_{it} \quad \text{고정효과 모형}$$

- L_{it} = (종속변수) 조사 대상자 i 의 t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대 만족도
- C_{it} = (관심변수) 조사 대상자 i 의 t 시점에서의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돌봄 제공 여부
- X_{it} = (통제변수) 조사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포함하는 변수들
성별, 연령,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소득,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시대 또는 세대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거주 지역
- α_i = 개인 고정효과

01.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변수 구성: 돌봄 제공(관심변수)

-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없는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게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을 제공한 경우 1, 10시간 이하의 돌봄을 제공하였거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 관련 연구들에서도 1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주당 10시간 이하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 상대적으로 저감도일 것으로 판단

 변수 구성: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종속변수)

- 근로여부: 현재 근로한다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 연간 근로기간: 각 조사 시점 지난 12개월 동안 근로한 개월 수
- 월소득: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세후 소득, 자영업자는 월평균 순수입
- 시간당 소득: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세후 소득)/(주당 근로시간*4.3), 자영업자는 (월평균 순수입)/(주당 근로시간*4.3)
- 경제상태 만족도: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0-100점 사이 값으로 응답

01.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변수 구성: 통제변수

변수명	변수 정의
성별	남자인 경우 1, 여자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연령	연령별, 1인 계층당 교차항수행차
취업자 여부	취업자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주택	주택 소유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취약 소문 여부	취약 소문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근로소득 제1·2위분포	근로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에서 초과분(excess) 평균 이상인 경우 1, 평균 이하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연속 수	각년 (이동수행차)
주거의 근접성	스스로의 거주상태를 통해 이산되어, 동일한 경우 1, 다른 이차라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본인의 소득 또는 SAH, 제1·2위	일상생활 수행능력(SAD)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SAD)에 해당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일상생활 여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소득	소득이 저소득층이 또는 광역지역이 농구인 경우 1, 그 외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주: 제어 변인

0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Mean test 분석 결과

-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1% 수준에서 유의함)
-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은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10% 수준에서 유의함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mean test 결과

단위: % (주, 시, 시군, 읍, 면 별)

구분	돌봄 제공자	돌봄 비제공자	T-Statistic
근로 여부	54.7	60.8	-0.12***
연간 근로기간	8.0	7.8	-1.02**
주당 근로시간	46.6	46.4	0.2
주당 근로일수	5.6	5.5	0.1*
월소득	187.9	229.8	-0.17*
시간당 소득	1.0	1.6	-0.4*
경제상태 만족도	47.8	56.4	-0.07**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OLS 분석 결과

- 돌봄 제공은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할 확률은 8.7%p 낮으며, 연간 근로기간이 약 0.7개월 짧음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관계성(OLS)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돌봄 제공	-0.087***	-0.662*	-1.380	0.005	-12.917**	-0.254*	-0.622**
	(0.033)	(0.304)	(0.888)	(0.108)	(3.882)	(0.009)	(0.270)
경제력					27.398	27.123	18.475
					(6.675)	(6.822)	(4.815)
대중교통					6.973	6.971	4.731
					(3.732)	(4.391)	(4.585)
R-squared	0.232	0.239	0.029	0.021	0.080	0.000	0.215

주 1. 경제, 연령, 성별, 교육, 건강, 가구 소득, 가구 소득 대비, 고소득층, 저소득층,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21000, 22000, 23000, 24000, 25000, 26000, 27000, 28000, 29000, 30000, 31000, 32000, 33000, 34000, 35000, 36000, 37000, 38000, 39000, 40000, 41000, 42000, 43000, 44000, 45000, 46000, 47000, 48000, 49000, 50000, 51000, 52000, 53000, 54000, 55000, 56000, 57000, 58000, 59000, 60000, 61000, 62000, 63000, 64000, 65000, 66000, 67000, 68000, 69000, 70000, 71000, 72000, 73000, 74000, 75000, 76000, 77000, 78000, 79000, 80000, 81000, 82000, 83000, 84000, 85000, 86000, 87000, 88000, 89000, 90000, 91000, 92000, 93000, 94000, 95000, 96000, 97000, 98000, 99000, 100000, 101000, 102000, 103000, 104000, 105000, 106000, 107000, 108000, 109000, 110000, 111000, 112000, 113000, 114000, 115000, 116000, 117000, 118000, 119000, 120000, 121000, 122000, 123000, 124000, 125000, 126000, 127000, 128000, 129000, 130000, 131000, 132000, 133000, 134000, 135000, 136000, 137000, 138000, 139000, 140000, 141000, 142000, 143000, 144000, 145000, 146000, 147000, 148000, 149000, 150000, 151000, 152000, 153000, 154000, 155000, 156000, 157000, 158000, 159000, 160000, 161000, 162000, 163000, 164000, 165000, 166000, 167000, 168000, 169000, 170000, 171000, 172000, 173000, 174000, 175000, 176000, 177000, 178000, 179000, 180000, 181000, 182000, 183000, 184000, 185000, 186000, 187000, 188000, 189000, 190000, 191000, 192000, 193000, 194000, 195000, 196000, 197000, 198000, 199000, 200000, 201000, 202000, 203000, 204000, 205000, 206000, 207000, 208000, 209000, 210000, 211000, 212000, 213000, 214000, 215000, 216000, 217000, 218000, 219000, 220000, 221000, 222000, 223000, 224000, 225000, 226000, 227000, 228000, 229000, 230000, 231000, 232000, 233000, 234000, 235000, 236000, 237000, 238000, 239000, 240000, 241000, 242000, 243000, 244000, 245000, 246000, 247000, 248000, 249000, 250000, 251000, 252000, 253000, 254000, 255000, 256000, 257000, 258000, 259000, 260000, 261000, 262000, 263000, 264000, 265000, 266000, 267000, 268000, 269000, 270000, 271000, 272000, 273000, 274000, 275000, 276000, 277000, 278000, 279000, 280000, 281000, 282000, 283000, 284000, 285000, 286000, 287000, 288000, 289000, 290000, 291000, 292000, 293000, 294000, 295000, 296000, 297000, 298000, 299000, 300000, 301000, 302000, 303000, 304000, 305000, 306000, 307000, 308000, 309000, 310000, 311000, 312000, 313000, 314000, 315000, 316000, 317000, 318000, 319000, 320000, 321000, 322000, 323000, 324000, 325000, 326000, 327000, 328000, 329000, 330000, 331000, 332000, 333000, 334000, 335000, 336000, 337000, 338000, 339000, 340000, 341000, 342000, 343000, 344000, 345000, 346000, 347000, 348000, 349000, 350000, 351000, 352000, 353000, 354000, 355000, 356000, 357000, 358000, 359000, 360000, 361000, 362000, 363000, 364000, 365000, 366000, 367000, 368000, 369000, 370000, 371000, 372000, 373000, 374000, 375000, 376000, 377000, 378000, 379000, 380000, 381000, 382000, 383000, 384000, 385000, 386000, 387000, 388000, 389000, 390000, 391000, 392000, 393000, 394000, 395000, 396000, 397000, 398000, 399000, 400000, 401000, 402000, 403000, 404000, 405000, 406000, 407000, 408000, 409000, 410000, 411000, 412000, 413000, 414000, 415000, 416000, 417000, 418000, 419000, 420000, 421000, 422000, 423000, 424000, 425000, 426000, 427000, 428000, 429000, 430000, 431000, 432000, 433000, 434000, 435000, 436000, 437000, 438000, 439000, 440000, 441000, 442000, 443000, 444000, 445000, 446000, 447000, 448000, 449000, 450000, 451000, 452000, 453000, 454000, 455000, 456000, 457000, 458000, 459000, 460000, 461000, 462000, 463000, 464000, 465000, 466000, 467000, 468000, 469000, 470000, 471000, 472000, 473000, 474000, 475000, 476000, 477000, 478000, 479000, 480000, 481000, 482000, 483000, 484000, 485000, 486000, 487000, 488000, 489000, 490000, 491000, 492000, 493000, 494000, 495000, 496000, 497000, 498000, 499000, 500000, 501000, 502000, 503000, 504000, 505000, 506000, 507000, 508000, 509000, 510000, 511000, 512000, 513000, 514000, 515000, 516000, 517000, 518000, 519000, 520000, 521000, 522000, 523000, 524000, 525000, 526000, 527000, 528000, 529000, 530000, 531000, 532000, 533000, 534000, 535000, 536000, 537000, 538000, 539000, 540000, 541000, 542000, 543000, 544000, 545000, 546000, 547000, 548000, 549000, 550000, 551000, 552000, 553000, 554000, 555000, 556000, 557000, 558000, 559000, 560000, 561000, 562000, 563000, 564000, 565000, 566000, 567000, 568000, 569000, 570000, 571000, 572000, 573000, 574000, 575000, 576000, 577000, 578000, 579000, 580000, 581000, 582000, 583000, 584000, 585000, 586000, 587000, 588000, 589000, 590000, 591000, 592000, 593000, 594000, 595000, 596000, 597000, 598000, 599000, 600000, 601000, 602000, 603000, 604000, 605000, 606000, 607000, 608000, 609000, 610000, 611000, 612000, 613000, 614000, 615000, 616000, 617000, 618000, 619000, 620000, 621000, 622000, 623000, 624000, 625000, 626000, 627000, 628000, 629000, 630000, 631000, 632000, 633000, 634000, 635000, 636000, 637000, 638000, 639000, 640000, 641000, 642000, 643000, 644000, 645000, 646000, 647000, 648000, 649000, 650000, 651000, 652000, 653000, 654000, 655000, 656000, 657000, 658000, 659000, 660000, 661000, 662000, 663000, 664000, 665000, 666000, 667000, 668000, 669000, 670000, 671000, 672000, 673000, 674000, 675000, 676000, 677000, 678000, 679000, 680000, 681000, 682000, 683000, 684000, 685000, 686000, 687000, 688000, 689000, 690000, 691000, 692000, 693000, 694000, 695000, 696000, 697000, 698000, 699000, 700000, 701000, 702000, 703000, 704000, 705000, 706000, 707000, 708000, 709000, 710000, 711000, 712000, 713000, 714000, 715000, 716000, 717000, 718000, 719000, 720000, 721000, 722000, 723000, 724000, 725000, 726000, 727000, 728000, 729000, 730000, 731000, 732000, 733000, 734000, 735000, 736000, 737000, 738000, 739000, 740000, 741000, 742000, 743000, 744000, 745000, 746000, 747000, 748000, 749000, 750000, 751000, 752000, 753000, 754000, 755000, 756000, 757000, 758000, 759000, 760000, 761000, 762000, 763000, 764000, 765000, 766000, 767000, 768000, 769000, 770000, 771000, 772000, 773000, 774000, 775000, 776000, 777000, 778000, 779000, 780000, 781000, 782000, 783000, 784000, 785000, 786000, 787000, 788000, 789000, 790000, 791000, 792000, 793000, 794000, 795000, 796000, 797000, 798000, 799000, 800000, 801000, 802000, 803000, 804000, 805000, 806000, 807000, 808000, 809000, 810000, 811000, 812000, 813000, 814000, 815000, 816000, 817000, 818000, 819000, 820000, 821000, 822000, 823000, 824000, 825000, 826000, 827000, 828000, 829000, 830000, 831000, 832000, 833000, 834000, 835000, 836000, 837000, 838000, 839000, 840000, 841000, 842000, 843000, 844000, 845000, 846000, 847000, 848000, 849000, 850000, 851000, 852000, 853000, 854000, 855000, 856000, 857000, 858000, 859000, 860000, 861000, 862000, 863000, 864000, 865000, 866000, 867000, 868000, 869000, 870000, 871000, 872000, 873000, 874000, 875000, 876000, 877000, 878000, 879000, 880000, 881000, 882000, 883000, 884000, 885000, 886000, 887000, 888000, 889000, 890000, 891000, 892000, 893000, 894000, 895000, 896000, 897000, 898000, 899000, 900000, 901000, 902000, 903000, 904000, 905000, 906000, 907000, 908000, 909000, 910000, 911000, 912000, 913000, 914000, 915000, 916000, 917000, 918000, 919000, 920000, 921000, 922000, 923000, 924000, 925000, 926000, 927000, 928000, 929000, 930000, 931000, 932000, 933000, 934000, 935000, 936000, 937000, 938000, 939000, 940000, 941000, 942000, 943000, 944000, 945000, 946000, 947000, 948000, 949000, 950000, 951000, 952000, 953000, 954000, 955000, 956000, 957000, 958000, 959000, 960000, 961000, 962000, 963000, 964000, 965000, 966000, 967000, 968000, 969000, 970000, 971000, 972000, 973000, 974000, 975000, 976000, 977000, 978000, 979000, 980000, 981000, 982000, 983000, 984000, 985000, 986000, 987000, 988000, 989000, 990000, 991000, 992000, 993000, 994000, 995000, 996000, 997000, 998000, 999000, 1000000, 1001000, 1002000, 1003000, 1004000, 1005000, 1006000, 1007000, 1008000, 1009000, 1010000, 1011000, 1012000, 1013000, 1014000, 1015000, 1016000, 1017000, 1018000, 1019000, 1020000, 1021000, 1022000, 1023000, 1024000, 1025000, 1026000, 1027000, 1028000, 1029000, 1030000, 1031000, 1032000, 1033000, 1034000, 1035000, 1036000, 1037000, 1038000, 1039000, 1040000, 1041000, 1042000, 1043000, 1044000, 1045000, 1046000, 1047000, 1048000, 1049000, 1050000, 1051000, 1052000, 1053000, 1054000, 1055000, 1056000, 1057000, 1058000, 1059000, 1060000, 1061000, 1062000, 1063000, 1064000, 1065000, 1066000, 1067000, 1068000, 1069000, 1070000, 1071000, 1072000, 1073000, 1074000, 1075000, 1076000, 1077000, 1078000, 1079000, 1080000, 1081000, 1082000, 1083000, 1084000, 1085000, 1086000, 1087000, 1088000, 1089000, 1090000, 1091000, 1092000, 1093000, 1094000, 1095000, 1096000, 1097000, 1098000, 1099000, 1100000, 1101000, 1102000, 1103000, 1104000, 1105000, 1106000, 1107000, 1108000, 1109000, 1110000, 1111000, 1112000, 1113000, 1114000, 1115000, 1116000, 1117000, 1118000, 1119000, 1120000, 1121000, 1122000, 1123000, 1124000, 1125000, 1126000, 1127000, 1128000, 1129000, 1130000, 1131000, 1132000, 1133000, 1134000, 1135000, 1136000, 1137000, 1138000, 1139000, 1140000, 1141000, 1142000, 1143000, 1144000, 1145000, 1146000, 1147000, 1148000, 1149000, 1150000, 1151000, 1152000, 1153000, 1154000, 1155000, 1156000, 1157000, 1158000, 1159000, 1160000, 1161000, 1162000, 1163000, 1164000, 1165000, 1166000, 1167000, 1168000, 1169000, 1170000, 1171000, 1172000, 1173000, 1174000, 1175000, 1176000, 1177000, 1178000, 1179000, 1180000, 1181000, 1182000, 1183000, 1184000, 1185000, 1186000, 1187000, 1188000, 1189000, 1190000, 1191000, 1192000, 1193000, 1194000, 1195000, 1196000, 1197000, 1198000, 1199000, 1200000, 1201000, 1202000, 1203000, 1204000, 1205000, 1206000, 1207000, 1208000, 1209000, 1210000, 1211000, 1212000, 1213000, 1214000, 1215000, 1216000, 1217000, 1218000, 1219000, 1220000, 1221000, 1222000, 1223000, 1224000, 1225000, 1226000, 1227000, 1228000, 1229000, 1230000, 1231000, 1232000, 1233000, 1234000, 1235000, 1236000, 1237000, 1238000, 1239000, 1240000, 1241000, 1242000, 1243000, 1244000, 1245000, 1246000, 1247000, 1248000, 1249000, 1250000, 1251000, 1252000, 1253000, 1254000, 1255000, 1256000, 1257000, 1258000, 1259000, 1260000, 1261000, 1262000, 1263000, 1264000, 1265000, 1266000, 1267000, 1268000, 1269000, 1270000, 1271000, 127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 OLS 분석 결과와 방향성은 대체로 일치함
-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확률을 8.1%p, 연간 근로기간을 약 0.7개월, 경제상태 만족도를 약 2.6점 감소시킴
- 세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고려하면 13.4%, 10.1%, 4.6% 감소하는 수준임
-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및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돌봄 제공자들은 근로강도를 조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함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단위)

	OLS	FE	IV	2SLS	IV	2SLS	IV
근로 여부	-0.081***	-0.079***	-0.079	0.052	-0.103**	-0.070	-0.071**
연간 근로기간	-0.022**	-0.022**	-0.022	0.010	-0.023*	-0.022	-0.022*
경제상태 만족도	-0.261***	-0.261***	-0.261	0.000	-0.261***	-0.261***	-0.261***
주당 근로시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당 근로일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월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시간당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1. 표수를 1만 명이 넘는 표본에서, 인공적 분포를 생성하여 1만 명의 표본을 생성하여 1000회 반복
 2. 표본은 1만 명이 넘는 표본에서, 인공적 분포를 생성하여 1만 명의 표본을 생성하여 1000회 반복
 3.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2차 조사 데이터, <http://kosis.kr/kohasa/kohasa.do>
 4/15/2023 14:30:00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분석

- 고졸 이하에서는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이 8.3%p(14.2%), 0.7개월(9.9%) 감소, 대졸 이상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7.1시간(16.0%) 감소함. 즉, 고졸 이하는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졸 이상은 노동공급을 지속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함
-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감소 폭은 남성에게서 크지만, 감소율은 여성에게서 큼
- 연령별로는 55-64세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확인됨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비공식 돌봄 효과

	OLS	FE	IV	2SLS	IV	2SLS	IV
근로 여부	-0.081***	-0.079***	-0.079	0.052	-0.103**	-0.070	-0.071**
연간 근로기간	-0.022**	-0.022**	-0.022	0.010	-0.023*	-0.022	-0.022*
경제상태 만족도	-0.261***	-0.261***	-0.261	0.000	-0.261***	-0.261***	-0.261***
주당 근로시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당 근로일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월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시간당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1. 표수를 1만 명이 넘는 표본에서, 인공적 분포를 생성하여 1만 명의 표본을 생성하여 1000회 반복
 2. 표본은 1만 명이 넘는 표본에서, 인공적 분포를 생성하여 1만 명의 표본을 생성하여 1000회 반복
 3.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2차 조사 데이터, <http://kosis.kr/kohasa/kohasa.do>
 4/15/2023 14:30:00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별 분석

- 가구 소득이 평균 이상일 때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짐.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 확률은 9.8%p(15.7%), 연간 근로기간은 약 0.9개월(12.4%) 감소함
-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4명 이하) 효과가 두드러짐. 가구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7.4%p(12.3%), 연간 근로기간을 약 0.6개월(8.8%) 감소시킴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비공식 돌봄 효과

	(1)	(2)	(3)	(4)	(5)	(6)	(7)
	연간 근로 기간						
(1) 평균 이상	-0.008**	-0.008**	-0.012	0.014	-0.014	-0.017	-0.011
가	0.006	0.014	0.012	0.018	0.015	0.018	0.019
다	-0.013	-0.014	-0.011	0.011	-0.011	-0.011	-0.011
연속	0.008	0.014	0.012	0.018	0.015	0.018	0.019
Control	0.008	0.014	0.012	0.018	0.015	0.018	0.019
(2) 평균 미만	-0.007*	-0.008	-0.012	-0.007	-0.012	-0.012	-0.014
가	0.002	0.010	0.009	0.011	0.010	0.011	0.011
다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연속	0.002	0.010	0.009	0.011	0.010	0.011	0.011
Control	0.002	0.010	0.009	0.011	0.010	0.011	0.011
(3) 4명 이하	-0.014**	-0.014**	-0.021	0.004	-0.021	-0.021	-0.021
가	0.006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다	-0.013	-0.013	-0.013	-0.013	-0.013	-0.013	-0.013
연속	0.006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Control	0.006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4) 5명 이상	-0.007	-0.008	-0.012	-0.008	-0.012	-0.012	-0.012
가	0.007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다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연속	0.007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Control	0.007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주: 1. 25% 양분, 25% 양분
 2. 5% 양분, 5% 양분
 3. * p<0.1, ** p<0.05, *** p<0.01
 4. 95% 신뢰수준에서 회귀계수 추정치와 95% 신뢰수준의 2배를 곱한 값이 t-통계량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함

0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별 분석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비공식 돌봄 제공의 효과는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매우 두드러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 확률은 18.4%p(36.3%), 근로를 지속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약 8.5시간(8.2%) 감소함

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공식 돌봄 효과

	(1)	(2)	(3)	(4)	(5)	(6)	(7)
	연간 근로 기간						
(1) 임금근로자	-0.007**	-0.007**	-0.012	0.014	-0.014	-0.017	-0.011
가	0.006	0.014	0.012	0.018	0.015	0.018	0.019
다	-0.013	-0.014	-0.011	0.011	-0.011	-0.011	-0.011
연속	0.008	0.014	0.012	0.018	0.015	0.018	0.019
Control	0.008	0.014	0.012	0.018	0.015	0.018	0.019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0.017**	-0.017**	-0.021	-0.021	-0.021	-0.021	-0.021
가	0.006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다	-0.013	-0.013	-0.013	-0.013	-0.013	-0.013	-0.013
연속	0.006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Control	0.006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3) 계층분리	-0.023	-0.022	-0.030	0.009	-0.030	-0.030	-0.031
가	0.002	0.009	0.008	0.009	0.009	0.009	0.009
다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연속	0.002	0.009	0.008	0.009	0.009	0.009	0.009
Control	0.002	0.009	0.008	0.009	0.009	0.009	0.009
(4) 무급가족종사자	-0.180**	-0.181	-0.180**	-0.184	-0.179	-0.185	-0.185
가	0.007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다	-0.180	-0.180	-0.180	-0.180	-0.180	-0.180	-0.180
연속	0.007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Control	0.007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주: 1. 25% 양분, 25% 양분
 2. 5% 양분, 5% 양분
 3. * p<0.1, ** p<0.05, *** p<0.01
 4. 95% 신뢰수준에서 회귀계수 추정치와 95% 신뢰수준의 2배를 곱한 값이 t-통계량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함

01. 가족돌봄휴(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전치도

(단위: %, 후속처치 전)

구분	총계	불응고 있다	대응 필요 있다	불응부 필요 있다	응답치	
전체	100,052,970	29.4	13.2	16.7	49.7	
연령	5~9세	100,012,609	17.0	9.7	15.5	47.6
	10~29세	100,012,416	18.7	10.1	20.6	43.1
	30~39세	100,099,908	43.1	20.8	13.8	22.9
	40~49세	100,041,111	53.4	16.7	12.1	15.7
	50세 이상	100,044,695	79.8	15.1	8.9	7.7
직종	전문직	100,005,983	13.1	12.4	16.7	31.8
	사무직	100,081,918	37.7	30.6	4.8	6.9
	일부직 종업자	100,081,918	48.9	11.1	18.3	20.8
	비전문직	100,046,559	22.1	20.6	18.9	40.3
노동 조건	정규	100,092,360	18.3	12.7	16.7	32.1
	비정규	100,021,215	39.2	58.3	18.4	26.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며
자료: 2015년 10월, 2016년 10월 가중치 적용하여 집계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후속처치 전)

구분	총계	필요한 사정 없음 가용 가능 가능 여부	필요한 사정 있음 가용 가능 가능 여부	필요한 사정 없음 가용 가능 가능 여부	
전체	100,002,076	62.8	31.6	15.6	
연령	5~9세	100,007,941	50.4	28.5	21.1
	10~29세	100,099,910	61.3	31.4	12.3
	30~39세	100,088,121	99.8	35.8	4.8
	40~49세	100,029,919	63.7	31.9	4.4
	50세 이상	100,084,215	79.7	20.8	4.2
직종	전문직	100,002,443	91.8	31.1	18.0
	사무직	100,084,917	62.7	34.6	2.7
	일부직 종업자	100,081,918	79.4	29.2	8.4
	비전문직	100,046,511	57.6	33.3	7.2
노동 조건	정규	100,002,563	90.4	31.0	17.6
	비정규	100,099,513	67.7	29.5	2.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며
자료: 2015년 10월, 2016년 10월 가중치 적용하여 집계

01. 가족돌봄휴(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전치도

(단위: %, 후속처치 전)

구분	총계	불응고 있다	대응 필요 있다	불응부 필요 있다	응답치	
전체	100,052,298	15.6	11.4	16.4	39.4	
연령	5~9세	100,012,428	7.8	8.6	15.3	38.2
	10~29세	100,012,586	16.7	13.4	12.9	47.1
	30~39세	100,081,088	96.7	24.9	15.9	4.6
	40~49세	100,029,917	71.3	16.5	12.3	10.0
	50세 이상	100,067,010	78.5	12.9	8.8	10.0
직종	전문직	100,081,198	14.5	12.0	16.9	38.4
	사무직	100,021,010	26.3	18.1	5.6	46.1
	일부직 종업자	100,081,917	44.1	8.3	18.1	29.4
	비전문직	100,067,010	25.2	9.3	9.9	62.4
노동 조건	정규	100,081,298	14.3	11.2	16.7	39.8
	비정규	100,070,999	30.6	34.4	19.0	36.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며
자료: 2015년 10월, 2016년 10월 가중치 적용하여 집계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후속처치 전)

구분	총계	필요한 사정 없음 가용 가능 가능 여부	필요한 사정 있음 가용 가능 가능 여부	필요한 사정 없음 가용 가능 가능 여부	
전체	100,002,297	63.4	25.5	21.0	
연령	5~9세	100,007,916	43.2	29.8	27.9
	10~29세	100,099,910	63.2	28.1	22.7
	30~39세	100,081,082	72.8	21.8	5.1
	40~49세	100,079,919	78.9	18.8	6.4
	50세 이상	100,084,211	81.2	5.5	3.2
직종	전문직	100,002,678	91.6	29.2	22.2
	사무직	100,082,920	71.9	15.3	19.8
	일부직 종업자	100,081,918	76.5	9.4	14.1
	비전문직	100,046,603	68.7	22.4	9.6
노동 조건	정규	100,002,398	90.6	26.7	22.7
	비정규	100,099,913	61.8	11.9	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며
자료: 2015년 10월, 2016년 10월 가중치 적용하여 집계

01. 가족돌봄휴(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지도

단위: % (순차지수)

구분	총계	부 부고 있다	병중 있다	장애자 있다	유년다	
전체	100.0(1,873)	19.6	18.1	18.0	46.2	
연령	남성	100.0(1,405)	13.6	17.8	18.0	41.9
	70~90대	100.0(1,275)	14.5	16.8	17.1	52.6
	30~60대	100.0(1,130)	26.6	20.1	18.1	26.5
	100~200만	100.0(643)	32.9	19.8	20.1	18.0
	300만 이상	100.0(429)	47.5	20.8	22.7	11.2
지역	전국평균	100.0(1,873)	13.8	17.1	17.8	51.5
	수도권	100.0(80)	66.4	9.8	8.0	46.6
	중부 권	100.0(279)	33.7	27.2	13.1	28.1
	호남권	100.0(133)	38.1	36.9	9.1	26.6
	내륙지역, 동남지역	100.0(45)	8.7	7.8	1.0	82.5
노동 경험	있음	100.0(1,290)	13.7	18.3	17.8	50.5
	없음	100.0(583)	44.4	18.7	8.8	33.1

주: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능 여부

단위: % (복합지수)

구분	총계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용될 경우 활용 가능	필요한 사항이 일부 적용될 경우 활용 가능	활용 불가능	
전체	100.0(1,873)	56.8	20.4	22.8	
연령	남성	100.0(1,405)	28.8	24.9	47.1
	10~20대	100.0(679)	43.8	15.6	41.6
	30~40대	100.0(670)	57.4	11.1	29.4
	50~60대	100.0(523)	66.1	13.0	21.7
	70대 이상	100.0(380)	73.5	9.9	16.7
지역	수도권	100.0(1,283)	32.3	20.9	46.7
	중부권	100.0(279)	130.3	8.0	8.8
	호남 권	100.0(133)	47.1	5.6	23.2
	전남지역	100.0(280)	58.3	24.5	18.3
	서남지역, 동남지역	100.0(194)	39.8	11.1	17.7
노동 경험	있음	100.0(1,498)	55.5	21.1	23.4
	없음	100.0(375)	36.4	11.6	12.0

주: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01. 가족돌봄휴(직)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모성보호 휴가	유아 보육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전체	55.5	45.0	52.9	31.7	26.2	22.0	-	
연령	남성	52.1	36.1	53.1	31.1	26.7	22.8	15.8
	10~20대	58.1	42.8	61.8	40.4	35.4	22.0	20.4
	30~40대	51.3	41.5	48.8	34.0	28.6	20.7	18.1
	50~60대	45.8	37.2	52.2	27.1	22.9	15.2	-
	70대 이상	31.1	34.1	24.8	23.8	20.9	14.7	11.4
지역	수도권	58.8	48.4	56.1	37.0	33.8	26.6	19.1
	중부 권	45.8	33.0	51.0	26.5	21.3	16.2	18.0
	호남권	42.1	28.7	54.1	31.4	24.3	18.2	-
	전남지역	58.8	48.4	56.1	37.0	33.8	26.6	19.1
	서남지역, 동남지역	45.8	33.0	51.0	26.5	21.3	16.2	18.0
노동 경험	있음	57.7	46.0	54.0	34.7	28.3	23.0	14.8
	없음	47.1	35.1	47.1	31.5	26.1	19.7	-
직종	사무직	60.7	48.0	57.0	35.0	30.0	24.0	18.0
	노동자	48.0	38.0	48.0	31.0	26.0	21.0	16.0

주: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활용 가능성

단위: %

구분	모성보호 휴가	유아 보육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근로시간 단축)	
전체	61.6	47.9	51.2	45.4	40.3	32.8	-	
연령	남성	41.6	47.8	45.1	47.1	43.1	34.7	25.5
	10~20대	41.0	46.9	49.1	40.7	35.8	34.0	24.3
	30~40대	49.6	41.5	48.7	47.8	42.7	34.5	22.3
	50~60대	23.5	24.1	32.5	26.4	20.9	15.8	-
	70대 이상	24.0	34.2	33.7	24.8	17.6	10.9	25.5
지역	수도권	29.9	29.9	34.0	26.4	20.4	13.6	20.4
	중부 권	24.4	34.7	36.7	25.8	17.9	17.0	25.5
	호남권	31.1	38.9	35.2	28.1	23.8	15.8	-
	전남지역	26.6	30.0	33.6	27.8	19.1	19.3	21.8
	서남지역, 동남지역	36.1	37.1	35.1	31.9	17.8	15.8	22.5
노동 경험	있음	20.0	21.7	28.5	20.5	18.5	18.5	22.5
	없음	20.0	21.7	28.5	20.5	18.5	18.5	22.5

주: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기준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02.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구분	세	이용률 (%)		비교
		장기요양 수급률	장기요양 이용률	
전체	전체	77.0	54.1	23.0
	여성	75.0	54.1	21.0
연령	65세 미만	75.0	54.1	21.0
	65-69세	66.7	48.0	18.7
	70-74세	76.3	56.0	20.3
	75-79세	76.0	55.0	21.0
	80-84세	74.8	57.0	17.8
	85세 이상	76.7	57.1	19.7
	연령 미지정	75.0	54.1	21.0
	연령 미지정	82.1	59.1	23.1
	연령 미지정	68.7	49.3	19.4
	연령 미지정	75.9	52.9	23.0
장기요양 수급유형	중등	69.3	51.7	17.6
	고등	82.0	56.7	25.3
	중등	67.0	49.8	17.2
	고등	82.1	59.1	23.1
	장기요양수급률 미지정	68.7	50.7	18.0
지역	광역시	76.1	57.8	18.3
	충청권	77.0	52.1	24.9
	지방	68.7	50.9	17.8
세대	혼	73.9	53.1	20.8
	혼 외	76.7	54.8	21.9
장기요양 수급 유무	수급유형 미지정	75.1	54.3	20.8
	수급유형 미지정	76.6	54.0	22.6
지역	지역	68.8	50.4	18.4

※ 2022년 12월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전. <http://www.kihasa.go.kr>

장기요양급여 특이유지비 현재 거주지

구분	세	비율 (%)		비교
		현재 거주지	비거주지	
전체	전체	52.0	47.9	4.1
	여성	53.0	48.1	4.9
연령	65세 미만	56.0	51.2	4.8
	65-69세	48.0	43.2	4.8
	70-74세	54.0	49.2	4.8
	75-79세	54.0	49.2	4.8
	80-84세	54.0	49.2	4.8
	85세 이상	54.0	49.2	4.8
	연령 미지정	52.0	47.9	4.1
	연령 미지정	58.0	53.2	4.8
	연령 미지정	46.0	41.2	4.8
	연령 미지정	54.0	49.2	4.8
장기요양 수급유형	중등	48.0	43.2	4.8
	고등	54.0	49.2	4.8
	중등	46.0	41.2	4.8
	고등	54.0	49.2	4.8
	장기요양수급률 미지정	46.0	41.2	4.8
지역	광역시	48.0	43.2	4.8
	충청권	54.0	49.2	4.8
	지방	46.0	41.2	4.8
세대	혼	46.0	41.2	4.8
	혼 외	48.0	43.2	4.8
장기요양 수급 유무	수급유형 미지정	48.0	43.2	4.8
	수급유형 미지정	48.0	43.2	4.8
지역	지역	46.0	41.2	4.8

※ 2022년 12월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전. <http://www.kihasa.go.kr>

02.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 외 도움을 받기(40.3%), 가족의 돌봄으로 충분함(21.9%), 타인의 도움 필요 없음(1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 외 도움을 받는 비율은 남성, 65-74세, 유배우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클수록(장기요양신청등급, 유배우자인 경우) 등에 높음
- 미이용의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불신 및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함

일반 추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1순위)

구분	세	비율 (%)		비교
		가족 외 도움 받기	가족의 돌봄으로 충분함	
전체	전체	40.3	21.9	18.4
	여성	39.3	21.9	17.6
연령	65세 미만	35.0	20.0	15.0
	65-69세	38.0	21.0	17.0
	70-74세	42.0	22.0	20.0
	75-79세	43.0	23.0	20.0
	80-84세	44.0	24.0	20.0
	85세 이상	45.0	25.0	20.0
	연령 미지정	40.3	21.9	18.4
	연령 미지정	41.0	22.0	19.0
	연령 미지정	39.0	21.0	18.0
	연령 미지정	40.0	22.0	18.0
장기요양 수급유형	중등	38.0	20.0	18.0
	고등	42.0	22.0	20.0
	중등	36.0	19.0	17.0
	고등	44.0	24.0	20.0
	장기요양수급률 미지정	38.0	20.0	18.0
지역	광역시	38.0	20.0	18.0
	충청권	42.0	22.0	20.0
	지방	36.0	19.0	17.0
세대	혼	36.0	19.0	17.0
	혼 외	38.0	20.0	18.0
장기요양 수급 유무	수급유형 미지정	38.0	20.0	18.0
	수급유형 미지정	38.0	20.0	18.0
지역	지역	36.0	19.0	17.0

※ 2022년 12월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전. <http://www.kihasa.go.kr>

02.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의 1순위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
- '지난 3개월 동안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수발 등은 주로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음'인 경우는 8.7%에 불과함
- 타인에 의한 도움의 필요성, 도움을 제공하는 자가 겪는 부담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타인의 도움이 불필요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피하한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제공된 도움 현황

종류	1순위	2순위
없음	8.7	8.6
배우자	35.5	33.9
이웃 및 친척	37.0	59.6
특노회 직원	7.7	10.6
그 외	11.1	16.3

자료: 보건복지부, Q2021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조사 보고서, https://nls.korstat.go.kr/brw/dbrw/brwSearch.do?tblCode=MS01_P001_P0202에서 2023.02.03. 추출

02.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빈도가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평균 55.7% 수준, 주 1회 이상(주 1-2회 +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평균 70% 수준임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구분	빈도	주 1회 이상	주 2-3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연령별, 성별 별 동시제 기준	100.0	72.7	14.0	6.3	5.0
연령 별 동시제 기준, 성별 별 동시제 기준	100.0	71.1	26.5	2.4	-
성별, 성별 별 동시제 기준	100.0	74.2	23.6	2.2	-
연령, 연령 별 동시제 기준	100.0	70.7	22.8	22.8	2.8

자료: 보건복지부, Q2021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조사 보고서, https://nls.korstat.go.kr/brw/dbrw/brwSearch.do?tblCode=MS01_P001_P0202에서 2023.02.03. 추출

-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 부담을 느끼는 비율(매우 부담됨+부담됨)은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36.1% 등 평균 31.8% 수준임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부담 수준 정도

구분	비율	매우 부담됨	부담됨	상당하다	부담이 적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연령 별 동시제 기준, 성별 별 동시제 기준	100.0	4.1	17.4	20.7	36.3	14.5
연령 별 동시제 기준, 성별 별 동시제 기준	100.0	4.6	26.9	30.1	23.2	12.9
성별, 성별 별 동시제 기준	100.0	4.2	21.3	18.9	22.4	14.3
연령, 연령 별 동시제 기준	100.0	22.1	28.6	28.4	20.8	11.2

자료: 보건복지부, Q2021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조사 보고서, https://nls.korstat.go.kr/brw/dbrw/brwSearch.do?tblCode=MS01_P001_P0202에서 2023.02.03. 추출

III. 발표자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발표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인구증가 →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노인 치매인구 및 단독가구 증가 → 신상 및 재산관리 상 의사결정장애노인 증가 →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충 필요
2. 의사결정지원제도
 - 후견제도
 - 사전의향서
 - 의사결정지원제도
3.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욕구인식조사 (N=1,800)
 - 연구방법 - IPA
 - 연구결과
 - 후견 > 사전서비스의향서,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전문가의사결정지원 > 비전문가의사결정지원
4.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 및 제도의 효과성 (N=2,000)
5. 결론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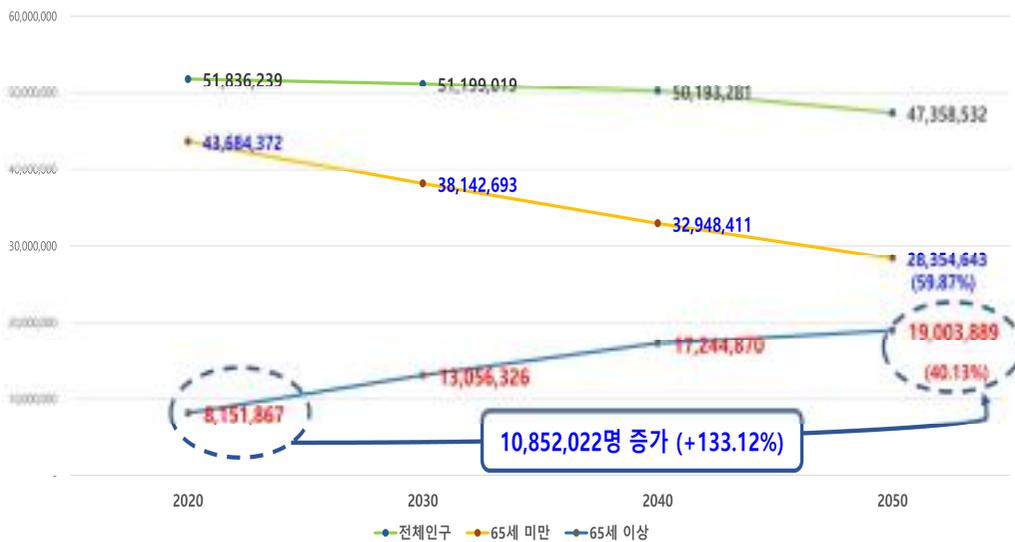
2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치매인구 및 단독가구 증가

3

인구변화 추계 : 65세 이상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angId=121&tblId=DT_1822500&conn_path=12)



4

노인의료 및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확장

노인 서비스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장려 등의 조치, 상담 및 지도, 노년학대에 대한 조치
기초연금법	❖ 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치매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사회보험방식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및 시설급여 (시설입소를 통한 생활보호)를 제공

●본인이 서비스 신청, 계약,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5

65세 이상 치매 동향 (2020~2050)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



6

치매 (Neurocognitive Disorders: 신경인지장애) 특징

DSM-5의 치매 :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s)

1. 예전 상황과 비교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기능 저하**의 증거 (Evidence of **significant cognitive decline** from a previous level of performance in one or more cognitive domains)
2. 인지결손이 **일상생활(예: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의 독립성을 방해** (The cognitive deficits **interfere with independence in everyday activities**)
3. 인지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The cognitive deficits do not occur exclusively in the context of a delirium)
4. 인지결손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음 (The cognitive deficits are not better explained by another mental disorder)
5. 병인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Specify whether due to):
 -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전두측두엽 변성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루이소체병 (Lewybody disease); 혈관 질환 (Vascular disease);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물질/치료약물 사용 (Substance / medication use); HIV 감염 (HIV infection); 프리온병 (Prion disease);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헌팅턴 병(Huntington's disease); 다른 의학적 상태 (Another medical condition); 다중 원인 (Multiple etiologies); 명시되지 않은 경우 (Unspecified)

중양치매센터

1. 치매란?

-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난 상태**

일상생활 : 재산관리 영역의 예

• 부동산 관련

- 매매계약
- 임대차 계약

• 소비활동 지원

• 금융업무

- 예금 관리
- 보험계약 체결 관련 사무, 등

• 통신서비스 이용

- 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 상속 관련

- 상속재산 조회, 관리, 처분
- 상속재산 분할 협의, 포기 등,
- 상속재산 회복,
- 상속등기 등 기타 상속 관련 업무

8

일상생활 : 신상관리 영역의 예

• 주소 및 거소의 결정

- 주거 마련 관련 계약(임대차 등) 체결, 변경, 해지,
- 영구임대주택 입주 관련 계약 체결, 해지, 변경, 종료,
-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용 계약 체결, 해지, 변경,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

•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이용 신청, 계약제결,
- 병원 입원, 치료 등 동의 업무,
- 수술 등 집중적 의료행위,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격리 시설 입소, 퇴소 행위,

• 근로 활동

-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 구직 및 근로계약 체결 단계,
- 보호직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 근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이직을 하는 경우, 등

• 공법상 신청 행위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갱신, 분실신고,
- 전입신고, 등

• 학대 피해 등 구제 수단

- 피해 확인,
-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
- 민사사건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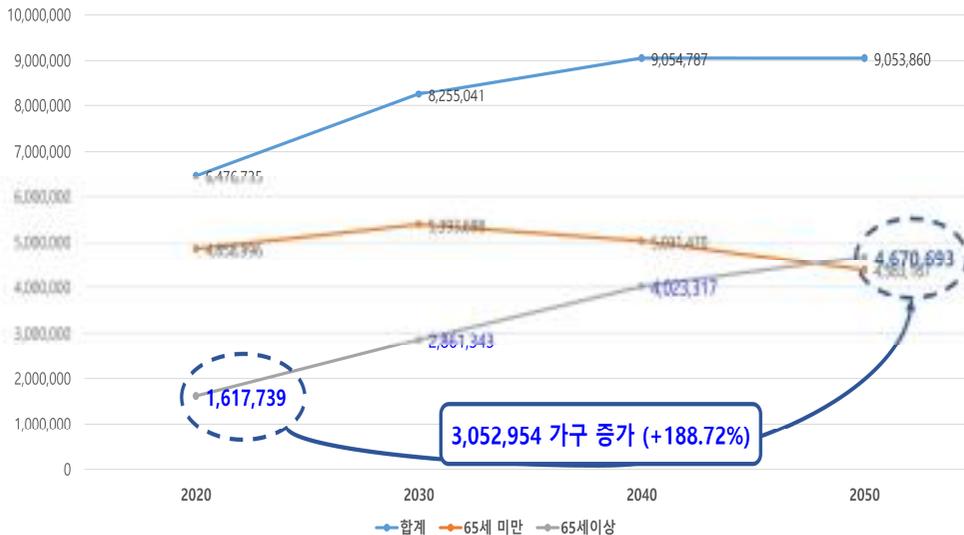
• 피 후견인 사후 사무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상속재산 청산 방법, 등

9

1인 가구 (2020~2050)

2050년 기준 전체 인구의 39.6%, 65세 이상의 41.1%



10

노인 치매 1인 가구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8Z0506&conn_path=I2)
 (**치매유병률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중앙치매센터)

	2020년			2050년			2020 → 2050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변화(율)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65-69세	439,116	1.39%	6,104	790,267	1.41%	11,143	5,039가구 증가 (+82.55%)
70-74세	372,520	3.86%	14,379	770,166	3.9%	30,388	16,009가구 증가 (+111.34%)
75-79세	347,876	11.83%	41,154	893,401	11.58%	103,456	62,302가구 증가 (+151.39%)
80-84세	274,091	20.96%	54,450	873,282	20.46%	178,673	124,223가구 증가 (+228.14%)
85세 이상	184,136	38.71%	71,279	1,343,577	41.16%	553,839	482,560가구 증가 (+677.00%)
65세 이상 전체	1,617,739	11.58%	187,366	4,670,693	18.79%	877,499	690,133가구 증가 (+368.33%)

690,133가구 증가
(+368.33%)

11

2. 의사결정지원

12

대안: 노년기 통합 서비스 제도

: 소득, 보건의료, 사회참여, 의사결정 (생존, 안전, 사회심리, 자존 자아실현)



의사결정 스펙트럼

		인지장애 정도		
		없음	있음	심함
의사 결정 주체	당사자 (자기의사결정)	자기의사결정 (원칙)	자기의사결정 : 방임? (But, 의사결정지원 대상)	자기의사결정 : 방임? (But, 후견Guardianship 대상)
	지원자 (의사결정지원)	당사자 동의 無 : 인권침해 당사자 동의 有 : 사전의향서	의사결정지원 (Supported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지원 : 방임? (But, 후견Guardianship 대상)
	대리인 (후견)	당사자 동의 無 : 인권침해 당사자 동의 有 : 사전의향서	동의 無 : 인권침해 동의 有 : 한정후견, 특정후견	의사결정대리 (후견, Guardianship)

의사결정지원제도

•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스펙트럼

• 후견제도

- 의사결정 대리

• 의사결정지원제도

- 잔존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 당사자 자기의사결정이 원칙 (**전문가의사결정지원,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

• 사전의향서

- 당사자 자기의사결정이 가능한 시기에 미래 특정 분야 의사결정 등록 및 보관 (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서비스의향서**, 등)

15

현황 :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통칭하는 용어 - 일반적으로 후견제도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한 형태

• 우리나라 성년후견(의사결정지원)제도 시행

- 법적 근거 : 2011년 개정 민법

- 시행 : 2013년 7월

-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16

한국의 후견제도

분류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관련조항	민법 제9조	민법 제12조	민법 제14조의 2	민법 제959조의 14
개시사유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광범위한 기능제한)	원칙적 행위능력자 (민법상 사무처리능력 부족)	행위능력자 (기능보다 필요 사무 유무로 판단)	행위능력자 (현기능 OK, 나중 대비)
후견인의 권한	법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위 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범위 따름

후견제도
의사결정지원제도
사전의향서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지원센터 17

후견제도: 치매 공공후견사업 (2018년 9월)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17.9)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공공후견 대상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 60세 이상 치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 후견인의 역할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범위 결정됨)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 거소관련 사무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지원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사전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8년 2월)

• 추진근거 및 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 시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를 통한 회복 가능성이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영명의료에 대한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 사전의향서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보건소, 등 <https://www.lst.go.kr/main/main.do>)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 작성 : 사전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등록 및 보관 :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사전의향서 등록증 신청 시 우편으로 등록증 발급

• 사전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변경 또는 철회 가능

19

의사결정지원제도 : ?

• 의사결정지원제도

- 잔존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 당사자 자기의 사결정이 원칙
 - 전문가의사결정지원
 -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

20

3.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욕구인식조사

20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1,800명

- 15세 이상 국민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기준으로 비례 확률 표집 (층화 무작위 표집)
- 조사기간 (2023년 11월 17일 ~ 2023년 12월 1일)

2. 연구내용

- 1) 의사결정지원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욕구인식조사 (중요도-시급도)
 - 후견서비스 (① 의사결정대리서비스) --- 의사결정지원서비스 (②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③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 사전의향서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⑤ 사전서비스의향서)

3. 분석방법

- 1) 의사결정지원서비스 IPA 분석 (필요도-충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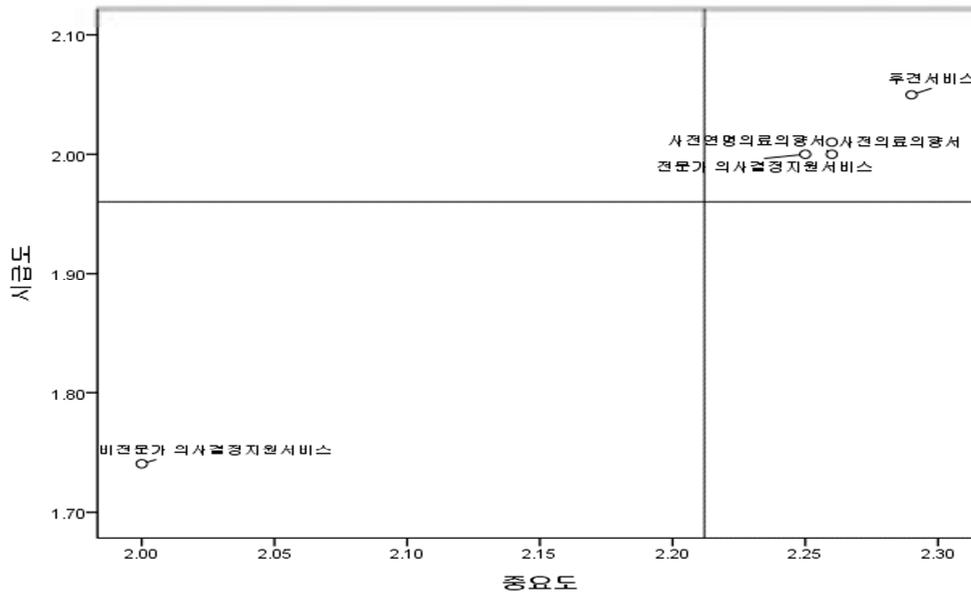
22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비율(%)	구분		N	비율(%)
성별	남성	908	50.4	결혼상태	결혼	1052	58.4
	여성	892	49.6		미혼/별거/이혼/사별	748	41.6
연령	20대 이하	354	19.7	가구소득	없음	29	1.6
	30대	276	15.2		100만원 미만	62	3.4
	40대	339	18.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5	6.9
	50대	359	19.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52	14.0
	60대 이상	481	19.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5	16.9
	초등학교	10	0.6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71	15.1
학력	중학교	71	3.9	거주지역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29	12.7
	고등학교	452	25.1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51	8.4
	대학교(3년제)	300	16.7		대도시	785	43.6
	대학교(4년제)	819	45.5		중소도시	868	48.2
	대학원	148	8.2		농어촌	147	8.2

23

의사결정지원서비스 IPA 분석 결과



4.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 및 제도의 효과성

20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2,000명

- 19세 이상 국민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기준으로 비례 확률 표집 (층화 무작위 표집)
- 2022년 12월 조사

2. 연구내용

- 1) 각 영역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은?
- 2) 후건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3. 분석방법

- 1) 의사결정지원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인식 관련 요인은? : 회귀분석
- 2) 후건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 회귀분석 - 조절효과 유의도 검증

26

연구참여자 특성

변수	구분	시례수(%)	변수	구분	시례수(%)
총 연구참여자 수		2,000(100.0)	성별	남성	1,007(50.3)
교육 수준	무학	1(0.1)		여성	993(49.7)
	초졸	27(1.4)	장애등록 여부	비등록	1,937(96.9)
		중졸		69(3.5)	등록
	고졸	489(24.5)	거주지역	대도시	869(43.5)
	대졸 (3년제)	304(15.2)		중소도시 및 농어촌	1,131(56.6)
	대졸 (4년제)	909(45.5)	배우자유무	배우자유	838(41.9)
	대학원졸	201(10.1)		배우자무	1,162(58.1)
변수	평균(표준편차)		변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45.21(15.11)		ln(로그)소득	12.68(5.02)	

27

연구결과 1) 각 영역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욕구 관련 요인

	후견서비스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외래치료횟수	.002	.005	.010	.001	.005	.006	.010	.005	.046#	.006	.005	.027	.007	.005	.035
입원치료횟수	-.050	.069	-.017	-.031	.064	-.011	-.165	.069	-.054*	-.019	.067	-.006	-.069	.066	-.024
만성질환수	-.008	.032	-.006	-.006	.030	-.005	-.022	.033	-.017	-.053	.032	-.042#	-.020	.031	-.017
일반인구 인지장애발생가능성	-.002	.003	-.016	-.001	.003	-.007	.001	.003	.008	-.004	.003	-.041	-.004	.003	-.048
자신의 인지장애발생가능성	.007	.003	.072*	.008	.003	.086**	.002	.003	.019	.008	.003	.075*	.008	.003	.077**
자기돌봄필요여부	.015	.144	.002	-.046	.134	-.008	-.068	.145	-.011	.203	.140	.033	.173	.138	.029
가족돌봄필요여부	.291	.079	.084***	.205	.073	.064**	.328	.079	.094***	.124	.077	.037	.150	.075	.045*
연령	.000	.002	.006	.003	.002	.035	-.003	.002	-.036	.003	.002	.041	.000	.002	-.006
성별	.017	.054	.007	.070	.051	.032	-.070	.055	-.029	-.058	.053	-.025	-.074	.052	-.033
교육수준	.009	.026	.008	.008	.024	.008	.071	.026	.067**	.070	.025	.069**	.043	.025	.043#
소득	.014	.006	.059*	.016	.006	.074**	.015	.006	.061*	.015	.006	.064*	.013	.006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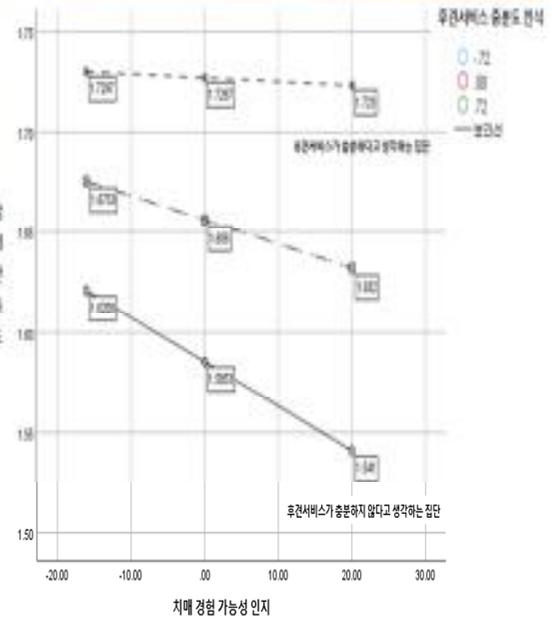
$\chi^2(18)=20134$ p=0.325, IF=1.000, CFI=1.000, RMSEA=0.008
#p<.1, *p<.05, **p<.01, ***p<.001

28

연구결과 2) 후건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종은·강상경, 2023)

변인	B	S.E.	t	p
상수	1.3559	.0530	25.6072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	-.0612	.0006	-2.1788	*
후건서비스 총분도 인식	.0988	.0152	6.5139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x 후건서비스 총분도 인식	.0014	.0007	1.5525	#
연령	-.0034	.0009	-3.8293	**
성별(남성=1)	.0419	.0221	1.8916	
교육수준	.0129	.0106	1.2133	
배우자 유무(배우자유=1)	.0357	.0264	1.3591	
소득	.0279	.0024	11.5571	***
장애유무(장애유=1)	-.0129	.0526	-.2056	
거주지역(대도시=1)	.0647	.0218	.2137	
Adjusted R ²	.1101			
F	24.6068***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ΔR ²	.0017*			

#p<.1, *p<.05, **p<.01, ***p<.001



5. 결론 및 논의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관련 요인들

• IPA 분석 결과

1. 후견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수준이 가장 높아서 가장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됨.
2. 다음으로 사전서비스의향서, 사전연명의료서비스의향서, 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가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됨
3. 상대적으로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5개 서비스에 대한 욕구 관련 요인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 서비스에 따라서 관련요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① 자신의 인지발생 가능성, ② 가족돌봄 필요여부, ③ 교육 및 소득 수준은 거의 공통적으로 연관된 변수로 나타남.
- 즉, ① 인지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②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남.

31

결론

- 치매 노인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의사결정지원 욕구 증가
- 의사결정지원 욕구인식 조사결과
 - 후견 > 사전서비스 의향서,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전문가 의사결정지원 > 비전문가 의사결정지원
- 의사결정 욕구 관련 요인
 - 즉, ① 인지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②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후견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인지장애가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잠재적 보호요인 기능.

- 인구 사회 변화에 따라 치매 독거노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 돌봄이나 사적 의사결정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미래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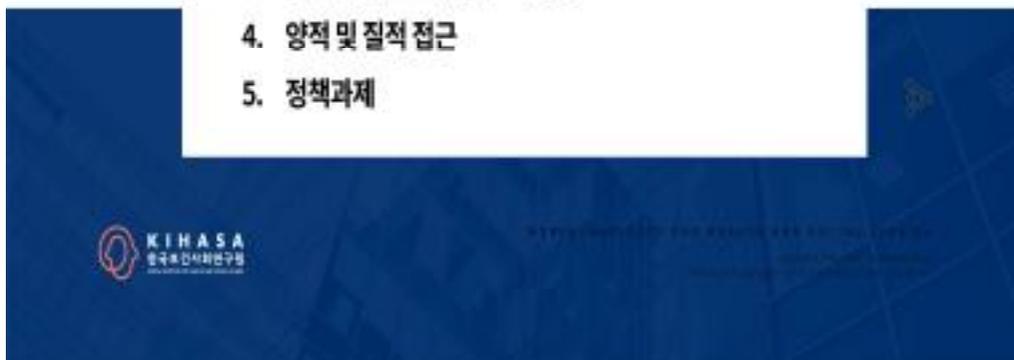
32

III. 발표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황남희 연구위원)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3. 범죄피해 보호 지원제도 현황
4. 양적 및 질적 접근
5. 정책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왜 고령 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절대적 규모 증가로 고령 범죄피해자 수 증가(전망)
 - 보다 높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범죄 노출기간 증가
 - 현대 노인들은 급속한 사회문화, 기술, 가치관 발달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증가(예, 보이스피싱 지능화)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변화로 사기 등 재산범죄 증가(대검찰청, 2023)
 -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 집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비해 낮은 관심과 지원
 - 코로나19 이후 노인학대 증가(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 타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피해 심각, 회복에 긴 시간 소요(법무부, 2021)

1.1 연구배경



1.1 연구배경

- 인구고령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 분야도 예외가 아님
 -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나, 고령 범죄피해자 지속 증가(30~40대 감소중)(윤정숙 외, 2022)
 - 60대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은 40~50대보다 낮지만, 20~30대보다 높고 최근 증가중
- 그러나 고령 범죄피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 미흡
 - 고령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범죄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영유지
 - 고령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
 - 이승현 외(2017)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고령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대응의 필요성 주장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시
 - 범죄피해자 중 고령자에 주목하며,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지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점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 범죄의 개념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나이버 지식백과, 2023). “죄형법정주의”
- 범죄는 시대 트렌드를 따라 변화, 사회변화로 새로운 반사회적 행위 나타나고 그 피해가 표면적으로 불거지면 법으로 규정

● 범죄피해 유형 (김지영, 2023)

-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관계의 파괴

● 범죄피해 유발 요인

- 일상활동이론: 범죄를 유발하는 세가지 요인으로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의 존재, 감시자의 부재'(Cohen & Febron, 1979)
- 생활양식-노출이론: 개인의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이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노출', 범죄자와의 '근접성'과 연관되어 범죄피해를 유발하거나 억제
- 기회이론: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노출'되고, 범죄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이 높을 때,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거나 피해자의 보호 능력이 낮은 경우 '피해 가능성 증가'(Cohen, Kuegel, & Land, 1981)

●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

- 고령자의 신체적 열약성, 낮은 사회적 지위(정주호, 2020)
- 고령자의 체력이나 시력, 기억력 등 낮은 신체·인지적 기능(박광우, 2017)
- 고령자의 의사결정 취약성, 가족관계 단절 등(이승현 외, 2017)

* 취약성 높지 않다는 반론(박광우, 2017)

- 낮은 사회활동 참여와 긴 지각 거주시간, 단축된 사회관계 등으로 낮은 노출
- 성범죄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낮은 매력도

●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관한 양적 연구

- 재산범죄, 강력범죄로부터의 범죄피해가 많음(허경미, 2004)
- 재산범죄의 피해여측요인은 학력(↑), 개인위험노출요인, 가구방범수준이며, 주거침입범죄의 피해여측요인은 가구노출(↑), 방범활동(성용은, 2018)

3. _____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3.1 법적근거



● 헌법의 범죄피해자 권리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1987년 제정)과 범죄피해자보호법(2005년 제정)을 통합

● 개별법

-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개별법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와 방법 명시
- 노인학 관련하여 노인학대를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유일한 개별법

3.2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종류



피해자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이사 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상담센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3.3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기관



기관명	지원 제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신변보호조치,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가명조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등), 취업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성폭력 피해자(해바라기센터), 아동학대 피해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 및 법 교육
검찰청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임시 안전숙소, 가명조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현장정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3.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2)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기관간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핵심
- 이를 위한 체계화 논의

4. 양적 및 질적 접근



4.1 자료 및 방법



● 양적 분석

- (자료) 대검찰청, 2000~2021년 범죄분석 DB
- (방법) 범죄유형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주이, 연령별 및 성별 범죄피해 순위 등 기초분석
- (연령구분) 자료 특성상 20세 이하, 30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51~60세), 60세 초과(61세 이상)

● 질적 분석

- (방법) 개인심층면접조사
- (대상) 고령자 및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관련 업무종사자 19명

4.2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경향이 있지만, 2021년 감소

- 범죄피해 분류방식 등으로 인해 연도별 비교의 한계 존재
- 고령자의 범죄피해 규모는 20세 이하 다음으로 가장 낮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
- 특히 인양형 범죄피해 비율에서 고령층의 증가세 뚜렷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고령 범죄피해자 증가 예상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수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A4)

● 고령층의 범죄피해의 충격은 다른 연령대보다 큼. 그러나 피해 지원 받길 꺼리기도

- “충격은 심하실 텐데 본인들이 감내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심리치료까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A2)
-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사실 잘 마시다가 시피 병원에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르신들은 사실 회복이 더디죠. 신체적인 부분도 회복이 더디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참 어르신들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4)

● 범죄피해 유형의 변화

“(전략) 저희 경찰 경험상 이전에 이루어지던 범죄들 이전 절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사범, 예를 들어 절도 사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경찰에 입직했을 때는 쉽게 말해 도둑이 잘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기준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조금 사이버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대상으로 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경제 범죄 자체가 사기 범죄 위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략)” (D1)

4.4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범죄유형으로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도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감소
 -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 규모는 20세 이하 다음으로 가장 낮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
 - 특히 비율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증가세가 뚜렷, 다른 연령층의 감소 또는 정체 중



4.2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재산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에는 절도와 사기가 85%수준으로 다수를 차지
 - 고령자의 범죄피해에서 재산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고령자는 손괴, 배민, 절도의 비중이 높으며, 횡령과 사기 역시 높음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재산상 범죄피해는 고령층의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발생

“그 지역사회 안에는 (노인 대상 금전 갈취가) 정말 많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수급비로 기초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고 주는 건데 옆에서 이거 수급비 나올 때마다 술 먹으러 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얻어먹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고, 근데 떼어낼 수도 없고.” (C5)

“한 가지 예로 양딸인가? 양아들인가? 아무튼 해서 상속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아들이나 양자녀로 하는 데는 법률상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뽕뽕 털어먹는 거죠.” (C2)

“(요양보호사로부터 금전 편취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잖아. 아니면 같이 공범으로 해먹은 놈들이 마음맞아가지고 제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숨겨진, 오히려 이런 분들 또 고령화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물론 다 하지만 그것 또 뭐야 간병인이나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이런 경우도 있다. (후략)” (D4)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많고 피해정도 심각해지고 있음. 암수 범죄피해 역시 줄 것으로 짐작

“최근에는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범죄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A2)

“보이스피싱 무슨 사기 이런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이 많고.” (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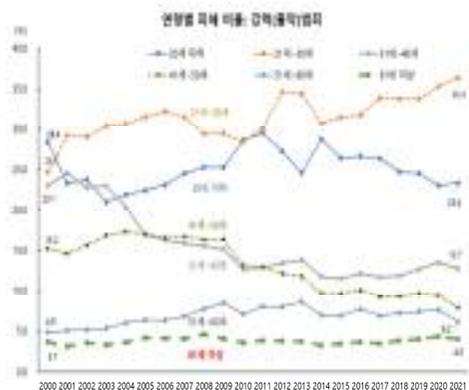
4.2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강력(흉악)범죄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대에서 크게 증가함

·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구성

· 고령자의 경우 분석기간 중 큰 변화없이 가장 낮음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고령층에게도 성폭력 범죄피해

- “[강력] 사실은 관계나 연애 관계에 있는 데이트 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후략)” (B3)
- “범죄피해 유형별로 본다면,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도 있고, 강도, 상해 피해자분들도 계세요. 수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자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4)

4.2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강력(폭력)범죄는 발생건수는 소폭 증가하다, 최근 감소하는 모습임

- 강력(폭력)범죄의 하위분류 변경으로 2002년부터 분석
- 고령층의 발생건수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비율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여성 고령자의 피해 발생건수가 높은 특성(학대, 가정폭력 관련 유추)



4.3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전통적인 가정폭력, 학대 언급이 많고 복합적으로 발생, 오랜기간 누적되어 상황이 심각한 특성

- “과거부터 가정 폭력이 있었던 가정어 노인 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제 가정폭력의 연속인 거죠. 사실 저희는 만 65세 이상 대 상을 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제 만 65세가 넘으니까 노인학대로 분류가 돼서 어제도 가 정폭력의 일관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B4)
- “신고 접수됐으니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다. (중략)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는 (오랫동안) 누적된 경우 가 많아요. 한두 번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아요.)”(D3)

● 미신고, 높은 암수범죄 가능성

- “최근에는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범죄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A2)
- “[전력] 조금만 있으면 영감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려다, 참고 살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또 친구 도 지내분이나 이웃에서 신고를 만 해주면 당사자들한테 신고를 잘 만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암수 범죄가 노인들 의 범죄는 좀 암수 범죄가 훨씬 드러난 것보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D1)

4.3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2021년, 소분류 기준)



● 재산범죄와 강력(폭력)범죄 피해 순위가 높으며, 남성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배임(14위), 실화(15위)가 순위에 오름

남성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2위	폭행(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3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5위	상해(강력폭력범죄)	손괴(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6위	공갈(강력폭력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7위	성폭력(강력홍악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8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9위	손괴(재산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10위	명예(기타일반범죄)	성폭력(강력홍악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문서위조범죄
11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12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13위	체포와감금(강력폭력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4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성폭력(강력홍악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배임(재산범죄)
15위	유기(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실화(과실범죄)

4.3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2021년, 소분류 기준)



● 여성 고령자도 다른 연령대와 달리 실화(15위)가 순위에 오르고 주거침입(7위)의 순위가 높은 편임. 남성과 달리 성폭력이 11위

여성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2위	성폭력(강력흉악범죄)	성폭력(강력흉악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3위	폭행(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흉악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5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6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횡령(재산범죄)	성폭력(강력흉악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7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8위	협박(강력폭력범죄)	손괴(재산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9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10위	기타음란행위(풍속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11위	손괴(재산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성폭력(강력흉악범죄)	성폭력(강력흉악범죄)
12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기타음란행위(풍속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13위	약취와유인(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기타음란행위(풍속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4위	공갈(강력폭력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5위	체포와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감금(강력폭력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기타음란행위(풍속범죄)	배임(재산범죄)	실화(과실범죄)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강력범죄 중심의 지원으로 그외 범죄피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가능성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곳을 저희가 연계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은 범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범죄가 다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방화라든가 강도라든가 약취 유인이라든가 이렇게 큰 중대 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들만 선정해가지고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그런 필요한 지원들을 다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건이라는 게 뭐든지 강력 사건에만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이 있을 건데 범죄피해지원센터는 그 외에 사건명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강력 사건이 아닌 것은 사실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죄명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죄명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죄명에 해당하게 되면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후략)” (D2)

● 과도한 업무, 인력 부족

“지금 인력이 없어요. 그렇게 행정 업무까지 지원해 줄 만큼 센터에 행정력이나 지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요.” (A2)

“대상자를 방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가서 라포를 형성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관리할 시간이. 신규는 발품을 해야 하고.” (C3)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사례 관리 같은 것을 직원들이 적극적 하죠. 저희는 인력이 사실은 창피한 말씀이지만 지금 저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사 기관들은 보통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예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든지 이런 데도 보면 여가부에 등록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구마다 다 있는데 거기 상근 인원이 7~8명에서 최소 10명이거든요. 인원이 10개 구니까 100명이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5명이 그걸 하고 있어요.” (A5)

●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낮은 인식, 부족한 지원과도 관련 있음**

“내가 무지해서 그랬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바보라서 그랬다, 그런 걸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누구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신고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회복도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범임을 잡고 못 잡고는 그다음 문제잖아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하나 잡으면서 애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 칠 수 있는 거를 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후략)” (D4)

“성폭력 자체가 약간 노인학대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성폭행당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진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근데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거나 노인분들은 자기가 좀 당해도 더 자기가 그게 좀 창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노인분들이 성폭력당했다는 그런 거는 아직 많이 들어 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피해 당하신 분 먼저 이렇게 용기를 좀 내주셔야 할 부분이고. (후략)” (D2)

● **의사결정 권한 주제로 인식되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 발생**

“어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학대 상황어 있거나 하면 바로 분리가 되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서 의사결정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은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B1)

“저희가 사실상 저희랑 있을 때는 서비스를 받겠다고 의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대상자한테 연락했을 때 “나는 그런 말 안 적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B2)

“노인분들, 고령층은 일단 서류를 잘 못 내세요. 필요서류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서류를 잘 못 내시는 경우가 많고, 말귀가 되게 어두우셔서 여러 번 설명드리고 종이에 써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해도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 습니다.” (A1)

● **부양의무자 존재로 지원 혜택의 배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나 차상위가 못돼요. 자녀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경제적으로 뭐다 뒷받침해 주지는 않은 차라리 자녀가 없는 분들은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실 데가 많아요.” (B1)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심터 이용 과정의 불편함

“[전략]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제공하는 심터 쪽에서) 위치 정보라든지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라 위치 정보라든지 일단 전권을 꺼서 그렇게 부른을 해제를 한 이후에 전화를 반납을 시켜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기를 제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매우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D1)

“심터도 다 좀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곳도 있고 엄격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폰 이런 사용 제한은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기시기 꺼려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단체 생활을 하셔야 돼서 혼자 이렇게 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단체가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중략) 밤늦게 몇 시까지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단체생활 해야 되고, 폰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사용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심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D2)

“[전략] 최근에 노인들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녀는 이미 다 결혼을 하거나 분가하거나 따로 사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데, 심터나 이런 데는 동물은 사실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맡겨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심터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같이 갈 수 없으니 그러면 그냥 내가 남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후략)” (D1)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서비스 연계과정의 불편함 존재

“공공기관도 섞여 있고, 민간기관들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다 저마다 개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다르고, 으레 연계하는 그런 방식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전화를 먼저 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데 해서 연계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4)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관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썩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B5)

“중복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화로 해도 안 알려주시는 데는 공문을 써서 보내달라는 때도 있고.” (A1)

4.4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 노인 비전문기관 업무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낮은 이해, 관련 교육 부족

“마직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커리큘럼) 아직 제가 알거로는 없었던 것 같고 여성 청소년 기능 안에 저희가 지금 가장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아무래도 내부 교육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현장 신고 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사건 조사는 어떻게 하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 규정에 맞춰서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 관련 절차라든가, 새롭게 바뀌는 절차라든가 규정 자체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수 교육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1)

● 고령층 대상 통계 부족, 체계적 생산관리 미흡

“(종류) 아무래도 종합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니(종합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정서 학대가 좀 많다고 신체 학대보다는 정서 학대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관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경찰 쪽에는 아무래도 사법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학대, 폭력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갈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신체적 학대가 조금 많은 것 같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 경찰 이외에도 다른 외부 기관 동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다른 노인 관련 기관, 이쪽으로 해서 접수가 되다 보니 정서 학대 신고가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D1)

5.

정책과제



●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력 충원

- 공급자 중심의 산재된 범죄피해 보호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일괄 접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민관법 등 관련 법의 정비를 통한 서비스 연계 원활화 필요
- 개인의 역량과 시간소요가 많은 업무 특성상 그에 적절한 인력 확충 지원

● 업무종사자 대상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보편적 교육 제공

- 고령 범죄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필요
- 노인 관련 업무 부처 및 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사기관 등에 종사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법률, 심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심리정서 치료, 법률서비스 지역내 기관 연계로는 현재 존재
- 자문변호사 운영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재판과 소송 자원의 어려움

●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고령층 주거 개선 지원

- 주거침입은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순위가 높았음
- 고령층 주거 개선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포함할 필요
- 경찰청과 지자체 협조하여 추진되는 셉티드(CPTED)*의 확산 필요. 그 과정에서 노인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제고의 여지

*지역별 범죄위험도 분석, 사업대상지역의 범죄취약요인 진단 및 치안정책 연계 등

● **범죄피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서비스의 다양화**

- 고령 범죄피해자의 건강수준, 경제활동 여부, 반려동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쉼터 확대

● **사회복지정책 연계 고령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변화하는 범죄 수법, 유형, 법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할 필요
-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치매조기검진 등과 연계하여 관련 종사자를 통한 교육이나 참여 노인대상 주기적 직접 교육으로 실시
- 사회복지정책 관련 종사자를 통한 교육시는 노인의 범죄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

● **고령층의 인식 전환을 통한 범죄피해 신고율 제고**

- 고령층의 낮은 범죄피해 신고율에 대응한 지속적인 전략 필요
- 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 범죄피해 유형 파악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피해 예방에도 기여
- 범죄피해 신고로 인한 피해회복 증가 혹은 검거율 증가 등으로 수사기관의 신뢰 제고도 필요

● **고령 범죄피해 관련 체계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 필요**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통계 미구축(이승현 외, 2017)
- 노인연령의 61세 초과 정의에 대한 재조정 필요, 연령 세분화된 정보 제공
- 노인학대 등 일부 통계 생산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통계수치의 불일치 문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기고 및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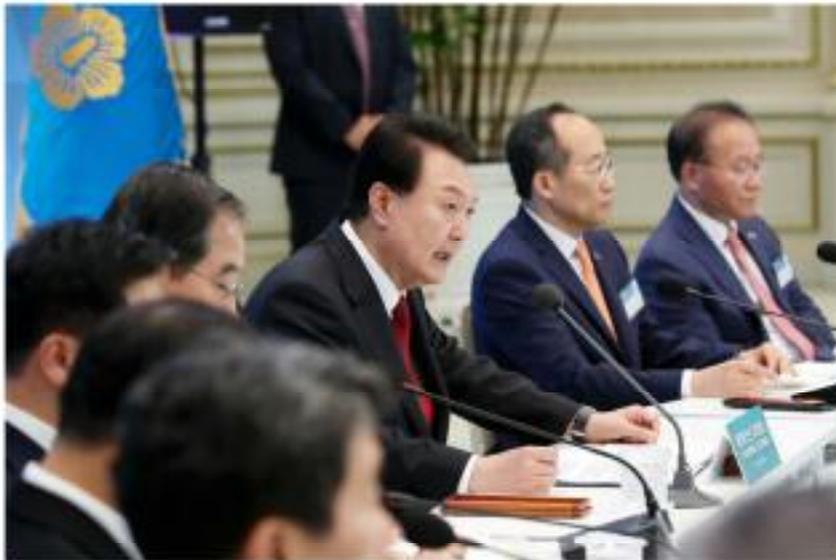
1. 한겨레, “연구기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이철희 교수, 23.07.31.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연구기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수정 2023-07-31 19:11
등록 2023-07-31 19:1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한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 해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인구 위기의 징후는 더욱 뚜렷해지고, 성공적인 대응의 증거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몰라

2. 한겨레,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 이철희 교수, 23.08.28.

24. 4. 30. 오후 4:24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

수정 2023-08-28 19:21

등록 2023-08-28 18:27



이철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합리규제 혁파 일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플러스터장

어느새 한국도 이민 문제가 뜨거운 정치적·정책적 논쟁거리인 국가가 되었다. 가파른 인구변동과 급격한 산업·기술의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

<https://www.hani.co.kr/arti/PRINT/1106129.html>

10

3. 한겨레, “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 이철희 교수, 23.09.25.

24. 4. 30. 오후 4:24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 [세상읽기]

수정 2023-09-25 16:11

등록 2023-09-25 16:11



게타이피자뱅크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면, 예외 없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질책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는데

<https://www.hani.co.kr/arti/PRINT/1110006.html>

1/3



도 효과가 없으니 굳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도 저출산 대응 신규·보완 정책에 쓰일 예산으로 총 15조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예산과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기존 정책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 어서 아주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필자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다시 말해 현재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꼽고 싶다.

정책 당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까지 시행되어온 저출산 대응 정책은 실질적으로 '소득 중상위 계층'에 속하는 '결혼한 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인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육아휴직 급여와 지급 기간 확대 등은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린 부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주택구매 자금 지원 정책도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첫째,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여전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된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한국과 같이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는 결혼 감소가 출생아 수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필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출생아 수 감소의 약 85%는 결혼의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 25~39살 여성 중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1991년 87%에서 2021년 43%로 떨어졌다. 결혼의 결정은 일자리의 질, 주거비용, 장래에 대한 전망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인과 출산이 별개의 선택으로 갈라지고, 결혼한 인구의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결혼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한겨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한국의 교육·여성 문제”, 23.10.31.

24. 4. 30. 오후 4:21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한국의 교육·여성 문제

[세상읽기]

수필 2023-10-31 07:00

등록 2023-10-31 07:00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의 수많은 분야 중 자신이 속한 분야의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 받는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상자라면 더욱 반가울 것이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필자는 25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지도교수의 가르침

<https://www.hani.co.kr/sets/PRINT/1114273.html>

10

5. 한겨레,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이철희 교수, 23.11.28.

24. 4. 30. 오후 4:25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수정 2023-11-28 09:00

등록 2023-11-28 08:00



연스플래시 제공



[세상읽기]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어머니를 돌볼 새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한 지 두주가 되었다. 이제 꽤 익숙해진 일이다. 과거에는 한분이 오래 근무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오시는 분이 자주 바뀌고, 그만둔 자리를 채우기 어렵게 되었다. 동네 센터에는 사람이 없고, 사정이 나은 다른 지역 센터 보호사들은

<https://www.hani.co.kr/sets/PRINT/1118123.html>

10

6. 한겨레, “서유럽과 동유럽의 분기점, 인구감소 대응”, 이철희 교수, 24.01.23.

24. 4. 30. 오후 4:26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서유럽과 동유럽의 분기점, 인구감소 대응

수정 2024-01-23 09:17

등록 2024-01-23 08:00



14세기 흑사병의 감상을 그린 16세기 벨기에 화가 피터르 브뤼헬의 그림 '흑병의 승리'. 위키미디어 코먼스



**[세상읽기]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글러스
터장**

지난번 칼럼에서 꺼냈던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겠다. 기근과 역병이 창궐했던 시대의 기준으로 엄청난 재앙이었던 흑
사병은 중세 유럽 봉건사회를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었다. 당시 지배층이

<https://www.hani.co.kr/arti/PRINT/1125490.html>

1/3

7. 한겨레, “의대 증원,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이철희 교수, 24.02.18.

24. 4. 30. 오후 4:22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의대 증원,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수정 2024-02-18 19:11

등록 2024-02-18 18:31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병원 쪽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연구클러스터장

지난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5년간 2천명씩 늘려, 5년간 이 정원을 계속 유지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https://www.hani.co.kr/arti/PRINT/1128804.html>

1/3

8. 한겨레, “이민 확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철희 교수, 24.03.18.

24. 4. 30. 오후 4:23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이민 확대, 만병통치약 아니다 [세상읽기]

수정 2024-03-18 18:38

등록 2024-03-18 15:45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가사노예제도 시범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기술 공백학'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강정윤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점차 커지는 돌봄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채우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1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

<https://www.hani.co.kr/arti/PRINT/1132750.html>

1/3

9. 한겨레, "총선 이후의 인구정책 방향... 차별화보다 초당적 협력을", 이철희 교수, 24.04.16.

24. 4. 30. 오후 4:23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한겨레

사설.칼럼 칼럼

총선 이후의 인구정책 방향... 차별화보다 초당적 협력을 [세상읽기]

수정 2024-04-16 09:13

등록 2024-04-15 0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jjae@hani.co.kr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한 것은 주로 여러 갈래의 "심판론"과 각종 "막말 파동"이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 결과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간 정책 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당은 두툼한 공약집을 냈고, 후보들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https://www.hani.co.kr/arti/PRINT/1136755.html>

1/3

10. 동아일보, "노동시장, '파워시니어' 시대에 대비해야", 이철희 교수, 23.04.06.

24. 4. 30. 오후 4:16

[동아시론/이철희]노동시장, '파워시니어' 시대에 대비해야 | 동아일보

[동아시론/이철희]노동시장, '파워시니어' 시대에 대비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4-06 17:51

**청년 인력 감소에 파워시니어 필요성 커져
이미 미국, 유럽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세
능력에 따른 처우, 고령 친화적 환경 필요하다**

고령인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장 대표적인 인구변화 대응책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에서 노동시장의 여러 부문이나 다양한 인력 유형 사이의 이질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충격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이 아닌 특정한 일자리의 특정한 인력 부족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고령인력 정책을 수립하려면 어떠한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며 어떤 유형의 고령자들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플러스트럴 경제학부 교수

장래의 노동시장 변화를 내다보건대 특히 주목할 만한 유형의 고령자는 학력과 직업의 전문성이 높고 건강한 소위 '파워시니어'이다. 우선 인구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이들이 전체 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10%인 65세 이상 인구의 대졸자 비율은 2040년 33%, 2050년 약 50%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개선되어 온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 자기 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세대는 과거나 현재의 고령자들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머지않아 급격하게 감소할 고학력 청년 인력의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있는 파워시니어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406/118705097/1>

1/3

11. 브릿지경제, “마음건강 관리 국가 역할 간과...마음건강 증진 ‘살고 싶은 나라’와 연결”, 강상경 교수, 23.09.19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브릿지 칼럼] 마음건강 관리 국가 역할 간과...마음건강 증진 ‘살고 싶은 나라’와 연결

강상경 서울대
학교 사회복지
학과 교수

최종 기사입력 2023-09-19 14:34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

최근 신원역, 서현역, 대전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개선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 사건 중 일부 가해자의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정신질환 예방, 치료,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환경적 맥락을 도의시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신질환의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회적 대응은 대체로 행위자에 대한 격리다.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을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을 과연 개인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도 코로나19 이후 소위 ‘문지마 범행’의 빈도가 증가했다.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사회 및 가족구조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격리 환경에서 찾는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대표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 중심의 1차집단이 말던 심리사회적 지지체계가 와해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공적 심리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충했지만, 작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문지마 범행’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목할 것은 행위자가 대부분 청년층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며 전통적 가족기반 지지체계가 와해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형성은 부진하다. 청년기 주요 발달과업이 사회적 관계 형성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게 심리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마땅하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때는 그 영향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가 선행되고, 이를 중심으로 범사회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환경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12. 관악논단,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은 '살고 싶은 나라'", 강상경 교수, 23.07

[544호 2023년 7월] 오라니엔 · 전문칼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은 '살고 싶은 나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은 '살고 싶은 나라'



강상경
사회복지86-92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연구원장

인구 통장은 사회 적응의 산물
사회환경에 종속적 혁신 필요

한 나라의 인구동향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동향의 특징은 '저출생'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이러한 '저출생·고령화 인구동향'은 우리 사회구성원 개인이나 가족구조 요인에 국한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동향은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 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태적 환경과 사회구성원인 국민들 간의 복잡하고 긴밀한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출생 현상은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맥락에서는 국가 환경체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고, 고령화 현상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과 보건·의료기술 및 정책 발전에 따른 수명연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혁신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국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

전후 '베이비 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견뎌낸 정부는 출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국가 주도의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보건, 의료, 교육, 주택 등에서 다자녀 가정보다는 소수자녀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국민들이 적응한 결과, 출생률이 낮아졌다. 저출생 현상은 정책평가 관점에서 보면 정책이 목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목표 출생률 유지에 위해서 필요한 후속적 정책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정책 외에도 교육환경, 직업 및 취업환경, 가족구조, 가치관 등 사회문화적 환경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길어진 교육기간, 취업준비연수 등은 결혼시기를 늦추고, 늦어진 결혼 시기는 저출생으로 연결된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이 있다.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면서 비혼자가 늘어나고 있다. 함께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성 결혼이 아니라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산이나 입양은 합법적 가족형태로 인정받지 못하여 다양한 국가 사회보장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 한 가정만 합법적 가족형태로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대한 선택적 적용의 결과로, 동거나 사실상 관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출산이나 입양을 꺼리게 된다.

국민들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또한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 학교 수업 중 토론에서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높은 사교육비나 헌신적 지원을 본인은 감당할 자신이 없고, 자신이 경험한 교육 및 입시에서의 극심한 경쟁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경험에서 나오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또한 출생률을 낮추는 원인이다.

저출생 현상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현상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감소하지만(2020년 5183만6239명→2050년 4735만8532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2020년 815만1867명→2050년 190만3889명)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구는 급증할(2020년 78만1582명→2050년 440만8337명)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수명연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노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보장, 돌봄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한 사회보장환경체계가 형성된다면 고령화는 '인구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령화는 심각한 국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저출생·고령화 인구동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및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거시적 생태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고용제도, 가족제도 등 다양한 정책 환경변화와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적응 등 생태학적 상호작용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국부적인 지원을 넘어, '국민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태체계 환경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산업구조변환, 교육제도, 주택제도 등 국가 환경체계에 대한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

13. 한국경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맞다”, 윤참나 교수, 23.06.15.

한국경제

[시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맞다

입력 2023-06-14 18:22 수정 2023-06-15 00:24 지면 A31

집값 안정 효과 없고 시장만 왜곡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논의를

윤참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이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7년부터 설정과 폐지를 반복하다 2019년 수도권 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가 최근 규제 완화로 대거 해제됐다. 그러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실거주 의무 요건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21년부터 추가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이며, 실거주 의무 요건은 이런 가격 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최근 전반적인 주택경기 하강 국면에서 실거주 의무 요건 폐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투기적 수요 유발로 미분양 사태를 막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임시방편으로, 추후 경제 상황이 개선돼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 부각되면 다시 재도입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정책들만 고려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자의 선택만 복잡해지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일종의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 요건 폐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14. 조선일보, “집에 아내가 없다…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황지수 교수, 24.03.19.

24. 4. 30. 오후 4:44

[기고] 집에 아내가 없다... 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기고] 집에 아내가 없다... 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입력 2024.03.19. 03:00

10년 전 필자가 조교수 1년 차와 엄마 1년 차를 병행하던 해에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은 1.2명이었다. 교수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출생률이 낮으냐’는 말이 나왔는데 필자는 ‘합계출생률이 1이 넘는 게 신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 출생률도 곧 반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제는 모두가 안다. 우리나라 초저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합계출생률은 무섭게 감소하여 그 5년 후에 1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출생률이 낮으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공감해야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일상은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세대가 경험한 일상과 간극이 크다. 기성세대 직장인 대부분은 오후 1시면 하교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퇴근할 때까지 누가 볼 것이며, 아이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갈 것인지 고민을 투철히 할 필요가 없었다. 집에 있는 아내가 아이를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집에 아내가 없다. 생계를 위해서든 자아실현을 위해서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하고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사회가 되었고,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속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선진국에서 100년에 걸쳐 나타난 변화가 한국에서는 고속 성장 이후 한 세대 만에 나타난 것이다. ‘내조하는 아내’가 있다는 전제로 운영되던 사회에서 ‘맞벌이 부모’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와 문화를 뜯어고쳐야 함을 의미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수당 인상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다.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거액의 지원금이 아닌 이상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부모가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으려면 직장과 학교, 양측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근로시간 감축과 유연화, 그리고 공공 보육 및 공공교육의 양적·질적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하고, 또 자녀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물론 논의되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쉽지는 않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3/19/VQKJKSGXA5GFXLHHUFRDFKTBQ4/>

1/2

기사

1. 매일경제, “35세 미만 노동인력 15년내 30% 증발”,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23.08.11.



서울대 미래전략원 보고서
사회복지·식당 인력난 심각
돌봄인력 8년후 58만명 부족
외국 노동인력 대거 유입해도
내국인 일자리 타격은 미미

2031년이면 주요 업종에서 150만명의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연구용역은 이민 활성화 정책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 당장 전국 인력난이 지방경제를 소멸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이민사회로 전환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이어 연내 취업비자 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이민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럼에서 발표한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불과 수년 뒤 대부분의 국내 산업 분야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폭발적 기술 발전 같은 영향으로 산업별 노동력 부족 양상이 매우 급격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려되는 분야는 고령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요식업·소매업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미만 노동 인력은 15년 사이에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5~6년 뒤 청년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급감하게 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을 대체하지 못하면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력별로도 타격을 받는 산업 부문이 다를 것으로 나타났다. 2031년 기준 고학력 직군에서는 연구개발업의 취업 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이었다. 저학력 직군에서는 운송업, 소매업, 공사업, 음식점·주점업 등에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인구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장래의 노동 공급·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 인력의 장기적 유입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인력이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세분화된 부문 및 숙련 수준별로 장래의 노동 수급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외국 인력 도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 중앙일보, "'1000만 노인' 코앞...경제학회 "2050년까지 의사 2만명 늘려야"",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한국경제학회 공동 개최, 24.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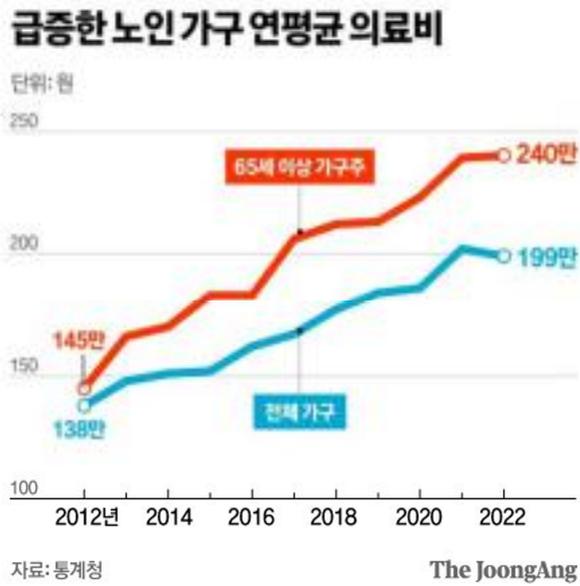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최근 열린 국내 최대 규모 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2050년까지 의사 정원을 2만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기며 향후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측면에서다. 정부도 올해 고3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7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회가 최근 주최한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 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폭증이다. 이철희 교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말부터 의사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2만1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까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전문 과목별로 산부인과·소아과 수요가 줄고 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며 “(수요가 적은 과목은) 의대생이 다른 과목으로 이동하거나 폐원하는 등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취약지역에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영 디자이너

논문이 우려한 의료 수요 폭증은 통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

3. 한국경제, “가격 묶였는데,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 나오겠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한국경제학회 공동 개최, 23.09.22.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2일 열린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토론회.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김범준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 역할 확대와 경직된 가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돌봄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1년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분은 약 58만 명으로 전체 직군 중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돌봄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족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식이 이전보다 약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인력난이 빚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 위 상임위원은 “공공성 확대 목적으로 돌봄서비스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책정돼 관련 종사자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양질의 종사자가 돌봄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돌봄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역할 없이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는 불가하다”고 했다. 돌봄서비스 유형과 품질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국민일보, “고물가, 미세먼지... 매력 없는 한국, 성적표 뜯어보니”, 이철희 교수, 23.08.09.



[인구가 미래다!] <7부> 이주민과 함께 ④ 매력 없는 한국

IMD의 결론대로라면 한국은 레바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관료주의 폐해가 심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예컨대 과세의 경우 IMD는 한국 경제가 과도한 누진과세 등의 영향으로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한국 역대 정부는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해 왔다. 유 팀장은 “실제로는 한국이 타국에 비해 나은 면이 있더라도 응답자들이 갖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점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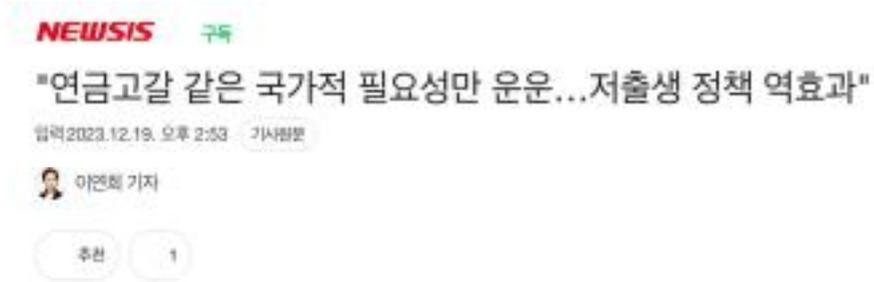
정주 환경을 만들라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주 환경이 낮게 평가되는 현실 확인에 교훈이 있다고 말한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급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면 결국 그들 가족이 함께 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한 생활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주거와 자녀교육, 의료지원 등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현 정부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인력을 어떻게 들여오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저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늘상 문제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신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고급인력 유치 방안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인구정책은 ‘현안 때우기’보다 ‘고급 브레인’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고효율 사회로 이동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이민정책과 인력정책이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철희 교수는 “영미권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따로 불러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학교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자주 맞닥뜨리는 한국의 각종 행정절차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한다. 외국인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신청할 때 서류를 한국어로 적도록 요구받고 어려워한 경우도 있더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5. 뉴시스, "연금고갈 같은 국가적 필요성만 운운...저출생 정책 역효과", 이철희 교수, 23.12.19.



저고위-홍석준 의원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 '세대론' 해법 제안해
'이미지 세대' 개인주의-공정성 등 성향 집중
"콘텐츠로 가족의 가치 강조하는 것 효과적"

를 낼 뿐이며, 개인의 가치관적·심리적 접근으로, 특히 유튜브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해 결혼과 자녀 양육의 기쁨,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출산율 하락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서 교수는 "급격히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도전 과제"라면서 "기존 정책의 강화나 수정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갖고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대한 환경변화"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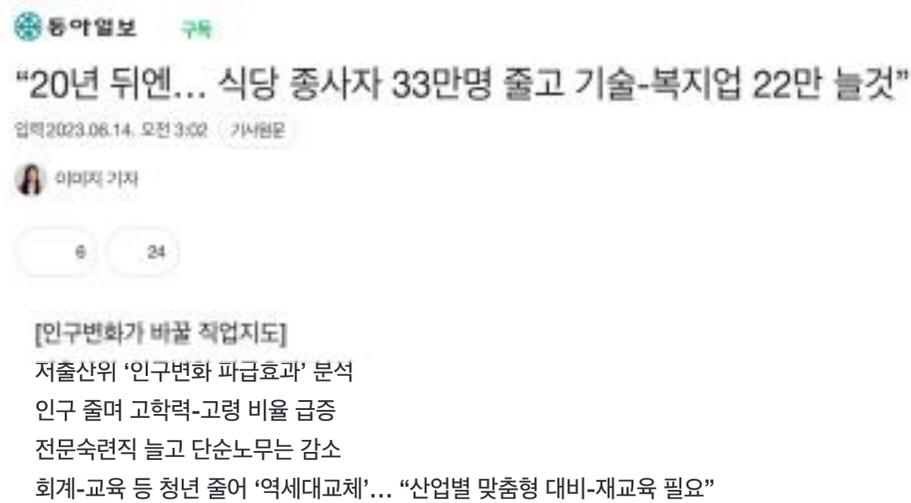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세대 간 갈등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정년 연장과 외국인 인력 도입 등의 현안으로 향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진단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심각한 인구 위기가 5~10년 내에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기자(dyhlee@newsis.com)

6. 동아일보, “20년 뒤엔,... 식당 종사자 33만명 줄고 기술-복지업 22만 늘 것”, 이철희 교수, 23.06.14.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규태 씨(68)는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갈수록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165㎡(약 50평) 남짓한 이 씨의 가게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직원이 6명은 필요하지만 현재는 4명뿐이다. 그중 2명은 이 씨의 가족이다. 이 씨는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도 서너 달 동안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 음식·운송업 종사자 줄고, 부동산업 늘고

13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장래인구 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전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40년 사이 ‘음식·주점업’ 종사자 수가 187만9360명에서 154만1860명으로 33만75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새 전체 종사자의 18%가 사라지는 셈이다. 같은 기간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32만2607명, 농림업은 26만7873명, 육상·파이프라인 운송업은 26만5497명, 전기통신 등 공사업은 23만6943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동산업 종사자는 48만5642명에서 71만5432명으로 22만979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축·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는 8만2781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7만2631명, 정보기술 서비스업 종사자는 7만2171명 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이런 산업별 종사자 증감 차이가 △인구 감소 △고령화 △고학력화 등 '인구 3대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화가 산업별 특징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는 58개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20~74세 종사자 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래 업종별 종사자 분포가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했고, 2021년 장래 인구추계(중위)를 반영했다.

● 고학력화-고령화로 노동시장 재편



7. 동아일보, “인구 위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이철희 교수, 24.05.25.

[책의 향기]인구 위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25 01:40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이철희 지음/312쪽·2만 원·위즈덤하우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지난해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수치를 접하자 머리를 움켜잡으며 어갈이 말했다. 이 장면은 한국의 인구 위기 문제를 상징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인구 문제를 두고 ‘국가적 재앙’ ‘종족 소멸’ 등 무시무시한 표현이 익숙해질 정도지만 저자는 “인구 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의 인구 위기 문제를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인 저자는 서울대에서 20년째 ‘인구와 경제’ 과목을 강의하는 등 국내의 대표적인 인구경제학자다.

책은 한국의 인구가 감소 자체보다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다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을 고려할 때 노동인구는 향후 15~20년간 ‘절벽’보다는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저자는 전망한다. 이 사이에 한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인구 대응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미래의 고령층이 현재보다 고학력층이라는 점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 것.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꼽는다.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후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20~30%포인트 낮다. 마지막으로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도입이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이어지면 임금 우위만으로 외국 인력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임금 외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화되는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참고서다.

8. 문화일보, “노인부양 부담 줄면 출산 늘 것... 미래세대 위해 연금제도 개혁해야”, 이철희 교수, 23.06.30.

문화일보 **국회** “노인부양 부담 줄면 출산 늘 것... 미래세대 위해 연금제도 개혁해야”[문화미래리포트 2023]

입력 2023.06.30. 오전 11:52 수정 2023.07.01. 오후 3:52 기사원문

이정민 기자 김군찬 기자

5 1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희망의 열쇠

연금개혁과 출산율

“양육기관 확충 등에 인센티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단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양육기관 확충 등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제1세션에서 토론자들은 ‘글로벌 인구 위기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우선 한국의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부양 비용 증가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데 동의하며 “연금제도 개혁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팀 정책연구자문위원은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노후에 대한 부담을 세대 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각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프강 러츠 비엔나대 인구통계학과 교수도 “부의 재분배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소득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금이 이를 모

두 부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득권 세대가 어느 정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대 간 부를 이전하는 시스템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 외에도 문화적·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임스 레이모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일과 가족 부양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줄 것 인지에만 중점을 맞춘 정책들은 근시안적”이라며 “여성이 일과 가족 부양 중 양자택일하도록 강제 선택을 요구하는 시스템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경제 지원 정책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9. 문화일보, “평택 출산율,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 증가, 비결은?”, 이철희 교수, 23.09.20.

문화일보 **구독**

평택 출산율,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 증가, 비결은?

경기 평택시가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늘어나 주목된다. 삼성전자 등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해주는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등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 젊은 부부가 자녀를 두고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1.028명으로 전년(1.025명)보다 0.003명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0.778명)과 경기도 평균(0.839명)보다 각각 32%, 23% 높은 수치다. 전국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1.0 이상인 곳은 47곳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중에선 평택시가 유일하다.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던 세종시의 경우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줄어 들고 있어 평택시 사례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평택시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혼인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2022년 기준 5.1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 화천군(6.4)과 서울 영등포구(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것도 평택시의 특징이다. 고덕동 일원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선 이후로 많은 인력이 이곳에 모여 들고 있다. 첫 생산라인이 착공된 지난 2015년 5400명이었던 고용인원은 2022년 약 5만 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총 3기의 반도체 라인이 운영 중이고 4 번째 라인이 건설 중이다. 총 6기까지 라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변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관과 관련 중소기업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시내 사업체 수는 2020년 5만9691개에서 2021년 6만910개로 증가했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지제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시내 주택 수는 2015년 15만4747가구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3만9451가구로 7년 만에 8만4704가구가 늘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따른 안정된 주택 가격 역시 자녀를 둔 가족이 집을 장만하는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평택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아파트 32평형(105.7㎡) 기준 2억~3억 원 수준으로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지역 서울 인근 도시보다 낮은 편이다. 가장 가격이 높은 고덕동 소재 같은 평형 아파트는 7억 원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취업자 중 80%가량이 시내에 집과 직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택의 경우 삼성전자 입주 등 일자리가 많아진 게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 문화일보, “기존 성공모델 다 버리고... 쏠사회시스템 재구조화 필요”, 이철희 교수, 23.11.01.

문화일보 구독

“기존 성공모델 다 버리고... 쏠사회시스템 재구조화 필요”[창간 32주년 특집]

받는 경제의 정치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며 “제도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이 완화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노동시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다수의 인사가 밝혔다. 윤재옥 국민익힘 원내대표는 “적극적 이민정책까지 고려할 만큼 저출산 문제에 사활적 긴박감을 갖고 달려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이 혜택(benefit)이 되도록 모든 사회 환경과 제도·시스템, 인식과 문화를 아이·가족 친화적으로 대개조해야 한다”고 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나이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교육개혁도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사회 갈등과 불평등 해소해야 =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인재가 전 세계에 진출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정태호 원장은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신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언급했다.

문화체육계 인사들은 ‘K-컬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박명성 신시 대표는 “문화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며 “K-컬처의 문화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K-컬처와 K-푸드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문화일보, “지자체도 지역화폐 예산 수립... ‘현금성 퍼주기’ 재현되나”, 이철희 교수, 23.11.27.



민주당 7053억 단독통과 따라

서울·경기 등 11곳 사업비 책정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세우지 않은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수천억 원 증액을 시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지역화폐 예산을 세우고 있다. 지역화폐 구매 시 웃돈을 주거나 물건값 일부를 돌려주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내년 총선(4월 10일)을 앞두고 지역화폐 퍼주기 관행이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 사업 항목을 독자적으로 신설, 7053억 원을 배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방 사무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지방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비를 세운 시도는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경북·제주·전북·전남·강원·세종 등 11개 시도로 집계됐는데 이들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대구·대전·울산·충남·충북·경남 등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6개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풀릴 경우 표심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 제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 대표 혹은 민주당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역화폐 공급에 꾸준히 공을 들여 왔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구매 액면가의 최대 10%를 얹어주는 소비지원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954억 원을 세웠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 여기에 국비를 계속 지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pshoon@munhwa.com)

12. 매일경제,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땀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이철희 교수, 23.08.06.

매일경제

구독

[모자이크 코리아]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땀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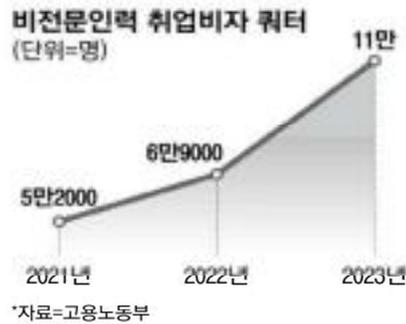
입력 2023.08.06. 오후 5:40 수정 2023.08.06. 오후 11:03 기사원문

임성현 기자 양세호 기자

6

1

업종별·지역별 수요 예측해
전문인력 도입목표 설정
법무부, 11일 연구결과 발표



정부가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하반기 중 취업비자 총량제를 시행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쿼터를 확대하는 현행 '땀질식' 외국인력 고용 정책 대신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해 도입 목표 총량을 미리 선정해놓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1일 공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토론회에서 부문별 외국인력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총량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제의 핵심은 인력수급 전망에 맞춰 매년 필요한 외국인 취업자의 총량을 정해놓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상황과 인력 부족 여건은 물론이고 향후 인구 변화 전망도 반영해 매년 필요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체류자격별, 송출국별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돼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호주는 물론 일본, 대만 등도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부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3. 매일경제, “젊은 사람들만 사라져’ 흑사병보다 심각…한국 덮치는 ‘이것’ 뭐길래”, 이철희 교수, 24.05.26.

문화

“젊은 사람들만 사라져” 흑사병보다 심각…
한국 덮치는 ‘이것’ 뭐길래 [Books]

이향휘 기자 scent200@mk.co.kr

입력 : 2024-05-26 06:14:48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펴냄 / 2만원



서울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 대신 침묵만 무성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종우 기자]

“한국의 인구 감소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

지난해 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칼럼이 국내에 엄청난 충격 파를 던졌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제서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인구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보기에 한국은 저출산 속도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마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가고 중세

14. 서울경제, “인구감소에도 생존 전략은 있다”, 이철희 교수, 24.05.24.

[북스&] 인구감소에도 생존 전략은 있다

■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이철희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최수문기자 기자 2024-05-24 18:07:20 문화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은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사회를 뒤덮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인구 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접혀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최적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술 수준, 환경, 개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저자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 감소 속도 등에 주목한다. 태어나는 이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지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2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 서울신문, “노동인구 감소, 특정 산업·연령대 등 불균형에 정책 초점 맞춰야”, 이철희 23.06.16.

서울신문 구독

“노동인구 감소, 특정 산업·연령대 등 불균형에 정책 초점 맞춰야”

입력 2023.06.16. 오전 5:03 기사원문

곽소영 기자 TALK

추천 1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40년 청년 대졸 취업자 절반 ‘뚝’
청년 의존도 높은 산업 타격 클 것

전공 칸막이 낮추고 보편 기술 교육
경단녀 고용 확대로 노동인구 확보
고령층은 빈곤문제 완화에 중점을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관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패널들이 15일 ‘장래 인구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초고령 사회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 토론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홍윤기 기자 “비가 많이 와도 홍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노동인구 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산업, 어느 연령대에 영향이 더 큰지 불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문 간, 인력 유형 간, 지역 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업에 따라 노동 부족과 공급 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언제 어떤 충격이 다가올지,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판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성이 높고 적응력이 빠른 청년 노동자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시장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청년 인력의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2040년이 되면 35세 미만 대졸 취업자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 청년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대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고, 빠르게 진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고용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경력단절이 심각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 노동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령층 노동인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만 천착하지 말고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무소득 기간)나 빈곤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곽소영 기자

16. 아시아경제, “고령화로 의료수요 급증, 의사 2만명 이상 늘려야”, 이철희 교수, 24.01.31.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의료 취약 지역에는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는 1일 서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

정이다.

이 교수는 "2020년대 말부터 은퇴 의사 증가로 의사의 수가 정체하기 시작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는 증가하면서 의사 인력 규모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의사의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의대 정원을 늘리고 2050년경까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과와 신경외과,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전공에서 의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또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은 최소한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병원과 의료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약지역에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로 인해 나타날 노동시장과 돌봄 수급불균형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지적했다. 그는 "인구변화가 산업, 기술 변화와 결합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현재와 같은 교육의 경직성과 훈련의 부재가 유지되고 부문 간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노동 인력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필요 사이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이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도 빠르게 커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돌봄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돌봄 대상자 가족의 경제활동과 생산성 저하, 건강 악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역 간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폐교, 보육시설 폐원,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원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17. 연합뉴스, “한일 학자들, 도쿄서 저출산 문제 논의... ‘인구감소 속도 늦춰야’”, 이철희 교수, 23.11.25.



한일경제포럼 개최...주일대사 "양국 실질적 협력 심화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국과 일본 경제학자들이 2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포럼'에서 양국이 모두 직면한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을 논의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경제학회, 일본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재계, 언론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 강연자로 나선 기타오 사기리 도쿄대 교수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미시적·거시적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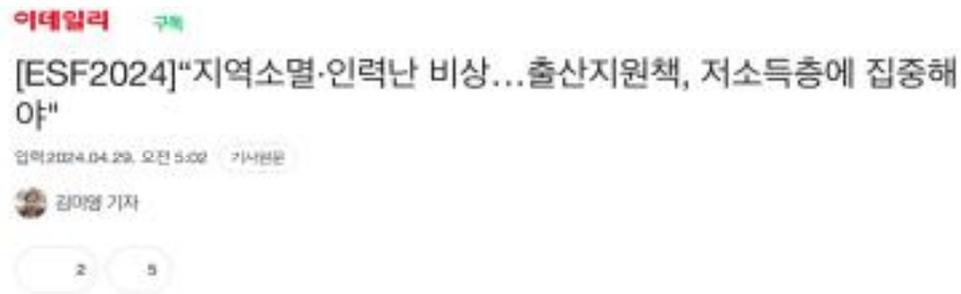
기타오 교수는 여성이 '경력' 아니면 '자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경우 인구 변화에 의해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인하고, 인구 변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만 한일 정상회담이 7회 개최되고, 각급 각료 회의가 재개되는 등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됐다"며 "가치관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포함해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8. 이데일리,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이철희 교수, 24.04.29.



[3]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관료·정치인, 인구감소 문제에 ‘절실함’ 없어”
 “인구감소 속도 늦추기 위한 대응 필요”
 “소득 1분위 출산율, 4분위의 절반...지원 더 늘려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 집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김민권 기자)

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터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엔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 조선비즈. “韓 인구 변화 이대로면 노동·돌봄·의료·지역·세대 ‘불균형’ 키운다”, 이철희 교수, 24.02.01.



[2024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향후 10년 사회복지 인력 가장 부족”

“2050년까지 2.2만명 의사 증원 필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저출산 가속화로 인한 인구 변화가 노동·돌봄·의료·지역·세대 5개 분야의 ‘불균형’을 심화해 경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을 문제로 지목하며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변화가 산업·기술 변화와 결합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 산업 및 직종 내에서도 학력(숙련 수준) 간, 연령 간 노동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21~2031년 기간 인구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취업자 규모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그 결과 앞으로 앞으로 10년간 노동 수요·공급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밖에 음식점 및 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산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에서 노동 부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만약 현재와 같은 교육의 경직성과 훈련의 부재가 유지되고 부문 간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노동 인력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필요 사이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이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인력 수급도 하나의 불균형 문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20년 말부터 의사의 수가 정체하기 시작하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증가하면서 의사 인력 규모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의사의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2000명 이상, 최대 3만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산부인과·소아과(아동청소년과) 등 전문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방안과 취약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란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24. 5. 2. 오후 8:27

이철희 교수 "韓 인구 변화 이래로면 노동·돌봄·의료·지역·세대 '불균형' 키운다"

이 교수는 이 밖에도 ▲돌봄 서비스 수급 ▲지역 간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정치의 세대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치 세대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투자의 정치적인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고령 인구의 정치적 압력이 강화해 세대간 분배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아동과 청년에 대한 투자 감소는 가까운 장래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먼 미래의 장년·고령 인구를 빈곤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다. 56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가하며 총 4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20. 조선일보, “밤 10시까지 가게 지켜도, 수중엔 월 30만원’ 퇴직 창업자들의 눈물”, 이철희 교수, 23.05.10.

朝鮮日報 3월 10일

“밤 10시까지 가게 지켜도, 수중엔 월 30만원” 퇴직 창업자들의 눈물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도 대형 슈퍼 내 작은 점포라면 1억2000만~1억3000만원이면 차릴 수 있다는 게 한 프랜차이즈 업체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일수록 노후 자금에서 많은 위험 부담을 지며 큰돈 투자하는 대신, 소자본 창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적은 돈으로 창업할수록 점주가 손에 쥐는 돈도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편의점은 창업비가 적게 들수록 프랜차이즈 본부와 이익을 많이 나눠야 하는 구조다. 한 편의점 점주는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벌면 절반은 본부에 떼 주고 나머지가 수중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쓰면 인건비만 600만원이 나간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안 쓰고 가족들이 밤낮으로 가게를 지키지 않으면 용돈 벌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하는 김모(62)씨는 “6000만원쯤 들여 가게를 냈는데, 내수가 죽었는지 매출이 떨어지기만 하고 오를 생각을 안 한다”면서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꾸 핑크 내 가게 쫓아가야 해서 스트레스만 왕창 받아, 이제 (편의점을) 집을 생각”이라고 했다.

‘100만원 이하 소득’이 절반 넘어

실버 창업이 소자본 투자에 몰리다 보니 실제 월 소득도 생활비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2021년 평균 월소득(순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은 54%에 이르렀다. 심지어 월소득이 50만원도 되지 않는 60세 이상 자영업자도 3분의 1 수준인 34.7%였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생계 유지를 위해 겨우 폐업하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고령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라고 했다.

또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2000원으로 50대 자영업자(292만8000원)의 48.2%, 40대 자영업자(287만1000원)의 49.2%에 불과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고령층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젊은 고령층으로 부를 수 있는 65~70세에게 시니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자 정년 연장과 취업과 창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2021년 ‘70세 정년퇴직’ 시대를 열면서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의 재취업을 돕는 것 외에 또 내건 것이 고령층 창업 지원이었다”며 “은퇴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좋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버 창업’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1. 조선일보, “60대 이상 근로자, 처음으로 20대 추월”, 이철희 교수, 23.05.27.



고용시장에 ‘저출산’ 본격 영향 작년 4분기 기준 15만여명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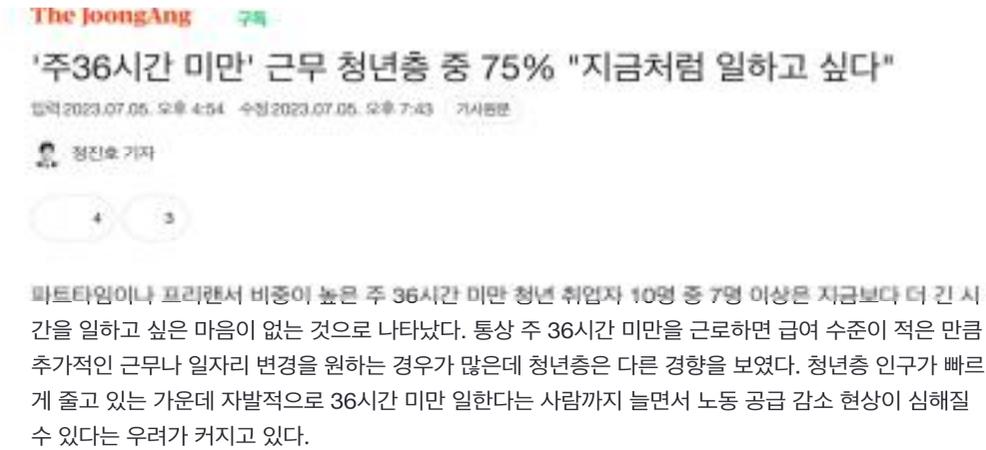
6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이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간 누적된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8만4000개 늘어난 337만5000개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만6000개 줄어든 322만 3000개였다. 청년층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7분기 만이다. 임금근로는 기업이나 개인 등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가로 급여나 현물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6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 20대 이하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16.5%로 20대 이하(15.8%)를 추월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친 취업자 기준으로는 이미 2014년부터 60대 이상이 20대 이하를 넘어섰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망라하는 임금근로자는 20대 이하가 많았다가 이번에 역전된 것이다.

고령층과 청년층 근로자 역전은 기본적으로 20대 이하 인구가 60대 이상보다 적기 때문이다. 2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3% 수준이지만, 60대 이상 비율은 25%에 달한다. 청년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일하는 사람도 고령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 요인 외에도 일자리 고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작년 4분기에 도·소매업에서 20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한 명을 뽑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반면, 고령층 일자리는 유연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작년 4분기에 가장 많이 늘어난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업(7만 8000개)이었는데, 주로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활동보조사 등이 속한다. 이병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고령층이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는 한편, 기업과 노조 등 민간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 기반해, 청년층도 구직에 실패한 경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인턴이나 임금이 낮은 일자리라도 단계적으로 진출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2 중앙일보, “주36시간 미만 근무 청년층 중 75% ‘지금처럼 일하고 싶다’”, 이철희 교수, 23.07.05.



적게 일하더라도 “지금이 좋다”

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청년(15~29세) 취업자(400만5000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이다. 이 중에서 재학·휴학 청년을 제외하고 졸업·중퇴·수로 상태의 청년만 4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303만4000명) 중 15%가 한 주 근무하는 시간이 36시간이 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얻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정규직 취업 전까지 거쳐 가는 자리란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48만9000명의 학업 상태가 아닌 주 36시간 미만 근무 청년 중 74.8%(36만6000명)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분의 1중에서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은 5만9000명에 불과했다.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는 연장 근로나 직업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청년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졸업·중퇴 청년 중 상용근로자는 14만6000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9.9% 수준이다. 2배 수준인 26만2000명은 임시근로자였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알바도 만족...“워라밸 선호 경향 커”

강원 춘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민모(30)씨는 하루 8시간씩 주 3회 일한다. 민씨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 남은 시간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민씨는 “월세나 식대를 아낄 수 있다 보니 적당히 쓰기도 돈이 부족하진 않다”며 “시험에 합격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생활 자체로 상당히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가장 원하는 사내복지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위가 ‘주4일제’(23.4%)였다. 재택근무와 탄력근로제가 최고의 복지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 형태와 관련된 제도가 식대나 복지포인트와 같은 금전적인 혜택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정연우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최근 청년층은 이른바 ‘워라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근무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젊은 인력 감소, 예고된 미래

청년 취업자 감소는 이미 예고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15~24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45년 10.4%로 줄어든다. 일할 청년 자체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취업을 원치 않는 청년까지 늘어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빈 일자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년·고령층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층은 단순히 임금 조건만 가지고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근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인력 수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젊은 노동 인력 감소는 곧 본격화할 텐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학 전공 칸막이 낮추기나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23. 중앙일보, “인구규모 유지보다 공동체 행복 증진을”, 이철희 교수, 24.05.25.

인구규모 유지보다 공동체 행복 증진을

중앙선데이 입력 2024-05-25 00:01:02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철희 지음
위즈덤하우스

인구변화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포’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의 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출생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겹친 한국사회를 두고 ‘인구위기’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적 재앙’ ‘종족 소멸’ 같은 섬뜩한 표현이 난무한다. 인구감소는 경제와 군사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안보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구경제학)로 같은 대학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인 지은이는 인구변화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인구변화를 제대로 분석하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촘촘하게 대안을 모색할 때라는 지적이다. 인구규모는 어느 정도가 합당할지, 인구구조에 맞춰 노인·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외국 인력의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살펴 적극적인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은이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자녀를 낳아 기르기가 어려운 사회적 ‘만성질환’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구감소가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준 건 아니다. 인구의 감소속도·규모에서 최근 한국 상황과 비견되는 14세기 흑사병 유행시기를 살펴보자. 당시 유럽의 인구 감소는 농노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도를 붕괴시켰을 뿐 사회와 경제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구감소는 오히려 자원과 인구 간의 균형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경우 인구가 줄면서 식량을 생산하던 경작지의 상당부분이 목초지로 전환돼 양모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모직물 산업발전과 임금상승, 도시화, 석탄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산업혁명기 기술혁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이 1800년 무렵 부강한 나라로 떠오른 배경이다.

물론 인구는 경제·군사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다. 인구증가가 수요를 증가시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은이는 지구 전체가 촘촘하게 연결돼 상품·자본·인력·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21세기에는 한 국가의 인구규모가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힘이 과거보다 약해진 게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인구감소 자체보다 그 속도에 주목하면서 인구축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인구규모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인구변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라는 경제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은이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수급불균형은 노인·여성·중장년층의 노동참여 활성화와 외국 인력의 적절한 이용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지은이는 인구감소가 위기를 부를 수 있지만 세밀하게 전략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책 무게를 인구규모 유지가 아닌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뒀야 한다는 지적이 울림을 준다. 부제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채인택 전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tzschaeit@gmail.com

24 한국경제,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려면 여성·청장년 경제활동 늘려야", 이철희 교수, 23.05.15.



고학력자 증가까지 감안하면
2070년 노동 투입 70% 유지 가능



청장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고학력자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까지 감안하면 2070년에도 노동 투입량을 2020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5일 한국경제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 등 5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46.5%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단편적인 분석으로는 노동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구가 줄지만 노동인력의 질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고학력자 증가와 영양상태 개선 등을 감안해 생산성을 조정한 2070년 노동 투입량은 2020년 대비 58.0%로, 같은 기간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여성과 장년(50~64세), 청년(20~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고, 여성과 장년인구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나리오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2070년 71.2%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기존 대비 13.2%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직업 간 불균형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유연해지고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일부 산업에서 심각한 노동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소매업(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이 2040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5개 업종의 감소 규모는 약 114만 개로 추산됐다.

이날 '인구 고령화와 장기 경제성장률'을 주제로 발표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같은 해 성장률은 0%를 기록해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전망이다.

26. KBS, “현금 지원 출산율 제고 한계...“인구 유출 줄여야””, 이철희 교수, 23.04.27.



그러나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육아기본수당 1,440만 원을 도입한 강원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출산 의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는 현금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출산율 제고나 인구 증가에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이 아닌 인구 유출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철희/교수/서울대 경제학과 : "특히 인구 중에서도 주로 젊은 인구가 그런 방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인구 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특히, 현금 지원은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27. KBS, “시간제가 오히려 좋아?...’좋은 일자리 개념 바뀌나”, 이철희 교수, 23.07.11.



“시간제가 오히려 좋아”?...’좋은 일자리’ 개념 바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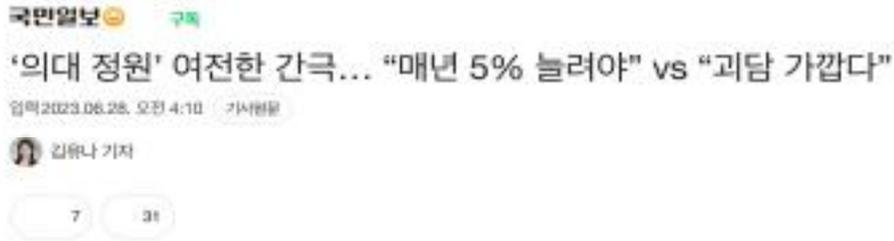


취재진이 인터뷰한 경기도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 모 씨. 기간제인데도 일자리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이지만,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업을 시도해볼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잠시 일을 쉴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비교적 유연합니다. 담임을 따로 맡지 않고 있어 오전 8시쯤 출근해 오후 4시 반쯤 퇴근합니다.

김 씨는 "직업을 선택할 때 한 지역을 정하고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며 "한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견뎌야만 한다는 게 오히려 두렵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계약직으로 일하면서도 계속 경력을 인정받고 호봉 상승에 따라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같은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 매력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청년들은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하고 자신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과거에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8. 국민일보, “의대 정원’ 여전한 간극... “매년 5% 늘려야” vs “괴담 가깝다”, 권정현 연구위원, 23.06.28.



‘의사 인력 공급체계’ 포럼

정부, 환자 포함 논의 주체 확대에

의협 “향후 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료서비스 수요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매년 5%(올해 정원 기준 약 152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대책연구기관이 추산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의사 인력 공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전문가 추계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 시점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요, 의사 인력 고령화 등을 고려한 추계모형 결과를 공개했다. “2030년까지 의대 정원 5%를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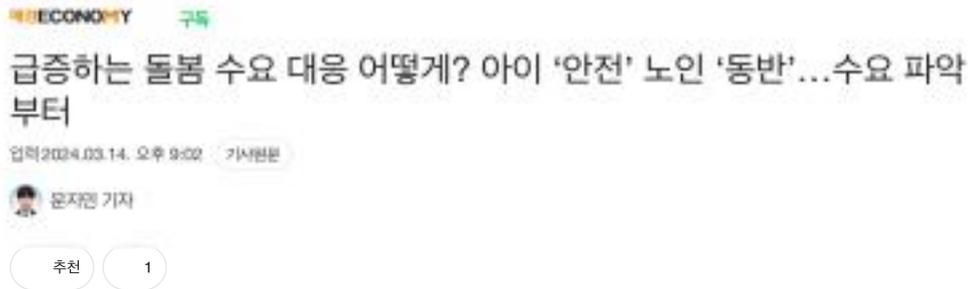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한의원, 치과를 제외한 의과의 외래·입원일수) 수준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고, 의료 인력의 업무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권 연구위원은 계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필수·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의대 정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의사 수 부족 시점이 오면 그때는 해결하기 더욱 어렵다. 선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2021년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신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추정된 의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 당면한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료 인력 재배치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진료 시작 전 대기)’ 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든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 괴담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논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의 의료 기대수준이 올라가면서 비급여 시장이 커졌고, 이쪽으로 유출되는 인력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절대적인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단체 외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향후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9. 매경이코노미, “급증하는 돌봄 수요 대응 어떻게? 아이 ‘안전’ 노인 ‘동반’... 수요 파악부터”, 권정현 연구위원, 24.03.14.



시니어타운 세제·금융 지원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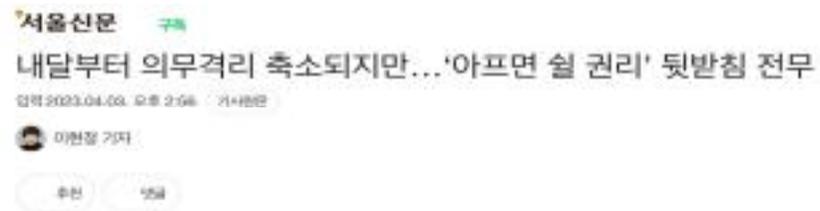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이다. 40~50대 자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달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면 자녀 세대의 간병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가족 구성원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선다면, 약 20년 뒤에는 최대 7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으며, 문화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수정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다. 개호예방, 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방지하거나 늦추는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돌봄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수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은 지역마다 주기적으로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응답자는 방문조사를 진행해 세세한 고령자 욕구를 파악한다. 최근에는 수시 대응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개호 인정을 받은 후에도 질환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 간호, 재택 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고령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돌봄 추세를 따라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지역 중심 커뮤니티 돌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대상 시니어타운을 공급할 때도 묘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노인 복지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형으로만 공급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은 분양형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노인 복지주택 맞춤형 주택연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처럼 임대형 주택에 거주해도 보증금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이동지원기구(JTI) 제도를 도입해볼 만하다.

고령자 공동체 주택인 ‘해심당’처럼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 운영하는 신개념 시니어타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 도봉구 해심당 1층에 있는 실버 카페 ‘카페향’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책임연구원은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이라도 보증금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 서울신문, “내달부터 의무격리 축소되지만...‘아프면 쉴 권리’ 뒷받침 전무”, 권정현 연구위원, 23.04.03.



내달부터 격리의무 단계적으로 풀리는데
아플 때 쉴 권리 보장방안 없어
고용부, 병가 법제화 미온적
상병수당은 대안 되기에 역부족
코로나19 환자 이용 어렵고
7월부터 소득하위 50%위주로 지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의무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1~3 단계) 1단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경각심이 더 낮아져 코로나19 환자의 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지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사실상 전무하다. 오는 7월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되기 전까지 실효성 있는 쉼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사업장이 병가 활용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지침’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가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등 관련 제도가 이미 갖춰졌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상병수당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데다 보장 기간도 짧아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12월 상병수당 신청 3856건 가운데 수당 지급이 이뤄진 2928건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했다. 애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시범사업이 이뤄진 탓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모형을 최대 2주까지 ‘대기 기간’을 설정했는데, 시범사업 지역 중 순천·창원의 대기 기간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었다. 예를 들어 대기 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현재 7일이니, 애초 코로나19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의 ‘대기 기간 14일’ 모형을 없애고, 7일·3일 모형만 운영한다. 상병수당을 적용받는 코로나19 환자가 1단계 시범사업 때보다는 늘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는 ‘보편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로 운영된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시범사업 형태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쉼 권리, 즉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데 현금 급여 성격의 상병수당을 먼저 도입하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연구보고서에서 “상병수당 수급은 아플 때 쉬는 것을 전제하지만, 시범사업 모형은 쉬는 기간 중 상실 소득만 보장할 뿐 병가 및 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편적 안전망으로써 상병수당이 도입되더라도 아플 때 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당수 근로자는 상병수당 수급 기간 중 일자리 상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표적 미디어 업체인 넷플릭스는 52주의 ‘완전소득대체’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픈 노동자의 병가 보장 및 소득 보장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재제도 적절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1. 세계일보, “임현택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의사 1만명 부족’ 연구원 “말도 안 되는 주장””, 권정현 연구위원, 24.03.29.

세계일보 구독

임현택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의사 1만명 부족’ 연구원 “말도 안 되는 주장”

입력 2024.03.29. 오전 7:05 기사원문

조희연 기자

124 14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저출생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참고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임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별 분포 그래프는 U자형이다. 소아(만 15세 이하 아동)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가, 20~40대에는 병원을 잘 안 가고, 50대 후반부터 다시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현상으로 소아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도,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화라는 요인을 차치해도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고령화 외에도 소득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전반적 소득 수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졌다는 설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상적으로만 봐도 의료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의사 인력은 굉장히 오랜 기간 통제해왔다”면서 “의대 정원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 정책에 참고한 3개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입장과 연구자 개인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연간 2000 증원’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서 정부가 틀렸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며 “보고서에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있고, 정부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논문의 객관적 추계를 참고하지만, 정책은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에 참고한) 연구 논문은 객관적 추계에 대한 자료와 연구자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는데, (과도하다는 건) 본인 주관을 담은 정책 제언”이라며 “정부가 참고한 건 재정 추계로 3개 논문 모두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수 ‘현상 유지’와 ‘현재도 부족’

보고서가 제안한 정책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권 연구위원은 “정부와 연구자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고 표현했다.

권 연구위원이 진행한 연구는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인력 공급에 대한 전망을 다루며 ‘현시점의 수요·공급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첫번째 차이는 여기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 수’를 추계했는데, 정부는 ‘현 상태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공급 추계에서 의사 인력의 최적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시점을 균형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얼마나 추가로 필요할지 따지는 게 일반적 연구 방식”이라면서 “정부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국민 건강 손실’ 비용 고려”

두번째 차이는 ‘증원 과정에서 무엇을 감내할지’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인 증원을 주장했다. 그는 “2000명을 한번에 증원하면 당장의 갈등 소지도 있고, 빠르게 자원을 투입해 교육환경을 정비하는데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점진적인 증원이 큰 혼란 없이 정착육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방식에도 한계는 있다. 권 연구위원은 “점진적 증원은 의사 인력을 빠르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한다”고 했다. 또 “점진적으로 증원해도 이런(의·정 갈등)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원을 어느 정도로 하면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을지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의사가 부족한 시기를 감내하더라도 천천히 증원해서 교육 현장의 혼란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의사를 빠르게 증원해서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선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 증원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책 수단을 펼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시기를 감내하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되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수련 환경을 지원하는 등 필수요로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어떤 방식이든 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채로 필수요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국민 건강이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 비용효과 측면에서 정부 입장이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의·정 한발씩 물러나 대화해야”

‘2000명 증원’을 두고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권 연구위원은 “정부와 의사들이 한발씩 물러나서 협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단 의사들은 환자 결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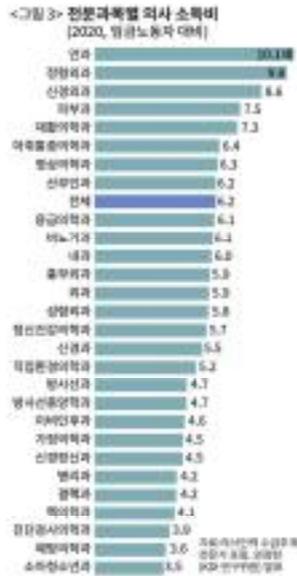
그는 “행동의 도덕적 명분과 타당성이 중요한데, 의사의 본분을 떠난 행동을 타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면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32. 시사인, “지연된 의대 증원, 그리고 그 반대자들”, 권정현 연구위원, 23.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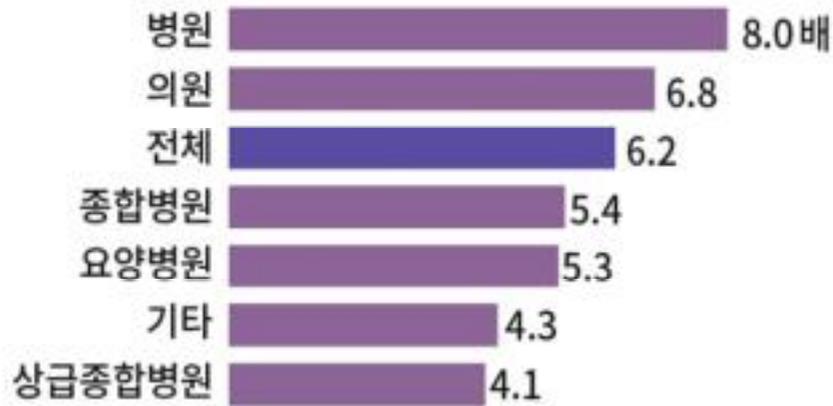
8월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참석자들. ©시사IN 조남진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보건경제학)은 의협 쪽 참석자들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권 연구위원은 <시사IN>과 통화에서 “의사 수를 늘려봤자 필수의료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의협에서는 필수과를 기피하게 되는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 과목별로, 의료기관별로 의사의 소득은 크게 차이가 난다. 안과의 경우 임금노동자 대비 소득비는 10.1배에 이르지만 소아청소년과는 3.5배이다(〈그림 3〉 참조).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병원과 의원이 임금노동자 대비 소득비가 각각 8배, 6.8배인 데 비해 필수의료 성격이 더 짙은 종합병원(5.4배), 상급종합병원(4.1배)은 그보다 낮았다(〈그림 4〉 참조). 소위 ‘바이탈 과’라고 불리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과목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의료소송 위험, 빈번한 당직 근무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나 개원의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림 4> 의료기관 종별 의사 소득비 (2020, 임금노동자 대비)



자료: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권정현(KDI 연구위원) 발표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피부·미용처럼 현재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야를 ‘레드 오션’으로 만들면 장기적으로 의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권정현 연구위원).”

33. 조선비즈, “중증 담당의·응급의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과 별개로 살펴야”, 권정현 연구위원, 23.11.28.



박은철 연세대 교수 권정현 KDI 연구위원 우봉식 대한의협 소장 진단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로 의사 채용 독려해야”
 “우왕좌왕 정부 정책 방향성 문제”
 “의대 증원 보다 필수의로 더 급해... 점진적으로 해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남게 하려면 의사 고용을 늘리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계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권정현 KDI 연구위원, 우봉식 대한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병원에 의사들을 남게 할 방법으로 의사 고용 확대 정책과 함께 동시에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다.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도록 보상을 늘리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간에 정부가 추진한 수가 인상책을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 전문가도 있었다.

“대학병원 의사 고용 촉진 정책 내놔야”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부족하다”라며 “대학병원에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을 포함해 상급 종합병원에 응급·중환자 치료비를 파격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24조 원 적립금 중에서 1~2조 원 정도만 투입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국고도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수가를 높여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 특정과의 수가를 인상하면 수도권 대학병원의 교수 채용을 확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 대학병원 의사들이 수도권을 이직하면서 지방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을 수도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그동안 수가를 높여서 심장·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기피 과에 교수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 왔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일 자리의 금전적 보상 외에 비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학병원에서 의사 고용을 늘려서, 과중한 업무를 나눌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 전문의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유인책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 진료과 교수를 더 채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사 단체에서도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학병원에 자리가 있다지만 정작 공석을 뽑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효율에 있다”며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이 있는 대학병원이 경증 당뇨·혈압 환자까지 진료하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4.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쓸림 있더라도...의사 늘려야 필수의료까지 낙수효과”, 권정현 연구위원, 23.10.17.

朝鮮日報

국회

성형·피부과 쓸림 있더라도... 의사 늘려야 필수의료까지 낙수효과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3058명)이 1년 만에 4000명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6000명대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입학생 증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1명(한 의사 포함

2.5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을 훨씬 밑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 의사 제외 3.0명)는 그해 OECD 평균(4.5명)에 한참 뒤진다.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도 나왔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현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장에 인력이 배치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진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며 “의대 정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 자원 배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독일·영국·일본 등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한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은 2020년의 대에서 8639명을 뽑았다.

특히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역 의대 전문의 부족 현상도 심화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 현안 설문조사에서 67.8%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 (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과목 및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이고 지역 거주를 택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는 방안 등 지역과 의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국립

35. 한겨레, “의대 증원 규모 10월 중 발표...18년째 3058명 정원 얼마나”, 권정현 연구위원, 23.10.11.



2025년 입시부터 적용...의협 설득 필요
공론화 뒤 내년 4월까지 교육부 통보해야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언해온 정부가 이달 중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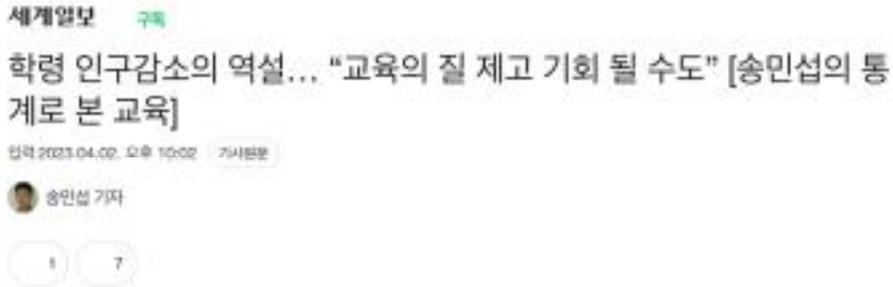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11일 종합하면, 이르면 10월 중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검토 중인 대책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교환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복지부가 숫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 의사협회(의협) 설득을 비롯한 공론화 작업을 위해선 이보다 앞서 정부 계획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 중이다. 다만, 2025학년도부터 연 500명 이상씩 일정 기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복지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어 있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12명씩 더 늘린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보다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추계도 최근 이어지고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2019년) 의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 기준 최대 2만2천명(한의원·치과의사 제외)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연 512명 증원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적정 증원 숫자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김원이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300~1000명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과 국립대병원 간 연계를 강화해 이들 기관의 지역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높ی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의 협의 등) 고려할 사안이 많지만,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끔 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6. 세계일보, “학령 인구감소의 역설... “교육의 질 제고 기회 될 수도””, 김태훈 교수, 23.04.02.



김태훈 경희대 교수 ‘인구변화 파급 효과’ 보고서

2038년 중학생, 2022년 절반인 69만여명
대학 더 심각... 2043년 16만명 미달 전망

김 교수 “학급·교사당 학생 수 줄어들어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질 개선 가능성”
“수업방식 변화 없이는 효과 없어” 지적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460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는 학교 현장이 우선적으로 체감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약 41만5500명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취학하는 7년 뒤엔 초1 학생 수가 지금의 6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언제쯤 극에 달할까요? 김태훈 경희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장래 인구변화의 교육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는 2070년까지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 학생 수 증장이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20여년간 학생 수 추이 및 취학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 추계를 보면 지난해 266만4278명이었던 초등학생(1~6학년)은 올해 261만835명, 2025년 237만1374명으로 줄기 시작해 2033년 144만202명으로 저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2070년엔 100만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각 2026년과 2029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는 중·고교생 수의 저점은 2038년과 2041년입니다. 2038년 중학생 수는 2022년(134만8428명)의 절반 수준인 69만1921명으로, 지난해 126만2348명이었던 고교생 수는 2041년 66만8964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 사정은 더 딱합니다. 2021년 입학정원(15만5990명) 중 약 4만명을 채우지 못한 전문대학은 정원이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5년 6만5000명, 2035년 7만2000명, 2043년 10만7000명을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도 ‘학령인구 절벽’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2021년 입학정원(31만3073명)을 간신히 채운 4년제 대학들은 2025년 3만4000명, 2035년 5만4000명, 2043년 16만명의 미충원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가 속설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2021년 기준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수가 적었던 4년제 대학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1363명), 경남(-1251명), 강원(-621명), 전북(-363명), 전남(-274명), 제주(-52명)였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재양'일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의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1명으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명)과 같습니다. 2033년엔 11.4명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의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인 '콩나물 교실'(과밀학급)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2022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5.48% 정도였습니다.



자료: 김태훈 경희대 교수

김 교수는 교과 담당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2022년 15.6명에서 2033년 8.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한국이 2025년 처음 OECD 평균(2019년 기준 14.5명)을 밑돈 뒤 10년 뒤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교사당 학생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초교 6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감소하면 국어·수학·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2.22%포인트, 2.15%포인트, 3.57%포인트 증가한다는 게 김 교수의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학급·교사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자동적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김 교수 지적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학급 규모가 줄더라도 교사들이 이에 맞는 수업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규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국면에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50년 대계 정책 방향 제시와 학교, 교사들의 치열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 르몽드, "In South Korea,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sinks lower and lower", 황지수 교수, 24.01.29

ECONOMY ·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sinks lower and lower

COLUMN

Sébastien Lechevalier

professor at EHESS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Paris), researcher at the Maison franco-japonaise de Tokyo (UMIFRE 19) and at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Researcher Sébastien Lechevalier reports on how the causes of declining fertility among Korean women var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Published on January 29, 2024, at 12:00 am (Paris), updated on January 29, 2024, at 7:23 am | 2 min.

Subscribers only

Falling birth rates affect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of East Asia and Europe, resulting in accelerated aging of the population. However, the scale of the phenomenon is greatest in South Korea. In 2021, the country's total fertility rate (total amount of children per woman of childbearing age) was 0.81, compared with 1.16 in China, 1.19 in Spain, 1.25 in Italy, 1.3 in Japan, 1.58 in Germany and 1.8 in France. Most importantly, it's a long-term situation: The fertility rate has been below 1.3 for two decades.

This is an essential point, as the decline in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is often evaluated a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women tend to postpone the exact time when they give birth, without actually having fewer children than generations of previous decades.

In contrast, the non-transitory nature of the Korean situation seems to show that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per woman tends to fall sharply over the medium-long term for a variety of successive reasons over time. This has been demonstrated by a study carried out on several generations of Korean women by Jisoo Hwang, Professor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ater, Fewer, None?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y* 60/2, 2023).

The main outcome is a detailed assessment of how the causes of this low fertility have evolved. In short, the generation of women born in the 1960s married but had fewer children than previous

generations. This was followed by a generation with a much lower marriage rate. Finally, the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has been characterized by a greater number of childless women, even when they are married.

Education and housing costs

Another result concerns the impact of education level. Traditionally, more educated women have fewer children. But this is no longer the case in most advanced countries, where better-educated women are the ones who delay childbirth the most... without having fewer children as a result. Again, South Korea operates differently: it's the least educated women and the most educated women who have the lowest fertility rates!

Following in the spirit of the work of 2023 Nobel Prize winner Claudia Goldin, the cohort approach allowed Hwang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fertility changes by situating them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each generation. In short, the extreme situation in Korea can be explained in part by the extremely high costs of education and housing, but also by the worsening conditions of job stability and wages for sections of the youth demographic, who could no longer afford to start a family.

You have 18.53% of this article left to read. The rest is for subscribers only.

38. 타임, “Why Experts Say South Korea Shouldn’t Just Throw Cash at Its Low Birth Rate Problem”, 황지수 교수, 24.03.03.



A social worker cares for a baby at the Jusarang Community Church in southern Seoul on May 24, 2017. Jung Yeon-je—AFP/Getty Images

BY CHAD DE GUZMAN X

APRIL 3, 2024 1:45 AM EDT

South Korea—the world’s poster child for **demographic decline**—has spent some \$280 billion over the past 18 years to address its diminishing birth rate, which **recently dropped to a new record-low** of 0.72 babies per woman in a lifetime. It’s a result of a confluence of factors but mostly comes down to young Koreans’ frustrations with **high costs of living** and **low quality of life**. But while cash handouts have been the government’s go-to approach, experts say that just throwing money at the problem isn’t necessarily the best solution.

Since April 2022, South Korea’s government has handed out **vouchers worth 2 million won** (around \$1,500) to parents who produce their first child, with another 3 million won dispensed for every additional child. In an effort to further subsidize the cost of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increase its budget for family cash assistance. The monthly stipend parents receive for a newborn’s first year also increased in 2024 to a years. For a child born in 2024, parents are expected to receive—over eight years—at least 29.6 million won, or about \$22,000, from the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have joined in on the campaign to boost birth rates via cash incentives, with **some offering thousands of dollars** for employees who reproduce—incentivized themselves by **tax benefits and other government support measures** for such programs.

“It’s just so much simpler to go to the cash incentive, to use that policy tool,” Jisoo Hwang,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ls TIME. “I think for any government, that has been the easier way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problem.”

But Hwang and other analysts tell TIME that while handouts help, a better approach would be to focus on policies and programs that would address and improve broader quality-of-life issues. Such measures would bring their own unrelated benefits as well as indirectly help foster an environment where young people feel more inclined to have and raise children.

collective of people. “It may be actually more efficient to, instead of giving out small increments of cash subsidies, if we can actually invest in public education or public childcare, and to enhance th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that throughout the country,” she tells TIME.

To be sure, Seoul is making some moves along these lines to try to address quality-of-life problems. Last week, the government **eased the burden on new parents seeking housing**, with households that have children aged 2 or younger made eligible to special housing subscription systems in which the government allocates presale apartments through a raffle—a system that is considered the most cost-friendly way to purchase a house in South Korea, given **high costs of real estate, especially in metropolitan areas**. And earlier this year, President Yoon Suk-yeol announced that publicly funded **after-school care programs for children** would be expanded nationwide.

Also last week, Yoon oversaw the launch of a high-speed train that would reduce travel time between Seoul and its outskirts to less than a quarter of the original commute. Land Minister Park Sang-woo **told Reuters** that the new train was viewed as another tool that might improve birth rates: “With two-hour commute on the way home, for example, how can anyone make time for babies? The idea is to give people more leisure time after work.”

Hwang says the Yoon government’s non-cash-based approaches to tackling cost-of-living and quality-of-life issues for families indicate that it is taking the matter of declining birth rates seriously. But there’s a limit to how much any administration will prioritize long-term solutions—more fundamental changes to labor markets and education systems—whose results won’t likely be seen until they’re out of power.

At the same time, however, policymakers need to be wary of introducing non-cash solutions that could create new problems, says Stuart Gietel-Basten, a demographer and professor of social science and public policy at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xample, he says, if the new high-speed train makes commuting easier, companies may just expect workers to do more work in a culture where long hours on the job are already pervasive.

achieve. Demographers have previously warned that **once fertility rates fall beneath a certain threshold**, lifting them become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self-reinforcing economic and social mechanism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uthorities optimistically forecast the fertility rate will continue to decline, at least for the next two years before a projected **slight uptick in 2026** that authorities believe will trend upward, albeit slightly, for the next decade. **Yonhap** reported in December that Lim Young-il, the head of the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trends division, attributes the current yearslong decline in South Korea's birth rate, which he believes to be temporary, to the sharp decline in marriages at the height of the COVID-19 pandemic. Across Asia, **marriages have started to rebound**.

That's not to say that continued investment in family-supporting programs is a waste. "By improving access to childcare, improving access to kindergartens,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so on and so forth, that has made people's lives better," Gietel-Basten tells TIME. "It may not necessarily have increased fertility. Maybe it will in time. But that's not the [only] reason to bring in these kinds of policies."

방송출연

1. SBS뉴스, “정부의 출산율 반등 전망, ‘어림없습니다’”, 이철희 교수, 23.12.26.



(<https://www.youtube.com/watch?v=KUsFvdrk4TQ>)

2. 삼프로TV, “저출산 대한민국이 마주할 문제들”, 이철희 교수, 23.05.24.



(<https://www.youtube.com/watch?v=aw5nbJu6u0g>)

3. 삼프로TV, “자식은 부채다?, 대책은 어디에?”, 이철희 교수, 23.10.02.



<https://www.youtube.com/watch?v=wg5qSlBaxWY>

4. 삼프로TV, “밥 먹듯 야근하는 세상에서 애까지 낳아야 합니까?”, 이철희 교수, 24.03.30.



<https://www.youtube.com/watch?v=0Z6TV4CnQHY>

5. 삼프로TV, “수요공급의 법칙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애는 어디서 키울까요?”, 이철희 교수, 24.04.06.



(<https://www.youtube.com/watch?v=W2TDMezCyp4>)

6. 삼프로TV,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땅한’ 정책”, 이철희 교수, 24.04.27.



(https://www.youtube.com/watch?v=_ckbgX-MmYY)

7.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 강상경 교수, 23.12.11.



https://www.youtube.com/watch?v=Ymp_CI3ZGdE